

정책연구보고서

# 국민안보의식조사를 통한 정책대안 연구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2020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유의사항

1. 본 연구보고서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소속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2. 본 연구보고서는 정책입안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타기관에 불필요한 자료유출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 국민안보의식조사를 통한 정책대안 연구

2020. 12. 30.

연 구 진 : 류동원, 박민형, 안경모  
정원호, 민정훈 교수

국 방 대 학 교  
안보문제연구소



# 발 간 사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는 1989년부터 연례적으로 일반국민과 군 장병을 대상으로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여론조사가 행해지고 있지만, 안보의식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연구소의 조사가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조사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당면 현안 발생 시 의견을 묻는 일회적 여론조사나 특정 정책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설문조사와는 달리, 우리 연구소의 의식 조사는 외부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70여개가 넘는 동일 문항에 대해 30년이 넘게 일관되게 실시해온 조사입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발간 년도의 설문 결과 분석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변화추이, 역사적 맥락, 주요 변수와의 상관관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더욱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조사결과의 단순한 요약 및 정리 차원을 넘어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그리고 나아가 이를 기초로 한 정책적 함의 도출 및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연구소는 관련 분야별로 우수한 교내외 학자 및 전문가들에게 올해 실시한 범국민 안보의식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를 본 연구보고서에 담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감염병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북한의 핵 위협은 여전히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새롭게 선출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안보상황 속에 우리 국민과 군인들의 안보의식에 관한 권위있는 분석과 정책대안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쯤로 정책담당자분들과 연구자분께 본 연구가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한된 연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좋은 연구를 해주신 참여 연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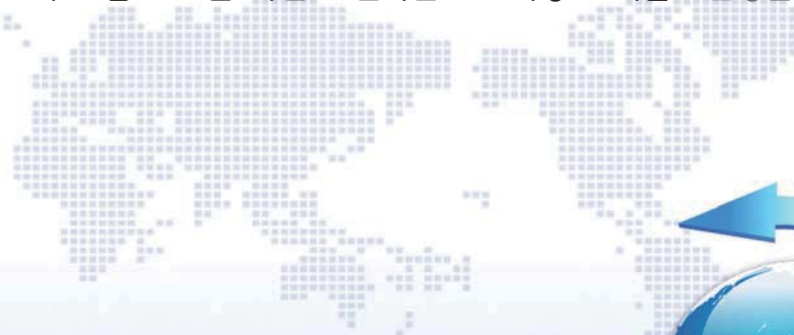
국방대학교 총장 겸 안보문제연구소장 (육)소장 김 중 철





2 0 2 0  
국 민 안 보 의 식 조 사 를 통 한  
정 책 대 안 연 구

1. 2020년도 국민안보의식 조사개요 ..... 1
2. 국민안보의식 변화와 안보정책적 함의 / 류동원 ..... 3
3.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와 대미정책 추진방향 / 박민형 ..... 44
4. 국민들의 대북 인식변화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 안경모 ..... 79
5.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군신뢰도 제고방안 / 정원호 ..... 116
6.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국방의 역할 / 민정훈 ..... 158





# 2020년도 국민안보의식 조사개요

## I. 조사목적

본 조사는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및 정책대안연구’ 중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안보의식에 관한 조사로서, 안보관련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의 바람직한 안보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II. 조사방법

|          | 일반국민                                | 전문가       |
|----------|-------------------------------------|-----------|
| 조사대상     |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 국방·안보 전문가 |
| 표본수      | 1,200명                              | 62명       |
| 조사방법     | 면접조사                                | 웹조사       |
| 조사지역     | 전국                                  |           |
| 조사도구     | 구조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  |           |
| 표본 추출 방법 |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다단계 층화추출              |           |
| 표본 오차    | 신뢰수준 95% 범위내에서 $\pm 2.83\%p$ (일반국민) |           |
| 조사기간     | 2020년 8월 28일 ~ 9월 16일               |           |

## III.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Key · in-Programm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 PC+(ver 12.0)에 의해 분석됨.
- ◎ 본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의 숫자와 각 항목별 합계의 숫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IV. 응답자 특성

|           |               | 사례수(명) | 비율(%) |
|-----------|---------------|--------|-------|
| 전체        |               | 1,262  | 100.0 |
| 대상별       | 일반국민          | 1,200  | 95.1  |
|           | 전문가           | 62     | 4.9   |
| 전문가 소속별   | 대학            | 30     | 48.4  |
|           | 연구소           | 32     | 51.6  |
| [일반국민]    |               |        |       |
| 본인 안보 수준별 | 상             | 567    | 47.3  |
|           | 중             | 497    | 41.4  |
|           | 하             | 136    | 11.3  |
| 성별        | 남성            | 720    | 60.0  |
|           | 여성            | 480    | 40.0  |
| 연령별       | 18-29세        | 303    | 25.3  |
|           | 30대           | 256    | 21.3  |
|           | 40대           | 314    | 26.2  |
|           | 50대           | 327    | 27.3  |
| 지역별       | 서울            | 238    | 19.8  |
|           | 경기/인천         | 393    | 32.8  |
|           | 대전/세종/충청      | 128    | 10.7  |
|           | 광주/전라         | 110    | 9.2   |
|           | 대구/경북         | 109    | 9.1   |
|           | 부산/울산/경남      | 175    | 14.6  |
|           | 강원/제주         | 47     | 3.9   |
| 지역 크기별    | 대도시           | 549    | 45.8  |
|           | 중소도시          | 610    | 50.8  |
|           | 군지역           | 41     | 3.4   |
| 직업별       | 자영업자          | 182    | 15.2  |
|           | 블루칼라          | 351    | 29.3  |
|           | 화이트칼라         | 409    | 34.1  |
|           | 전업주부          | 163    | 13.6  |
|           | 학생            | 69     | 5.8   |
|           | 무직/기타         | 26     | 2.2   |
| 최종 학력별    | 고졸이하          | 354    | 29.5  |
|           | 전문대(재학/중퇴/졸업) | 311    | 25.9  |
|           | 4년제 이상        | 535    | 44.6  |
| 생활 수준별    | 상             | 137    | 11.4  |
|           | 중             | 700    | 58.3  |
|           | 하             | 363    | 30.3  |

# 국민안보의식 변화 추세와 안보정책적 함의

류 동 원\*

- I. 서론
- II. 코로나19와 국제질서 및 안보개념의 변화
- III. 안보의식조사의 변화 추세
- IV. 결론: 정책적 함의와 대응책

## I. 서론

### 1. 연구배경과 목표

한국의 안보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대안의 준비를 위해 국민 안보의식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전개된 북미 정상회담, 남 북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그 변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는 2020년 초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팬데믹(Pandemic: 대유행, 이하 팬데믹)으로 발전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모든 인간의 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올해의 국민안보의식 조사와 그에 분석은 이전과 달리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국방대학교 교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전의 불확실성은 주로 경제위기나 전쟁 혹은 북핵위기와 같은 경제와 안보적 요인에 기인하였지만, 이번에는 질병, 즉 바이러스의 확산이 불확실성과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정치와 경제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경제지표가 최악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세계경제가 이미 크게 위축되었다.

이처럼 코로나 19가 세계안보환경에 가져온 엄청난 변화로 인해, 2020년 국민안보의식 조사 결과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와 도전들에 대한 포괄적 대비를 위해, 2020년 국민안보의식 변화 추세와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과제의 연구목표는 한국 안보의식 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코로나 19를 계기로 드러난 국민안보의식 변화 추세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대응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19로 나타난 안보환경과 안보개념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논리를 모색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안보이론의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

둘째, 국민안보의식 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국민안보의식의 중장기적 추세와 변화요인을 파악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안보환경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요인이 국민안보의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 한미동맹, 대주변국 인식 등에 대한 국민의식을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안보의식의 변화요인과 추세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국민안보의식의 거시적 방향성을 예측하고, 국민안보의식과 국민의 지지를 반영한 국방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 2. 선행연구

국민안보의식 조사를 통한 변화 추이는 올바른 외교정책과 국방정책 수립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연구소에서 해마다 범국민안보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범국민안보의식 조사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정책대안연구로서 “국민안보의식 변화 추세와 안보정책적 함의”에 대한 분석은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를 토대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지난 5년간(2015-2019)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자들에 수행되었으며,<sup>1)</sup> 공통적으로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 한미동맹, 대주변국 인식, 남북관계, 국방정책 등에 대한 국민안보의식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각각의 보고서는 당해 년도의 안보환경을 특성과 변화추이를 반영하며, 예를 들면, 2015년 보고서(이정민 2015)는 해외에서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안보의식 변화와 중국의 종합국력 성장을 기초로 한 미중관계, 북한 핵무기 능력의 강화와 체제변화 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

2016년 보고서(정한범 2016)는 범국민안보의식 조사를 토대로 북한의 비대칭적 군사위협,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군사력 경쟁,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미중간 패권경쟁을 분석하였다. 2019년 보고서(최현진 2019)는 국민들의 안보의식 변화 추세와 요인을 분석하고, 해당 안보의식의 추이와 한국외교·안보정책 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였고, 나아가 국방정책 결정과정에도 국민의 목소리와 안보의식을 반영, 사회적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들 보고서는 본 연구 수행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II. 코로나19와 국제질서 및 안보개념의 변화

### 1. 국제질서의 변화

올해의 “국민안보의식 변화 추세와 안보정책적 함의”에 대한 분석은 ‘코로나19 팬데믹’은 광범위한 영향으로 인해 이전과 달리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안보환경에 살고 있다. 이전의 안보에 대한 영향 요인은 주로 북한의 도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군사경쟁과 해양분쟁 등에 국한되었지만, 이번에는 질병, 즉 바이러스의 확산이 안보불안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 미국의 리더십의 부재, 흔들리는 세계적 협력, 강대국간의 불협화음, 반세계화의 물결과 지역주의 혹은 국가주의의 부활, 미중 경쟁관계의 심화와 그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를 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올해의 국민안보의식조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직접적이고 유의미한 분석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이를 분석할

1) 이정민, 2015; 정한범 2016; 하도형 2017, 2018; 최현진 2019.

것이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세계의 모습을 다양하게 예측하였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의 세상이 이전의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sup>2)</sup> 대표적으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4월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팬데믹 이후 세계질서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무역과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번영하는 시대로부터, 구시대적인 '성곽도시(walled city)' 시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다.<sup>3)</sup>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세계는 별다른 지정학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일시적 혼란기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sup>4)</sup>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미중관계의 악화와 중국이 이끄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거나, 반대로 그것이 중국 지도부의 몰락을 촉발할 것이라고 믿는다. 즉, 이들은 먼저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차적으로는 자기 고립적이고 즉흥적인 낙관과 오판의 반복으로 국내적 신뢰를 잃었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코로나 19의 위험성을 간과하면서 국제적 공동 대응을 주도하지 못해 국제적 공공재 제공과 국제문제 주도에 실패했다. 반면에 중국은 당초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국제적 비난을 받았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된 틈을 타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하고 있으며, 팬데믹을 계기로 중국에 유리한 세계질서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세계화의 종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며, 다른 학자들은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글로벌 협력으로 연결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또 다른 분석가들은 팬데믹이 국가주의를 강화하고, 자유 무역을 약화시키며, 여러 나라에서 체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대유행 이후 세계는 이전의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미중간의 세력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코로나19는 세계 역사의 기본 방향을 크게 바꾸기보다는 이전의 발생하였던 변화의 방향을 가속화할 것이다. 위기 자체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에는 어렵지만, 위기 이후 나타날 세계의 모습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sup>5)</sup>

미국의 리더십의 부재, 흔들리는 세계적 협력, 강대국간의 불협화음, 반세계화의 물결과

2) Hal Brands and Francis Gavin, "COVID-19 and World Order." In Hal Brands and Francis Gavin. (eds.), *COVID-19 and World Order: The Future of Conflict, Competition, and Cooper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20).

3) Henry A. Kissinger, "The Coronavirus Pandemic Will Forever Alter the World Order", *WSJ*, (April 3, 2020).

4) Joseph S. Nye, "No, the Coronavirus Will Not Change the Global Order." *Foreign Policy*, (April 16, 2020).

5) Richard Haass, "The Pandemic Will Accelerate History Rather Than Reshape It", *Foreign Affairs*, (April 7, 2020)

지역주의 혹은 국가주의의 부활 등, 이 모든 것들은 코로나 19가 출현하기 이전에 이미 국제 환경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지만, 대유행으로 인해 이러한 특징들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기존 국제정치의 특징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sup>6)</sup>

한 국가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전염병은 부국과 빈국, 동과 서, 개방적 및 폐쇄적 국가를 가리지 않고 황폐화시켰다. 이에 걸맞는 의미있는 지구적 대응은 많이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뉴턴의 제3의 법칙(모든 운동은 같은 크기의 상반된 반작용을 가진다)은 명백히 작동되지 않았다. 당면한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부적절한 대응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무리 강력해도 국가의 개별적인 노력으로 세계적 도전에 대응할 수 없다.

현재 미국은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두 차례의 전쟁으로 인한 피로와 국내적 수요 증가로 인해 세계적 차원에서 리더 역할을 맡지 않으려고 한다. 바이드 민주당 후보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의회와 대중의 저항으로 인해 세계적 리더십의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미중 관계는 수년 동안 악화되어 왔다. 두 나라 경제를 “분리(decoupling)”한다는 아이디어는 팬데믹 이전에도 미국이 자신의 많은 필수 상품을 잠재적인 적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상당한 힘을 얻었다. 팬데믹의 결과로 미중간 분리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대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코로나 사태로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된 틈을 타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중국에 유리한 세계질서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불확실한 선전이나 비효율적인 글로벌 행동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중국의 역량에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 19로부터 얻을 수 잠재력이 지나치게 과장되어있는 것처럼, 미국이 세계적 리더십과 능력은 너무 쉽게 저평가되었다. 팬데믹에 대한 미국이 대응이 문제가 있었지만, 미국의 파워는 물질적 능력과 정치적 정당성의 지속적인 조합에 달려 있으며, 팬데믹이 권력 변화를 유발하여 중국에 유리한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sup>7)</sup>

## 2. 안보개념의 변화

2019년 말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문제는 단순한 질병의 확산을 넘어 글로벌

6) Ibid.

7) Michael Green and Evan S. Medeiros, "The Pandemic Won't Make China the World's Leader", *Foreign Affairs*(April 15, 2020).

감염으로 확대되어 전 지구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심각하게 주고 있다.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성 질병은 보건안보에 속하며, 비전통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와 인간 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냉전시대까지 안보개념은 주권국가의 영토를 보전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조하는 국가안보 개념에 집중하였다. 1990년대 초반 냉전이 종식되면서 국제사회의 안보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도래했으며, 그에 따라 안보개념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이 나타났다. 우선 안보의 주요 쟁점이 군사적인 요소로부터 경제적인 문제, 더 나아가 자원, 환경, 사회 문제 등 모든 비군사적인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변화했다. 이와 더불어 보호할 대상으로서의 안보 개념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 국가안보는 “외부의 주권국가가 일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가하는 군사적 위협”이라고 한다면, 비전통안보는 “비국가행위자 혹은 비물질적 요소가 국가의 주권과 이익 그리고 개인, 집단,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가하는 비군사적 위협과 침해”를 말한다. 이렇게 볼 때, 비전통안보개념은 국가안보 중 일부 요소(테러리즘과 같이 비국가행위자가 국가주권에 가하는 위협)와 인간안보를 포괄하고 있다.<sup>8)</sup>

하지만 비전통안보 개념은 말 그대로 군사안보를 기초로 하는 전통적 안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엄밀한 학술적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비전통안보라는 용어 보다 주로 비군사안보, 지구안보, 인간안보 혹은 신(홍)안보 등의 개념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각 지역이 직면한 비전통안보 위협의 주체와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관심 연구영역도 상이하다. 미국의 학자는 비교적 경제안보와 테러리즘에 관심을 보이고, 유럽 지역은 사회안보와 인간안보에 관심이 많으며, 그리고 유엔과 기타 국제조직의 학자들은 환경안보와 인권문제에 대한 연구를 중시한다.<sup>9)</sup>

한편 아시아지역에서 비전통안보 위협은 ‘인간안보’의 개념을 준거점(referent point)으로 하여, 개인안보, 집단안보 및 사회안보 등을 포괄하고 있다. 즉 아시아 지역은 지역내 모든 형태의 비군사적 위협을 비전통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따라서 전염병과 불법이민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잠재적 위협들을 비전통안보의 위협요인으로 평가한다.<sup>10)</sup> 이처럼 비전통안보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학자들간 혹은 지역 및 국가간에 일치된 견해를 찾아보기 힘들다. 비전통안보는 경제발전, 사회안정, 식량확보, 자원 및 환경보호, 개인의 자유 등을 모두 포함하고

8) 유동원, “중국의 비전통안보 연구: 위협유형과 대응전략”, 『국방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2010 봄호), p. 125.

9) 傅勇, 『非傳統安全與中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7), p. 12.

10) NTS-Asia and IPA. Non-Traditional Security Challenges in Asia: What Role for Multilateralism? (Singapore: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2007), p. 3.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념 규정이 쉽지 않다.<sup>11)</sup> 그러나 비전통안보개념은 최근 국제관계의 변화와 조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

비전통안보위협 of 가장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인간안보의 개념은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1994 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처음으로 정의되었다. 이 보고서는 인간안보를 2가지의 의미로 정의한다. 첫째, 인간 개개인이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만성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한다. 둘째, 가정, 직장 또는 지역 사회에서 일상 생활 양식이 급격하고 고통스럽게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2)</sup>

또한 이 보고서는 인간안보를 구성하는 7가지의 범주로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식량안보(Food security), 보건안보(Health security), 환경안보(Environmental security), 개인안보(Personal security), 공동체안보(Community security), 정치안보(Political security) 등 제시하여,<sup>13)</sup> 질병과 같은 보건안보를 인간안보의 영역에 포함하였다. 결국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문제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되었다.

UNDP의 인간안보 개념은 그동안 국제 관계(IR)의 이론과 실천을 계속 지배하는 낡은 ‘국가안보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였다. 첫째, 안보 담론의 핵심 대상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 개인, 사회이다. 국가의 합법성은 개인을 보호할 책임을 의미한다. 둘째, 안보 위협은 더 이상 국가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안보위협은 초국가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존재한다. 셋째, 기아와 질병이 인간안보의 영역으로 인식된다. 넷째, ‘억압’로부터의 안전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했던 국가 자체가 행위 주체가 되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일상 생활 패턴에 대한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운 혼란’으로부터 보호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물질적 박탈, 질병, 자연재해 등에서 느낄 수도 있는 불안도 안보영역에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초기에 UNDP 보고서는 주류 안보학에 진입하지 못하였지만, 2003년 인간안보위원회(CHS: Commission on Human Security)가 작성한 ‘인간안보의 현재: 인간보호와 권한 부여(Human Security Now: Protecting and Empowering People)’ 보고서, 2010년

11) 또한 비전통안보와 전통안보의 구분도 쉽지 않다. 예를 들면, 경제안보, 식량안보, 및 에너지 안보 등은 1970년대 이미 일본의 중요한 국가안보의 요소로 규정되었으며, 지금도 전통적 안보이슈로 간주되고 있다. Tsuneo Akaha (2011). pp. 4-5

12)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22.

13) Ibid, pp. 22-23.

과 2012년 총회에 제출된 ‘인간안보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Human Security: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Ban, 2010, 2012a)를 통해 인간안보는 탈냉전시기 주요 안보이론의 일부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 안보의 개념은 개별적인 인간이 안보담론의 주체임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정당성은 개인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한다. 2003년 인간안보위원회(CHS) 보고서는 인간안보는 “빈곤과 절망에 벗어나 자유와 존엄성을 누리는 사람들의 권리”로 규정하였다. 또한 인간안보를 달성하는 주체 혹은 행위자로서 개인들과 시민사회에 주목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들을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14)</sup>

UNDP와 CHS 보고서의 인간안보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안보의 위협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며,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인간을 위협하는 국가 내부적 폭력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HIV/AIDS, SARS와 같은 지구적인 전염병, 난민, 강제이주민 등과 같은 인간이동, 질병, 빈곤 등과 같은 비폭력적 위협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질병과 같은 비전통안보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발생 이후 주요 강대국들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이는 각국이 여전히 군사중심의 국가안보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IPRI에 따르면, 2019년 미국의 국방예산 7230억 달러이며, 중국은 2610억 달러로 미국의 3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sup>15)</sup>

말라리아, 에이즈, 빈곤, 테러리즘과 같은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이 보다 증대되었고 다양화되지만, 각 나라들은 이를 전통적 국가안보의 위협보다 비교적 덜 위협적이고 도발적으로 느껴왔다. 그 이유는 아마 전쟁과 같은 안보 차원의 위협과는 달리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은 적절한 예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이 전통적 안보 위협보다 인류에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미 천만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그중 약 21만 명이 사망했다. 선진국들도 속수무책이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 19는 기존의 전통적 국가안보와 비전통안보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한다. 이것은 국가의 경제적, 물리적 안보를 훨씬 넘어서, 주체로서 인간의 생존(인간안보)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해 왔다. 이는 또한 안보연구가 ‘생존 이상의 것’ 또는 ‘위협을 초래하는 삶으로부터의 자유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sup>16)</sup>

14)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Human Security Now, final report of the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New York, 2003). p. 6.

15) 연합뉴스, 2020년 5월 20일

16) Booth 2007: 102

먼저 코로나 19는 기존의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구분을 넘어서 상호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UNDP 보고서는 ‘국가’를 안보의 최우선 대상으로 하는 ‘국가안보’와 ‘개인’ 혹은 ‘그 개인이 포함된 조직’을 안보의 최우선 대상으로 하는 ‘인간안보’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Acharya는 아래와 같이 제시하여 기존에 통용되는 안보 개념을 정의하였다.

〈표 1〉 4가지 안보 이미지<sup>17)</sup>

|                |                    | 위협 요인                       |                                   |
|----------------|--------------------|-----------------------------|-----------------------------------|
|                |                    | 물리적 폭력                      | 물리적 폭력+비군사적                       |
| 보호대상<br>(unit) | 개인<br>(Individual) | 개인안보<br>(Personal Security) | 인간안보<br>(Human Security)          |
|                | 국가(State)          | 국가안보<br>(National Security) | 포괄적안보<br>(Comprehensive Security)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엄격한 구분은 기존의 국가안보 이외의 비전통안보로서 인간안보(기존 안보의 개념을 확대하여 국가가 보장해줄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인간안보와 국가안보의 개념적 단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sup>18)</sup>

먼저 “국가안보 대 인간 안보”라는 대칭적 인식은 인간안보가 독립적으로 운영체계를 갖추어 국가안보를 대체할 수도 있는 듯한 이미지를 초래한다. 그러나 안보의 수단과 자원은 대부분 국가정부의 소유 및 통제 하에 있으므로, 그런 이미지는 비현실적이다.<sup>19)</sup> 실제로 코로나 19 사태는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인 동시에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코로나 19가 개인, 단체, 사회와 더불어 국가 더 나아가 세계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응과정에서 안보의 주체로서 국가와 더불어, 개인,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역할도 중요해졌으며, 안보 주체들간의 상호 협력도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별도의 정책실행에 필요한 자원과 제도, 조직을 갖지 않는 인간안보는 그러한 실행능력을 갖춘 국가안보 개념과 유기적 통합이 필요하게 되었다.

인간안보와 국가안보의 유기적 통합은 인간안보위원회(2003) 보고서에서 그 필요성이

17) Amitav Acharya, “Human Security: East Versus West”, International journal, 56(3),(July 2001), p. 453

18) 장진섭, “인간중심 국가안보: 새로운 안보 현실에 대응하는 안보 패러다임”, 『군사논단』, 제97호(2019년 봄), pp. 213-214.

19) 위의 논문

제기되었다. 보고서는 “국가안보는 위협의 주체를 적대적인 국가로 상정하고, 군대를 통해 국가, 제도, 가치, 국민 등을 방어하는 것이며, 인간 안보는 외부의 적대적 국가보다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사람(개인, 사회, 집단)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국가는 더 이상 유일한 행위자가 아니며, 지역 및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NGO) 및 시민 사회 혹은 개인이 인간안보 문제에 관여하며, 이를 위해 사람들과 사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 (empowering people and societies)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인간안보위원회(2003)는 인간안보와 국가안보는 상호 보완적이며, 의존적이며, 인간안보가 없으면 국가 안보에 도달 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국가안보가 없으면 인간안보도 존재하기 힘들다고 파악하였다.

인간안보 개념에서는 국가의 이중적 성격 때문에 국가만이 주요 행위자가 될 수 없고, 다른 행위자들, 초국적 기구, 국제지역적 기구, NGO, 시민사회 등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간안보를 달성하는 주체 혹은 행위자로서 개인들과 시민사회에 주목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들을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20)</sup>

코로나 19가 제기하는 물리적, 생물학적 위협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과 마찬가지로 안보연구자들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코로나 19가 ‘존재’라는 근본적인 생활 경험에 가해지는 위협, 즉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이다.<sup>21)</sup> 존재론적 안보의 개념은 R.D. Laing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용어로서, 현실에서 안정적이고 완전한 존재(a stable and whole existence)로서 ‘지속적인 사람’과 관련이 있다.<sup>22)</sup> 앤서니 기든스에 의하면, “존재론적 안보는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안전감 및 다른 사람들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신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뢰를 얻는 것은 ‘사람이 심리적 행복감을 유지하고 실존적 불안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sup>23)</sup>

존재론적 안보는 Jef Huysmans에 의해 국제관계(IR)학 처음 도입되었고, 브렌트 스틸과 제니퍼 미첸에 보다 발전되었다. 존재론적 안보는 주체들이 자신의 정체성 안정을 위해 일관된 자기 내러티브(생물학적 연속성)를 찾고, 국가들이 “일관된 자기(self) 개념”을 유지하도록 행동 조정을 유도하거나 공동체가 “안전한”정체성을 구축하고 외부인을 물리치도록 자극할 것을 제안한다.(Kinnvall, 2004) 사실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감은 국가로 하

20)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Human Security Now, final report of the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New York, 2003). p. 6.

21) Xander Kirke, “Anxiety and COVID-19: The Role of Ontological Security and Myth”, E-International Relations, May 29 2020,

22) R. D. Laing, The Divided Self: A Study of Sanity and Madness, (London: Tavistock, 1960), p.39.

23) Anthony Giddens. Modernity and Self-Identity, (Polity: Cambridge, 1991), p. 37.

여금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존재’의 관념(the sense of ‘being’)을 찾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치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속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존재론적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자의 행동을 언급한다.<sup>24)</sup>

Covid-19는 우리의 자아,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세계 내에서' 행동하는 방식에 독특한 도전을 제시했다. 모호한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우리의 일상생활, 직장 또는 “제도화된 일상”(institutionalised routines)<sup>25)</sup>은 타격을 받았다. Covid-19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 활동,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신뢰 관계, 그리고 세상 속의 존재를 결정할 자유를 갑자기 파괴하여, 불안을 발전시키고 촉진하였다. 최소한 사회적 거리는 사회의 주요 장소(카페, 레스토랑, 체육시설 등)를 폐쇄하는 것과 같이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감소시켰다. 우리의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은 제한이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해야하기 때문에 불안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기조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물리적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sup>26)</sup>

인간안보 (Human Security)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결핍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와 존엄 속에서 살 권리를 의미한다(the right of people to live in freedom and dignity, free from fear and want). 존재론적 안보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심리적 안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유와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안정된 자아의 우선적 존재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이 존재론적 안보가 부족한 경우, 다른 개인과 기본 신뢰 관계를 맺을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두려움과 결핍에서 벗어나 자유와 존엄성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안보는 존재론적 안보를 전제로 한다.<sup>27)</sup>

그러나 존재론적 안보가 반드시 인간안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은 문화, 인종 또는 종교에 근거한 다양한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존재론적 안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존재론적 안보는 ‘자기’와 ‘타자’ 또는 ‘친구’와 ‘적’ 사이의 경계를 강화할 때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안보는 ‘자기’와 ‘타자’를 모두 포함하는 ‘인간’이라는 보편적 범주를 안보의 기본 항목으로 두어 이 경계를 초월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인간안보는 “친구와

24) Viktoria Arkchurina and Vincent Della Sala, ‘Russia, Europe and the Ontological Security Dilemma: Narrating the Emerging Eurasian Space’, Europe-Asia Studies, Vol. 70. 2018.

25) Anthony Giddens, Modernity and Self-Identity, p. 61

26) Xander Kirke, “Anxiety and COVID-19: The Role of Ontological Security and Myth”, E-International Relations, May 29 2020,

27) Giorgio Shani, Human Security as ontological security: a post-colonial approach, Journal of Postcolonial Studies, Volume 20, 2017

적”이라는 이분법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시도한다.

Covid-19는 실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동과 집회의 자유와 같은 근본적인 자유에는 제한이 가해졌으며, 이로 인한 비대면 접촉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주요 정보 채널이 사이버 공간의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교통 산업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영향을 받아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쳤으며, 식품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생필품과 의료 수단의 정치화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국제무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수백만 명이 직장 and 생계 수단을 잃었다. 두려움과 공포가 대중에게 널리 퍼졌다.

코로나 19는 경제와 사이버 안보를 포함한 정치적 안보 영역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비 전통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국가는 보다 권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시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동과 표현의 자유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종종 이러한 비 전통적 안보 위협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고 정당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한다. 이는 대유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보 위협이다.<sup>28)</sup>

### Ⅲ. 안보의식조사의 변화 추세

#### 1. 조사개요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의 2020 ‘범국민안보의식조사’는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안보의식조사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일반국민은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는 국방·안보 전문가로 한정하여, 각각 1,200명과 62명의 표본으로 8월 28일 ~ 9월 16일 동안 온라인 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그 목적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안보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2.83\%p$ (일반국민)이다.

안보문제연구소는 지난 32년간 매년 국민안보의식 조사를 시행해왔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축적된 자료는 양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지

28) Dhritiman Banerjee, “Covid-19: A New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 Modern Diplomacy, (June 3),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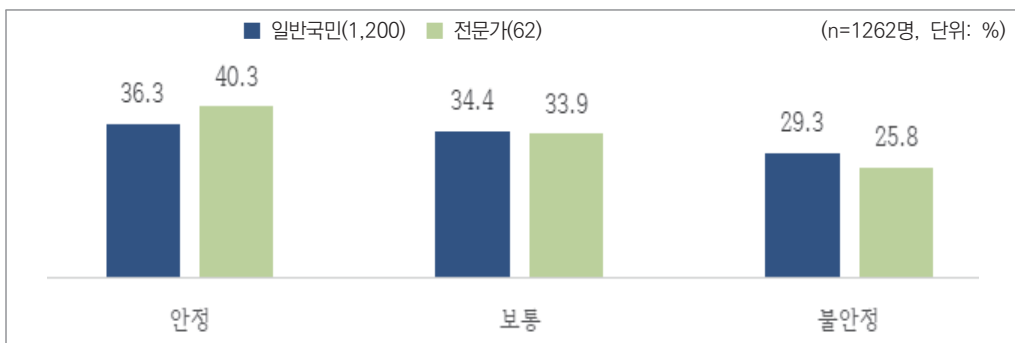
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민안보의식 변화와 관련하여 의미가 큰 설문 문항들을 대상으로 본장에서는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외요인, 안보위협요인 감소 방안, 주변국 인식, 국가정체성 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그 추이를 분석하였다.

## 2. 안보의식 전반

### 가.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과 안보의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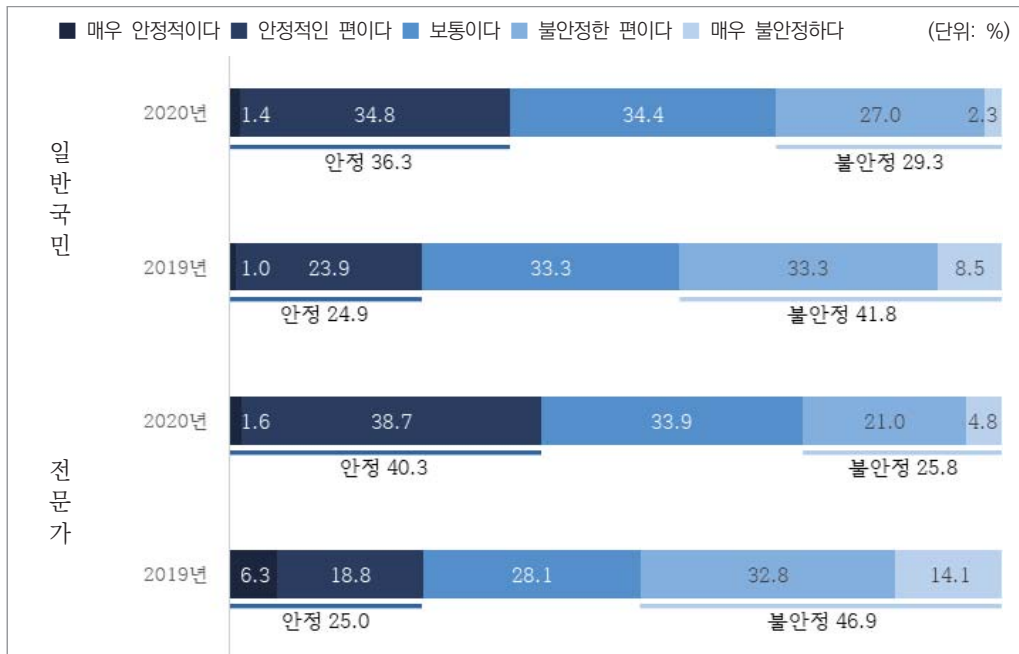
2020년 안보의식조사(그림 1)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안정적(36.3%)이거나 보통(34.4%)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보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응답이 36.3%로, ‘불안정적’(29.3%)이라는 응답보다 6.9%p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그리고 〈그림 2〉에서 나타난 것처럼, 2019년 대비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36.3%로 11.4%p(2019년 24.9%) 증가한 반면, ‘불안정적’이라는 응답은 29.3%로 12.5%p(2019년 41.8%) 감소하였다. 한편 전문가 조사에서 ‘안정적’이라는 응답이 40.3%로, ‘불안정적’(25.8%)이라는 응답보다 14.5%p 높게 나타났고, 2019년 대비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40.3%로 15.3%p(2019년 25.0%) 증가한 반면, ‘불안정적’이라는 응답은 25.8%로 21.1%p(2019년 46.9%) 감소하였다.

〈그림 2〉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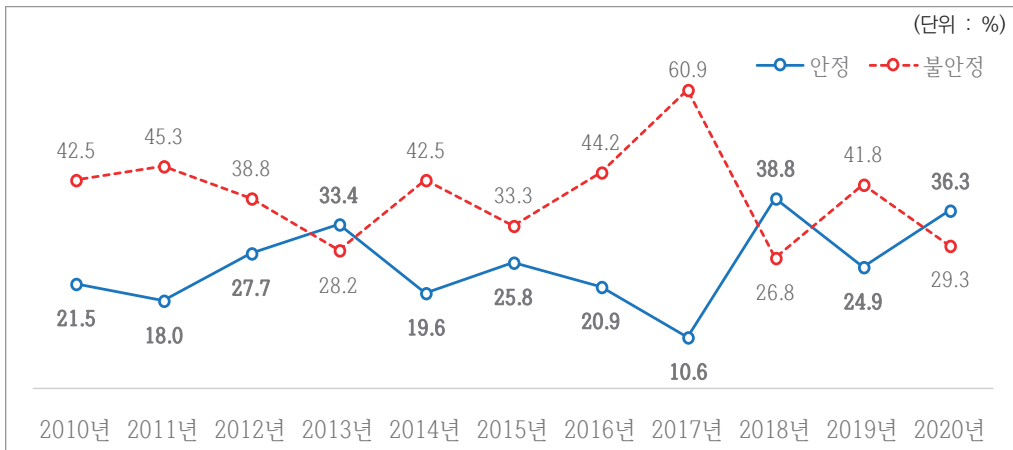


전문가 집단과 일반국민 모두 안보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한국안보에 주요 위협요인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이 감소한 반면, 코로나19가 초래한 전세계적인 위기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0년 8월 초에 KBS가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19 이후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 평화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40.5%)라고 응답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응답(32.5)보다 8%p 높게 나왔다.<sup>29)</sup>

또한 최근 10년간(2010~2020)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추이(그림 3)를 살펴보면, 2010년에서 2017년까지 기간중 2013년을 제외하고 모두 국민들은 안보상황을 불안정하다고 인식하였고, 2017년은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60.9%로 정점을 기록하였다. 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안보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응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1년 18.1%에서 2013년 33.4%로 상향되었다. 이는 2000년대 초기와 비교하여, 강화된 한미동맹관계,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 한국과 북한과의 국력 격차의 증대와 북한정권과 북한 도발에 대한 냉정한 평가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9)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 “2020년 국민 통일인식 조사 결과”, 2020.8

〈그림 3〉 한국의 전반적 안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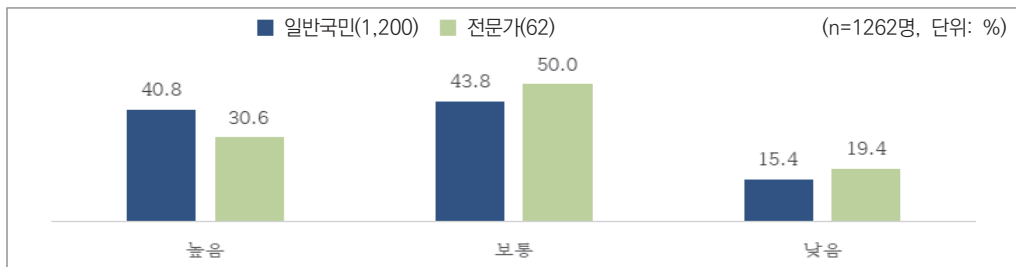
그리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안보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응답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불안정하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이는 2014년 이후 지속된 북한의 도발(300mm 방사포, 로동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신형 단거리 미사일, KN 미사일, 잠수함발사탄 도미사일:SLBM)과 핵실험, 2015년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서부전선 포격 사건, 2016년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과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의 심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년에는 대내 정치적 문제(문재인정부의 출범)와 대외적으로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특히 북한은 2017년 들어서 강성대국 건설의 구호에 맞추어 수소탄 실험(6차 핵실험)과 신형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다양한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였고, 이에 미국은 북한이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해결책을 사용 고려를 밝히면서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이처럼 불안정한 안보정세는 국민안보의식조사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최근 3년(2018-2020) 동안 안정과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교대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안정적이라는 인식(38.8%)이 불안정하다는 인식(26.8%)보다 12%p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018년 2월 한국에서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의 개선,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에 대한 한국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9년 북미간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되고 북미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이 이어지자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41.8%까지 치솟았다.

## 나.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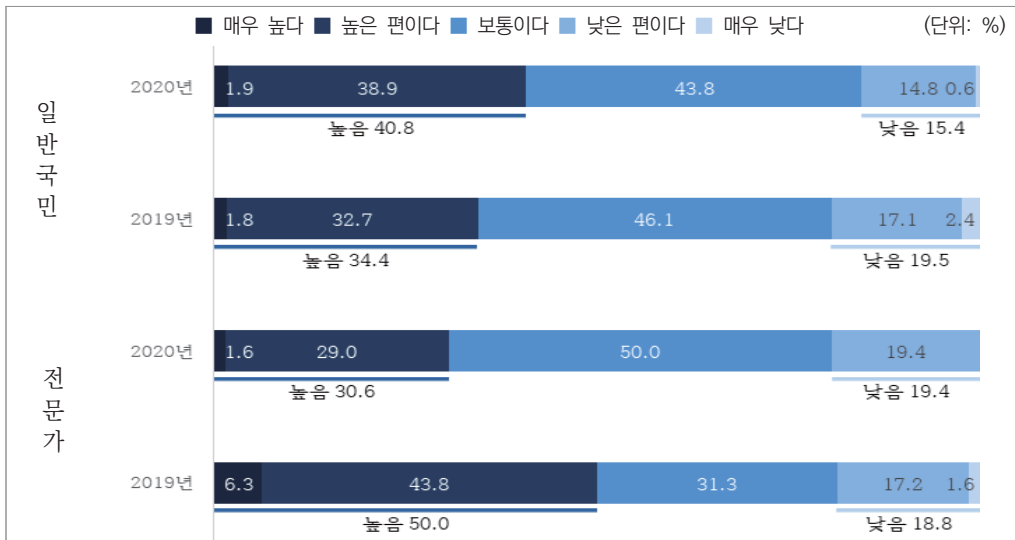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그림 4>에서,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40.8%로, ‘낮다’(15.4%)는 응답보다 25.4%p 높게 나타났으며, <그림 5>에서 2019년 대비 ‘높다’는 응답은 40.8%로 6.4%p(2019년 34.4%) 증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15.4%로 4.1%p(2019년 19.5%) 감소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30.6%로, ‘낮다’(19.4%)는 응답보다 11.3%p 높게 나타났으며, 2019년 대비 ‘높다’는 응답은 30.6%로 19.4%p (2019년 50.0%) 감소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19.4%로 0.6%p(2019년 18.8%) 증가하였다.

〈그림 4〉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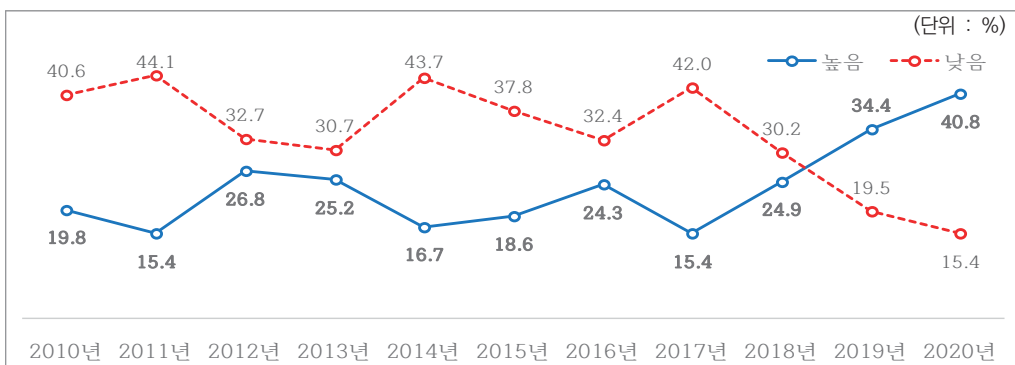
주목할 점은 일반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낮다’는 응답보다 25.4%p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2019년 대비 ‘높다’는 응답은 6.4%p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높다’는 응답이 ‘낮다’는 응답보다 11.3%p 높게 나타났으며, 2019년 대비 ‘높다’는 응답은 19.4%p 감소하였다. 전문가(30.2%)들과 일반국민(40.8%)과의 ‘높다’는 응답의 차이는 10.6%p로 나타나며, 전문가 집단에서 높다는 응답이 전년대비 20% 정도 감소한 것은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안보의식에 대한 강조점이 다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전문가들은 코로나 19의 안보에 대한 영향을 보다 엄중하게 생각하고, 질병을 비전통안보 특히 인간안보 혹은 존재론적 안보의 영역에서 분석하지만, 일반국민들은 코로나 19의 경제적 영향에 보다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국민조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는 점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그림 5〉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지난 10년간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은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과 거의 일치하여 나타나고 있다. 즉 안보상황이 불안정하다고 인식하는 해당 년도(2010-2017)에는 거의 대부분 안보의식 수준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주목할 점은 2017년 이후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6〉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 다.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국민이 아닌 본인의 안보의식수준을 묻는 질문(그림 7)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평균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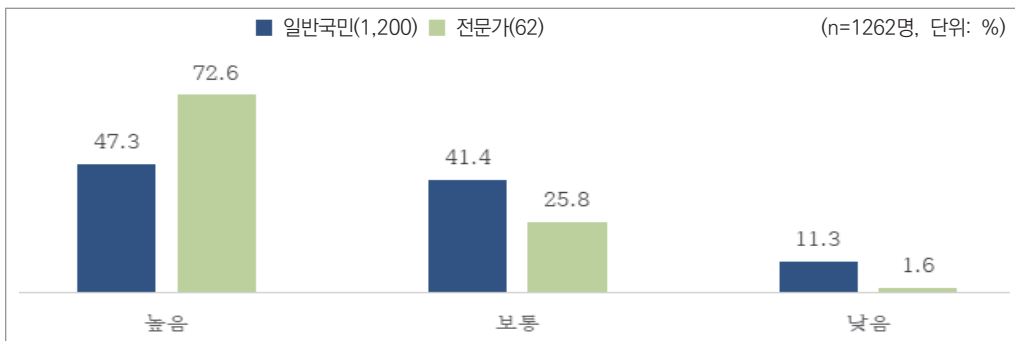
로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조사에서는,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47.3%로, ‘낮다’(11.3%)는 응답보다 35.9%p 높게 나타났다. <그림 8>에서 2019년 대비 ‘높다’는 응답은 13.3%p(2019년 34.0%) 증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11.3%로 4.6%p(2019년 15.9%) 감소하였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높다’는 응답이 72.6%로, ‘낮다’(1.6%)이라는 응답보다 71.0%p 높게 나타났으며, 2019년 대비 ‘높다’는 응답은 72.6%로 13.3%p(2019년 85.9%) 감소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1.6%로 작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경우, 자신의 안보의식이 높다는 의견이 일반국민에 비해 25.3%p 높게 나타났고, 낮다는 의견은 9.7%p 적었다. 전문가 집단은 국내 대학 및 안보관련 연구소에 근무하는 안보, 국방 전문가로 구성되어 평소에 국제 및 한국 안보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안보 및 국제관계 이론에도 정통하여 자신의 안보의식이 높다는 의견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집단이 일반국민과에 비해 안보의식이 25.3%p 높게 나타난 것은 일반국민의 상대적으로 낮은 안보의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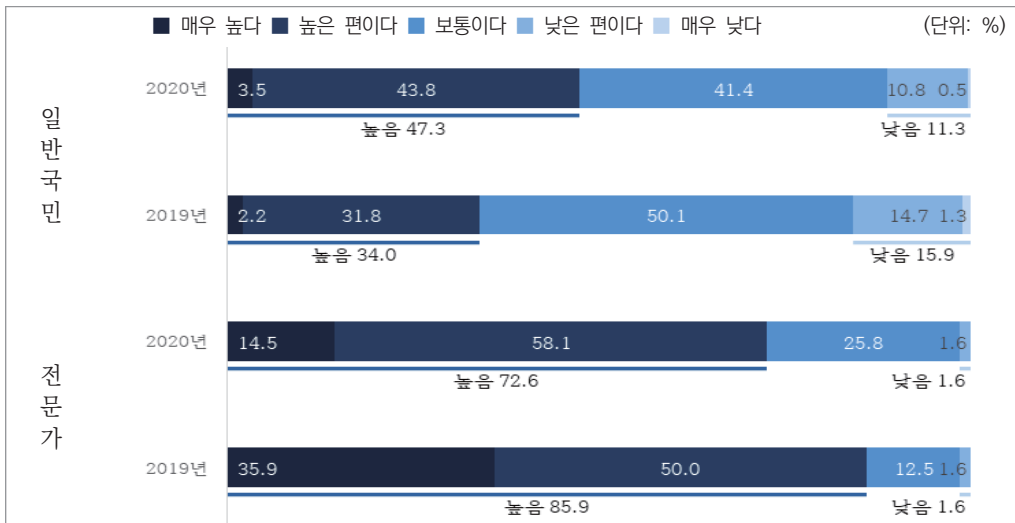
일반국민의 경우, 자신의 안보의식이 높다는 의견(47.3%)이 2019년 대비 13.3%p(2019년 34.0%) 증가하였는데, 이는 올해 코로나 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그 영향이 자신의 일상과 인간과 개인안보에 까지 미치게 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의 고조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의 안보의식이 높다는 응답이 자신이 아닌 일반 국민의 안보의식이 ‘높다’는 응답(40.8)에 비해 6.5% 높게 나타났다.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과 타인(국민)의 안보의식 수준 평가는 전반적으로 동조화 현상을 보이지만, 본인의 안보의식이 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높다’는 응답은 남성, 지역별로 경기/인천, 광주/전라,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 최종 학력별로 4년제 이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림 7>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그림 8〉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전년도 비교



### 3. 국가안보의 위협요인과 대응방안

#### 가. 대외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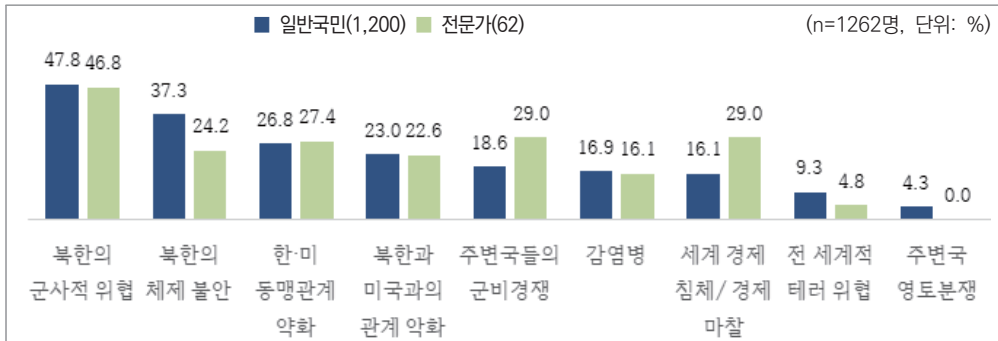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에 대한 응답에서, 일반국민 조사는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북한의 체제 불안’(37.3%)과 한미동맹의 약화(26.8%), ‘북미관계 악화’(23%), ‘주변국 군비경쟁’(18.6%), ‘질병’(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에서 일반국민 응답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미동맹의 약화’가 각각 40.8%로 동일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변국 군비경쟁’과 ‘세계 경제의 침체나 경제 마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은 7.0%p(2019년 40.8%), ‘북한의 체제 불안’ 응답은 12.8%p(2019년 24.5%) 증가하였다.

2020년 일반국민조사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북한의 체제 불안’ 등 북한이 다시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대외요인으로 등장하였고, ‘질병’이 처음 국가안보에 위협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말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질병과 질병의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반영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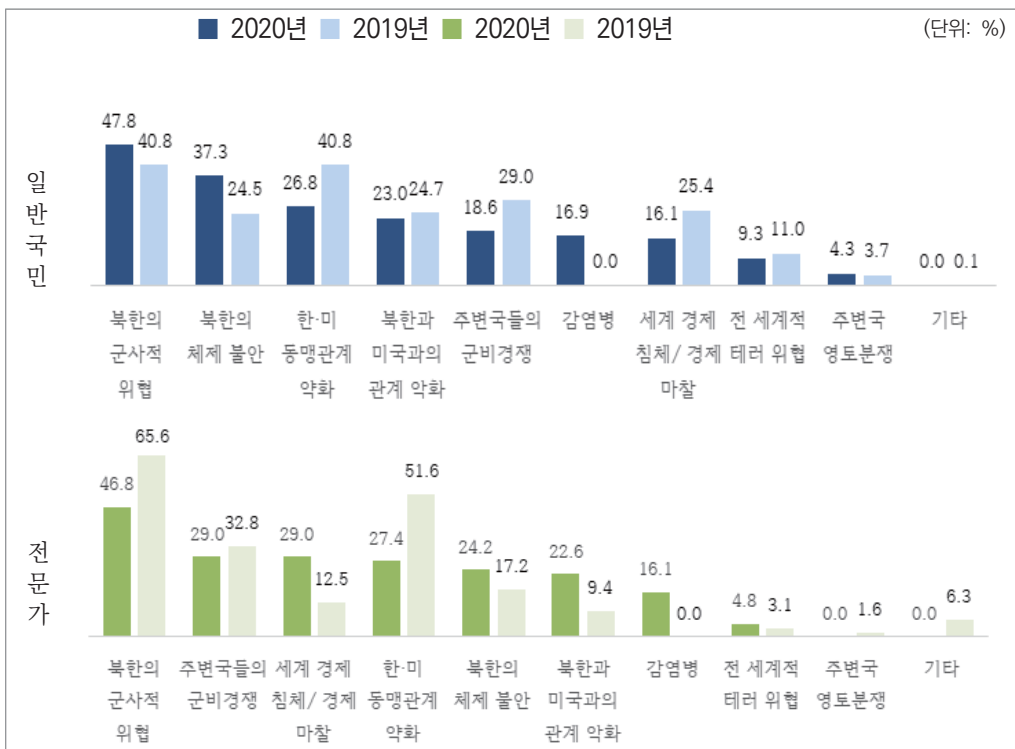
전문가들 조사에서, 전문가들 응답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변국들의 군비경쟁’과 ‘세계 경제의 침체나 경제 마찰’(각 29.0%)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은 18.8%p(2019년 65.6%) 감소한 반면, ‘세계 경제의 침체나 경제 마찰’이라는 응답은 16.5%p(2019년 12.5%) 증가한 한편,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2019년 32.8%).

〈그림 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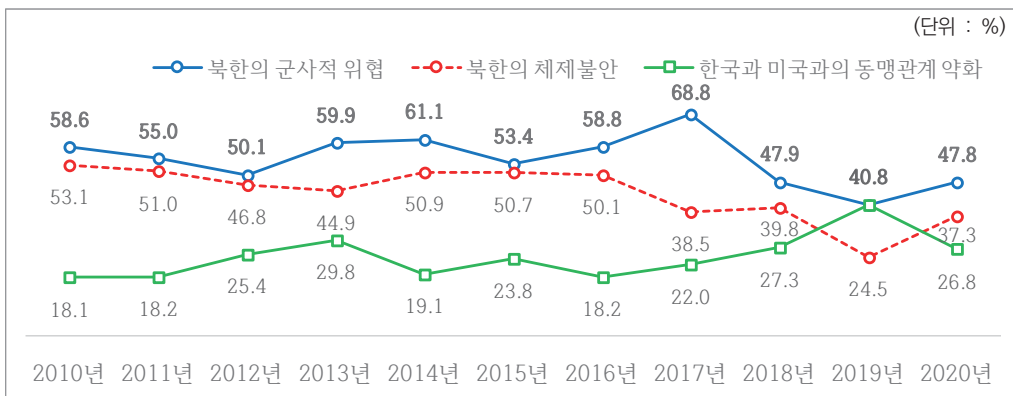
〈그림 1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전년도 비교



지난 10년간(2010-2020) 추이 변화(그림 11)를 보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북한의 체제불안’(2019년 제외)이 차지하였고, ‘한미동맹 약화’가 세 번째로 나타났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국가안보에 주요한 위협이 된다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2006년 조사에서 18.6%의 응답자들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장 큰 국가안보위협 요인으로 답변하였지만, 2010년 58.6%로 치솟았으며, 이는 4년 만에 40% 정도 증가한 수치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 응답은 50%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 최고치인 68.8%를 기록하였고, 2018년에서 2020년 동안에는 40%대로 낮아졌다.

2010년 58.6% 응답은 그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사건 등이 발생하여 북한의 도발이 현실적으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국민의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1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1+2순위 기준, 상위 3개 응답 제시)



그리고 2017년 응답이 최고치인 68.8%를 기록한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등 미사일 개발, 북미간 군사적 위협 증대 등 불안한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018년에서 2020년 기간 동안 ‘북한의 군사적 위협’ 응답이 40%대로 낮아진 것은 2018년 이후 북핵 관련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특히 2020년에는 미국 대통령선거와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었다.

지난 10년간 조사결과를 보면, 주목할 점은 한미동맹의 약화가 주요 국외위협 요인으로 지적되었다는 것이다. 2006년 11.5%의 일반국민 응답자가 한미동맹의 약화를 주요 국외위협 요인으로 인식하였고, 매해 조금씩 상승하여 2010년 18.1%를 기록하고 이후 2018년까지 평균 20%대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2019년 ‘한미동맹의 약화’ 응답이 최고치인

40.8%를 기록한 후, 2020년 26.8%로 하락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2008- 2013)와 박근혜 정부(2014-2017) 시기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정책은 한미동맹의 강화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약화가 중요한 안보위협 요인으로 등장한 것에 대해 보다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2019년 ‘한미동맹의 약화’ 응답이 최고치인 40.8%를 기록한 것은 같은 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인해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의 증대와 일본과의 지소미아 연장문제와 한일관계의 악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점들이 안보의식에 반영된 것이다.

## 나. 대내요인

일반국민 조사에서,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으로 ‘국내 경제의 불안’이라는 응답이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내 정치의 불안’ (46.7%), ‘국민안보의식 해이’(21.2%), ‘사회불평등 심화’(19.2%), ‘감염병’(1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국내 경제의 불안’이라는 응답은 1.2%p(2019년 48.1%), ‘국내 정치의 불안’이라는 응답은 2.4%p(2019년 44.3%) 증가하였다.

일반국민들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으로 ‘국내 경제의 불안’을 가장 큰 요인을 지정한 것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실감하면서, 이 점들이 안보의식 조사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올 11월 11일 KDI는 ‘2020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1%로, 실업률을 4.0%로 전망했다.<sup>30)</sup> 코로나 19의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수의 서비스업, 제조업에 영업 제한, 금지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에 따른 소비 위축도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전문가의 경우, ‘이념갈등’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내 정치불안, 국내 경제 불안, 사회불평등 심화가 33.9%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감염병이 24.2%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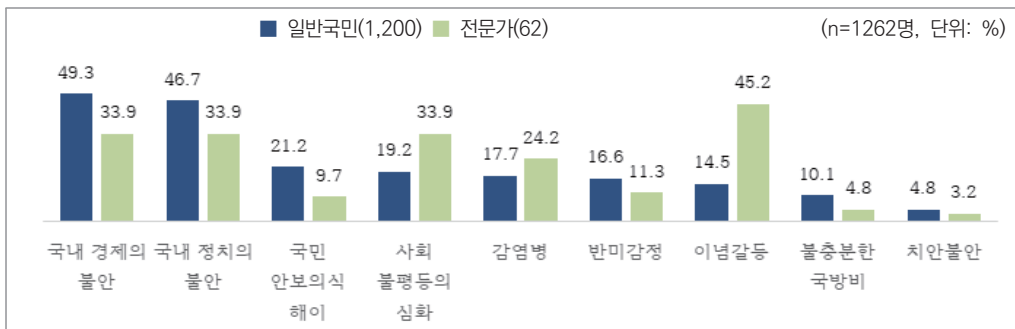
주목할 점은 전문가들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 요인으로 ‘이념갈등’을 지정한 응답이 45.2%이지만, 일반국민의 응답은 14.2%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보인 이유는 전문가들은 비교적 코로나 19의 경제적 영향,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정책 전반, 북한문제 등에 대한 여야 혹은 보수와 진수의 대립에 주목한 반면, 일반국민들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문제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 시민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회갈등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이었고(5점 만점에 4.49점), 그 다음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30) 연합뉴스, 2020.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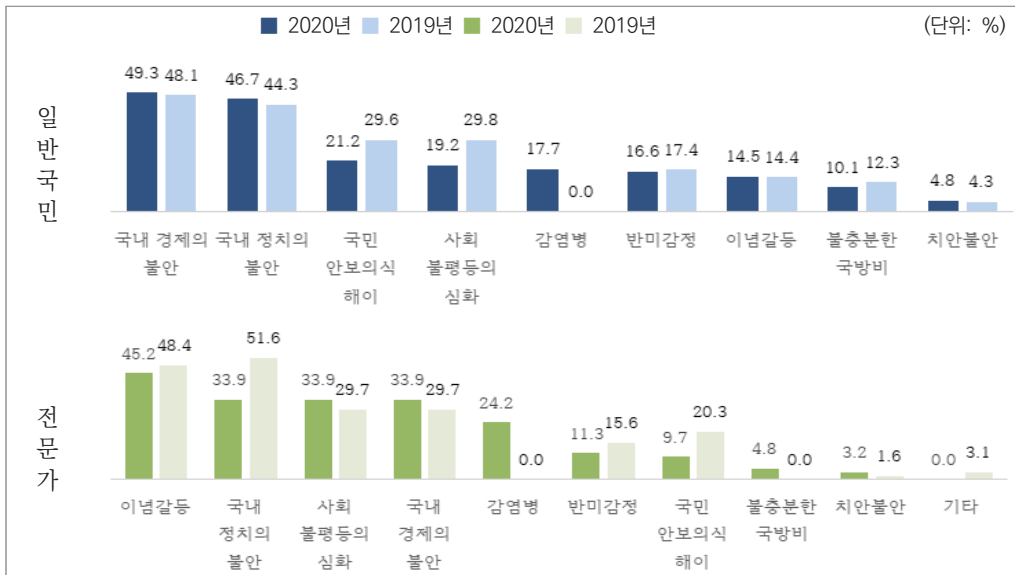
갈등' (4.42점),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4.22점), '갑을 관계 갈등'(4.13점) 순이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갈등이 "더 심각해졌다"고 답변하였다.<sup>31)</sup>

또한 전문가들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으로 감염병(24.2%)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국민들의 응답(17.7%)보다 6.5%p 높은 수치이다. 이는 전문가들이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을 안보영역에 포함하여, 비전통안보 혹은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림 1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그림 1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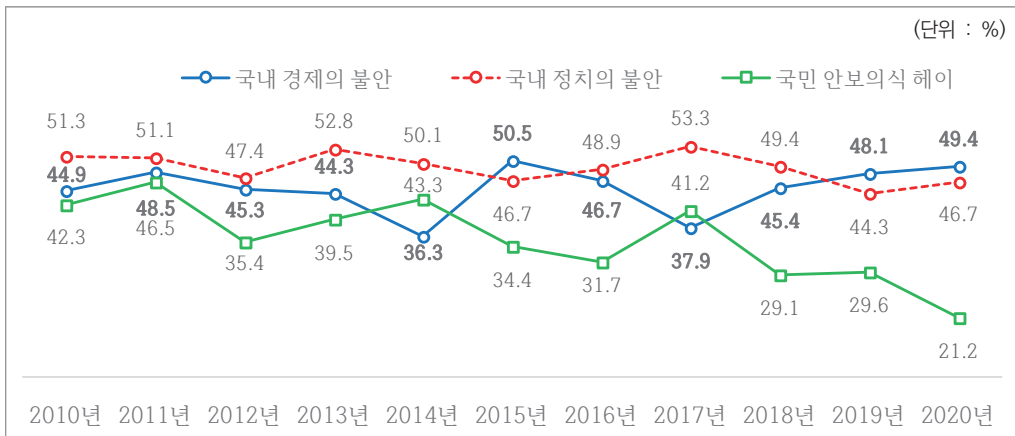


31) 조선일보, 2020.11.25

지난 10년간(2010-2020)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대내요인<그림 14>을 살펴보면, 2010년에서 2018년까지(2015년 제외) 기간 동안 ‘국내 정치의 불안’이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되었으며, 2015년, 2019-2020년에는 ‘국내 경제의 불안’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국내 경제의 불안의 경우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이며, 국내 정치의 경우 2017년 가장 높은 요인이었지만 이후 하락하다 2020년 반등하고 있다.

한편 ‘국민안보의식의 해이’는 2010년에서 2018년 기간 동안(2014년, 2017년 제외) 국내경제와 국내정치 요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으며, 2014년과 2017년의 경우, ‘국민안보의식의 해이’는 ‘국내정치 불안’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민안보의식의 해이’는 중요도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 국민들의 안보의식수준 평가가 낮을수록,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대내요인에서 ‘국민안보의식의 해이’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2014년과 2017년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가장 낮게 지적된 시기이며, 2018년 이후 국민들의 안보의식 높게 평가된 시기이며, 이러한 점들이 안보의식 조사 결과에 반영되었다.

〈그림 1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1+2순위 기준, 상위 3개 응답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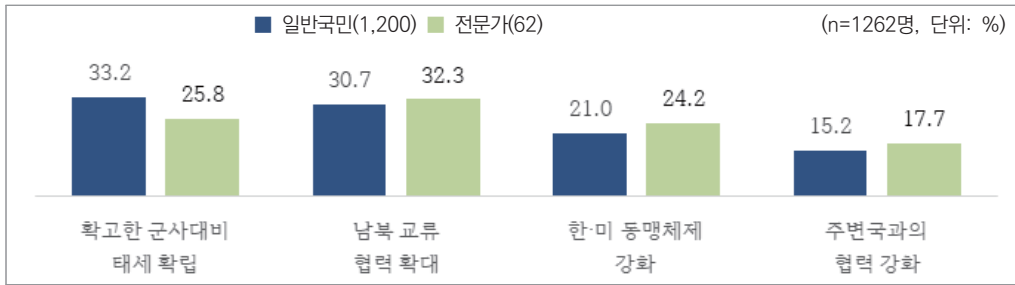


#### 다.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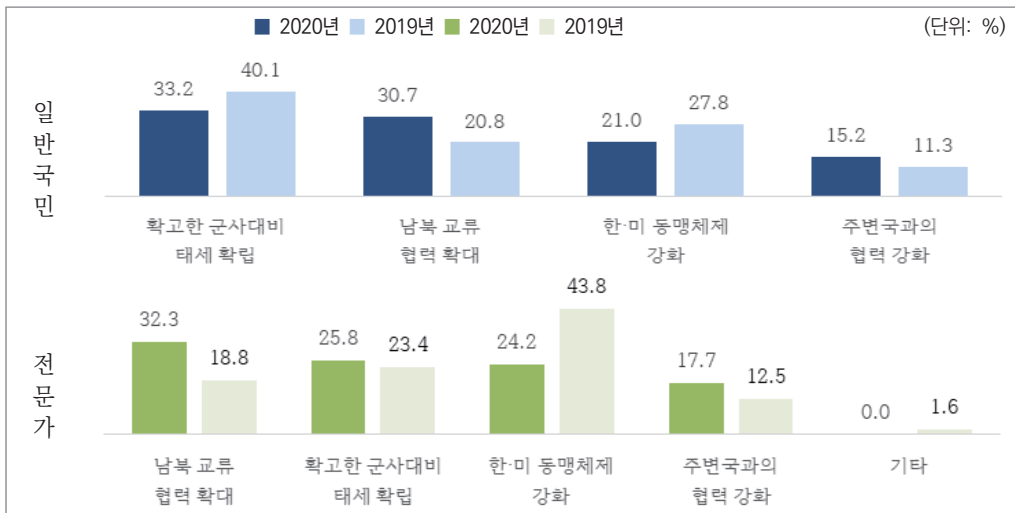
일반국민의 조사에서, 안보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33.2%)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남북교류 협력 확대’(30.7%), ‘한미동맹 강화’(2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경우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40.1%)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동맹 강화’(27.8%), ‘남북교류 협력 확대’(2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는 2019년 대비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이라는 응답은 6.9%p 감소한 반면, '남북교류 협력 확대'라는 응답은 9.9%p 증가하였고, '한미동맹 강화'는 6.8%p 감소하였다.

〈그림 15〉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그림 16〉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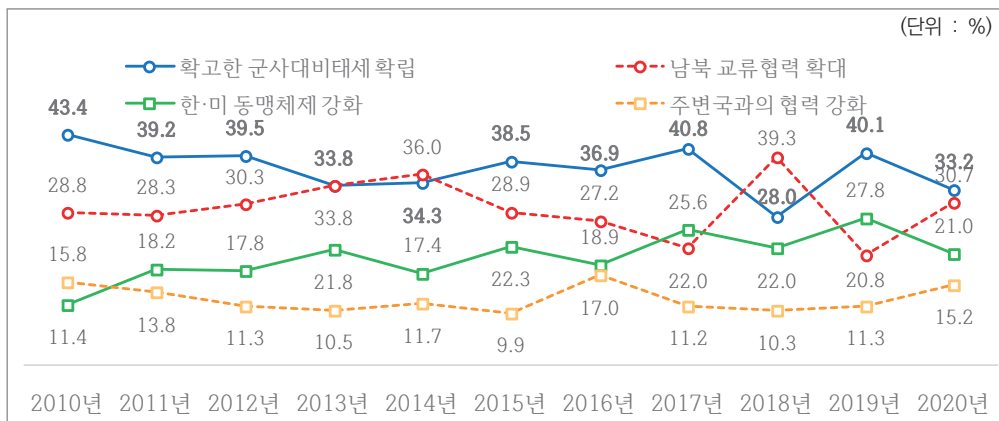


전문가조사에서, 안보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교류 확대' 응답(32.3%)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25.8%), '한미 동맹체제 강화'(2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남북 교류 확대'라는 응답은 13.5%p(2019년 18.8%) 증가했으며,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이라는 응답 또한 2.4%p(2019년 23.4%) 증가하였고, '한미 동맹체제 강화'는 19.6%p(2019년 43.8%) 감소하였다. 2020년 조사에서 안보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이 '남북교류 확대'를 최우선으로 선택한 것은 한국안보의 주요 위협요인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 혹은 '북한체제의 불안' 등 북한과

관계되어있기 때문에 ‘남북교류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안보위협을 줄이고 함이다. 안보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광주/전라, 직업별로 학생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

지난 10년간(2010-2020) 국민안보의식 조사<그림 17>에서, 전반적으로 2014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예를 들어, 2018년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영향으로 남북교류협력 확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19년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되고 북중관계가 강화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확립’ 의견은 40.1%로 올라갔고, 2020년에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확립’이 6.9%p로 감소한 반면, 남북 교류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9.9%p 증가하였다.

<그림 17>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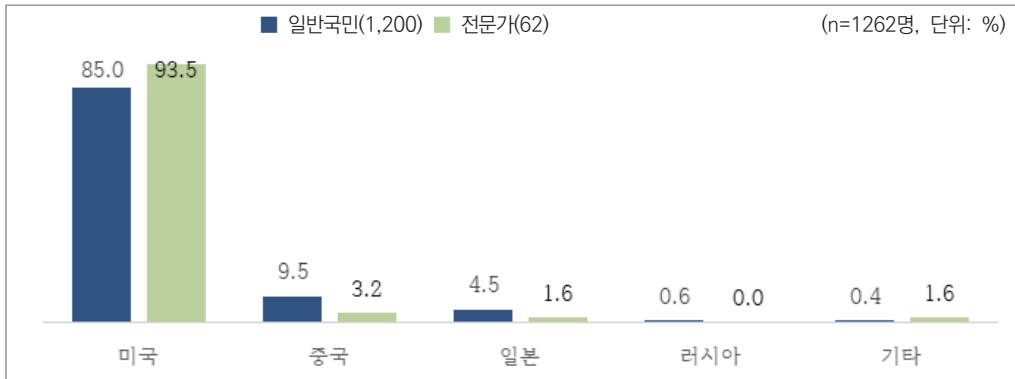
## 4. 주변국에 대한 인식

### 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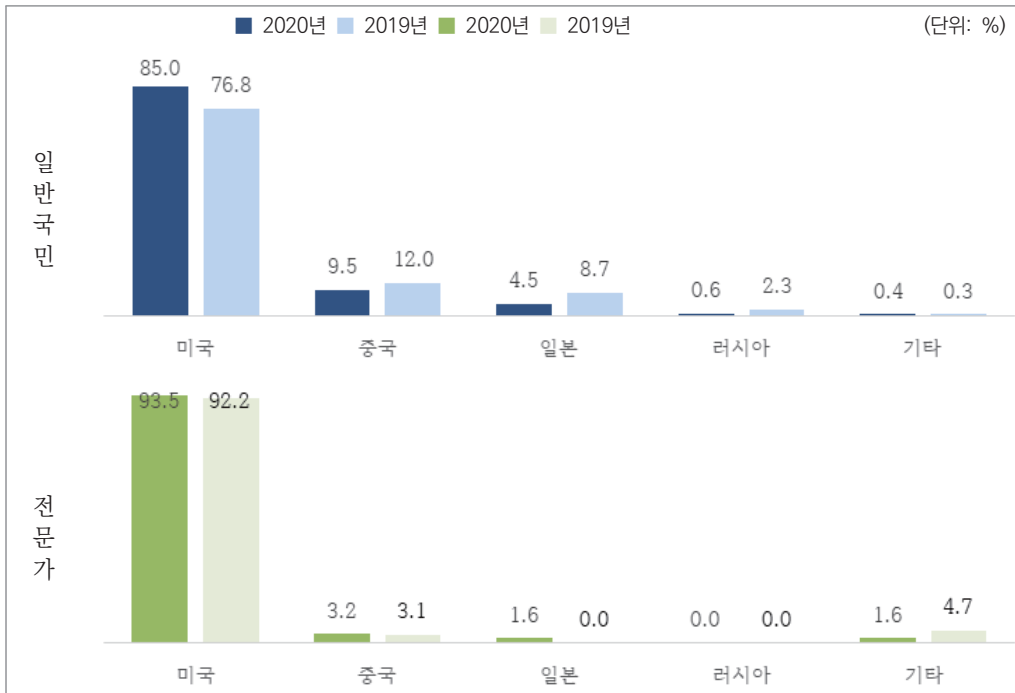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그림 18>,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8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9.5%), ‘일본’(4.5%), ‘러시아’(0.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9>에서 나타난 것처럼, 2019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8.2%p(2019년 76.8%) 증가한 반면, ‘중국’이라는 응답은 2.5%(2019년 12.0%) 감소하였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미국’이라는 응답이 9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9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1.3%p(2019년 92.2%) 증가하였다. 전문가 조사가 일반국민 조사보다 미국의 중요성이 8.5%p 높게 평가되었고, 중국의 중요성은 일반 국민이 전문가보다 6.3%p 높게 나타났다.

〈그림 18〉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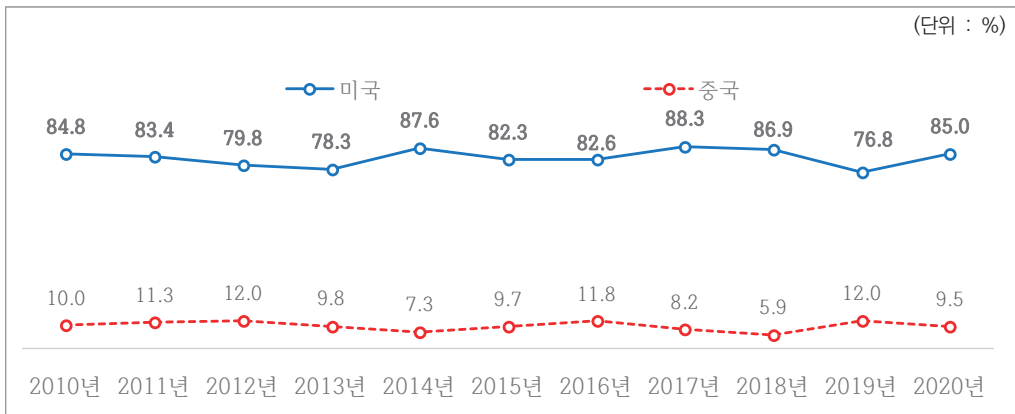
〈그림 19〉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전년도 비교



〈그림 20〉이 보여주듯이, 지난 10년간(2010-2020) 안보측면에서 중요한 국가에 대한 응답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이 평균 80% 이상의 응답을 기록하여 압도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평가되며, 그 다음 중국이 평균 1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중요하다고 응답이 2017년 최고치인 88.3%를 기록한 이후 2018년 86.3%, 2019년 76.8%로 하강하였고, 2020년 다시 85%로 상승하였다. 2017년의 경우,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치를 기록하여 미국의 안보적 존재감이 상승한 시기이며,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8.2%로 하강하였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중국의 중요성은 최저치인 5.9%를 기록하였다.

2019년의 경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되고, 오히려 4, 5차 북중 정상회담이 진행되어 북중관계가 강화되면서, 미국의 중요성은 최저치인 76.8% 기록하였고, 중국의 중요성은 최고치인 12%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한반도의 안보상황, 북한의 도발, 북미 혹은 북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안보측면에서 중요한 국가의 중요도는 변화되고 있다.

〈그림 20〉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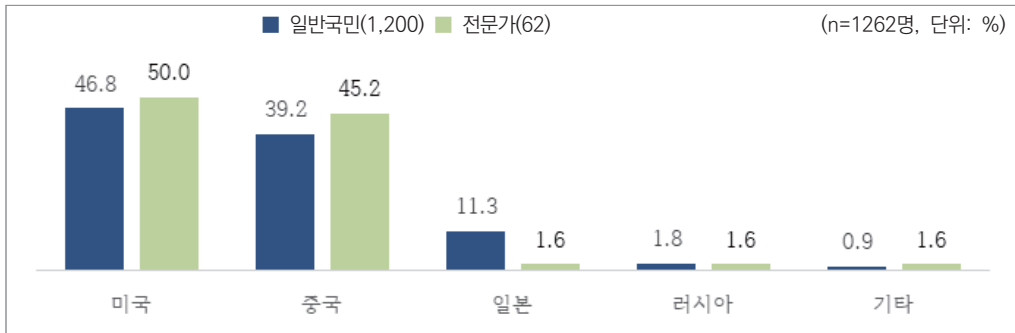


#### 나. 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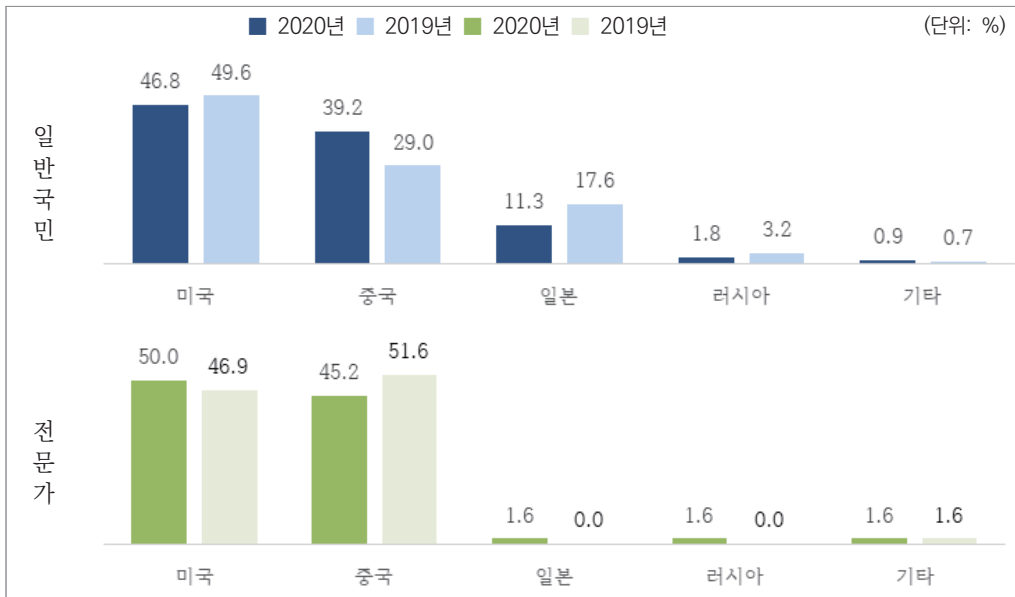
일반국민 안보의식조사(그림 21)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45.2%), ‘일본’(1.6%), ‘러시아’(1.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2〉가 보여주듯이, 2019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2.8%p(2019년 49.6%) 감소하였고, ‘중국’이라는 응답은 10.2%p(2019년 29.0%) 증가하였다. 전문가 조사에서, ‘미국’이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4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3.1%p(2019년 46.9%) 증가하였고, ‘중국’이라

는 응답은 6.4%(2019년 51.6%) 감소하였다.

〈그림 21〉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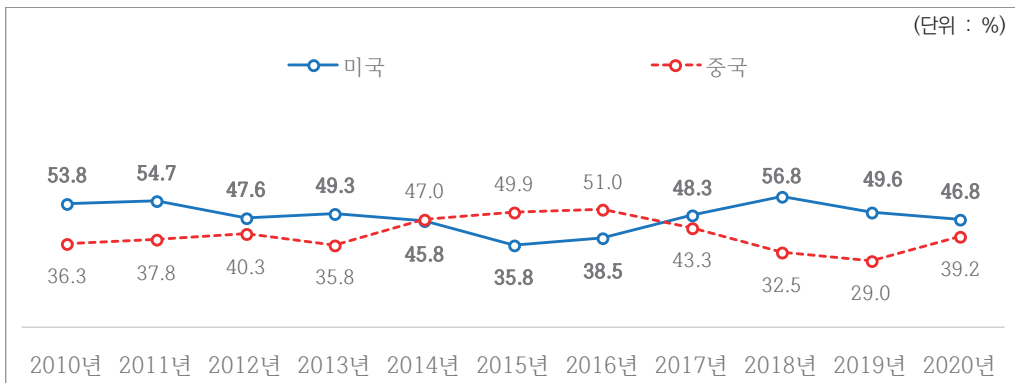
〈그림 22〉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전년도 비교



〈그림 23〉처럼, 지난 10년(2010~2020)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대부분 미국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중국이 차지하여 두 국가가 양분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년 동안 경제적 중요성이 미국을 추월하여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의 호전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며, 당시 한중관계는 수교이래 최고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6년 7월 한반도에 사드배치가 공식화되면서, 한중관계가

냉각되었고 그 여파로 한중 경제관계도 타격을 받아서 2017년 이후 중국의 경제적 중요성 평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에는 최저치인 29%를 기록한 후 2020년 39.2%로 회복되었다. 미국의 경우 2018년 56.8%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중요도가 감소하고 있다.

〈그림 23〉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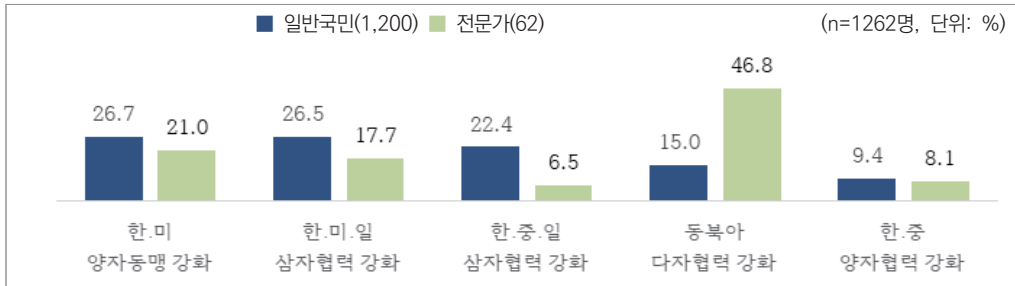


#### 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외교적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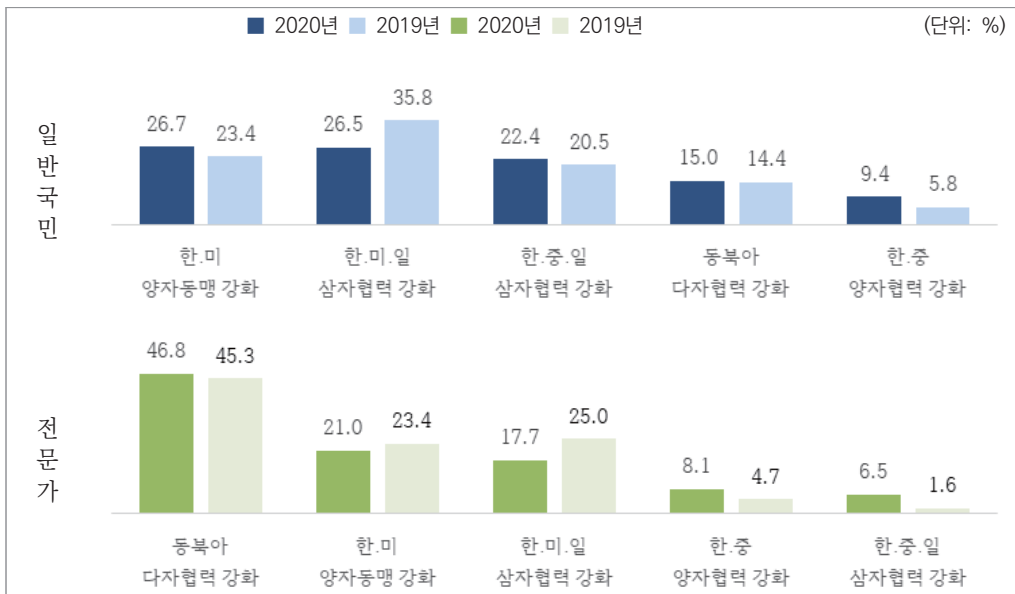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그림 24)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으로 ‘한·미 양자동맹 강화’가 2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는 26.5%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25〉가 보여주듯이, 2019년 대비 ‘한·미 양자동맹 강화’는 3.3%p(2019년 23.4%) 증가하였고,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는 9.3%p(2019년 35.8%) 감소하였다. 전문가조사에서,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가 4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 양자동맹 강화’(2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동북아다자협력 강화’는 1.5%p(2019년 45.3%) 증가하였고, ‘한·미 양자동맹 강화’는 2.4%p(2019년 23.4%) 감소하였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이라는 질문에 조사에서 일반국민은 한미 동맹 강화(26.7)를, 전문가들은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46.8)를 지적하였는데, 일반국민들은 중국을 배제하는 한미 동맹, 한미일 삼자 협력을 강조한 반면, 전문가들은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전문가들이 미중 경쟁이 심화될 경우, 미국이나 중국의 편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가 좁아질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의 경우, 일반 국민들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으로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를 지적하였는데 이는 일본과 지소미아 연기문제, 미국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것에 대한 경계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외교적 선택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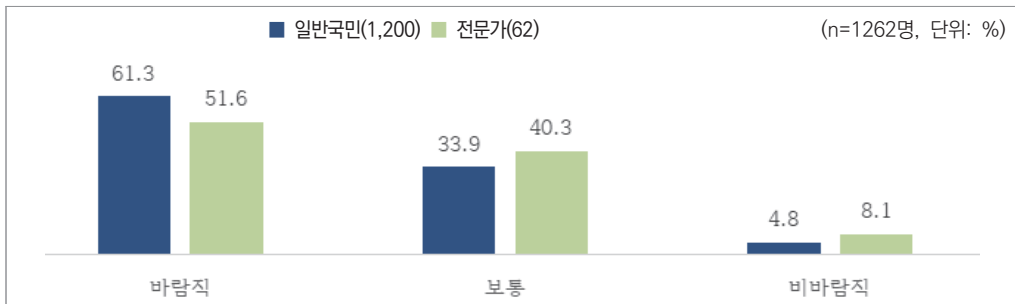
〈그림 25〉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외교적 선택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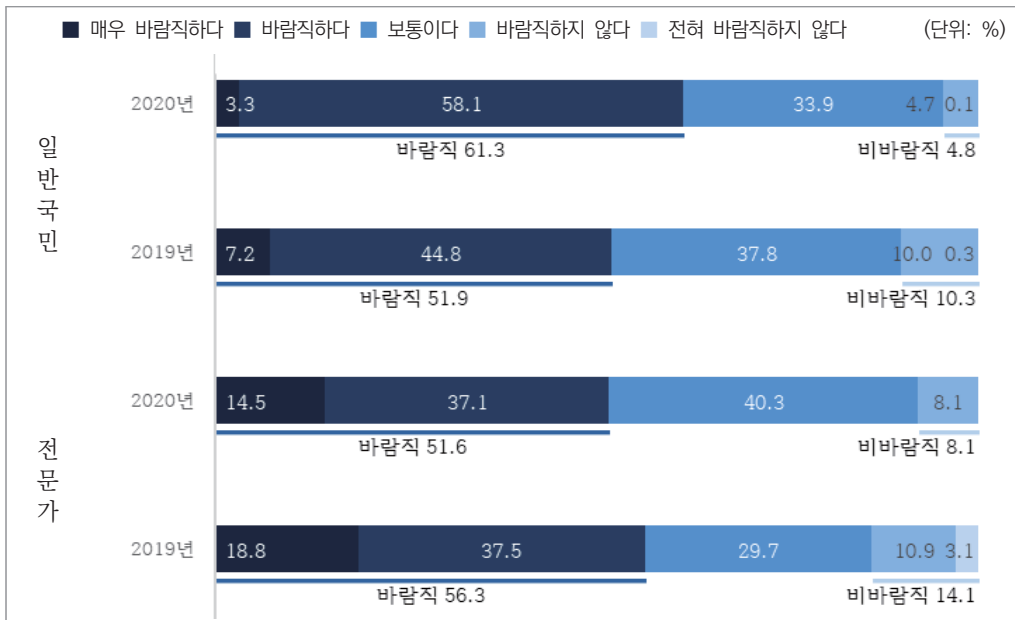
#### 라. 한·미·일간 3개국의 군사협력

일반국민 조사(그림 26)에서, 한·미·일간 안보협력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1.3%로 ‘바람직하지 않다’(4.8%)는 응답보다 56.6%p 높게 나타났다. 〈그림 27〉이 보여주듯이, 2019년 대비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9.4%p(2019년 51.9%) 증가한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5.6%p(2019년 10.3%) 감소하였다. 전문가 조사에서,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6%로, ‘바람직하지 않다’(8.1%)는 응답보다 43.5%p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대비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7%p(2019년 56.3%) 감소하였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6.0%p(2019년 14.1%) 감소하였다.

〈그림 26〉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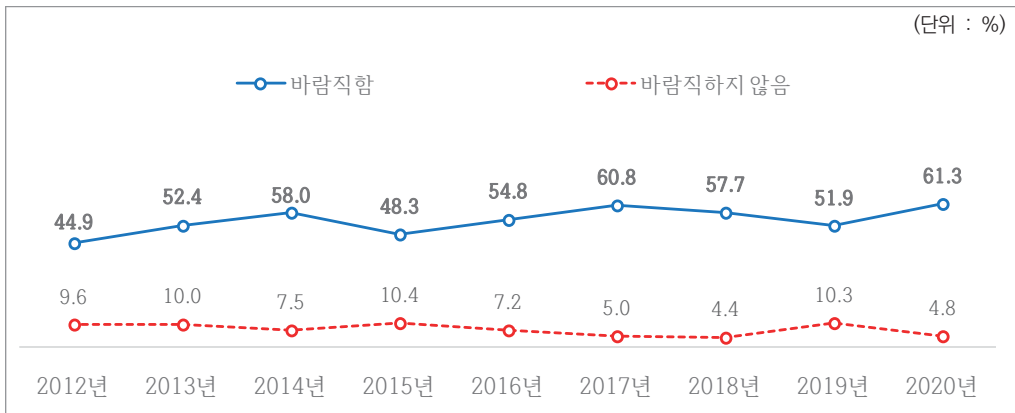


〈그림 27〉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전년도 비교



지난 10년간(2010-2020)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의 과반수는 한·미·일간 3개국의 군사협력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상승추세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최고치인 61.3%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 19와 미국대선으로 인한 국제정세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강화되고 미중 갈등의 심화와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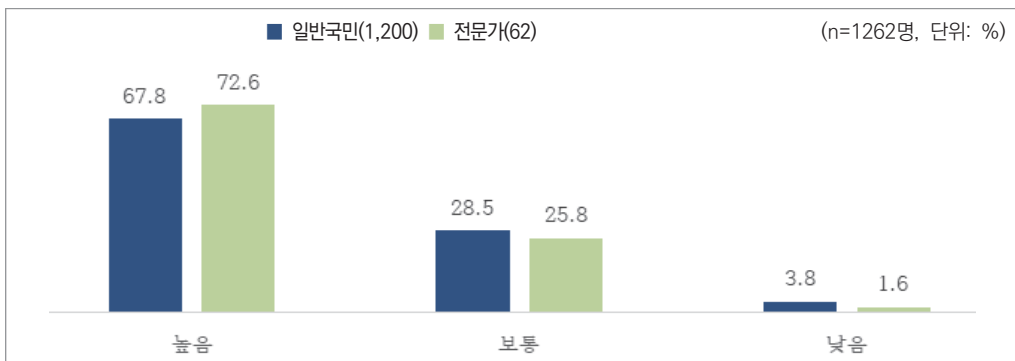
〈그림 28〉 한·미·일간 3개국의 군사협력



## 5. 국가정체성 평가

일반국민 조사(그림 29)에서,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는 응답이 67.8%로, ‘낮다’(3.8%)는 응답보다 64.0%p 높게 나타났다. 〈그림 30〉이 보여주듯이, 2019년 대비 ‘높다’는 응답은 0.3%p(2019년 67.4%) 증가, ‘낮다’는 응답은 1.8%p(2019년 5.5%) 감소하였다. 전문가조사에서, ‘높다’는 응답이 72.6%로, ‘낮다’(1.6%)는 응답보다 71.0%p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대비 ‘높다’는 응답은 7.1%p(2019년 79.7%) 감소하였으며, ‘낮다’는 응답 또한 1.5%p(2019년 3.1%)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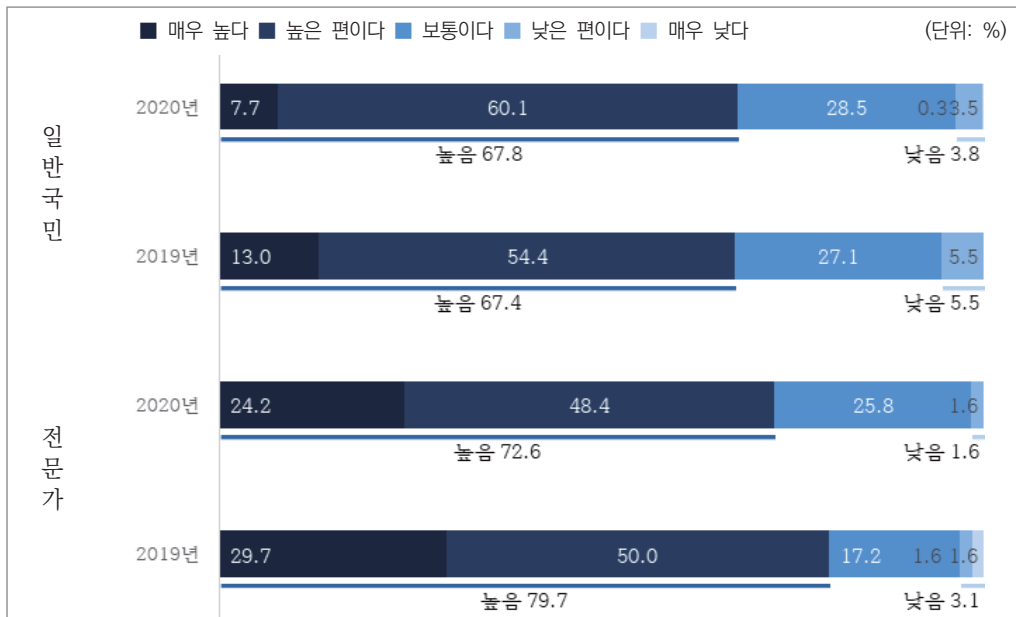
〈그림 29〉 국가정체성 평가(역사와 전통)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일반국민과 전문가 집단 모두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는 응답이 낮다

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고, 전년 대비 수치는 크다란 변화가 없다. 일반적으로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국민들이 안보의식도 높은 경향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안보의식의 고취에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역사와 전통의 자부심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별 분석에서도 드러나며, 자부심이 높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높게 나와서 양자간 상호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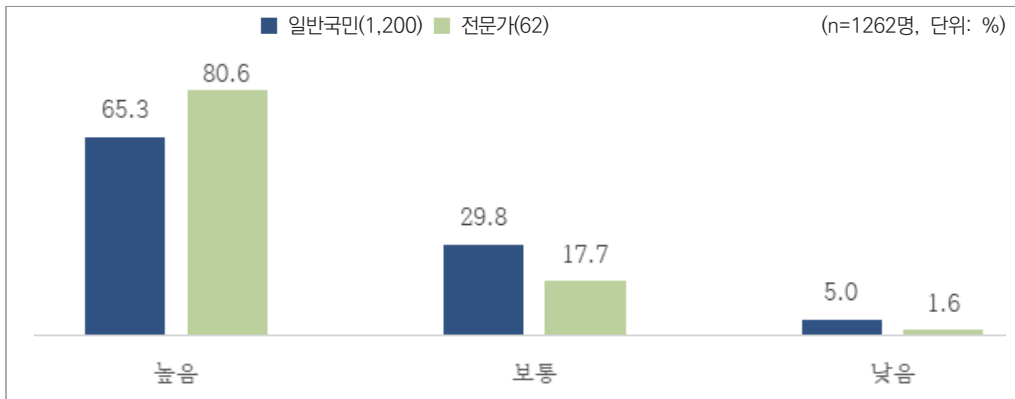
〈그림 30〉 국가정체성 평가(역사와 전통) 전년도 비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그림 31)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높다’는 응답이 65.3%로, ‘낮다’(5.0%)는 응답보다 60.3%p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에서 드러난 것처럼, 2019년 대비 ‘높다’는 응답은 7.1%p(2019년 58.2%) 증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0.7%p(2019년 5.7%p) 감소하였다.

전문가 조사에서, ‘높다’는 응답이 80.6%로, ‘낮다’(1.6%)는 응답보다 79.0%p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대비 ‘높다’는 응답은 7.2%p(2019년 73.4%p) 증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1.5%p(2019년 3.1%) 감소하였다.

〈그림 31〉 국가정체성 평가(대한민국 국민)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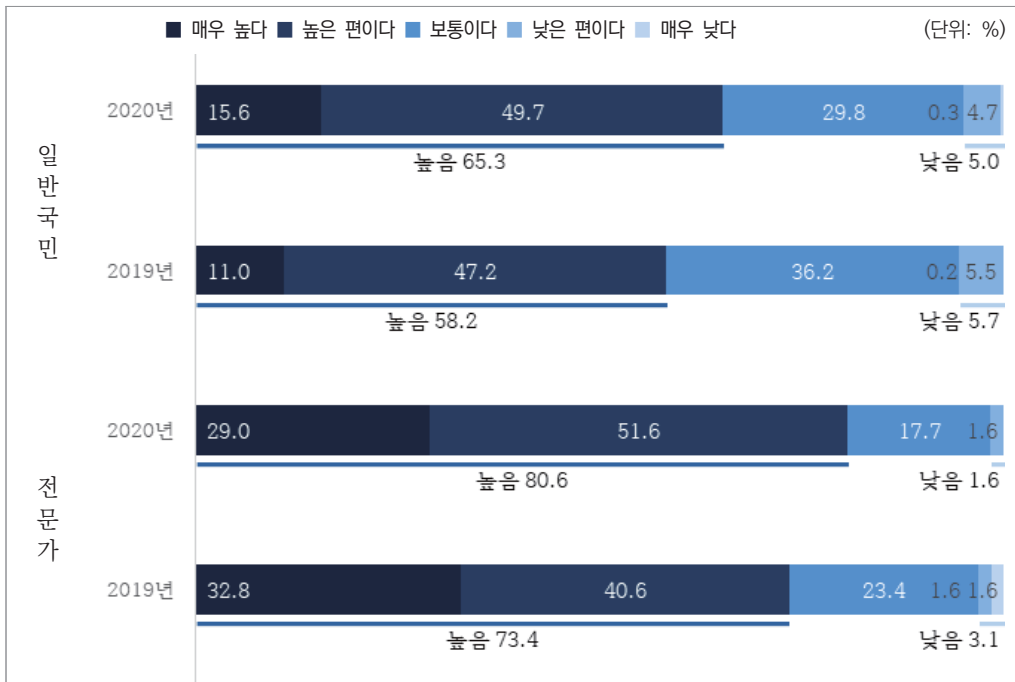


일반국민과 전문가 집단에서 각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높다’는 응답이 65.3%, 80.6%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특히 전년 대비 7.1%p와 7.2%p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코로나 19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전세계, 특히 최강대국으로 여겨졌던 미국, 독일, 프랑스 등 G7 국가들이 코로나19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한국은 민주적 방식으로 봉쇄와 격리 없이 감염자를 철저히 조사해 추적하며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은 2020년 5월 KBS와 시사IN, 서울대학교가 “코로나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의 인식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대응 덕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1.9%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는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다’는 질문에 대한 반응도 변화가 컸다. 반년 전인 지난해 12월 시행한 조사에서 46.4%가 ‘그렇다’고 한 것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63.7%로 상승하였다.<sup>32)</sup>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이전 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후 한국의 대외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32) KBS 뉴스, 2020.5.20.

〈그림 32〉 국가정체성 평가(대한민국 국민) 전년도 비교



#### IV. 결론: 정책적 함의와 대응책

2020년의 “국민안보의식 변화 추세와 안보정책적 함의”에 대한 분석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광범위한 영향으로 인해 이전과 달리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안보환경에 살고 있다. 이전의 안보에 대한 영향 요인은 주로 북한의 도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군사경쟁과 해양분쟁 등에 국한되었지만, 이번에는 질병, 즉 바이러스의 확산이 안보불안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 미국의 리더십의 부재, 흔들리는 세계적 협력, 강대국간의 불협화음, 반세계화의 물결과 지역주의 혹은 국가주의의 부활, 미중 경쟁관계의 심화와 그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를 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안보의식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광범위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2020년 안보의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안보상황을 대체로 긍정적으

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한국안보에 주요 위협 요인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이 감소한 반면, 코로나19가 초래한 전세계적인 위기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자신의 안보의식 수준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과 자신의 안보의식이 높다는 의견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올해 코로나 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그 영향이 자신의 일상과 인간과 개인안보에 까지 미치게 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의 고조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일반국민들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으로 '국내 경제의 불안'을 가장 큰 요인을 지적한 것도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실감하면서 이 점들이 안보의식조사에 반영된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에 평가가 높게 나온 점도 한국 정부가 코로나 19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코로나 19는 국민들의 안보의식 전반에 걸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인간안보와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에 대한 위협인 동시에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응과정에서 안보의 주체로서 국가와 더불어, 개인,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역할도 중요해졌으며, 안보주체들간의 상호 협력도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별도의 정책실행에 필요한 자원과 제도, 조직을 갖지 않는 인간안보는 그러한 실행능력을 갖춘 국가안보 개념과 유기적 통합이 필요하게 되었다.

코로나 19가 제기하는 물리적, 생물학적 위협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과 마찬가지로 안보연구자들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코로나 19가 '존재'라는 근본적인 생활 경험에 가해지는 위협, 즉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이다. 존재론적 안보는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안전감 및 다른 사람들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신뢰'를 포함한다.

코로나 19는 우리의 자아,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세계 내에서' 행동하는 방식에 독특한 도전을 제시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 활동,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신뢰 관계, 그리고 세상 속의 존재를 결정할 자유를 갑자기 파괴하여, 불안을 발전시키고 촉진하였다. 최소한 사회적 거리는 사회의 주요 장소(카페, 레스토랑, 체육시설 등)를 폐쇄하는 것과 같이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감소시켰다. 우리의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은 제한이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해야하기 때문에 불안에 기여할 수 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국가의 위상,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전혀 상관없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 세계의 최강대국으로 여겨졌던 미국, 독일, 프랑스 등 G7 국가들

이 코로나19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도 자국내의 코로나 19 확산을 강제적인 봉쇄와 격리를 통해 통제하고 있지만,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함으로써 코로나19는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전파됐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코로나 이후 세계를 주도하는 건 더 어렵다. 무엇보다 중국이 코로나 19를 간신히 통제하긴 했지만,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민주적 방식으로 봉쇄와 격리 없이 감염자를 철저히 조사해 추적하며 코로나 19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자를 통해 나를 보는 것에 익숙해 있다. 이제 나에 의해 구성된 나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팬데믹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의 모습은 그동안 힘의 구조에 가려져 있던 우리의 모습일 것이다. 이는 코로나 19에 대처하는 한국의 경제적 토대와 역량, 성숙한 시민사회와 관료체제의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코로나 19 이후 국제질서에서 한국이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는 조건들이다.

따라서 팬데믹 이후 국제질서에서 힘의 구조를 벗어나 보다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국가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가정체성은 이번 국민안보의식 조사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나와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된 개방적 사고와 의식에 기초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의 자율적 공간을 확대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팬데믹 이후 불확실한 국제질서하에 미중관계가 악화되면, 한국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전형적인 냉전식 사고로서 현재 국제관계는 냉전 시기와 같이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으로 나눌 수 없다. 이미 유럽의 국가들은 물론이고 아시아 국가들도 자율적 행위자로 성장하였다. EU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에 관여하지 않고, 미중간 관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EU가 완전히 중립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려 한다. 그리고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자율적 공간을 확보하여 자신의 국가이익을 위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 편에 일방적으로 경사되지 않고 헤징(hedging)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고 새로운 냉전을 준비하는 대신 동아시아의 기존 세력균형을 강화하고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중관계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평가와 전망을 경계해야 한다. 즉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미중간 충돌 가능성은 낮으며, 신냉전 논의도 근거가 희박하다. 그리고 한중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국(정치, 외교, 경제,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이 필요하며, 향후 전개될 새로운 국제질서와 규범에 대한 논의와 내러티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외정책에 관련하여 중국적 내러티브와 이야기(Story)에 대해 비판적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 중국의 대외적 내러티브는 상당 부분 국내정치와 연결되어 국내 관객을 대상으로 하고, 실현이 불가능한 문화적 과장(인류운명공동체), 중국적 특징과 정체성을 강조하여 타자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대중국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참고 문헌

- 유동원, 2010. “중국의 비전통안보 연구: 위협유형과 대응전략”, 『국방정책연구』, 26(1),
- 유동원, 2020. “불확실성 시대 미중경쟁과 우리의 대응”, 『RINA 안보현안분석』, 166,
- 이정민, 2015. “국민안보의식 변화 추세와 안보정책적 함의”
- 장진섭, 2019. “인간중심 국가안보: 새로운 안보 현실에 대응하는 안보 패러다임”, 『군사논단』, 제97호.
- 정한범 2016, “국민안보의식 변화 추세와 안보정책적 함의”, 『정책대안연구』, 안보문제연구소
- 최현진 2019, “국민안보의식 변화 추세와 안보정책적 함의”, 『정책대안연구』, 안보문제연구소
- 하도형 2017, 2018, “국민안보의식 변화 추세와 안보정책적 함의”, 『정책대안연구』, 안보문제연구소
- 傅勇, 2007『非傳統安全與中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Acharya, A. 2001. “Human Security East versus West,” International Journal: Canada's Journal of Global Policy Analysis, 56.3,
- Akaha, Tsuneo. 2001. “Non-traditional Security Cooperation for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Working paper Vol. 7, Center of Excellence-Contemporary Asian Center, Waseda University,
- Arkchurina, Viktoria and Vincent Della Sala. 2018, “Russia, Europe and the Ontological Security Dilemma: Narrating the Emerging Eurasian Space” *Europe-Asia Studies*, Vol. 70.
- ASEAN, 2020. “Statement of the Special ASEAN-China Foreign Ministers’ Meeting on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February 20,
- Ayoob, M. 1995. *The Third World Security Predicament: State Making, Regional Conflict,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London: Lynne Rienner
- Baer, Dan. 2020, *How Will China Shape Global Governance? A China File Conversation*, May 9,
- Ban, K.M. 2012a. Follow-up to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4/291 on human security: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763.
- Ban, K.M. 2012b. Oral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on the Implementation of Resolution 66/253 adopted on 16 February 2012
- Banerjee, Dhritiman. 2020, “Covid-19: A New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 *Modern Diplomacy*, June 3
- Beckley, Michael. 2020. *How Will China Shape Global Governance? A China File Conversation*, May 9
- Booth, Ken. 2007. *Theory of World Secur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Press, 2007)
- Brands, Hal and Francis Gavin., 2020. "COVID-19 and World Order." In Hal Brands and Francis Gavin. (eds.), *COVID-19 and World Order: The Future of Conflict, Competition, and Cooper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2003. *Human Security Now, final report of the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New York
- Giddens, Anthony.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Polity: Cambridge,
- Green, Michael and Evan S. Medeiros, 2020. "The Pandemic Won't Make China the World's Leader", *Foreign Affairs*, April 15.
- Haas. P. M. and E. B. Haas, 1995. "Learning to Learn: Improving International Governance," *Global Governance* 225,
- Haass, Richard. 2020. "The Pandemic Will Accelerate History Rather Than Reshape It", *Foreign Affairs*, April 7.
- Kirke, Xande. 2020. "Anxiety and COVID-19: The Role of Ontological Security and Myth", E-InternaKunming Declaration: 'A Stronger GMS Partnership for Common Prosperity', News Release, 5 July 2005.tional Relations, May 29.
- Laing, R. D. 1960, *The Divided Self: A Study of Sanity and Madness*, London: Tavistock.
- NTS-Asia and IPA. 2007. *Non-Traditional Security Challenges in Asia: What Role for Multilateralism?* Singapore: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 Nye, Joseph S. 2020 "No, the Coronavirus Will Not Change the Global Order." *Foreign Policy*, April 16.
- Qi, Tian. 2020. "Building a healthy global community together", *The Gleaner*, May 24
- Shani, Giorgio. 2017. Human Security as ontological security: a post-colonial approach, *Journal Postcolonial Studies*, Volume 20
- Shani, Giorgio. 2017, Human Security as ontological security: a post-colonial approach, *Journal Postcolonial Studies*, Volume 20
- Shoji, Tomotaka. 2020. "The Security and Diplomatic Dimensions of COVID-19: The View from ASEAN", *International Information Network Analysis*
-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1994.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와 대미정책 추진방향

박 민 형\*

- I. 서론: 문제제기
- II. 미래 한미동맹 변화
- III. 한국인들의 인식 변화 분석
- IV. 미래 대미 정책 추진 방향
- V. 결 론

## I. 서론: 문제제기

2020년 11월 3일 세계 이목이 집중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하는 등 마지막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한국의 입장에서 미 대선은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바이든 정부는 기존의 트럼프 정부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된 정책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외 정책면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미국의 대외정책은 행정부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대외정책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국방대학교 교수

에 관한 시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 및 대결 구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시아로의 회귀’ 또는 ‘아시아 재균형’이 추진되었듯이 새롭게 들어서게 될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과는 필연적인 대결 및 경쟁 구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레이엄 엘리스 하버드대 교수가 자신의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주장하였듯이 미중 간 패권전쟁은 구조적 필연성이 크기 때문이다.<sup>1)</sup>

하지만 한반도 정책 측면에서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바이든 정부는 지도자 개인의 취향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문가 집단의 전략적인 접근법을 우선시 할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트럼프 정부보다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협상을 위해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바이든은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로 지칭하며 ‘원칙에 입각한 대북 외교’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대선 토론회 및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협상과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며 북한과의 협상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이후에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천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했던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 Policy)’를 폐기하고 주변국들과 협력적 관계를 중시하는 미국으로 다시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 즉,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미국의 국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당선자는 11월 11일 미국 재향군인이 날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전쟁 기념비를 찾기도 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이라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런 행동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겠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강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실, 동맹에 대한 강화 의지는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변화된 민주당 정강 마지막 부분인 ‘미국 리더십의 개혁’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본 정강에서는 동맹의 재창조(Reinventing Alliances)가 제시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핵 위기 와중에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결코 폭력단의 갈취행위처럼 동맹을 대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과 갈등을 빚어왔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같은 동맹 현안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그동안 갈등 관계 속에

1) 그레이엄 엘리스, 정혜윤 역, 『예정된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서울: 세종서적, 2018).

있던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할 것으로 보인다. 대 중국 전제 차원에서라도 미국에게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확고한 안보를 유지하면서 국익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분석하여 미래 대미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미동맹 변화에 있어 가장 큰 충격력을 줄 수 있는 미중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미래 한미동맹의 변화 방향성을 살펴본다. 이후 한국민들의 인식을 집중분석한다. 분석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우선, 동맹 자체에 대한 한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동맹 현안별 인식을 분석한다. 그리고 나서 주변국과의 관계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 한국의 대미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미래 한미동맹 변화

미래 한미동맹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한미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외부적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중관계 변화는 미래 한미동맹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향후 미중관계는 다양한 변수들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물론 양국 모두 갈등적인 상황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가능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강대국간 관계가 협력만을 지향하는 이상적인 관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채택하여 중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역 갈등을 시작으로 남중국해, 대만문제, 인권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갈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들어서게 될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발생한 COVID19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국제적 협력 필요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나 미중 관계에 있어서는 갈등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즉, COVID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에는 이에 대한 책임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기존 제 분야의 갈등 양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간의 관계는 한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군사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물론 미중간의 갈등이 한국에게 이분법적인 선택을 직접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중간의 갈등이 군사안보 분야로까지 번지게 될 경

우 미국은 군사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의 미국 지지에 강한 반발을 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에는 경제적인 수단으로 압박하게 될 것이다. 지난 사드 배치 간 일어난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중국 정부의 경제적 조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즉, 미중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은 양국 모두에게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며 이러한 압박은 미국으로부터는 군사안보적으로, 중국으로부터는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미래 한미 동맹 변화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미중 관계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1. 미래 미중경쟁 양상: “가속화”

### 가. 미국 국가전략 및 위협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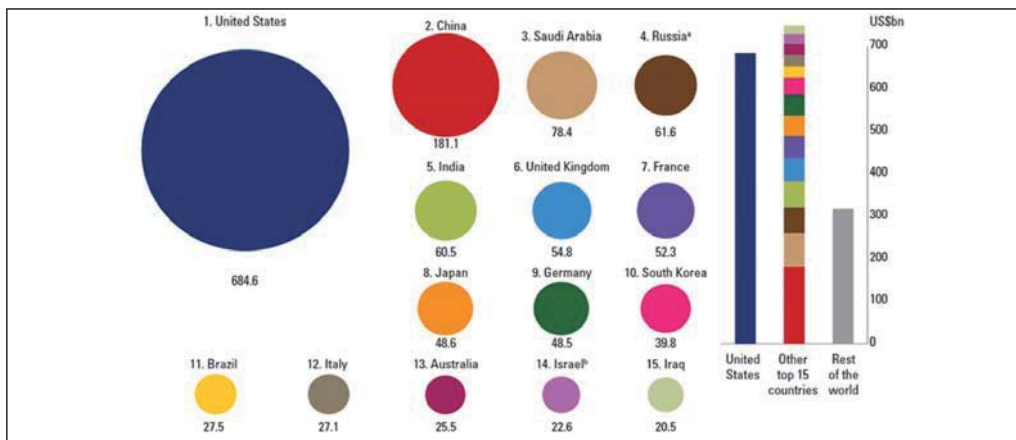
미국은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밝혔듯이 통상, 외교, 국방 등 국제 제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한다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Policy)’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 년 동안 미국은 우리의 산업을 희생해서 다른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우리 국방을 궁핍하게 만들며 다른 나라 군대를 지원했으며, 우리 국경 방어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경을 지켜줬다”고 비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에서 시작된 이러한 정책 방향성은 미국이 자국의 경제, 국방 등에 대한 강화를 추진하고 과거의 강력한 미국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세계에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존 오바마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협력, 특히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였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력으로 대변할 수 있는 힘을 통한 평화유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9.11 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해왔으며 이로 인해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전략적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것은 미군이 전면전보다는 비정규전에 치중하도록 하였고 군사적인 발전도 이와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테러와의 전쟁 시 미국이 주로 상대했던 적은 정규적인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고 대규모 전투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알카에다나 탈레반과 같은 조직들이었다. 당시(부시 및 오바마 행정부) 국가안보전략서에서도 테러위협, 불량국가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위협을 가장 중요시하게 명시하고 있었다.<sup>2)</sup> 그러나 미군은 이러한 전쟁들을 수행하면서 재정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군사력 최신화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경제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시행을 하지 못하였다.<sup>3)</sup>

2)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15), p. 7.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의 위협인식은 크게 변화하였다. 2017년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에서 미국은 자국에 대한 위협을 3가지로 상정하면서 그 중 첫 번째를 “수정주적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으로 규정하였다.<sup>4)</sup> 또한, 2018년 1월에 발표된 미국의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NDS)』에서도 미국의 핵심적 관심이 테러에서 강대국과의 전략적인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sup>5)</sup>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같은 경쟁국들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회피하기 위해서 무력 분쟁이 발생하는 임계점 바로 아래인 이른바 회색지대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것이며, 무력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 합동 전력의 원거리 투사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반접근 및 지역거부 전략을 수행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sup>6)</sup> 이렇듯 미국은 군사적으로 중국과 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 감소는 미국의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규범에 도전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sup>7)</sup>

〈그림 1〉 2019 세계 국방비 지출 현황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9 (London: IISS, 2019)

3) Daniel S. Roper and Jessica Grassetti, "Seizing the High Ground: United States Army Futures Command," *ILW SPOTLIGHT* 18-4(2018), p. 1.

4)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17), p. 2. 이와 함께 제시된 위협으로는 불량국가인 북한과 이란의 핵 및 미사일 개발, 테러조직과 국제범죄 조직 등 초국가 위협 집단에 의한 위협을 꼽고 있음

5) U.S.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US DoD, 2018), p. 1.

6) US Army Training & Doctrine Command, *Multi-Domain Battle: Evolution of Combined Arms for the 21<sup>st</sup> Century, 2025-2040* (Washington D.C.: TRADOC, 2017), pp. 1-6.

7) U.S. Army TRADOC, *The Operational Environment and the Changing Character of Future Warfare* (Washington D.C.: TRADOC, 2017), p. 2.

한편, 미국은 자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장비, 교리, 정규전에 대한 대비 등에서 악화 또는 노후화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같이 미국에 대해 도전 가능한 국가들은 전투수행개념, 전력 등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상쇄시켰다고 분석한다. 물론 여전히 미국은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국가이며 이러한 추세는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2019년 세계 국방비 현황을 보면 당분간 미국의 군사적 우세가 계속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019년 현재 미국의 국방비는 2위부터 15개 국가를 합친 양과 그 규모가 유사할 정도이다. 그러나 중국(2위)과 러시아(4위)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현재 미국의 압도적인 지위는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미래 미중 경쟁 구도 분석

21세기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 기조 중에 하나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함으로써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양국 간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왔다. 몇몇 연구들은 국제정치 상에서 미국의 주도적 지위 상실을 예측하기도 하였다.<sup>8)</sup>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시절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2011년을 전후해서 아시아 지역에 군사적 투사능력을 유지함으로써 지역 동맹국은 물론 우방국들에게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하고자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을 추진하기도 하였다.<sup>9)</sup> 반면, 중국은 2013년부터 옛 실크로드를 따라 도로, 철도, 항만 등 경제적인 육상벨트를 통해 주변국가와의 무역 확대를 하겠다는 이른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와 중국 남쪽 해안-중동-아프리카-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를 연계하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있다.

8) Graham Allison, 정혜윤 역, 『예정된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서울: 세종서적, 2018).

9) James Steinberg and Michael O'Hanlon, *Strategic Reassurance and Resolve: US-China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그림 2〉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또한 군사적으로는 1982년부터 태평양의 섬(島)을 사슬(鏈)처럼 이어 해상 방어선을 설정하였는데 제1도련선은 1980년대 설정하여 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보르네오를 연결하였으며 제2도련선은 오가사와라~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도련선의 설정은 미국의 태평양 독점 지배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에서 미국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에 대해 환영할 것이며 중국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14년에 발표된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에서도 중국 군사력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위협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sup>10)</sup>

하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까지 대 중국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비 증가와 우주, 사이버, 전자 영역에서의 역량 확대로 점차 다중영역(multi-domain)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sup>11)</sup> 또한, 미국은 2019년 6월 1일 발간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 IPSR)』에서 중국을 “자국의 정치·경제·안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마찰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12)</sup> 특히, 중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역 및 국제적 체계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과 질서를 폄하

10) Joe Renouard, “America’s Anti-China Mood Is Here to Stay,” *The Diplomat*, August 14, 2019.

11) 김태형,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군의 군사전략 변화,” 『국방연구』 제63권 제1호(2020), p. 90.

12) US DoD,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Washington D.C.: US DOD, 2019), pp. 7-10.

하고 있으며, 다양한 반접근 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 denial)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공해 및 국제공역 등에서 여타 국가들의 활동을 저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림 3〉 중국의 해상 방어선



게다가 미국은 같은 보고서에서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을 미국이 신뢰할 수 있고 능력 있는 파트너들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공식 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지칭한 것으로 1979년 수교이후 ‘하나의 중국’을 대중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던 것을 부정한 것이었다. 심지어 미국 정부는 대만에 탱크와 미사일 등 20억 달러 이상의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중국 외교부는 2019년 6월 6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고도로 민감하고 엄중한 위협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미국과 중국은 이른바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전쟁의 본질은 단순히 경제 분야만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며 미래 국제 사회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패권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중의 갈등은 무역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 티베트, 사이버 해킹,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이 중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operation freedom of navigation)’을 전개하며 중국에게 경고를 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국력이 커져갈수록 공세적인 외교를 전개해왔고 특히 최근에는 대

외정책으로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도광양晦(韜光養晦)’에서 자신들의 발언권을 요구하는 ‘분발유위(奮發有爲)’를 지향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미중간의 전략 변화는 갈등 구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중간의 협력을 위한 다양한 협의체가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 기조가 기존 정부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국가 대전략적인 측면과 경제, 안보, 군사 등에 있어서 다양한 이슈들은 미래 양국 경쟁 관계를 더욱 고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미중 경쟁관계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미중간의 경쟁은 한국에게 있어 정책 선택의 딜레마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은 안보 차원에서는 미국에, 경제 차원에서는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중 패권 경쟁은 한국에게 있어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 국면에 접어들 경우 한국은 마치 샌드위치가 된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에게 강대국을 이웃으로 둔 “지정학의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실제로 중국과 심각한 군사적인 갈등관계에 미국이 놓일 경우 한국에게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 첫째, 동맹은 서로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지지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의 가치 등을 공유하고 있어 이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지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셋째, 군사력 측면에서 여전히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보다는 미국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인식할 것이다. 넷째, 미국은 중국과 달리 한국과 지리적으로 이격이 되어 있기에 한국과 영토적인 분쟁 가능성이 없음으로 한국은 중국보다는 미국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2016년 7월 주한미군이 사드배치를 공식화하면서 경제적 타격과 외교적 입지 축소라는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가 “협력” 관계를 최우선 시 하지 않는 한 한국은 양국 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양국 모두 자국의 국익을 우선 시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선택의 기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미국 최우선주의를 추진하는 미국과 중국몽(中國夢)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의 중국을 고려할 때 조만간 발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와 같은 주요 전략들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미일 무역협상에서 일본의 일대일로 불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최근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참여를 비판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sup>13)</sup>

〈표 1〉 미-중간 관계 시나리오

| 구분 |       | 중국        |           |
|----|-------|-----------|-----------|
|    |       | 협력 우선     | 국익 우선     |
| 미국 | 협력 우선 | 협력적 관계    | 불안한 협력/갈등 |
|    | 국익 우선 | 불안한 협력/갈등 | 심각한 갈등    |

## 2. 미래 한미동맹 변화 방향

한미동맹은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으로 형성되었다. 초강대국과 약소국사이에서 체결된 동맹으로 공식적으로는 ‘상호방위조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양국이 서로 동맹을 통해 교환하는 가치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강대국인 미국의 경우 동맹을 통해 세계 전략적 차원의 이익을 강화할 수 있었던 반면 약소국인 한국은 직접적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비대칭 동맹을 형성시키는 요인은 일반적으로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의 부족, 동맹국으로써의 가치 차이, 대안 동맹 형성 가능국의 존재 여부 등이 핵심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즉, 자국의 능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위협이 존재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국가이거나,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국가, 또한 여러 국가들과 동맹을 맺을 정도로 효과적인 국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국가의 경우 비대칭 동맹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동맹 체결 시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전 세계에서 최빈국에 속할 정도로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도 매우 부족한 형편이었다. 그리고 당시 미국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에 한국은 동맹 수립과정에서 비대칭적인 요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후 오랜 시간 동안 한미동맹이 가지고 있는 ‘자율

13) 한준규, “장기전 돌입한 미중 패권경쟁, 한국의 선택은,” 『서울신문』, 2019년 6월 9일자.

14) 박민형,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형성요인과 극복전략,” 『국방정책연구』 제26권 제3호 (2010), pp. 130-140.

성-안보 교환관계'라는 비대칭 동맹의 성격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은 비대칭 동맹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임스 모로우(James D. Morrow)는 '자율성과 안보 상호교환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약소국이 동맹을 통해서 안보라는 사활적 이익을 지켜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국가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일부 자율성을 양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5)</sup> 즉, 안보와 자율성은 서로 반비례한다는 것이 이 모델의 핵심 주장이다. 이 주장에 입각하면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이 자국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견지할 경우 안보 수준의 일정 부분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모로우의 이 모델은 지금까지도 한미동맹과 같은 비대칭 동맹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주국방과 공고한 동맹의 양립을 주장하고 있다. 즉,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는 곧 "동맹을 발전시키고 대외 안보협력의 능동적 활용을 통해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이를 격퇴하는 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구비"하려고 하고 있다.<sup>16)</sup>

이러한 노력은 앞에서 제시한 모로우의 모델로는 설명이 제한된다. 이는 모로우 모델이 약소국과 강대국의 국력을 상수화시켜 설명하였기 때문이다.<sup>17)</sup> 즉, 약소국과 강대국의 국력이 변화한다면, 예를 들어 강대국이 쇠퇴한다거나 약소국이 중진국 또는 그 이상으로 성장할 경우의 동맹관계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제한이 되는 것이다.<sup>18)</sup>

국가는 자국의 능력에 변화가 생기면 이를 국제관계에 반영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자신의 이익은 최대화하고 손실은 최소화(Maximum Benefit Minimum Cost)하기 위해 국가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능력의 변화는 새로운 이익 추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15) James D. Morrow,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4 (1991).

16) 국가안전보장회의, 『평화변영과 국가안보』(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4).

17) 이 모델의 경우 경제학에서 말하는 무차별 곡선을 이용한 것으로 이 곡선의 기본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차별 곡선은 2가지의 재화에 대해 소비자의 효용성(만족)이 같은 점을 연결한 선으로 그 선에서는 소비자의 만족도는 모두 같다. 그러나 소비자의 임금이 증가하면 이 무차별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즉, 만족에 이르는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것을 동맹 모델에 적용해보면, 약소국의 능력이 증가하면 약소국은 안보의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고 자주성을 늘리거나, 혹은 안보와 자주성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8) Park, M. H. and Chun K. H., "An Alternative to the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The Case of the ROK-U.S. Allianc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7, No. 1 (2015), pp. 41-56.

〈표 2〉 상대적 약소국의 선택

| 구분       | 이익 1 (안보) | 이익 2 (자율성) | 평가 |
|----------|-----------|------------|----|
| 정책 추진 결과 | 상승        | 상승         | 최선 |
|          | 상승        | 유지         | 차선 |
|          | 유지        | 상승         |    |
|          | 하락        | 상승         | 차악 |
|          | 상승        | 하락         |    |
|          | 하락        | 하락         | 최악 |

출처: 박민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형성,” 『한국국가전략』 제4권 3호(2019), p. 146.

따라서 만일 국가가 동맹관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이 앞의 모델에서 제시하였듯 자율성과 안보라는 두 가지 재화가 있다면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은 자율성과 안보를 둘 다 얻는(높이는) 것이고 차선의 경우는 하나의 재화의 수준에는 변화가 없이 다른 한 재화를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은 국력이 상승함에 따라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과정을 강한 한미동맹 관계 유지를 바탕으로 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미국은 강력한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서는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미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즉, 한미 모두 한국의 역할 확대를 추구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내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추구하고자 하는 반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한국 역할 확대”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격차가 결국 한미 간의 군사안보 분야에서 갈등의 가능성을 높게 될 것이며 한국에게는 딜레마 상황을 가져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 미국이 한국에게 어떠한 요구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발표한 다양한 문서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미국은 중국을 미래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과 연계하여 수립한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면 미국은 과연 한국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게 될 지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은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미래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단편적으로, 미국은 전 세계를 인도-태평양, 북부(북미), 남부(중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로 구분하여 6개의 지역사령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도-태평양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보고서 형태의 구체적인 전략 공개가 없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알 수 있다.

이 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세부

전략을 천명하고 있다. 첫째,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하는 것이다. 이 전략의 목적은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전투태세가 완비된 군을 전진 배치하여 경쟁국이 군사력으로 원하는 목표를 얻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부담을 나누는 것으로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동맹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동의 위협에 서로 책임을 분담하여 대항하면 안보에 대한 짐을 덜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과 개별국가와의 양자관계를 연결하여 3자, 더 나아가 다자 관계로 국제 사회 안보 체계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집단안보체제를 통해 지역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를 유지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에게 많은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즉,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 전략 추진을 위한 활동에 한국의 동참을 계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몇 몇 작전에서 여전히 미국은 한국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 천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방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미래 미국은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항행의 자유 작전, 미사일 방어 등 다양한 분야를 재검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어떻게 참여하게 될 것인지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요구에 대해 한국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한국에게 군사안보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은 미래 대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Ⅲ. 한국민들의 인식 변화 분석

미래에도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북한은 여전히 핵을 포기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재래식 무기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주변국들도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물론 한국이 자신의 힘만으로 미래 위협에 대처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러한 절대적 안보는 상호의존성이 증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그 어떤 국가도 불가능할 것이며 한국은 더욱 더 그러하다. 따라서 한국은 미래 안보를 위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맹을 유지함에 있어 미래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정책 방향성 변화는 우리 한국 정부에게도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국가 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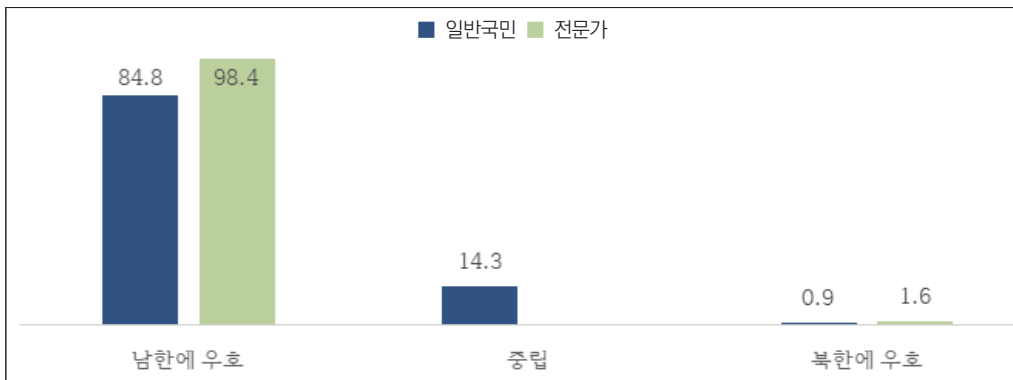
관계는 항상 긍정적일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은 미래 더욱 건강한 동맹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한국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 그 중 국민들의 인식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민주사회에서 여론의 향배는 정부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변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대미 정책 수립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동맹관계 대한 국민들의 인식

한국이 지금까지 북한에 의한 군사 위협을 억제할 수 있었고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 제 분야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민들은 여전히 동맹의 유용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혹시 모를 한반도 유사 사태 발생 시, 미국은 한국의 편에 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림 4〉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미국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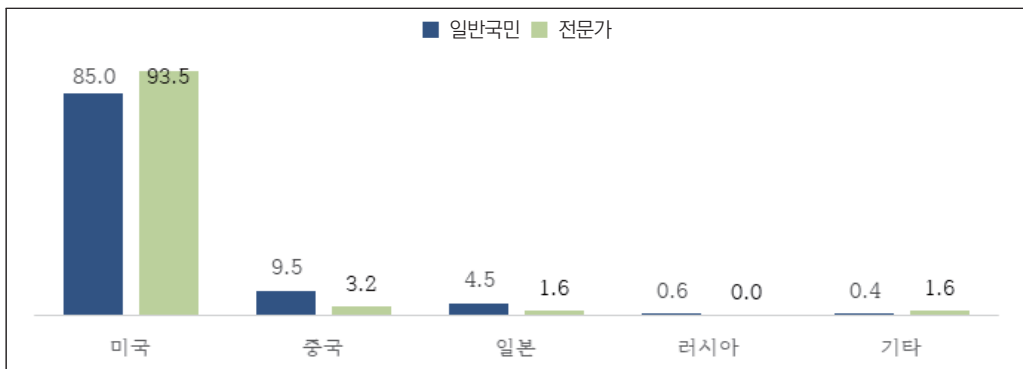
출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충남: 국방대학교, 2020), p. 67.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미국의 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반 국민의 84.8%, 전문가의 98.4%는 미국이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듯이 한국 국민들 대부분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sup>19)</sup>

19) 같은 조사에서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응답자의 22.6%, 전문가의 56.6% 만이 한국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59.0%, 전문가 75.8%가 응답하였다.

한국민들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중요성을 인식하는가는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 5>처럼 일반 국민의 85%, 전문가의 93.5%는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응답은 결국 한국 국민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국가이며 따라서 이를 제도적으로 공고화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에게 중요한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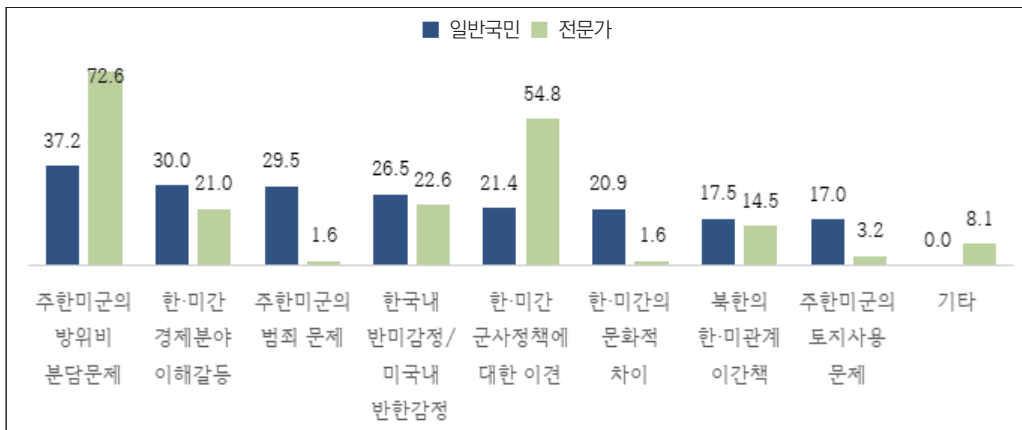
출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충남: 국방대학교, 2020), p. 61.

한미동맹은 60여 년 동안 유지되면서 제도적으로 매우 공고한 동맹으로 발전해왔다. 양국은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해 전쟁지도체제를 발전시켜 왔으며 연합연습을 통해 전쟁수행체제를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항상 협력적인 방향성만을 가지고 발전한 것은 아니다. 주한미군 범죄로 인한 한국내 반미 감정이 크게 증가한 경우도 발생했으며 전시작전권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최근 트럼프 정부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다양한 갈등속에서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국민은 미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미동맹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질문에 매우 다양한 의견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문가의 경우 최근 이슈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72.6%)와 한미간 정책적 이견 발생(54.8%) 등을 압도적으로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의 경우에는 8가지 사항을 큰 차이 없이 고루(37.2%-17.0%) 응답했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이는 일반 국민의 경우 경험적으로 한미 간의 문제가 되었던 사항을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즉, 최근 급격하게 하락한 주한미군범죄 문제에 대해 여전히

30%가에 달하는 국민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의 경우 단 1.6% 응답했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국민들은 여전히 과거의 기억을 크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9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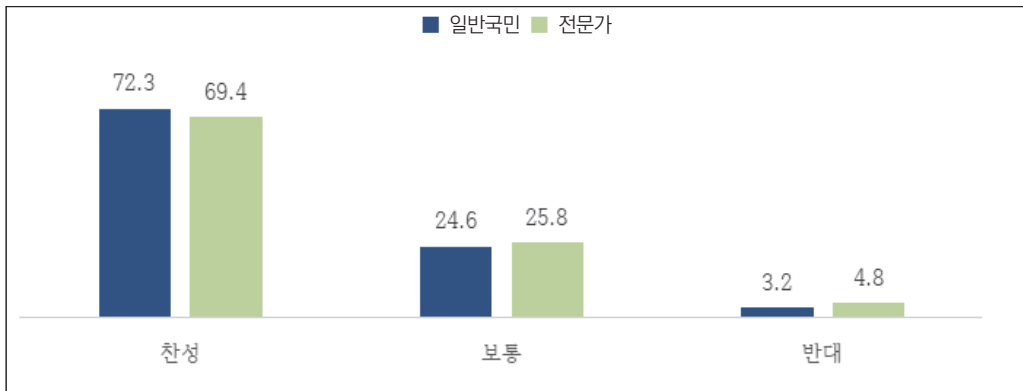
〈그림 6〉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



출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충남: 국방대학교, 2020), p. 11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은 미래 한미군사동맹 관계는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응답은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한국 국민들은 미래를 위해 여전히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미군사동맹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일반 국민들은 72.3%, 전문가는 69.4%가 찬성한다는 데 응답하였다. 이는 70% 정도의 국민들이 군사동맹 강화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반대 의견은 매우 극소수라는 점이다. 일반국민의 경우 3.2%, 전문가는 4.8에 불과하다는 점은 여론조사의 오차를 감안할 때 한국 국민들 대부분은 군사동맹 강화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은 거의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9년의 경우에도 찬성이 71-75%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반대는 6.4% 정도로 나타났는데 2020년과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 진다.

〈그림 7〉 미래 한미군사동맹 강화에 대한 의견



출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충남: 국방대학교, 2020), p. 120.

## 2. 중요 사안별 인식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동맹을 유지하다보면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한미동맹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여 왔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지금까지 60여 년간을 공고하게 유지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미 양국의 정책 변화,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안보환경 변화, 위협 인식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동맹 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중 미래 한미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본 연구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주한미군 주둔 문제, 연합연습 시행 등 크게 4가지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 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비용을 내지 않는 동맹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무임승차(free-riding)문제를 노골적으로 부각시켜 한국을 압박하였다. 그의 주장은 “가난해지고 있는 미국이 이제 부국이 된 국가들, 예를 들어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동맹국들에게 과도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sup>20)</sup> 심지어 그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100%까지 늘리겠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up>21)</sup>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우리는 호구(sucker)

20) Donald Trump, Great Again: How to Fix our Crippled America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16).

21) 박원곤·설인호, “트럼프 행정부 안보·국방전략 분석/전망과 한미동맹 발전방향,” 『국방연구』, 제60권 4호(2017), p. 9.

가 아니다”는 다소 노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고 하였다.<sup>22)</sup>

이런 미국 대통령의 인식하에서도 결국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019년 2월 10일 마무리 되었다. 협상 결과는 총액 1조 389억 원으로 이전 분담금 9,602억 원보다 8.2% 증가한 수준이었으며, 유효기간은 1년이었다. 협상을 담당했던 한국 외교부는 미국 측이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였지만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한국의 재정 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양측이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금이 합의 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23)</sup> 물론,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그리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sup>24)</sup> 거의 1년 동안 지속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결국 ‘금액’은 미국이 ‘기간’은 한국이 양보한 수준에서 합의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합의와 동시에 다음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020년 11월 말 현재, 아직까지 세부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3월 말, 분담금에서 13% 인상한 뒤 2024년까지 연간 7-8% 상승률을 적용한다는 안에 잠정 합의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다.<sup>25)</sup> 2020년 11월 3일 실시한 미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한미동맹을 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트럼프 정부시절보다는 수월하게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보았을 때 미래에도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양국 간의 갈등은 언제든지 계속될 가능성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맹을 유지함에 있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담이 서로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동맹의 가장 기본적인 결속력의 약화까지 초래할 수 있는 갈등으로 변화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국민들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론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52.6%, 전문가의 50%는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반대로 ‘적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5.2%, 전문가 1.6%로 무의미한 비율로 들어났다. 즉, 2020년 현재 한국 국민들은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현 수준이 이미 상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만약 미국이 현 수준에서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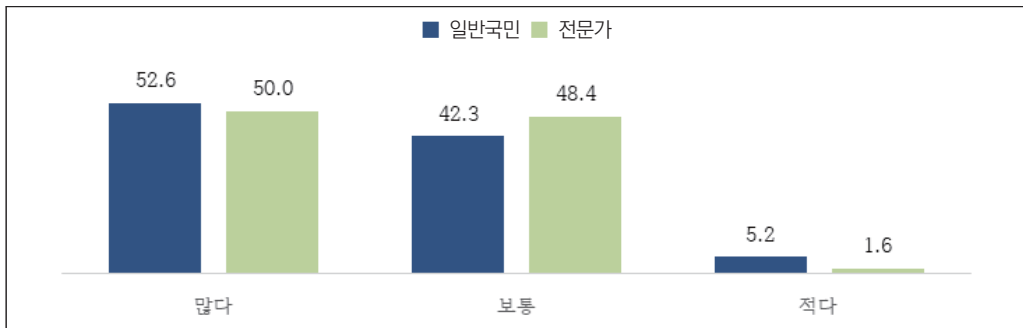
22)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거 슬로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였으며 이는 쇠퇴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의 신념이었다. Donald Trump, *Time to Get Tough: Make America Great Again* (Washington D.C.: Rernery Publishing Inc., 2015) 참조.

23) 정봉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유효기간 1년,” 『동아일보』 2019년 2월 10일자.

24) 2018년 3월 7일 호놀룰루에서 벌어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년 동안 한미 양국은 10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25) “드하트 美 방위비협상 대표, 이달중 사임할 듯,” 『동아일보』 2020년 7월4일 자.

〈그림 8〉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의견



출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충남: 국방대학교, 2020), p. 143.

실제로 YTN이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당시 미국이 제시한 1조 1,300억 원을 한국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58.7%)는 여론이 ‘받아들여야 한다’(25.9%)는 여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심지어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은 52%를 보여 ‘찬성한다(30.7%)’는 의견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sup>26)</sup> 이는 미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인식이 동맹 자체에 대한 문제로 이전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가능하게 해준다.

〈그림 9〉 제10차 협상 타결 직전 방위비 인상요구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출처: YTN 현안조사, 『2019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국민여론』, 2019.1. 25.

## 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은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논쟁의 핵심은 결국 전작권이 군사주권의 문제인지

26) 본 여론조사는 2019년 1월 25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7,54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응답율은 6.7%,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pm 4.4\%p$  임.

아니면 전쟁 수행의 효율성 측면의 조치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전작권 문제를 군사주권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찬성한다. 한국의 경제적, 군사적 역량을 고려하였을 때 전작권을 가져오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sup>27)</sup> 또한, 그들은 전작권 전환을 통해 대북 협상 능력도 제고할 수 있으며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미국이 주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국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28)</sup>

반면 전작권을 전쟁 수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보는 측에서는 전환에 반대한다. 북한의 핵 및 WMD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도 현재까지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군과 미군의 효율적 전쟁 수행 체계 중 하나인 단일화된 체계는 그 효율성이 크다는 것이다.<sup>29)</sup> 또한, 이러한 주장을 펴는 측에서는 군사주권에 대해서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작전통제는 육군, 해군, 공군 간의 합동 작전은 물론 국가들 간의 연합작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공통의 임무를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만 관련 부대들을 제한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이지 인사권이나 행정권까지 포함된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작권을 군사주권 훼손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과연 전작권 전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정책적 방향성에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문제연구소가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찬성과 반대를 직접적으로 묻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관계’를 묻고 있다. 이 질문은 전작권 전환 이후 가장 우려되는 한미동맹의 약화에 대한 의견을 물음으로써 반대 논리 중 가장 핵심 이유라 할 수 있는 ‘동맹 약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물음에 대해 일반국민들의 29%는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동맹은 더 돈독해질 것이라 응답하였고 전문가는 9.7% 만이 돈독해질 것 것이라 응답하였다. 이는 일반국민보다 전문가들이 전작권 전환을 더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현재와 같음’이라는 응답과 ‘약화’라는 응답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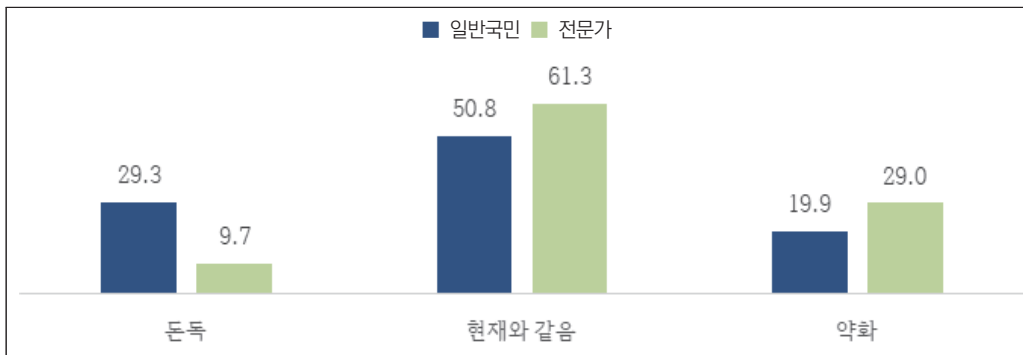
27) 김정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 변화,” 『국방연구』 제59권 1호 (2016); 정경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추진전략,” 국회세미나 자료집(2017. 9. 7).

28) 백민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미측 전문가 견해분석과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1647호 (2016), pp. 2-5.

29) 이러한 주장을 펴는 학자들은 몇 가지 전사를 예를 들기도 하는데 제1차 세계대전 시 지휘 단일화 조치를 강구하지 못했던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고전하다가 프랑 포쉬 장군을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 후 승리하였다는 점과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을 동맹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다른 국가의 군대들을 작전 통제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일반 국민들의 50.8%, 전문가의 61.3%는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동맹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이라 응답한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돈독’해질 것이라는 응답과 함께 볼 경우, 일반국민들은 80.1%, 전문가의 71%는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동맹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응답하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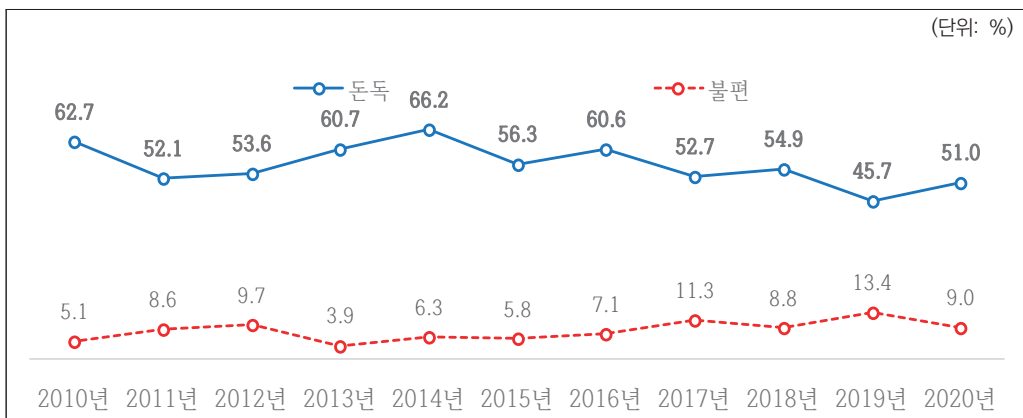
〈그림 10〉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출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충남: 국방대학교, 2020), p. 158.

여기서 지난 10년 간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동맹관계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인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국민들은 10% 정도만이 한미동맹이 불편하다고 응답해왔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현재와 같을 것’이라는 응답의 대부분은 긍정적인 답변에 가깝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1〉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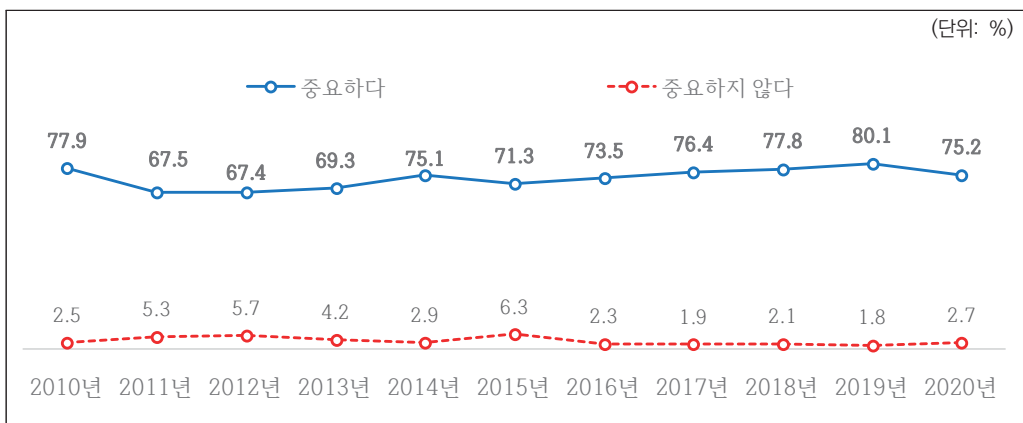
출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충남: 국방대학교, 2020), p. 14.

### 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동안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주한미군과 관련된 문제였다. 정치적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과 같이 주권의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한미동맹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국민들은 여전히 주한미군 범죄를 높이 (29.5%, <그림 6> 참조) 꼽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반미감정으로 격화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국민들이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75.2%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7%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국민들의 이러한 정서는 지난 10년간 설문을 종합해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 자체에 대한 안보적 중요성은 충분히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2〉 주한미군의 한국안보에 대한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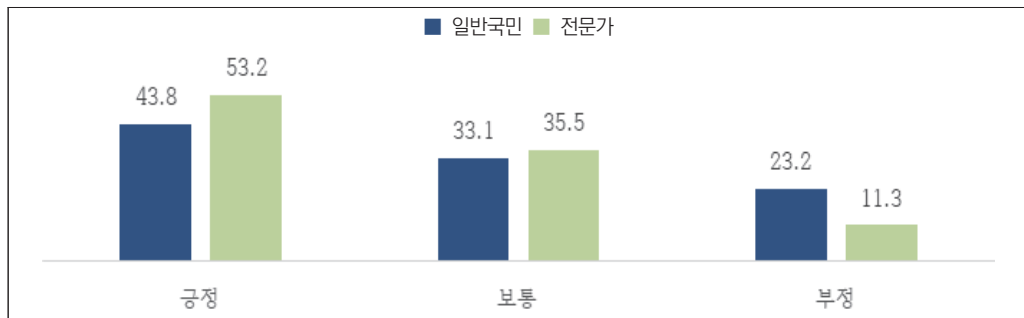


출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충남: 국방대학교, 2020), p. 15.

그렇다면 한국 국민들은 어떠한 측면에서 주한미군이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 국민들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군 주둔을 통해 한국의 안보 비용을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의 43.8%, 전문가의 53.2%는 ‘주한미군을 통해 안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23.2%, 전문가 11.3%에 지나지 않는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비용절약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절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질문의 특성상 부정적으로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국민 대부분은 주한미군으로 인해 한국이 안보 비용을 어느 정도 절약하고 있다고 인식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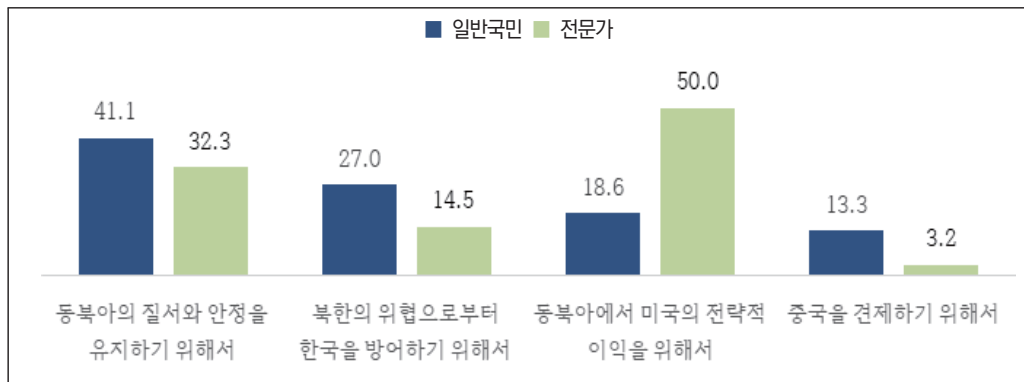
〈그림 13〉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출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충남: 국방대학교, 2020), p. 140.

둘째, 주한 미군으로 인해 북한 안보 위협에 대한 억제력은 물론 동북아시아 질서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반국민의 41.1%, 전문가의 32.3%가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에 대해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 유지를 꼽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위협 방어로는 일반국민 27%, 전문가 14%가 꼽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전문가의 50%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전략 문서 변화, 정치적 압박 등에 대한 추세 분석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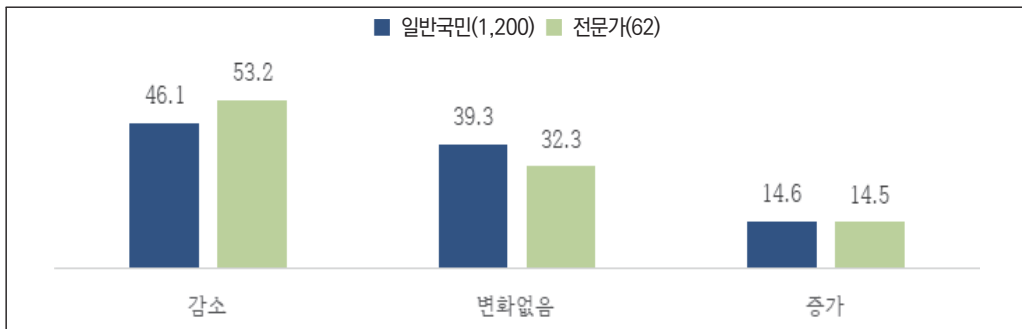
〈그림 14〉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이유



출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충남: 국방대학교, 2020), p. 135.

한편,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문제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대북 억제력 측면에서 인식을 살펴보면 일반국민(46.1%), 전문가(53.2%) 모두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39.3%, 전문가 32.3%를 보였는데 이는 한국의 국력 신장으로 인해 대북 억제력의 경우 한국이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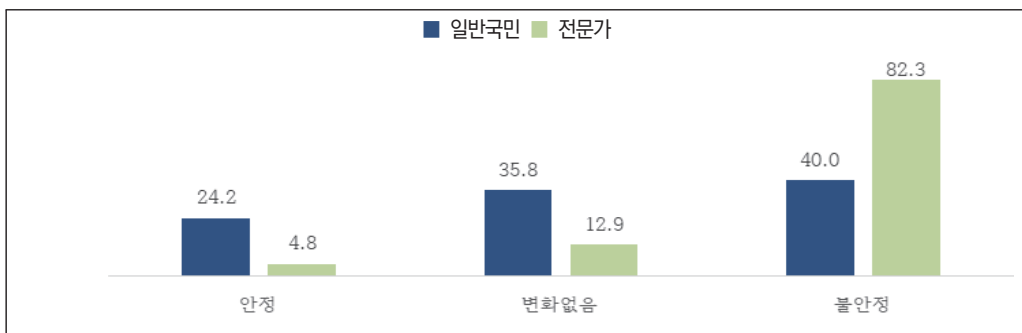
〈그림 15〉 주한미군 감축 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 변화



출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충남: 국방대학교, 2020), p. 152.

반면,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는 일반국민의 경우 40%가 불안정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전문가들의 경우 무려 82.3%가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경우 주한미군과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한 상관관계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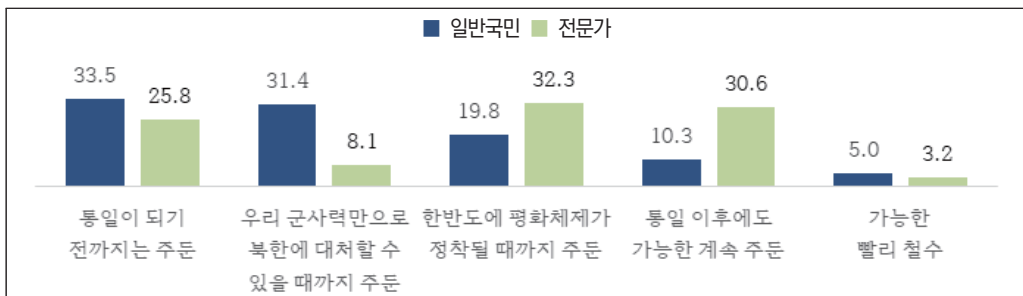
〈그림 16〉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 변화



출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충남: 국방대학교, 2020), p. 155.

이렇게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위협들이 제거 되기 전까지 철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소한 한국이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보유하거나,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들어서지 않는 한 철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일반국민의 33.5%, 전문가의 25.8%는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하여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통일이후에도 주둔하여야 한다는 응답도 일반국민 10.3%, 전문가 30.6%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7〉 주한미군 철수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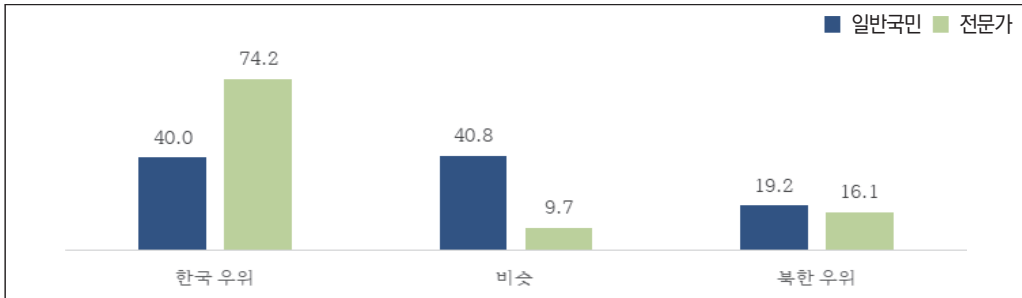
출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충남: 국방대학교, 2020), p. 137.

## 라. 연합연습 시행 문제

연합연습의 시행문제도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에 봉착해왔다. 시행 여부, 시행 규모, 시행 시기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특히 남북관계 측면에서 연합연습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되기도 하였다. 연합연습은 대북 억제력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은 연합연습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가져오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수준에 대한 질문에 일반국민의 40%, 전문가의 74.2%가 한국이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 반면 북한이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 비율은 일반국민, 전문가 모두 20% 미만이었다. 한국이 북한보다 더 강하거나 비슷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재래식 전력에 대한 인식으로 보인다. 즉, 주한미군은 제외하였으나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 핵 무기에 대한 위협 인식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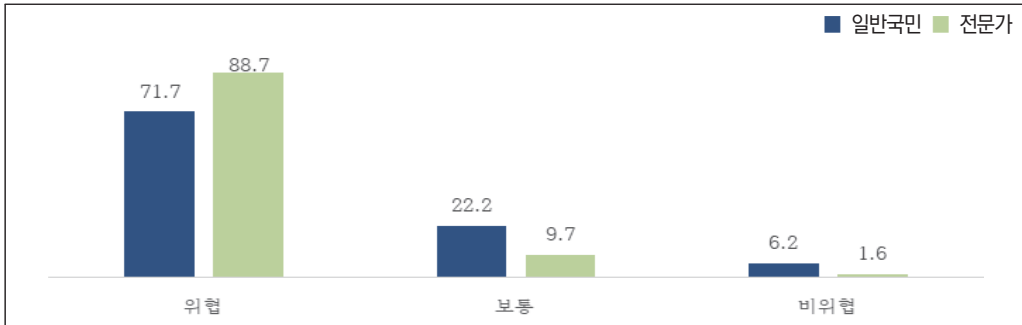
〈그림 18〉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출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충남: 국방대학교, 2020), p. 146.

북한 핵무기 개발이 한국 안보에 위협적인가에 대한 질문에 일반국민의 71.7%, 전문가의 88.7%가 ‘위협적’이라 응답하였고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응답은 설문의 오차를 고려할 때 유의미한 비율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한국 국민들은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는 북한에 필적할 만한 전력을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핵무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억제할 수 없는 큰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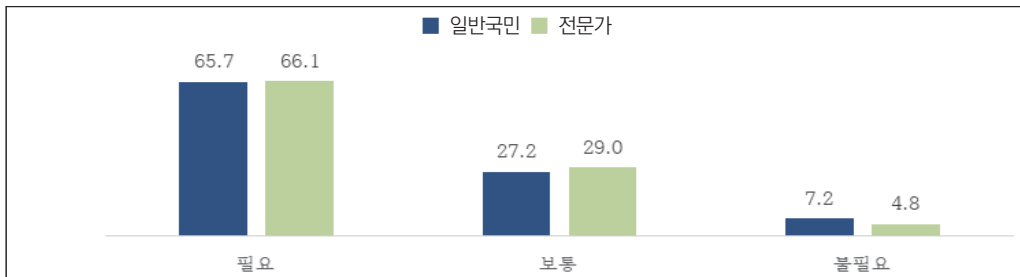
〈그림 19〉 북한 핵 무기에 대한 위협 인식



출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충남: 국방대학교, 2020), p. 185.

이러한 인식을 종합해볼 때 북한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대비 차원의 훈련이 바로 연합 연습이라는 것도 잘 인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미연합연습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일반국민 65.7%, 전문가의 66.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7.2%, 전문가 4.8%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한미연합 연습은 대북 억제력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0〉 연합연습의 필요성



출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충남: 국방대학교, 2020), p.149.

## IV. 미래 대미 정책 추진 방향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버리고 동맹의 관계를 중시하는 미국으로 다시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 즉, 세계 여러 나라 및 평화 단체와 결별을 선언했었던 관계를 복원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군이 주둔한 나라와 재협상을 통해 지금까지 발생했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국제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에서 한미동맹은 더욱 더 강화되는 방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강화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미래 미국이 새로운 국제 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국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한미동맹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확대가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변화 방향을 기반으로 좀 더 국익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미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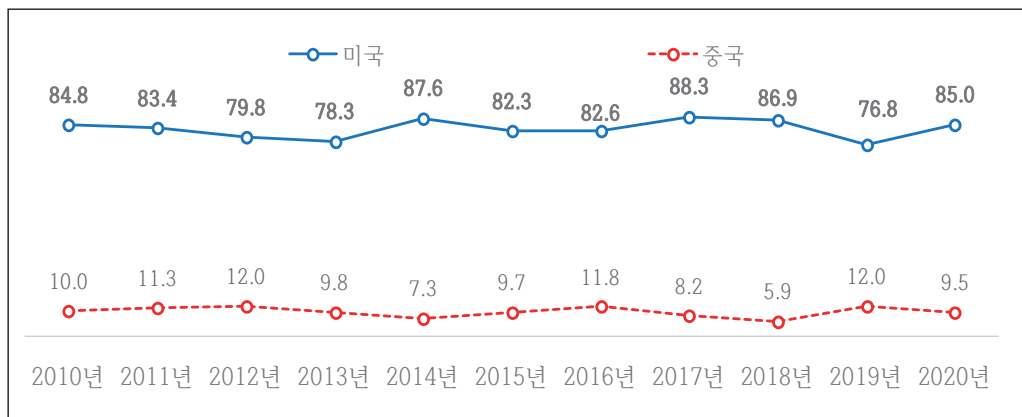
### 1. 한미관계 측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화 필요

한국에게 있어 미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 중요한 국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안보적으로는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경제적, 사회적, 학문적으로도 미국의 중요성은 한국에게 있어 매우 크다. 또한 최근에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sup>30)</sup> 따라서 미래 한국은 한미동맹에 대한 가장 큰 기조를 “관계 강화”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30) 2019년 한국 국방기술품질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 분야 과학기술 수준에서 미국은 세계 1위로 평가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기술품질원,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서』 (국방기술품질원: 진주, 2019) 참조.

특히, 국민들도 안보 면에 있어서 미국의 중요성을 매우 높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은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데 매우 큰 기반이 될 수 있다. 물론 관계를 강화함에 있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냉전시대처럼 일방적인 의존적 동맹이 아니라 미국과의 건강한 동맹으로의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지금까지 정보 분야와 같이 미국에 의존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험, 기술 등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21〉 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에게 중요한 국가



출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충남: 국방대학교, 2020), p. 11.

동맹 강화기조를 바탕으로 미래 한국은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동맹을 유지함에 있어 서로 분담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일정부분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 경제로 환원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sup>31)</sup>

하지만 70%가 넘는 한국 국민들은 주한미군 주둔 이유에 있어서 북한 위협만을 위해 주둔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3). 따라서 국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투명성, 상호존중과 호혜성, 제도적인 합리성 등을 더욱 강화시켜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있어 전환 이후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

31) 국방부, 『201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8), p. 129.

요가 있다. 즉, 전작권 전환이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약화시킨다거나 동맹자체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도화하여 국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주변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군사안보적인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전작권의 전환의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은 온전히 군사적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임에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경우 군사적 필요성과 중요성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군사적인 이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이점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반면 약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국민들은 여전히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는 다른 차원이다. 한국 국민들이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주한미군 범죄(29.5%)를 꼽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이전에 발생했던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잔상이 남아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는 범죄의 영향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2020년 6월 발표된 『2020 법무연감』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령이 해제된 2019년 주한미군 범죄 발생 건수는 26%(351건→444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는 주한미군 범죄는 결국 주한미군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동맹 자체에 대한 문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대한 확실한 통제와 함께 주한미군의 한국 국방 및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것도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에 대한 이미지 쇄신은 물론 미래 더욱 공고한 동맹으로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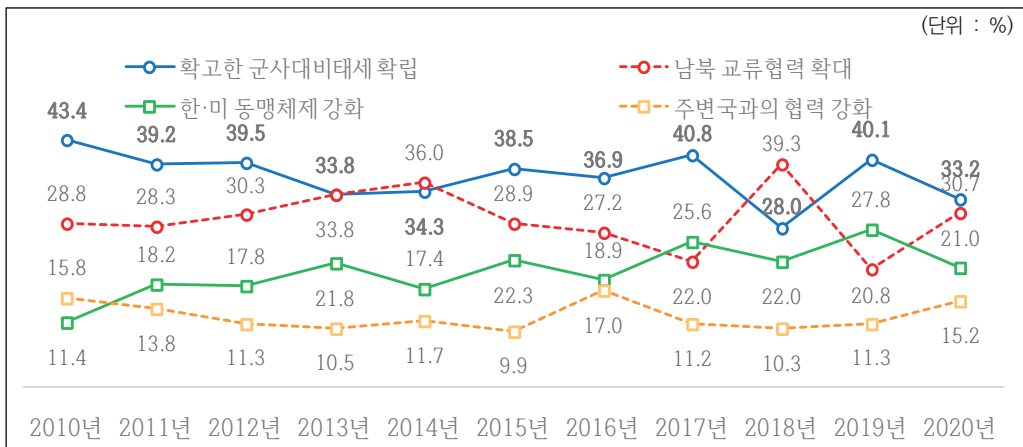
넷째, 연합연습 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연합연습은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적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그 규모 및 강도 등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 군사연습이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쉽게 취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국민은 물론 적에게도 좋지 못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한미연합 연습의 목표와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한 훈련에 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물론 군사적인 작전의 특성상 많은 부분을 공개할 수 없는 한계는 있다. 하지만, 훈련이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러한 훈련이 계속되는 것인지” 등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대북·대주변국 관계 측면

한국은 여전히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과 주변국의 군사적 성장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재래식 군사력도 증강시키고 있다. 일례로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선보여 한국은 물론 세계적인 우려를 자아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군은 무엇보다도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형성된 한반도 평화기류로 인해 국민들은 남북교류확대를 통해 안보위협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확고한 군사동맹태세 확립을 통해 위협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감소하였다. 물론 평화적인 노력을 통해 안보위협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가장 합목적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방은 이렇게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강력한 국방 태세는 오히려 평화적인 해법을 견인할 수도 있다. 적에게 군사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태세를 우선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22〉 안보위협 감소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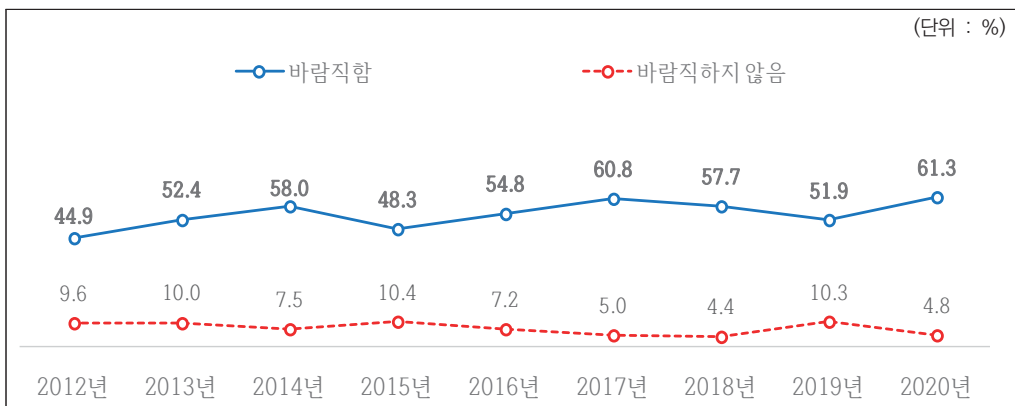
출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출판: 국방대학교, 2020), p. 11.

주변국 측면에서 한국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의 핵심은 ‘동맹’을 중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중요한 두 동맹,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일정 수위를 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

면서 한일 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합의’를 두고, 한일 갈등이 치열했던 2013년, 아베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계획을 밝혀 한국이 들끓자, 당시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참배를 만류했었다. 이후에도 미국은 막후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화와 양보를 압박했고, 결국, 2015년, 한국과 일본은 위안부 합의에 이르렀다. 바이든은 “ 당시 나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부부 관계를 복원시키는 이혼 상담사 같았다”고 회고하기도 했었다.

미국이 당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에 개입한 이유는 동맹 관리를 위해서였다. 중국과 대치 중인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한미일이 협력해야 한다는 판단 속에 한일 갈등은 피해야 하고 따라서 중재에 나선 것이다. 현재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맞서고 있고 지소미아, 수출 규제 등 안보, 경제 분야로도 갈등이 퍼져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일관계 악화는 한국에게 있어 좋지 못한 상황은 배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본에는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어 한국과 일본은 안보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국가임에 틀림없다. 이는 국민들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국민의 61.3%는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전에도 대체적으로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3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나타내어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응답인데 이는 10년 동안 10% 이내로 응답되었으며 2020년에는 4.8%로 오차범위를 고려할 경우 거의 의미 없는 수치에 불과하다.

〈그림 23〉 한미일 3개국 군사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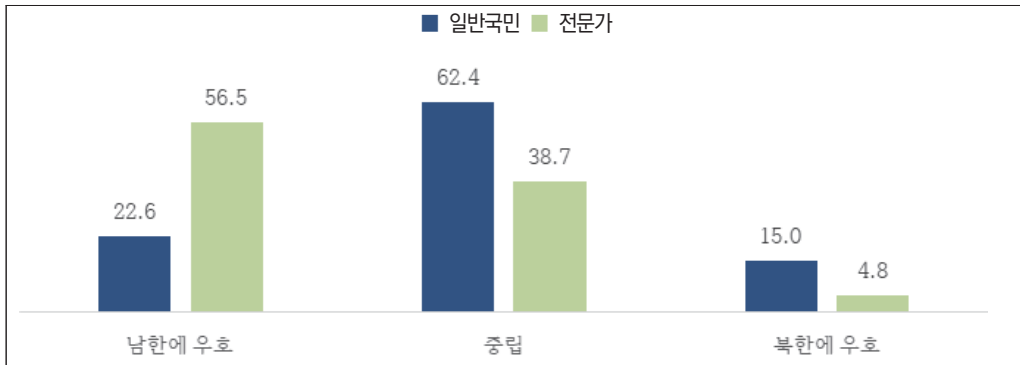


출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충남: 국방대학교, 2020), p. 12.

이렇듯 일본과의 협력적 관계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은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국민들은 일본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위기

상황 시 일본의 태도에 대한 질문에 ‘한국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22.6%에 그쳤고,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응답이 무려 62.4%로 나타났다. 심지어 반일 감정이 크게 반영된 수치로 보이지만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도 15%에 달했다.

〈그림 24〉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 시 일본의 태도



출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충남: 국방대학교, 2020), p. 70.

따라서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비호감도를 줄일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문제, 독도문제 등에서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망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되 미래 지향적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문제로 미래까지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본과 적극 공유하여 국방 분야 협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V. 결 론

2021년은 미 행정부가 교체되는 해이다. 이전에도 여러 번 미국의 정권 교체는 이루어져 왔으며 그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정권교체는 기존의 교체와는 다르게 그 변화 정도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지속해야 하며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동맹국은 물론 협력국가들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은 이러한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동맹 자체가 점차 강화되고 새로운 역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동맹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방위비 분담금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연합연습 시행 및 규모 등에 관한 문제 등이 한미 간의 주요 안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확인할 수는 없다. 단지 바이든 당선자와 국무 부장관, 안보보좌관 등의 주요 직책의 지명자들의 과거 행보를 통해 우리가 예측할 뿐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분석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미국의 정책이 변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한국에게 있어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한 안보자산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명심하고 미래 대미 정책 수립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고,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다. 한미동맹이 어려운 시기가 와도 새롭게 강화될 수 있는 것이고, 한미동맹이 강화되더라도 그 속에 새로운 어려움이 배태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국가안전보장회의. 『평화변영과 국가안보』(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4).
- 국방기술품질원.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서』(국방기술품질원: 진주, 2019).
-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 김정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 변화,” 『국방연구』 제59권 1호 (2016).
- 김태형.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군의 군사전략 변화,” 『국방연구』 제63권 제1호 (2020).
- 박민형.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형성요인과 극복전략,” 『국방정책연구』 제26권 제3호 (2010).
- 박원곤·설인호. “트럼프 행정부 안보·국방전략 분석/전망과 한미동맹 발전방향,” 『국방연구』, 제60권 4호(2017).
- 백민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미측 전문가 견해분석과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1647호 (2016).
- 정경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추진전략,” 국회세미나 자료집(2017).
- Daniel S. Roper and Jessica Grassetti. “Seizing the High Ground: United States Army Futures Command,” *ILW SPOTLIGHT* 18-4(2018).
- Donald Trump. *Great Again: How to Fix our Crippled America*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16).
- Donald Trump. *Time to Get Tough: Make America Great Again* (Washington D.C.: Rernery Publishing Inc., 2015).
- Graham Allison. 정혜윤 역. 『예정된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서울: 세종서적, 2018).
- James D. Morrow.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1991).
- James Steiberg and Michael O’Hanlon. *Strategic Reassurance and Resolve: US-China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 Joe Renouard. “America’s Anti-China Mood Is Here to Stay,” *The Diplomat*, August 14 (2019).
- Park, M. H. and Chun K. H. “An Alternative to the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The Case of the ROK-U.S. Allianc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7, No. 1(2015).
-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15).

\_\_\_\_\_.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17).

US Army TRADOC. *Multi-Domain Battle: Evolution of Combined Arms for the 21<sup>st</sup> Century 2025-2040* (Washington D.C.: TRADOC, 2017).

\_\_\_\_\_. *The Operational Environment and the Changing Character of Future Warfare*(Washington D.C.: TRADOC, 2017).

U.S.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US DoD, 2018).

\_\_\_\_\_.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Washington D.C.: US DOD, 2019).

# 국민들의 대북 인식변화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안 경 모\*

- I. 서론
- II. 조사결과에 나타난 국민들의 인식 I: 추세와 현황
- III. 조사결과 교차 검증: 서울대 조사결과와의 비교
- IV. 조사결과에 나타난 국민들의 인식 II: 응답군별 분석
- V. 결론

## I. 서론

본 연구는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실시한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및 정책대안연구’의 일환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면접조사한 결과 중 북한 및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대북정책과 관련한 지혜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목적의식 하에 본 연구는 크게 다음의 4개 파트로 구성되었다. 먼저 2장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대북인식에 나타난 변화의 추세와 현황을 파악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본 조사와 유사한 설문 중 가장 널리 인용되어온 대표적인 연구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조사 결과와 교차 분석함으로써 본 조사 결과를 검증한다. 다음으로 4장에서

\*국방대학교 교수

는 조사결과의 특성을 연령, 지역, 학력으로 구분하여 응답군별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사회의 첨예한 갈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남남갈등의 주요 변수로 지목되어 온 북한에 대한 인식과 대북정책과 관련한 이견의 내용과 특성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끝으로 5장은 상기한 결과를 바탕으로 파악된 국민들의 북한 및 남북관계 관련 인식의 추세, 현황 그리고 응답군별 특성을 종합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 II. 조사결과에 나타난 국민들의 대북인식 I : 추세와 현황

### 1. 대북 위협인식의 ‘제한적’ 재강화

대북 위협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눈여겨 봐야할 부분은 추세와 현황에 대한 분석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7년까지의 흐름이 2018년을 기점으로 반전된 중대한 국면적 변화가 있었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연차별 변화 뿐만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여론의 추이를 정확히 독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국면은 추세에 있어서는 2018년 이후의 기대감이 하노이 노딜 이후 일정한 조정기를 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현황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2017년도에 비해 상당한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는, 다시 말해 일정한 부침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2018년의 흐름이 ‘아직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대북 위협인식의 재강화라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이다.

#### 가.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과 관련된 가장 주요한 지표로 판단되는 “북한 정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설문결과는 상기한 추세를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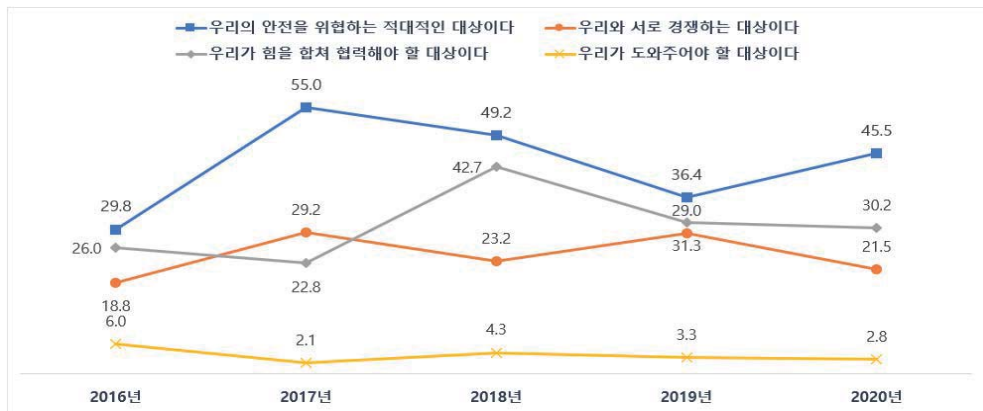
해당 설문에 대한 답변은 2017년을 정점으로 지난 2년간 매우 큰 폭의 변화를 보여왔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북한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라는 답변이 55%에서 36.4%까지 일관되고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이는 2013년부터 고조되어 가던 이른바 3차 북핵위기가 2017년 들어 전쟁 위기까지 언급되는 정점으로 치달은 후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인 평화 훈풍의 흐름으로 변화되어 간 추세와 정확히 조응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올해 설문결과 반전되었다. 북한이 적대적인 대상이라는 답변이

작년 대비 10%가량이나 늘며 45.5%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판문점 3자 회동과 스톡홀름 회담에서도 극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 후 남북미 3자관계가 정체에 빠진 것과 밀접히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상반기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의 극단적인 대응을 한 것이 국민들의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재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황의 차원에서 보면 2017년 55%에 비해 10%가 낮은 45.5%를 기록함으로써 2018년부터의 추세를 큰 틀에서는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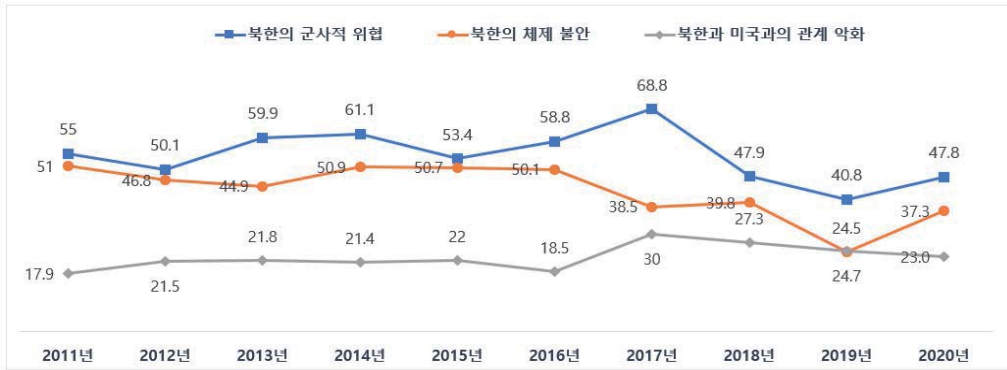
〈그림 II-1〉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 나.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외 요인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에서도 이와 같은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올해 조사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47.8%)이라는 응답은 2019년 대비 7%p(2019년 40.8%)나 증가하여 2017년 이래 2년 여간 지속되던 하락 추세가 반전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치는 2018년과 거의 동일한 47.8%로 2017년의 68.8%에 비하면 현격히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체제불안이나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악화 역시 각각 30%대와 20%대의 낮은 수치를 유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I-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



#### 다. 북한 핵의 위협 여부

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 할 수 있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아래의 그림은 북한의 핵 보유가 한국에 위협이 되느냐에 대해 ‘매우 큰 위협이 된다’와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는 답을 합친 값과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와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값을 합친 값을 비교해본 그래프이다. 결과를 보면 위협이 된다는 응답은 상기한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과 마찬가지로 2017년 79.8%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뒤 2018년부터 내리 2년 동안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71.8%로 작년대비 5% 가량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동시에 해당 수치가 2017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치로 아직은 2018년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3〉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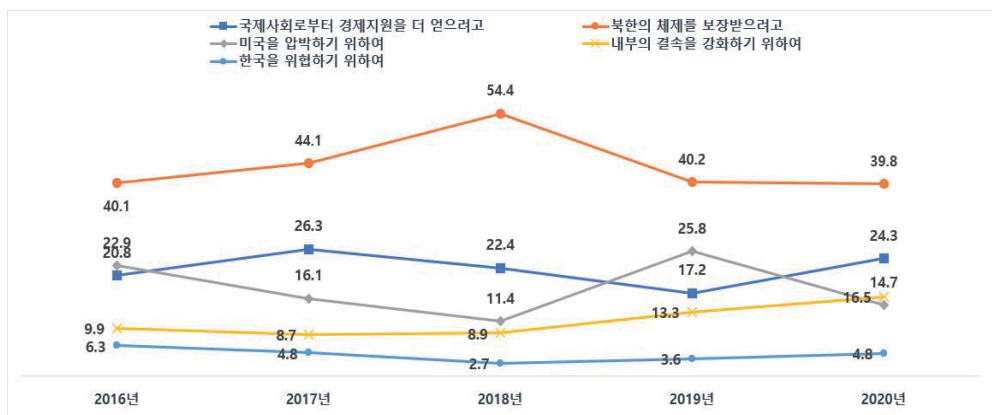


## 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에 대한 설문 역시 누군가를 위협하려는 의도보다는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받으려는 방어적 목적으로 판단하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40%대를 유지하며 지배적인 의견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18년 협상 국면에서 해당 의견이 역대 최고인 54.4%로 이례적인 수치를 기록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공언하고 협상에 나선 것이 상기한 기존의 지배적인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수치가 2019년에 40.2%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이와 같은 기존의 지배적 견해가 줄어새라기보다는 북미간의 협상이 본격화된 구체적 정황과 관련하여 미국 변수가 부상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견해가 11.4%에서 25.8%로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나타난 효과로 보이며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견해 역시 2018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점 역시 핵의 공격적 의도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 전반적인 여론과 일치하는 방향이라 판단된다.

〈그림 II-4〉 북한 핵무기 보유 의도 추세(2016-2020)



## 2. 안보 불안 완화 추세 지속

앞서 살펴본 추세상의 ‘반전’이 갖는 ‘제한적’ 의미는 안보 불안감의 추이를 볼 때 보다 선명히 나타났다.

### 가. 남북한 군사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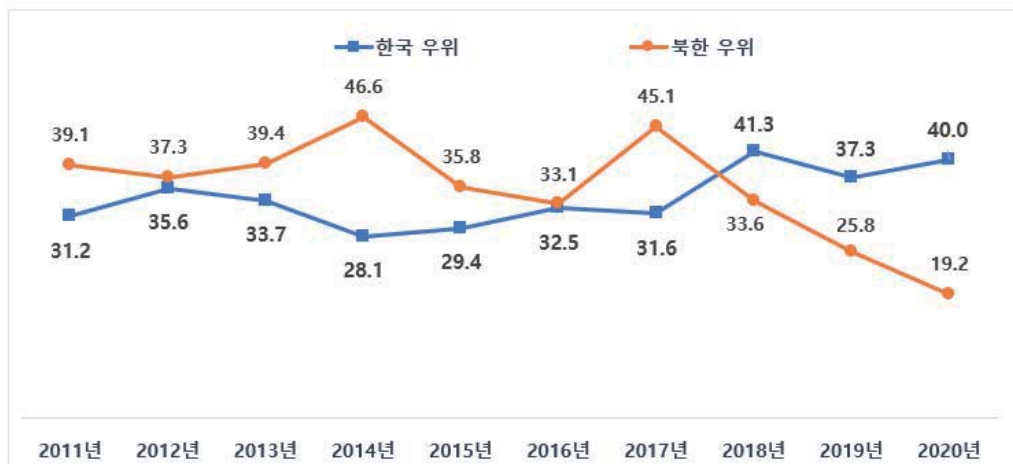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와 관련한 국민들의 판단은 그 예 중 하나

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해당 항목에 대한 답변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밀접히 연동되는 패턴을 보여왔다. 병진노선의 채택과 핵보유 법제화, 연이은 핵, 미사일 실험 등으로 전쟁 위기로 치달았던 2013년의 46.6%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도발과 북미대립이 극단적으로 충돌했던 2017년에도 45.1%로 북한의 군사력이 우위라는 답변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8년 이후 조사 이래 최초로 한국우위와 북한우위의 수치가 역전되며 북한우위 견해가 2018년 33.6%, 2017년 25.8%로 급격히 낮아진 것은 2018년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이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결정적으로 낮춘 성과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속된 북핵교착국면과 남북관계 악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올해 조사 결과에서 위협인식이 반전되었음도 불구하고 북한 우위라는 답변이 여전히 급격한 하락세를 유지하며 조사 이래 최초로 10%대인 19.2%로 급락한 것은 추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하노이 노딜 이후의 여러 상황이 북한이라는 행위자에 대한 위협인식 혹은 불만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만으로도 상당한 안도감을 느끼며 안보 불안감을 덜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림 II-5〉 주한미군 제외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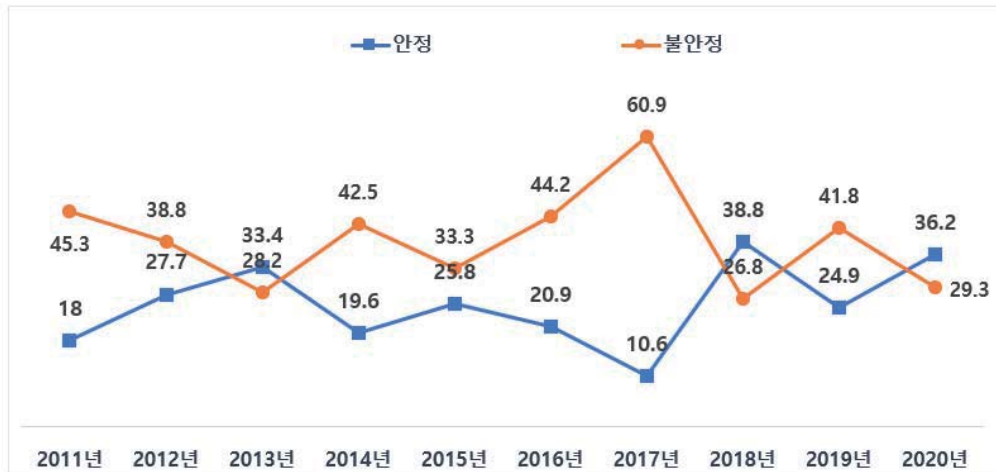
#### 나.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 평가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한국의 전

반적 안보상황에 대한 우려는 2017년 전쟁위기의 속에 60.9%의 극단적인 수치로 올라간 이후 2018년의 평화 훈풍 이후 26.8%로 절반 이하로 급격히 낮아지면서 말 그대로의 ‘전환’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작년 조사 결과 하노이 노딜 이후의 우려가 반영되며 불안정하다는 수치가 41.8%로 다시 반등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의 수치는 불안정하다는 답변이 다시 20%대인 29.3%로 낮아지면서 안정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하노이 노딜 이후의 교착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2017년 이전의 정세와 현재의 정세를 차별적으로 인식하며 현재의 평화 프로세스 진척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라 판단된다.

〈그림 II-6〉 한국의 전반적 안보 상황(2011~2020)



#### 다.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한 답변 역시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 “귀하는 향후 2-3년 내에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설문결과는 2019년 대비 ‘높다’(30.3%)는 응답은 5.3%p(2019년 35.6%) 가량 감소하였으며 ‘낮다’(33.7%)는 응답은 그에 반비례하여 4.6%p(2019년 29.1%)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응답이 높다고 보는 응답을 앞서며 2018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역전된 결과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II-7〉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추세



### 3.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지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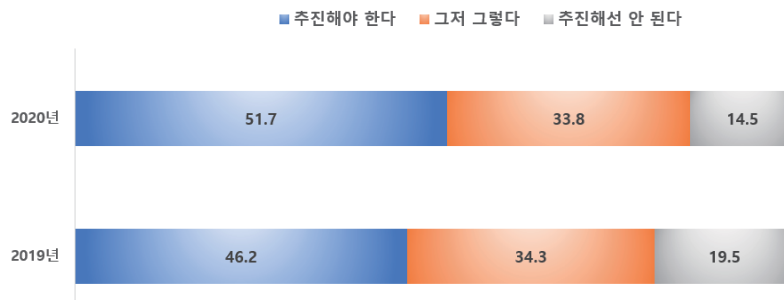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위협인식과 안보불안감의 전반적인 완화 추세와 대북 정책에 대한 선호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기본적으로 앞서 살펴본 인식의 추세 및 현황 모두와 연동되며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지지가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먼저 추세로 볼 때 앞선 인식과 마찬가지로 2018년 평화 훈풍에 대한 기대와 2019년 하노이 노딜의 충격이 찾아들며 일정한 조정 국면에 들어간 모습이며 현황으로 볼 때는 2017년보다 높은 정도로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주목되는 또 다른 지점은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그 방식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지원의 형태보다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남한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 가. 남북 교류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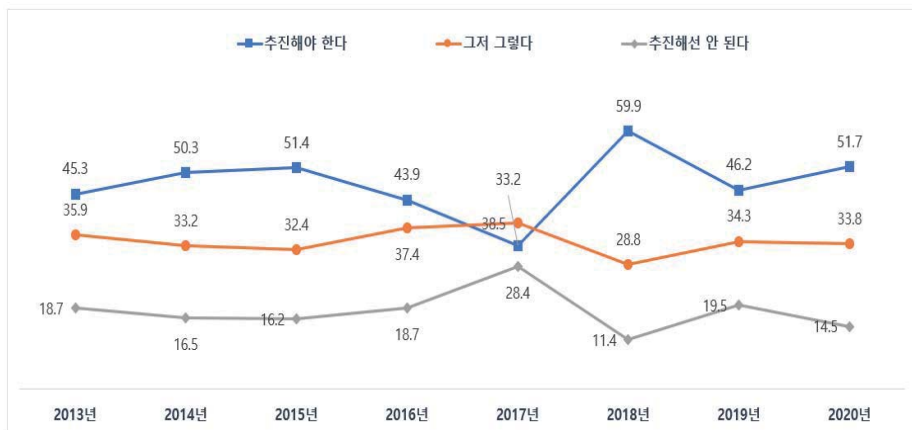
특히 남북 교류 사업 추진과 관련한 여론은 앞선 인식의 변화 추세와 거의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먼저 아래 그림에서 보듯 남북간 교류 사업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46.2%에서 51.7%로 증가한 반면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은 19.5%에서 14.5%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I-8〉 남북간 교류 사업 추진



또한 아래 추세선에서 보듯 해당 수치는 2018년 이후의 저점이었던 2019년의 46.2%조차 2017년도의 33.2%에 비하면 크게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지는 하노이 노딜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치로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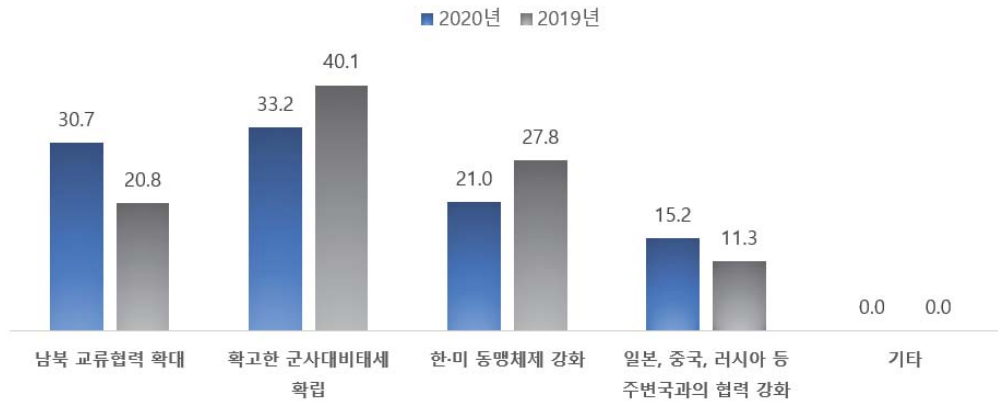
〈그림 II-9〉 남북간 교류 사업 추진(2011-2020)



## 나.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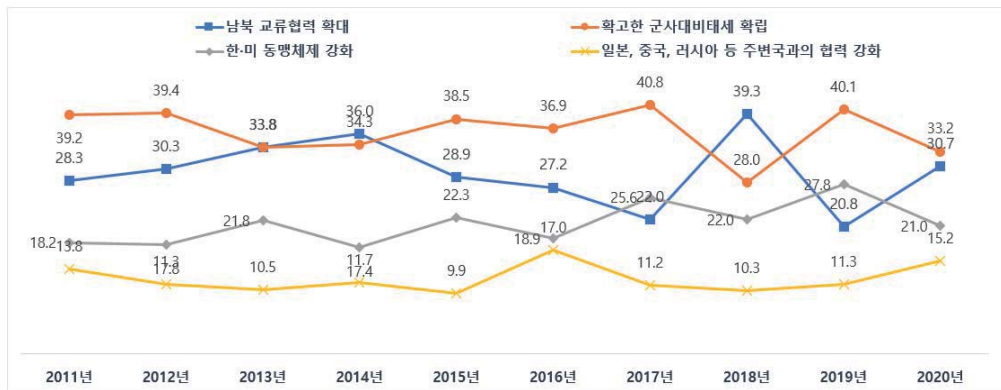
다음으로 “대외적으로 한반도의 안보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올해 설문조사 역시 전반적으로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는 견해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남북 교류협력 확대라 답한 비율은 20.8%에서 30.7%로 큰 폭으로 늘어난데 반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강화나 한미 동맹체제 강화는 각각 40.1%에서 33.2%, 27.8%에서 21%로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림 II-10〉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



또한 아래 그림에서 보듯 이러한 수치는 2019년도의 실망감을 어느 정도 극복한 결과로 2017년을 기점으로 보면 남북 교류협력 확대 여론은 22%에서 30.7%로 올라간 반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의 경우 40.8%에서 33.2%로 낮아진 결과라는 점에서 2018년의 전환 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11〉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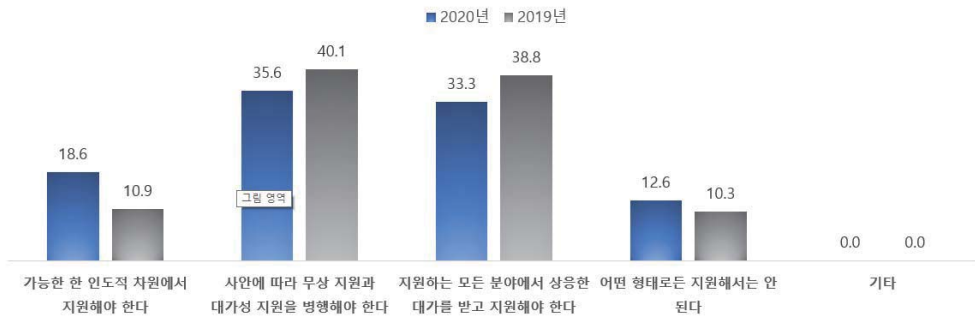


#### 다.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한 설문 결과는 대북위협인식의 완화와 협력인식의 강화로 특징지어지는 앞선 조사결과들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그 변화의 폭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을 보여줬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2020년 조사에서는 ‘가능한 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18.6%로 2019년 대비 7.7%p(2019년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안에 따라 무상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35.6%로 전년에 비해 4.5%(2019년도 40.1%) 감소했다.

〈그림 II-12〉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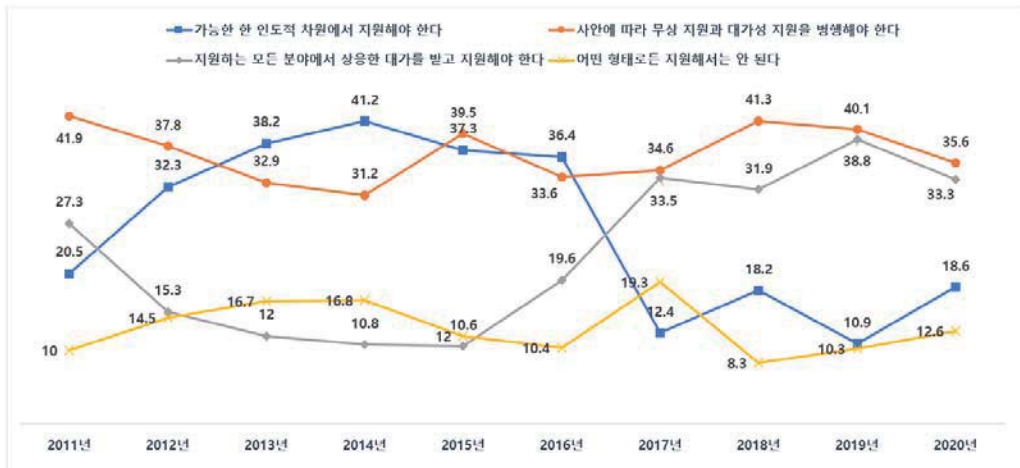


그러나 작년과 대비하여 나타난 이러한 추세와 함께 주목되는 지점은 2018년 이후의 전반적 추세이다. 먼저 엄격한 상호주의를 의미하는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은 2016년을 기점으로 10.6%에서 19.6%로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이듬해에는 33.5%로 상승했으며 평창발 훈풍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도 31.9%로 30%대를 유지했다. 다시 말해 비록 작년대비로 5.5%가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33.3%라는 수치는 2017년에 버금가는 매우 높은 수치라는 것이다.

또한 이와 반대로 '가능한 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는 마찬가지로 2017년을 기점으로 전년대비 24%나 감소하며 지난 10년 이래 최초로 10%대로 추락한데 이어 올해 조사까지도 18.6%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대북 접근법을 감성적인 차원에서 선택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북 위협인식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남북관계를 합리적 거래의 차원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그림 II-13〉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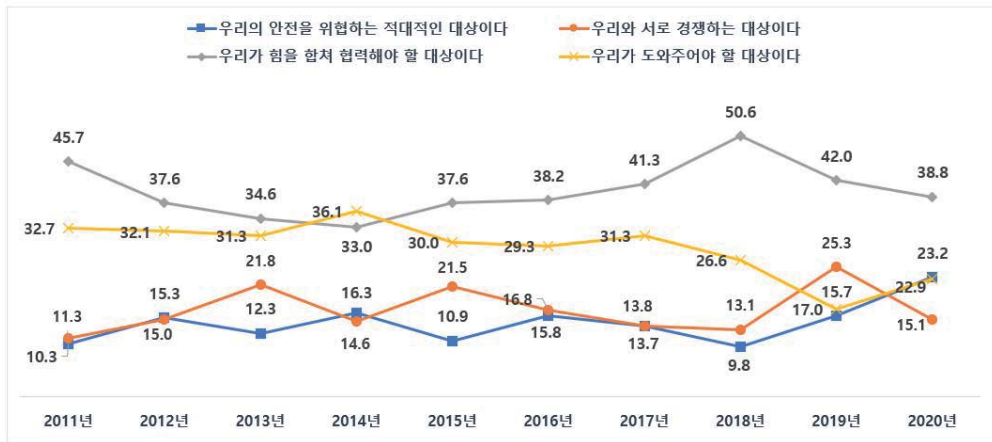


#### (4)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과 안보불안감이 완화되고 교류협력에 대한 지지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에 있어서는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방식보다는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합리적 여론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도 잘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여론은 2018년도 평창발 평화프로세스가 시작된 후 31.3%에서 26.6%로 하락한데 이어 2019년에도 15.7%로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8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여론이 50.6%에서 42%를 거쳐 올해 38.8%로 지속하락한 점이나 오히려 2018년 이후 ‘적대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여론이 9.8%에서 2019년 17%, 2020년 23.2%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 역시 상기한 복합적인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II-14〉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 4. 통일과 공존에 대한 입장

주지하듯 통일에 대한 입장과 평화로운 공존에 대한 입장은 때로는 같은 방향을 향할 수 있지만 또 어떠한 조건 하에서는 상반된 방향을 향하기도 한다. 이는 통일이 기본적으로 현상타파적인 개념인데 반해 평화와 공존은 기본적으로 현상유지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근본적인 속성이 상이한 데 기반한다. 평화통일이란 말에서 평화는 특정한 상태가 아닌 방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존의 특정한 상태를 일컫는 평화라는 말과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2018년 평화 훈풍 이후의 여론은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지가 오히려 양자의 현상을 변경하는 통일에 대한 전망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무리한 흡수통일을 기대하기 보다는 안정되고 비적대적인 상대와의 공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양상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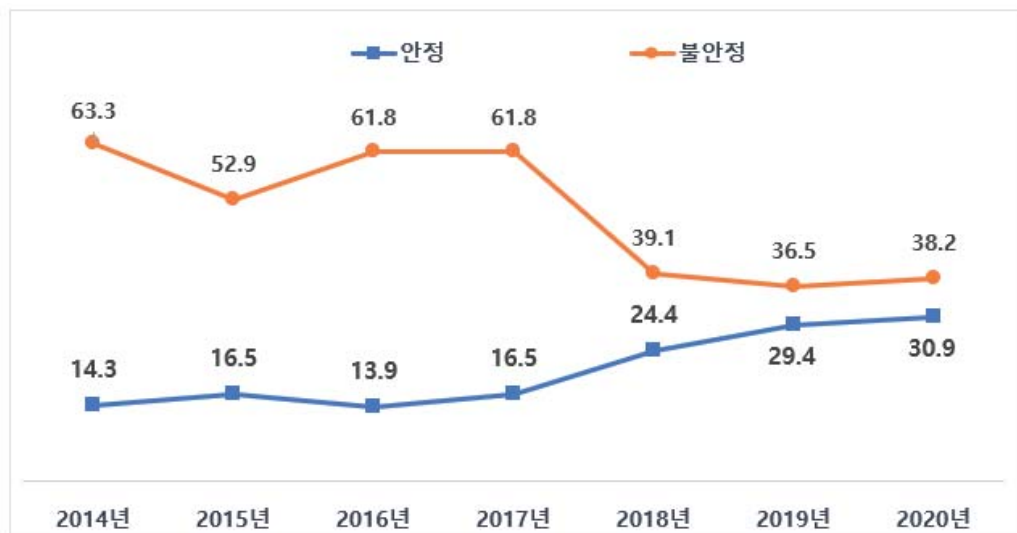
##### 가. 북한 안정성 평가

먼저 2018년 이후 적극적인 대외 접촉에 나서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자신들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홍보한 북한의 행보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귀하는 향후 5년 내에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인 아래 그림에서 잘 나타난다. 그림에서 보듯 2017년 60%에 달하던 불안정해 질 것이란 답변은 2018년을 기점으로 그 절반에 가까운 30% 대

로 줄어들었으며 안정될 것이란 답변은 2017년 16.5%에 불과하던 것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현재는 그 배에 가까운 30.9%를 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조사가 시작된 2014년부터 불안정해질 것이란 답변이 안정화될 것이란 답변의 4배에 달하던 격차가 최근에는 10% 이내로 좁혀지며 북한의 안정화에 대한 예상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15〉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추세(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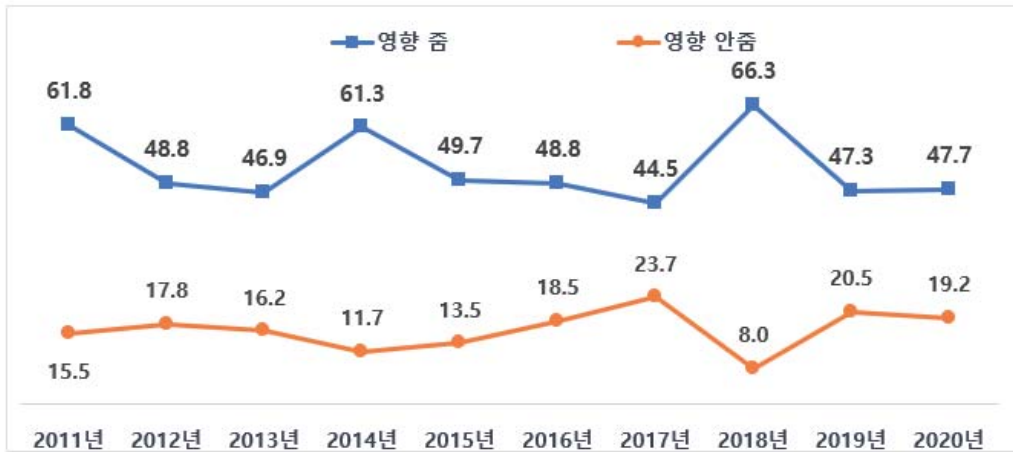


#### 나.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는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앞서 살펴본 지지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남북교류협력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북한 체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의 영향에 대한 아래 설문 결과는 이러한 여론을 잘 보여준다. 남북 간에 극적인 이벤트들이 이어지던 2018년 갑작스레 66.3%로 전년대비 21.8%나 급격히 상승했던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은 2019년 47.3%로 이전 수치로 회복한 이래 올해 역시 47.7%로 해당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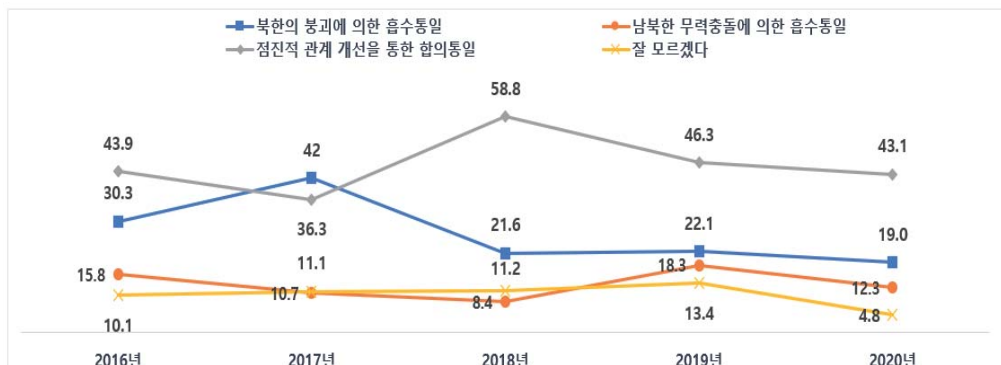
〈그림 II-16〉 북한 체제 변환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의 영향



#### 다. 통일 방식 전망

북한의 체제 안정성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의 변화는 통일방식에 대한 전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2015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42%에 이르던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이 유력하다는 답변은 2020년 19.0%로 절반 가까이 준 반면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 통일이 예상된다는 답변은 2018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43.1%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II-17〉 한반도 통일방식 전망(201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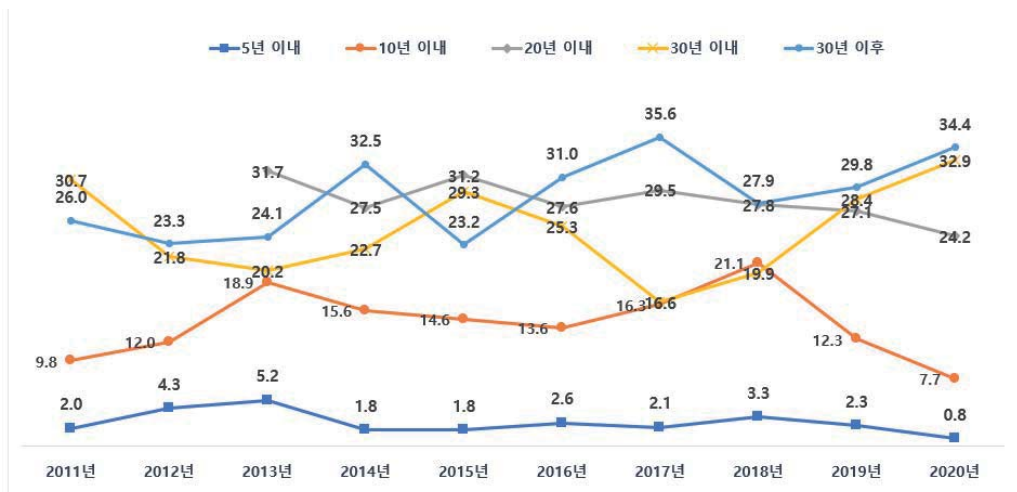
## 라. 한반도 통일 전망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 나아가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기대감과 지지도 상승과 북한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결합된 통일에 대한 복합적 인식 변화는 향후 통일의 가능 시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2018년을 기점으로 30년 이후라는 답변은 35.6%에서 27.9%로 하락하는 대신 10년 이내라는 답변이 16.3%에서 21.1%로 상승한 이후 2019년도부터는 30년 이후라는 답변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올해 34.4%로 이전의 최고점에 가까운 수치를 회복하고 반대로 10년 이내란 답변은 2019년 12.3%로 급격히 하락한 후 추세를 지속하여 올해에는 7.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남북 간 긴장해소와 교류협력의 증대, 대북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통일이라는 예정된 결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국민들은 남북관계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실천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 판단된다.

〈그림 II-18〉 한반도 통일 전망



### III. 조사결과 교차 검증: 서울대 조사결과와의 비교

본 설문조사와 유사한 국내의 여타 설문 중 신뢰도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조사는 단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결과라 할 수 있다. 북한 및 통일이라는 이슈에 집중하여 동일한 척도와 항목을 통해 10여 년 동안 정기적으로 지속되어온 조사라는 점에서 여타 조사의 양적, 질적 수준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사와의 교차 검증 결과 본 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변화의 폭과 방향은 대체적으로 서울대 조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과 적대감이 악화되었으나 2017년의 수준보다는 높지 않은 ‘제한적’ 악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하에는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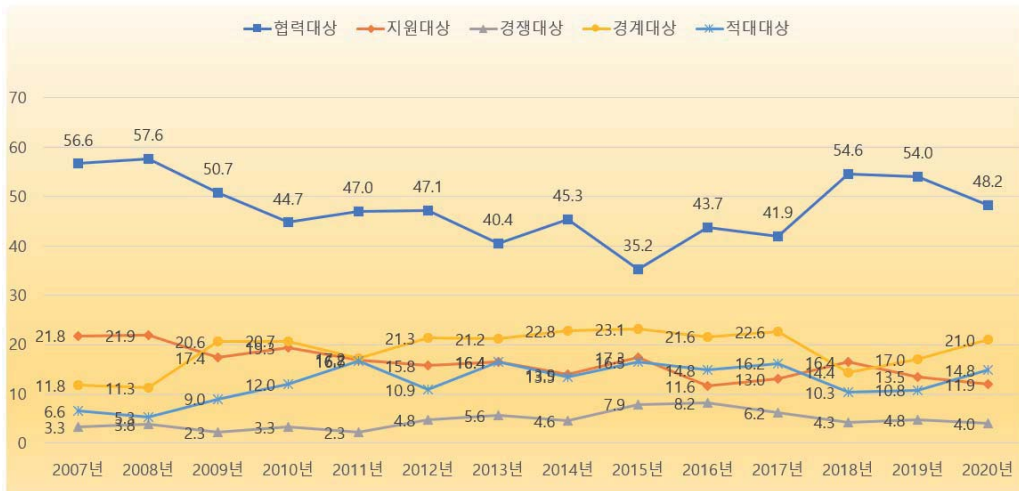
#### 1. 북한 정권에 대한 평가

먼저 북한에 대한 인식 부분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올해 안보문제연구소의 조사결과에서는 지난 5년간 최대 2배 이상의 격차로 북한이 적대적인 대상이라는 답변이 우세하던 것이 완전히 역전되어 협력의 대상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38.8%로 나타난 바 있다(적대적 대상이라는 응답은 23.2%).

아래 그림에서 보듯 이러한 결과는 서울대 조사결과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경계와 적대적 대상이라는 답변은 2019년 27.8%에서 올해 35.8%로 증가했고 협력의 대상이라는 답변은 54.0%에서 48.2%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협력의 대상이라고 보는 인식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경계 및 적대적 인식이라는 응답의 증가는 정체되어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으며 아래 질문들의 대한 응답에서도 동일한 배경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이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결과는 <2020 통일인식조사 단절의 시대, 통일인식의 변화>(2020년 10월 13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에서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그림 III-1〉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위와 같은 인식의 증감은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다시 말해 합리적인 상대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2017년 이전 4년 간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대략 70%로 대략 30%대를 기록한 신뢰한다는 응답을 두배를 상회하던 것이 2018년을 기점으로 신뢰한다는 응답이 54.7%,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5.3%로 극적으로 역전되었던 것이 올해 다시 역전되어 신뢰한다는 응답은 33.7%,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6.3%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각각 5% 내외로 이전의 수치와 차이를 보이며 아직은 평화 훈풍의 영향이 일정정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 북한 정권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인가?



## 2. 북한의 미래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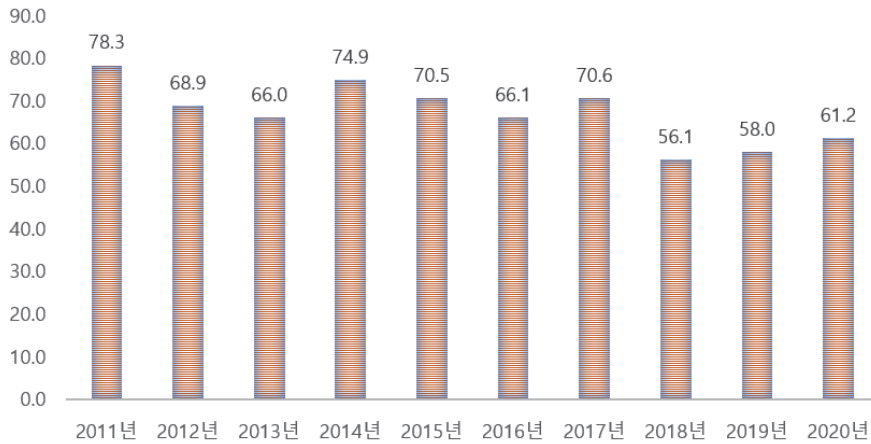
북한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는 상기한 두 개의 설문과 더불어 북한의 '미래'에 대한 아래의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먼저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2017년 이전 5년 동안 대부분 60%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17년의 경우 68%로 변화하고 있다는 답변 31%를 두 배 이상 상회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세는 2018년 극적으로 역전되어 변하고 있다는 답변이 77.3%, 변하지 않고 있고 있다는 답변이 22.7%로 역으로 세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세는 작년부터 다시 약간 좁혀지기 시작하여 올해는 변화하고 있다는 답변이 39.3%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60.7%를 기록하며 재 역전되었다. 해당 수치가 고점을 기록한 2017년의 수치에 비해 높지 않은 것 역시 유사하다.

〈그림 III-3〉 북한의 변화에 대한 평가



또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 역시 2018년 전년대비 14.5%나 하락하며 급격한 변화를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재상승하여 올해는 61.2%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2017년의 70.6%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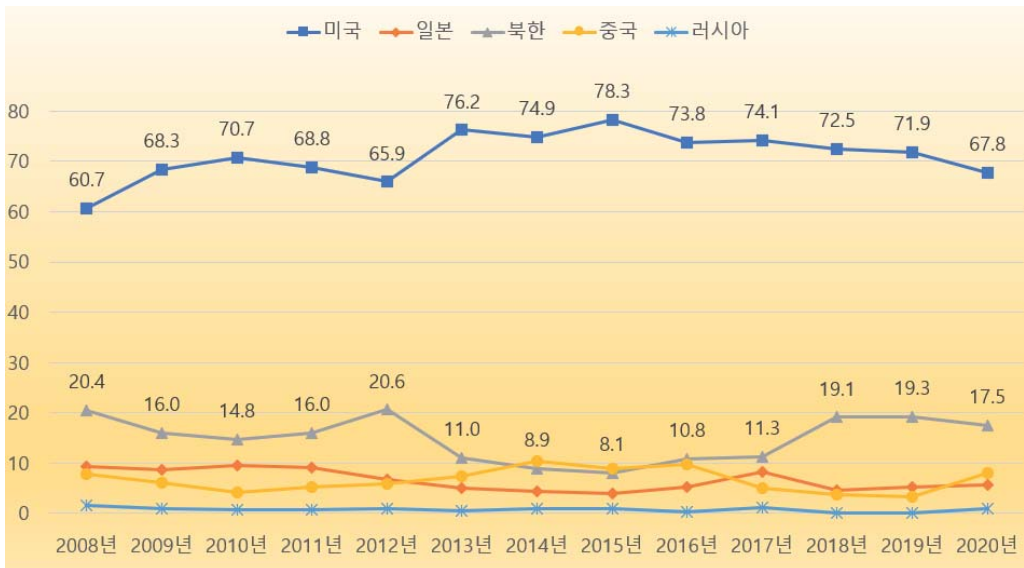
〈그림 III-4〉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 3. 여타 국가 대비 북한에 대한 친밀감

마지막으로 타국 대비 북한과의 친밀감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순위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국에 이어 2위이지만 수치에 있어서는 작년 대비 1.8%p 이상 감소한 17.5%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2017년의 11.3%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그림 III-5〉 어떤 국가와 친밀하다고 느끼는가?



## Ⅳ. 조사결과에 나타난 국민들의 대북인식 II: 응답군별 분석

한국 사회의 갈등 수치는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상위에 랭크될 만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북한 이슈는 남남갈등의 핵심적인 변수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특성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경색과 한미동맹, 주한미군 등의 핵심적 안보 문제와 결부되어 보다 심화된 갈등의 양상을 보여왔다.<sup>2)</sup>

이하에서는 전체 설문결과를 다시 연령별, 지역별, 학력별 범주로 나누어서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문제와 관련한 한국사회의 갈등의 양상을 이해하고 이를 완화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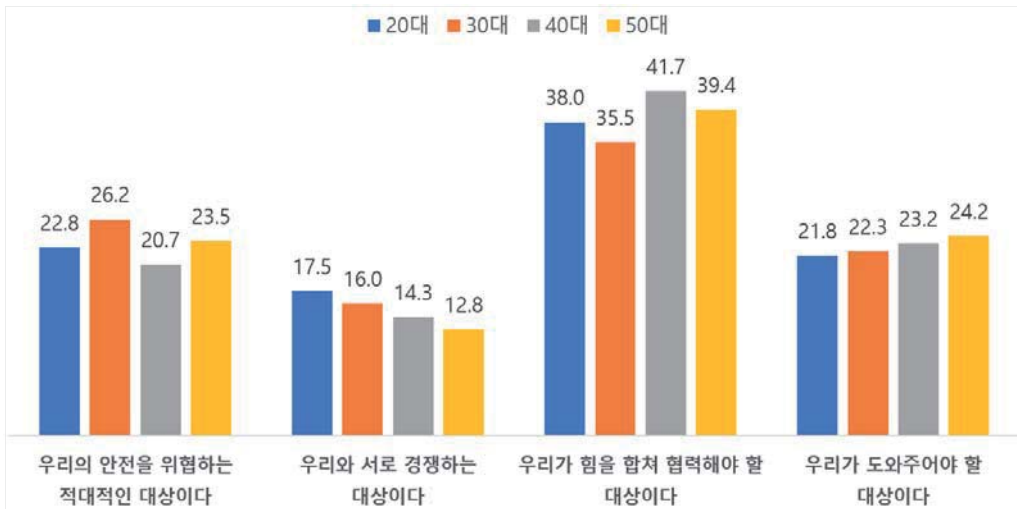
### 1. 연령별

응답군별 조사결과 가운데 연령별 구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여타 지역별, 학력별 차이에 비해 비교적 편차가 크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2030세대의 군사안보 및 북한 이슈에 대한 무관심이 오랫동안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사에 따른 한반도의 평화바람은 이들의 생각을 크게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육협의회에서 전국 2030세대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78.2%가 통일문제에 관심 있다고 대답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sup>3)</sup> 그동안 2030세대가 대북관 및 대북정책에서 보수적이라 평가받아온 것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경향이 완화되어 여타 연령대의 특성에 수렴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주민에 대한 생각이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의견의 경우에는 연령별 차이가 거의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2) 남남갈등에 대한 기존 논의에 대해서는 이하를 참조할 것.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강혜석, 2020. 『사회협약의 정치와 한반도 평화: 구성주의를 통한 전제조건 재검토 및 평화와의 접목』 이화여대 북한연구학회 편, 『남과 북, 평화와 공존』(선인); 2004.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경남대학교 출판부); 권숙도, 2019. 『평화의 관점에서 본 남남갈등 해결방안의 모색』 『한국정치연구』 제28집 제2호(2019); 김갑식, 『한국사회의 남남갈등: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23권 2호(2007); 마인섭·차문석·윤철기, 2012. 『북한 문제와 남남갈등』(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정영철, 2018.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남갈등』 『한국과 국제정치』 제34권 제3호.

3)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198>(검색일 2020.10.9.).

〈그림 IV-1〉 북한 주민에 대한 생각: 연령별



〈그림 IV-2〉 남북교류협력 재개(舊금강산 관광 재개: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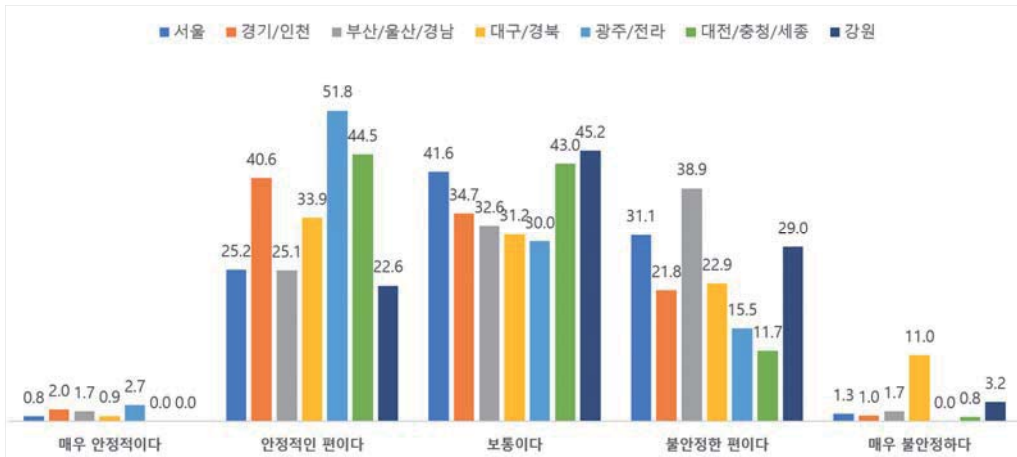


## 2. 지역별

응답군을 분류한 네 가지 기준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지역별 구분이었다. 아래와 같이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설문별로 그 답변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관한 문항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불안정하다고 느낀다는 답변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여타 지역에서 불안정한 편이라고 대답한 것이 평균 22% 가량인데 반해 부산/울산/경남은 이보다 두 배 정도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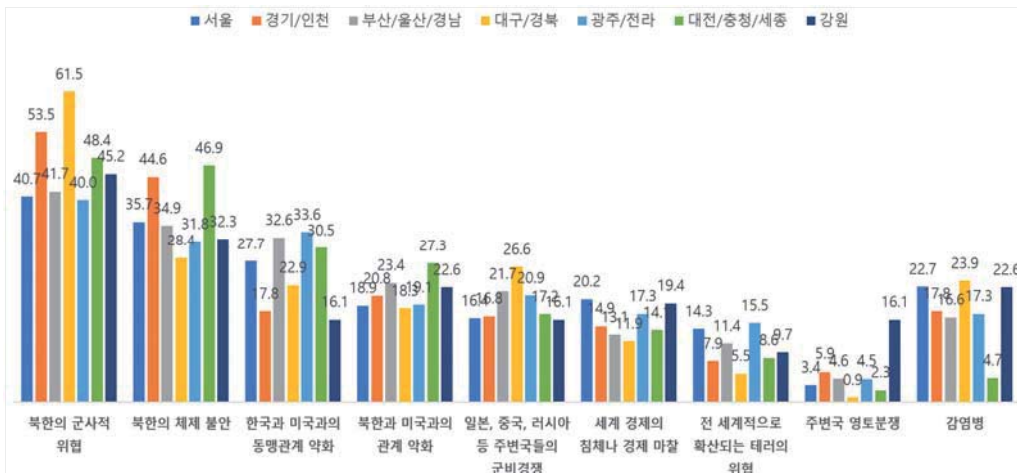
38.9%를 기록한 것이다. 또한 반대로 안정적인 편이다라는 답변은 광주/전라 지방이 51.8%로 일종의 전방지역이라 할 수 있는 강원도의 22.6%는 물론 부산/울산/경남의 25.1%의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다.

〈그림 IV-3〉 한반도의 전반적 안보 상황: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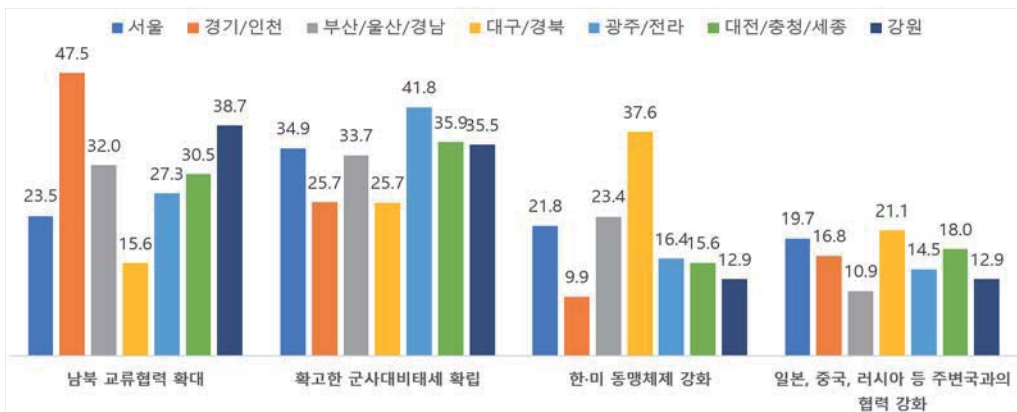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외요인과 관련한 지역별 특성도 흥미롭다. 대구/경북 지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61.5%로 가장 높게 보여 같은 항목에 대해 약 40%의 응답율을 보인 서울,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등과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그림 IV-4〉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외요인: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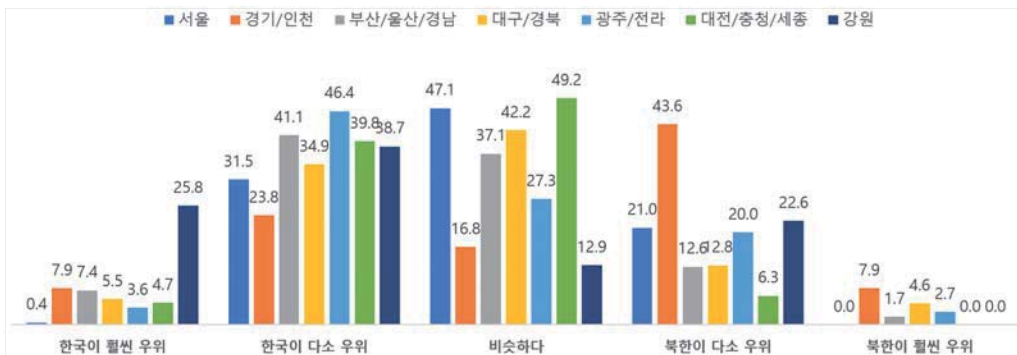
앞선 질문과 연동된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에 관한 지역별 특성 역시 주목할 만하다. 아래 그림과 같이 경기/인천 지역은 남북 교류협력 확대라는 항목에 47.5%로 가장 많이 응답했는데, 이는 대구/경북 지역의 15.6%와 비교했을 때 세 배가량 차이가 난다. 강원 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은 한미 동맹체제의 강화가(37.6%), 서울과 광주/전라, 대전/충청/세종 지역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각 34.9%, 41.8%,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5〉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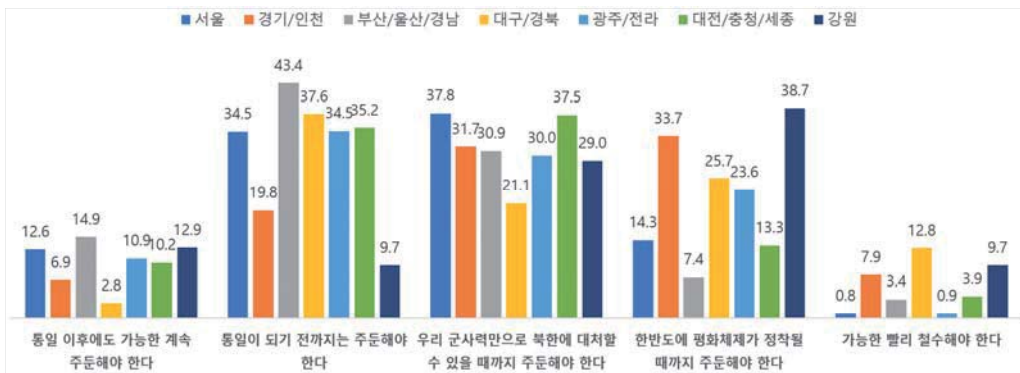
주한미군을 제외한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평가 항목 역시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인천 지역은 북한이 우위라고 보는 입장이 43.6%로 나타나 기타 지역과 두 배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그림 IV-6〉 주한미군 제외 남북한 군사력 비교: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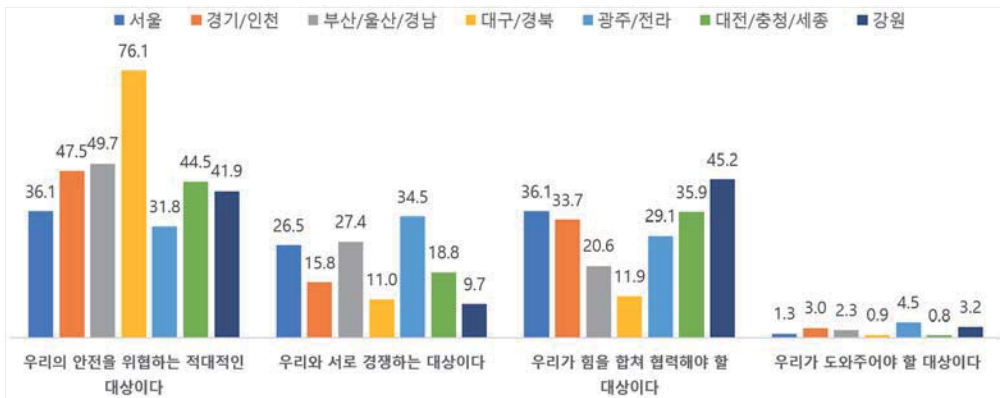
주한미군의 철수 시기와 관련한 문항에서도 그러한 지역별 응답의 차이는 두드러진다. 먼저 가능한 빨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구/경북 지역이 12.8%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이라는 항목에서 14.9%로 지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강원도는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38.7%), 서울 지역은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37.8%)이라는 항목에서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IV-7〉 주한미군 철수 시기: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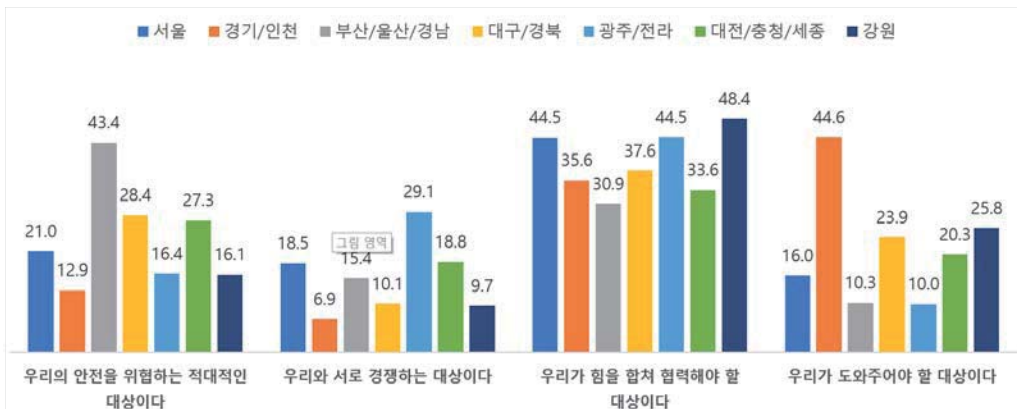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조사결과는 보다 흥미롭다. 가장 보수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유사하게 대구/경북은 다른 지역보다 북한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라는 항목에 76.1%로 가장 많은 비율로 답변했다. 반면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응답은 강원(45.2%), 서울(36.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8〉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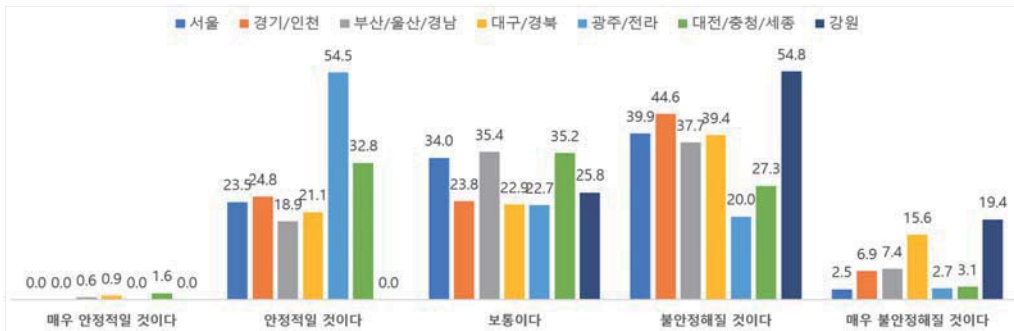
다음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의 경우 앞선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과 달리 적대적이나 협력적이냐는 이분법적인 균열을 보인다고 보다는 협력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원조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를 중심으로 견해가 갈린다는 점이 주목된다. 예를 들어 북한 정권을 적대적인 대상이라기보다는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던 강원 지방의 경우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동일한 인식을 가진 반면, 북한 정권을 적대적 대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던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북한 주민을 적대 또는 협력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원조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강원도의 경우 북한을 공존의 대상으로 보는 반면, 대구/경북의 경우 북한을 흡수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판단된다.

〈그림 IV-9〉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지역별



향후 5년 이내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도 지역별 차이는 뚜렷하게 관찰된다. 특히 대전/충남/세종의 경우 안정적일 것이라는 답변이 54.5%로 대략 20~30%대를 보인 여타 지역에 비해 현격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강원 지역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54.8%를 기록함으로써 광주/전라지역의 20%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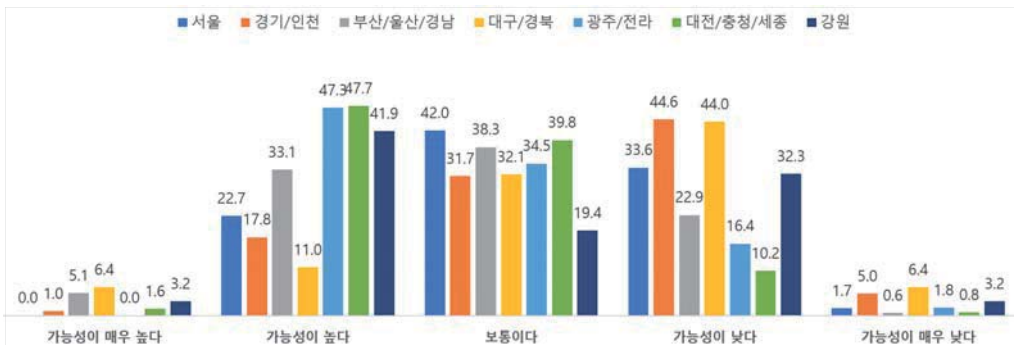
〈그림 IV-10〉 향후 5년 이내 김정은 체제는 체제 전망: 지역별



다음으로 향후 5년 이내 김정은 정권의 무력 도발 가능성과 관련한 지역별 편차이다.

전반적으로 그 가능성을 전 지역에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특히 광주/전라와 대전/충청/세종, 강원은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각각 47.3%, 49.3%, 41.9%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반해 대구/경북은 11%, 경기/인천 지역은 17.8%를 기록하여 30%에 가까운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IV-11〉 향후 5년 이내 김정은 정권 무력도발 가능성: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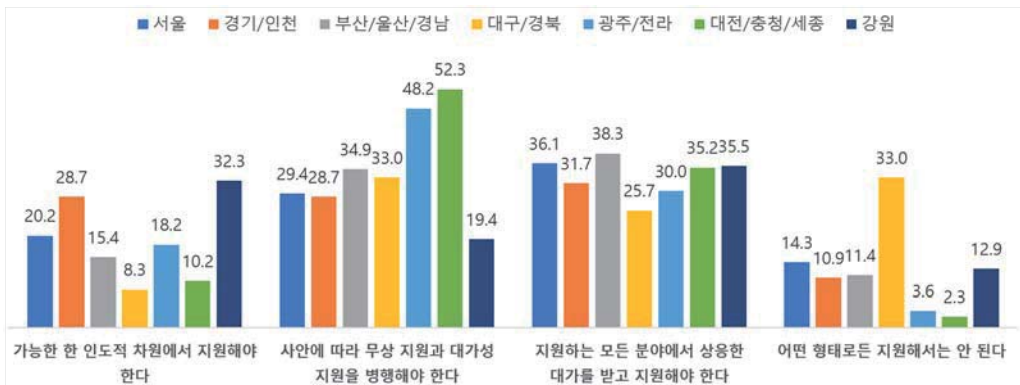


바람직한 대북지원 정책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지역별 차이 역시 주목할 만하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찬반 여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은 적게 관찰되는 가운데 대구/경북(33%)은 여타 지역 평균 9.2%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 지역은 반대로 가능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8.3%)도 여타 지역 평균 20.8%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대체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난 광주/전라 지역에서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는 엄격한 상호주의의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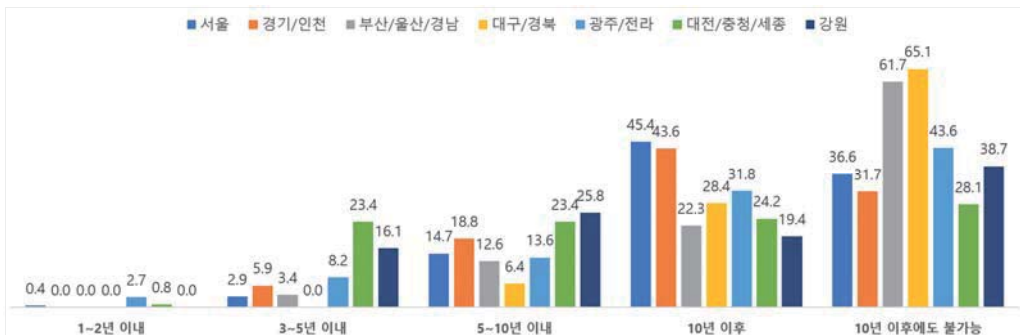
칙에 대한 응답이 30.0%로 두 번째로 낮다는 점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보수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보다 8.3%p 낮은 수치이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성격을 보이고 있는 대구/경북이 사안에 따른 무상지원과 대가성 지원의 병행에 가장 높은 33.0%의 지지를 보낸 것과 대비, 광주/전라 지역은 48.2%의 응답을 보여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IV-12〉 바람직한 대복지원 정책 방향: 지역별



상기한 지역적 편차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시점을 내다보는 문항에 대해서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아래 그림과 같이 광주/전라 지역은 3~5년 이내라고 대답한 응답이 8.2%로 나타난 반면 같은 항목에 대해서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는 23.4%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10년 이후에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지역이 각각 61.7%, 65.1%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여 보수적인 여론을 잘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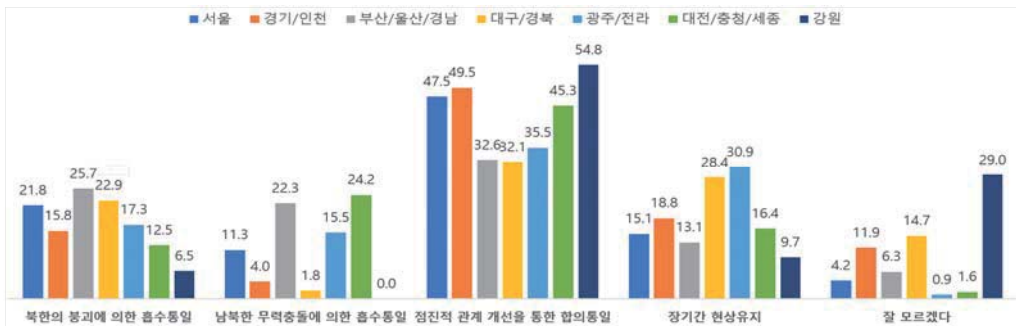
〈그림 IV-13〉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시점: 지역별



다음으로 통일의 방식과 관련한 지역별 응답군의 조사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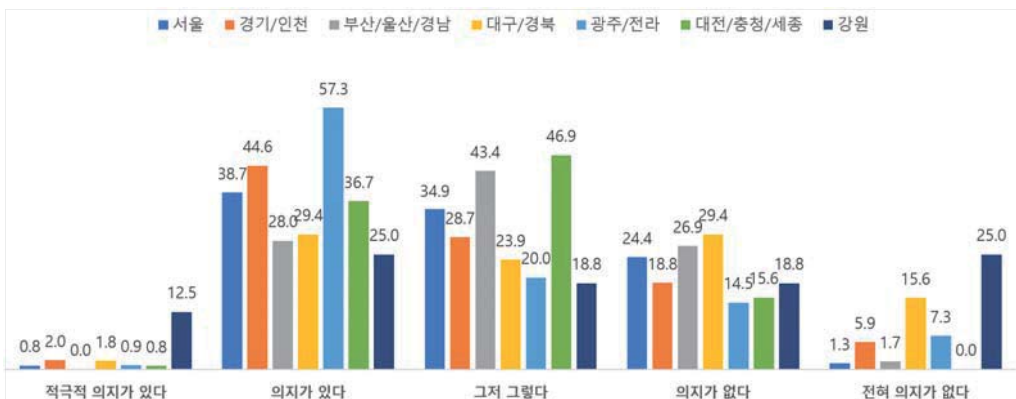
다.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강원 지역(54.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대구/경북(32.1%)지역과의 격차는 22.7%p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방식에 25.7%라는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

〈그림 IV-14〉 한반도 통일의 방식: 지역별



통일 비용을 부담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다’는 응답이 서울(38.7%), 경기/인천(44.6%), 광주/전라(57.3%), 대전/충청/세종(36.7%)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은 ‘그저 그렇다’가 43.4%, ‘의지가 없다’는 응답이 2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지역별 통일 자세 저항감의 차이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그림 IV-15〉 통일 비용 부담 의지: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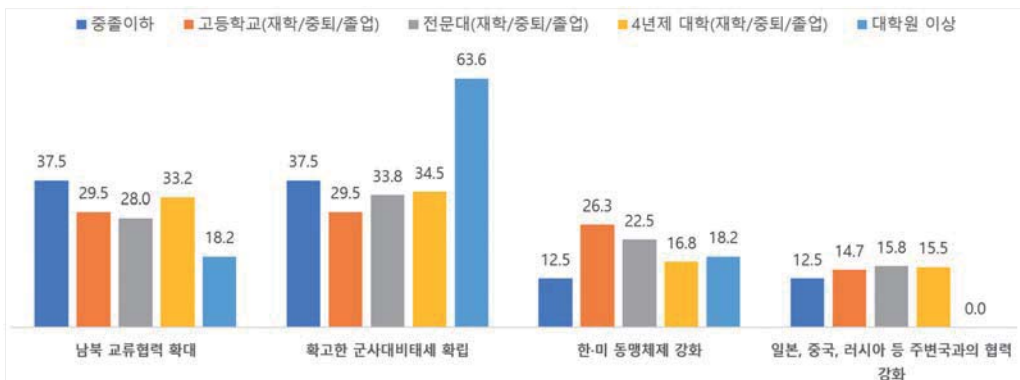


### 3. 학력별

마지막으로 학력별 구분에 따른 응답군의 특성이다. 학력별 구분은 중졸이하, 고등학교, 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 이상의 구분으로 나뉘며 상대적으로 모수가 적어 커다란 의미가 없는 중졸이하(8명)와 대학원 이상(11명)은 제외하고 나머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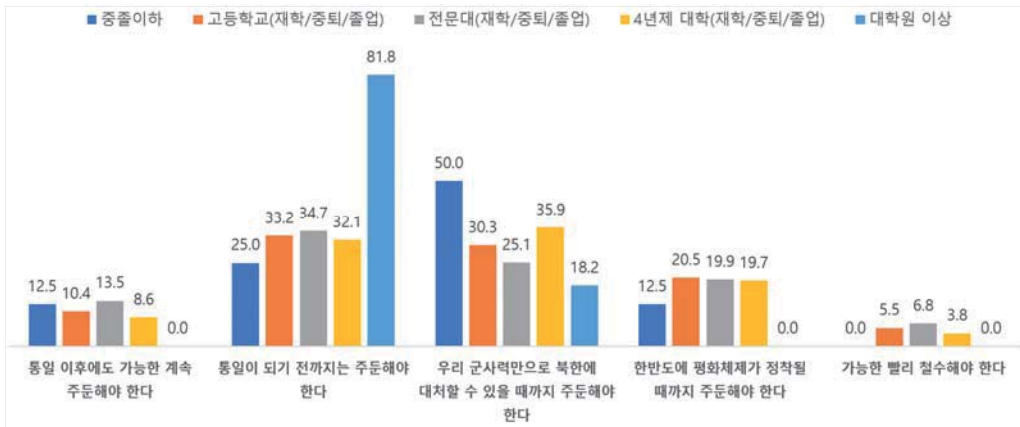
먼저 안보 위협감소를 위한 방식이다.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4년제 대학(재학/중퇴/졸업)의 경우 확고한 군비태세 강화(34.5%)와 남북교류협력 확대(33.2%)를 높은 비율로 선택한 데 반해 고등학교(재학/중퇴/졸업)의 경우 남북 교류협력 확대(29.5%),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29.5%), 한미동맹체제 강화(26.3%) 등으로 고른 지지를 보였다.

〈그림 IV-16〉 안보위협 감소를 위한 방식: 학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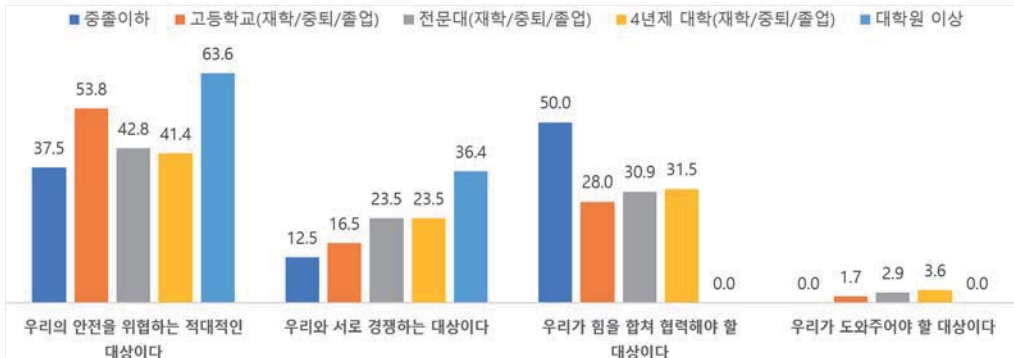
주한미군의 주둔 시기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반적으로 커다란 편차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4년제 대학(재학/중퇴/졸업)의 경우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가 35.9%로 가장 비율을 보인 반면 고등학교(재학/중퇴/졸업)와 전문대(재학/중퇴/졸업)의 경우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해야 한다’를 각각 33.2%와 34.7%로 가장 큰 비율로 지지하였다.

〈그림 IV-17〉 주한미군 주둔 시기: 학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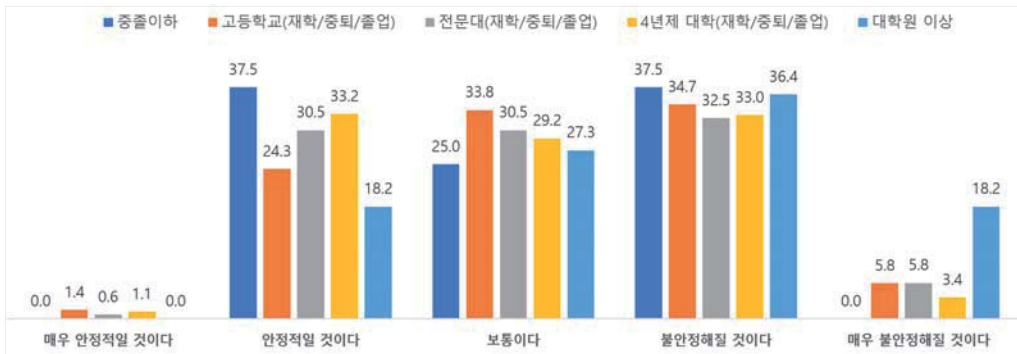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항목에서는 비교적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력이 낮을 수록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반대로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림 IV-18〉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학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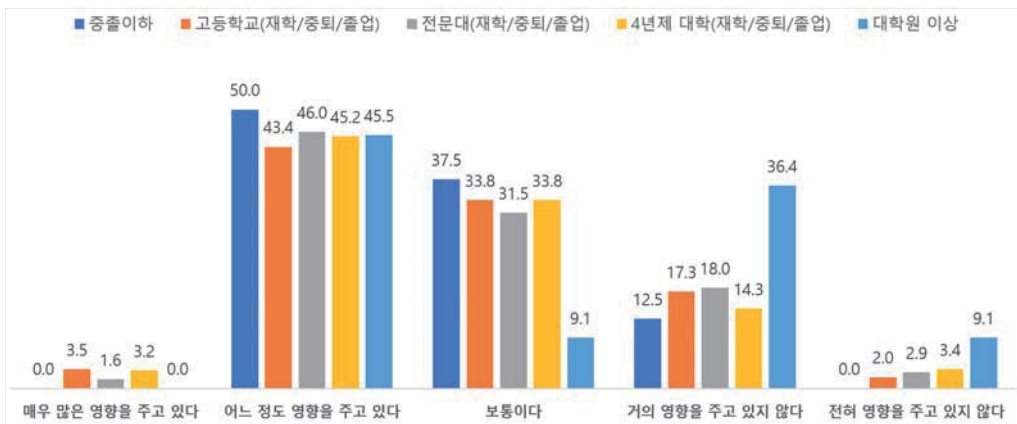
향후 5년 이내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항목에서도 학력 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정적인 것이라는 전망이 4년제 대학(재학/중퇴/졸업), 전문대(재학/중퇴/졸업), 고등학교(재학/중퇴/졸업)의 순으로 33.3%, 30.5%, 24.3%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림 IV-19〉 향후 5년 이내 김정은 체제는 체제 전망: 학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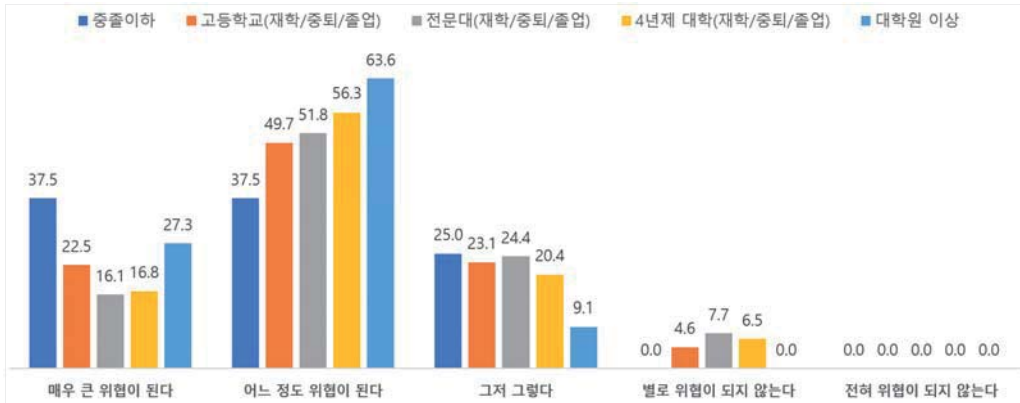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이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모든 응답군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가 약 45%를 보인 반면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10% 후반의 고른 수치를 보여 전반적으로 학력에 따른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0〉 남북교류협력이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 학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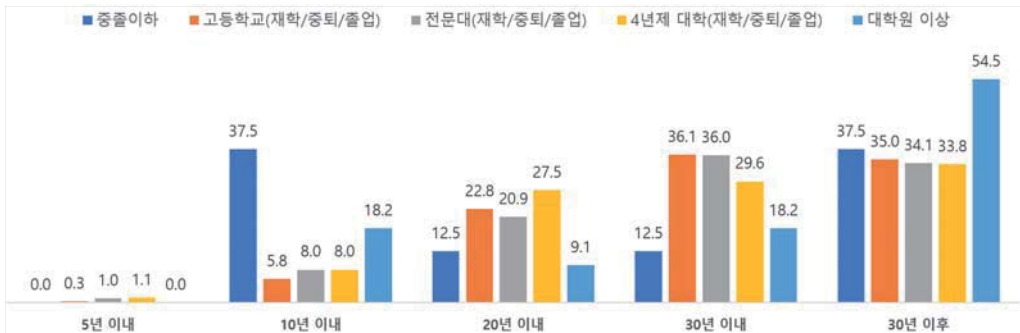
다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안보위협에 관한 설문결과이다. 해당 질문의 경우 대체 적으로 학력과 무관하게 70% 대의 높은 비율로 위협이 된다는 답변이 앞도적이었으며 상 대적으로는 고등학교(재학/중퇴/졸업)들이 매우 큰 위협이 된다는 답변이 22.5%로 높게 나와 위협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1〉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안보위협: 학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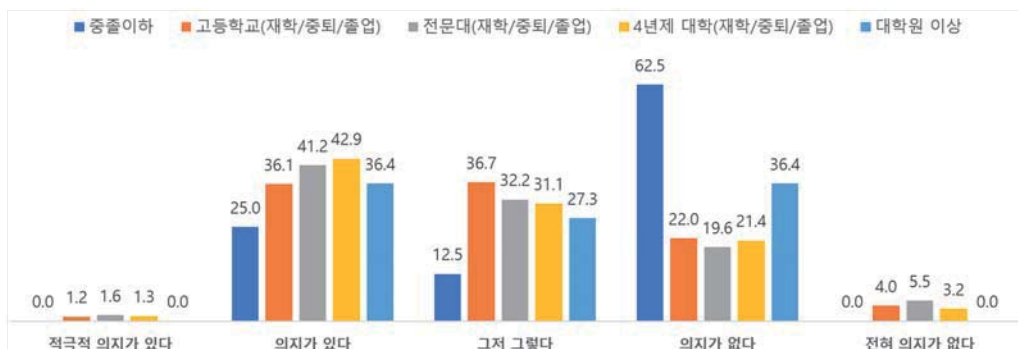
한반도 통일의 시점과 관련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30년 이내와 30년 이후의 답변이 70% 가량을 차지해 학력과 무관하게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일의 과정을 장기적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는 4년제 대학(재학/중퇴/졸업)의 고학력 군이 20년 이내라는 답변에서 27.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IV-22〉 한반도 통일 시점: 학력별



학력별로 나타난 통일 부담의 의지 가운데서 눈에 띄는 점은 의지가 있다는 답변이 고등학교(재학/중퇴/졸업)와 전문대(재학/중퇴/졸업), 4년제 대학(재학/중퇴/졸업)이 각각 36.1%, 41.2%, 42.9%를 차지하며 대략 40%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상대적으로는 고학력자들이 비율이 높다는 편차도 발견되나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IV-23〉 통일 비용 부담 의지: 학력별



## V. 결 론

분단 70년의 한복판에서 맞이했던 2018년의 평화 훈풍은 그야말로 많은 이들에게 벅찬 기대와 감동을 선사한 역사적 장면들을 남겼다. 그 중에서도 동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만나 새로운 미래를 논한 일이나 9월 19일 평양에서 15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남한의 대통령이 직접 연설했던 장면은 그 백미였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수많은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하노이 노딜의 충격 역시 만만치 않았다.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정상 판문점 3자 회동이나 동년 10월 스톡홀름에서 재개된 북미 실무회담 등 이후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의 시계 바늘이 다시금 멈춰선 것은 모두 아는 바와 같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북미 협상의 교착 속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상징되듯 남북관계 역시 역진을 면치 못했다.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로서의 “새로운 한반도”의 꿈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다시금 깨닫지 않을 수 없는 2년 여의 시간이지 않았나 한다.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등장과 북한의 8차 당대회 등 더할 나위 없이 중대한 정치적 변곡점들과 연동되어 펼쳐질 2021년을 눈앞에 둔 지금, 다시 한 번 대북정책을 점검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라 하겠다.

본 연구는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실시한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및 정책대안연구’의 일환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면접조사한 결과 중 북한 및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부분을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구축과 관련된 지혜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기획으로 시도되었다. 조사결과는 상기한 한반도 정세의 변화 흐름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디테일한 측면에서 흥미로운 지

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대북 위협인식이 작년 대비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지난 3년 동안의 전체 추이를 고려해 보면 강화의 함의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현재의 국면은 추세에 있어서는 2018년 이후의 기대감이 하노이 노딜 이후 일정한 조정기를 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현황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2017년도에 비해 상당한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는, 다시 말해 일정한 부침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2018년의 흐름이 ‘아직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북 위협인식의 재강화라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라는 수식을 붙인 이유이다.

둘째, 일정한 부침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2018년 이후 안보 불안이 완화되어온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노이 노딜 이후의 여러 상황이 북한이라는 행위자에 대한 위협인식 혹은 불만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만으로도 상당한 안도감을 느끼며 안보 불안감을 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하노이 노딜 이후의 교착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2017년 이전의 정세와 현재의 정세를 차별적으로 인식하며 현재의 평화 프로세스 진척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라 판단된다.

셋째, 기본적으로 앞서 살펴본 인식의 추세 및 현황 모두와 연동되며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지지가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먼저 추세로 볼 때 앞선 인식과 마찬가지로 2018년 평화 훈풍에 대한 기대와 2019년 하노이 노딜의 충격이 잦아들며 일정한 조정에 들어간 모습이며 현황으로 볼 때는 2017년보다 높은 정도로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주목되는 또 다른 지점은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지지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그 방식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지원의 형태보다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남한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넷째, 평화로운 공존에 대한 기대에 비해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지하듯 통일에 대한 입장과 평화로운 공존에 대한 입장은 때로는 같은 방향을 향할 수 있지만 또 어떠한 조건 하에서는 상반된 방향을 향하기도 한다. 이는 통일이 기본적으로 현상타파적인 개념인데 반해 평화와 공존은 기본적으로 현상유지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근본적인 속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평화통일이란 말에서 평화는 특정한 상태가 아닌 방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존의 특정한 상태를 일컫는 평화라는 말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2018년 평화 훈풍 이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지도는 상승한 반면 현상 변경을 뜻하는 통일에 대한 전망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흡수통일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되고 비적대적인 공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양상이라 하겠다.

다섯째, 응답군별 특성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이해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령별 구분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은 지역별 차이에 비해 비교적 편차가 크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2030세대의 군사안보 및 북한 이슈에 대한 무관심이 오랫동안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사에 따른 한반도의 평화 훈풍은 이들의 생각을 크게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2030세대가 대북관 및 대북정책에서 보수적이라 평가받아온 것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경향이 완화되며 여타 연령대의 특성에 수렴되고 있다는 증거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지역별 여론의 경우 상당히 커다란 편차를 보였다. 예를 들어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관한 문항의 경우 여타 지역에서 불안정한 편이라고 대답한 수치가 평균 22%가량인데 반해 부산/울산/경남은 이보다 두 배 정도 높은 38.9%를 기록했다. 반대로 안정적인 편이다라는 답변은 광주/전라 지방이 51.8%로 강원도의 22.6%는 물론 부산/울산/경남의 25.1%의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다.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에 관한 지역별 특성 역시 주목할 편차를 보였다. 경기/인천 지역은 남북 교류협력 확대라는 항목에 47.5%로 가장 많이 응답했는데, 이는 대구/경북 지역의 15.6%와 비교했을 때 세 배가량 차이가 났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은 한미 동맹체제의 강화가 37.6%로, 서울과 광주/전라, 대전/충청/세종 지역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각 34.9%, 41.8%,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향후 5년 이내 김정은 정권의 무력 도발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영남과 호남이 정반대의 방향에서 커다란 편차를 보였다. 예컨대 광주/전라와 대전/충청/세종, 강원은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각각 47.3%, 49.3%, 41.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대구/경북은 11%, 경기/인천 지역은 17.8%를 기록하여 30%에 가까운 격차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응답군별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강력한 평화 훈풍 속에 그 동안 많은 우려를 낳았던 세대별 격차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는 여전히 크며 그 양상 역시 ‘영남 vs 호남’, ‘진보 vs 보수’ 등의 이분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남남갈등으로 불려온 국민들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며 그 해결책 역시 이념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이해를 실제 현실에 비추어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겠다.

## 참고 문헌

- 강혜석. 2020. “사회협약의 정치와 한반도 평화: 구성주의를 통한 전제조건 재검토 및 평화와의 접목.” 이화여대 북한연구학회 편. 『남과 북, 평화와 공존』(선인).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2004.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경남대학교 출판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0. 『국민안보의식조사를 통한 정책대안 연구』(국방대학교)
- 권숙도. 2019. “평화의 관점에서 본 남남갈등 해결방안의 모색.” 『한국정치연구』 제28집 제2호(2019).
- 김갑식. “한국사회의 남남갈등: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 『한국과 국제정치』제23권 2호(2007).
- 마인섭·차문석·윤철기. 2012. 『북한 문제와 남남 갈등』(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안경모·강혜석. 2020. “김정은 시대의 대남전략(2018-2020): ‘세 가지 기둥’과 ‘정면돌파전’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제36권 4호.
- 정영철. 2018.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남갈등.” 『한국과 국제정치』제34권 제3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통일의식조사 단절의 시대, 통일의식의 변화>  
[https://ipus.snu.ac.kr/blog/archives/research\\_cat/unification\\_perception-survey](https://ipus.snu.ac.kr/blog/archives/research_cat/unification_perception-survey)(검색일 2020.10.10.)

#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군신뢰도 제고방안

정 원 호\*

- I. 서 론
- II. 병역제도와 병영문화에 대한 국민인식
- III. 국방비에 대한 국민인식
- IV. 안보위협에 대한 국민인식
- V. 국민의 대군신뢰도
- VI. 정책적 제언

## I. 서 론

국방정책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변화를 거듭한다. 그중에서도 주변국 안보환경의 변화와 같은 대외적 요인과 국내 안보환경 변화와 같은 대내적 요인이 대표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대내적 요인 중에서 국방정책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국방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국방 분야와 관련하여 현 정부에서는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강한 국방’이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졌다. 그동안의 경제발전을 원동력으로 북한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서도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부교수, kmawine@gmail.com

국방부에 대한 질타는 비단 새로운 정부만이 가진 생각은 아닐 것이다.

현 정부는 2017년 집권 초기부터 국방 분야에서의 자성과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환골탈태 수준으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국방개혁의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것을 요구하였다.<sup>1)</sup> 구체적으로 정부는 (1)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전력 확보, (2) 자주국방, (3) 방산비리 근절, (4) 군장병의 인권 증진 등을 국방개혁의 핵심요구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국방부는 정부의 핵심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1) 자주국방의 강군, (2) 본인들도 가고 싶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병영문화 창조, (3) 한미 동맹 발전, (4) 국가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포괄적 안보대응체제 구축을 국방개혁의 구체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인구감소와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노무현 정부에서 제시된 국방개혁 방향을 계승한다고 할 수 있다. 국방개혁 2.0이라고 명명된 국방개혁안은 2017년 9월 국방개혁특별위원회가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18년 7월 27일 10개월간의 논의와 숙고를 거쳐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산업 등 4개 분야에서 42개의 세부추진과제가 포함된 국방개혁 2.0 초안이 완성되었다. 국방개혁 2.0 초안이 완성된 이후에 국방개혁 2.0의 목표, 과제선정의 이유, 과제의 우선순위의 배경 등이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sup>2)</sup> 국방부에서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적합한 국방개혁안을 완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국방개혁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정부가 출범한 첫해에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를 위해 SRBM, ICBM급 미사일 실험, 9월 핵실험 등 다양한 위협을 가해왔으며 급기야 2017년 11월 28일 핵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개발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며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하였다.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정책을 추진하였는데, 대표적으로 3축 체계의 정비, 신작전수행개념의 정립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국방개혁안에 포함하였다.

그런데 2018년 초부터는 2017년과는 대조되는 안보정세의 급반전이 일어났다. 2018년 초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비핵화협상이 진행되고, 4.27 판문점선언, 6.12 1차 북미회담이 성사되었으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되었다. 이처럼 남북 및 북미 관계에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 분위

1) YTN, “문재인 대통령 ‘北 도발 대응 전력 확보 시급... 환골탈태 수준 국방개혁 필요,’ YTN, 2017년 8월 9일자.

2) [http://shindonga.donga.com/3/all/13/1444875/1\(검색일:2020. 11. 1\).](http://shindonga.donga.com/3/all/13/1444875/1(검색일:2020. 11. 1).)

기는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회담이 결렬되면서 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20년은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생활방식이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 분야에서는 탈북민이 재입북하는 등 국방정책과 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에 영향을 미칠만한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남북, 북미 관계는 2019년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 몇 차례의 도발을 자행하였으나 그 이상의 위협이나 도발은 하지 않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대내외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확대하여 국방개혁 방향설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정책 목표 설정에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완전한 비핵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남북평화공존과 평화정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향후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 한미동맹의 특성 변화, 주한미군의 주둔정책 변화 등의 사안들은 여전히 다루기 까다롭고 복잡한 문제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대내외적 안보환경 속에서 본 연구는 정부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을 중심으로 한 국방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토대로 향후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합의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 사회는 SNS를 활용한 정보의 획득과 소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에 대해 국민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여론을 조성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소위 참여민주주의 2.0 시대에서 국방부도 국민의 인식을 선제적으로 탐색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반영하면서 국방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 및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에 기초한 국방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와 공감대 증진 방안을 중요한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sup>3)</sup> 실제로 국민들은 안보 전문가들 못지않게 일련의 안보 환경의 변화와 정책 및 전략 변화가 우리나라의 미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예리하게 평가하는 한편 보다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4)</sup>

이처럼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인식이 과거보다 획기적으로 증진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의 국방정책과 국방개혁이 지속성 있는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

3) 이정민, “국민안보의식 변화추세와 정책방안,” 『국민안보의식조사를 통한 정책대안 연구 2015』, 국방대학교 국가안보장연구소 정책연구보고서, 2016, p. 2-45.

4) 이정민, 앞의 글, p. 5.

한 추동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급변하는 안보환경에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을 분석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그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의 대군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국민의 의식 수준,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를 알고, 군에 기대하는 바를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탐색하고, 국방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수준과 변화 동향을 진단함으로써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식별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에서 수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병역제도와 병영문화에 대한 국민인식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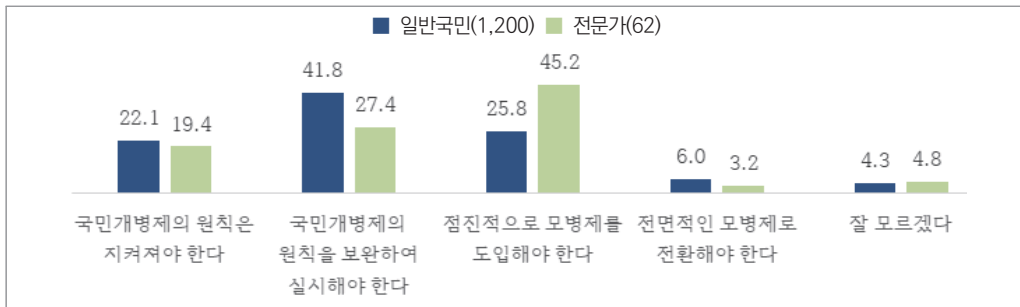
### 1. 병역제도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군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적자원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인 국민 개병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개병제에 대한 의견으로 일반국민은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41.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점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2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6.9%p(2019년 48.6%) 감소한 반면 ‘점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7.0%p(2019년 18.8%) 증가하였다. 반면에 전문가들의 경우 ‘점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2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점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1.4%p(2019년 43.8%),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4.0%p(2019년 23.4%) 증가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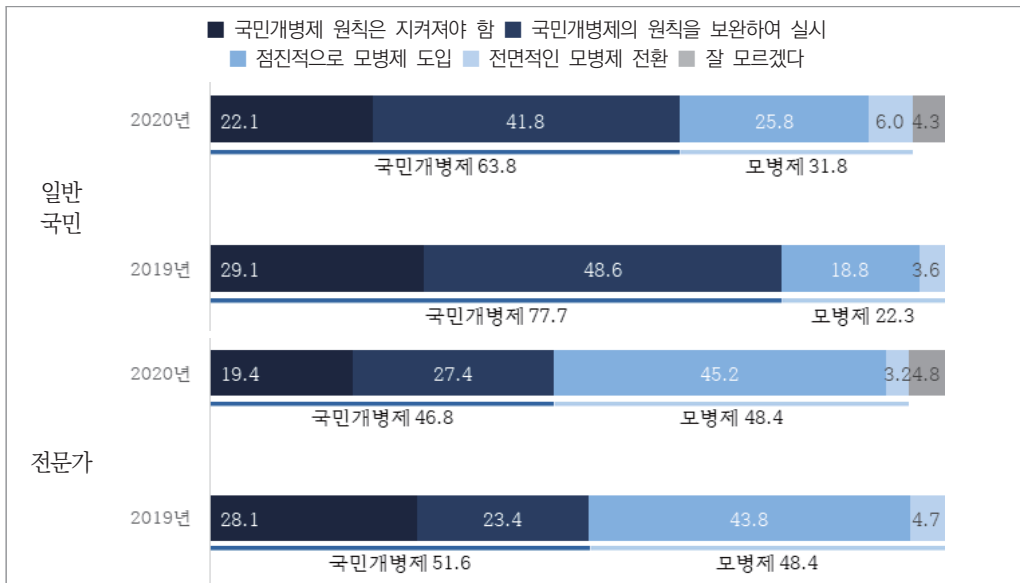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병역제도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응답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일반국민의 63.8%는 국민개병제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34.8%는 모병제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전문가들은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48.4%로 국민개병제를 찬성하는 의견인 46.8%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병역제도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인식 차이는 향후 병역제도와 이와 관련된 국방정책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아직까지는 일반국민의 다수가 국민개병제를 찬성하고 있지만 향후 인구절벽에 따른 가용인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면 적절한 규모의 병력 구조와 함께 모병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강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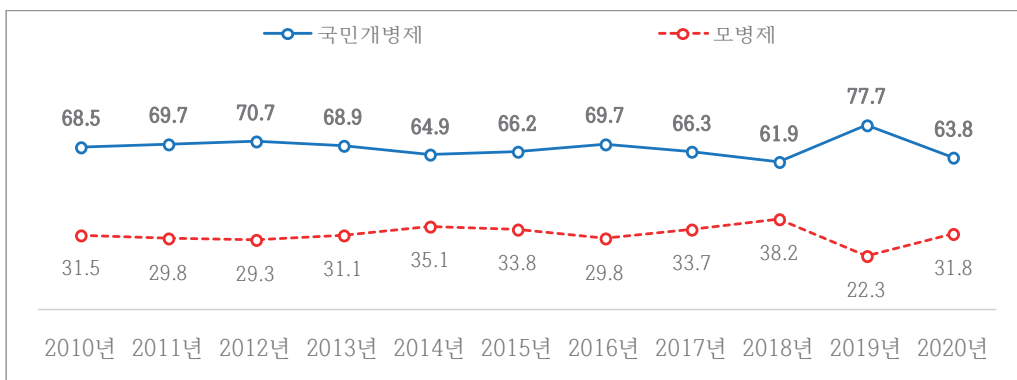
〈그림 II-1〉 국민 개병제에 대한 의견 (1)



〈그림 II-2〉 국민 개병제에 대한 의견 (2)



〈그림 11-3〉 병역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



## 2. 병무 부조리에 대한 인식

병역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지만 현재까지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한 병역의무의 이행은 지속적으로 논란과 관심이 되어 왔다.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아시안 게임 구기 종목에 참가한 특정 선수들의 병역면제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병역특례’의 형평성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었고 급기야 정치권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2018년 아시안 게임이후 병역특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 과거에 비해 병역특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 탓도 있다. 당시에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을 거론하면서 체육 분야나 특정 음악 분야는 인정하면서 대중음악 분야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에 대한 다양한 비판도 있었다.<sup>5)</sup> 이를 계기로 병무청에서는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0년에도 병역의무의 공정한 이행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특정 기업인 자녀의 황제군 복무가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sup>6)</sup> 정치권에서도 유력 정치인의 자녀가 복무 중에 특혜를 받았다는 점을 두고 한동안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sup>7)</sup> 한때 유명 연예인이었던 유모씨가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재판에서 최종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유씨의

5)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63397>(검색일: 2020. 11. 10).

6) 한겨레신문(2020. 6. 15). 공군, ‘황제군 복무’ 의혹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49410.html#csidx911e53bbb8adcca80a57d007c235f11>  
 (검색일: 2020. 11. 15)

7) 경향신문(2020. 10. 7). 2020 국정감사 시작…여야, 추미애 아들 의혹 증인 공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072055005#csidx983609e884c9d1093fa46accdc06e46](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072055005#csidx983609e884c9d1093fa46accdc06e46) (검색일: 2020. 11. 12)

입국허용에 대해서 논의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병역이행은 어떤 문제보다는 국민들에게 예민한 문제가 되어 왔다.<sup>8)9)</sup> 특히, 최근에는 2018년 아시안 게임 당시 논란이 되었던 방탄소년단의 병역 연기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다시금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sup>10)</sup>

이러한 현상은 병역문제가 ‘공정성’의 관점에서 모든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이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과거에는 국위선양에 따른 병역특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했던 국민들의 인식도 최근에는 특혜와 반칙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은 배경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두가 병역의무를 공정하게 이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병무 부조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군에 대한 신뢰도나 국방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에 대해 일반국민은 ‘줄어든 것 같다’는 응답이 50.3%로, ‘많아진 것 같다’(10.9%)는 응답보다 39.4%p 높게 나타났다. ‘줄어 든 것 같다’는 응답은 2018년 46.8%, 2019년 47.8%에 비해서 다소 높아졌다. 전문가들의 경우 일반국민보다 보다 긍정적이었는데 ‘줄어든 것 같다’는 응답이 59.7%로, ‘많아진 것 같다’(11.3%)는 응답보다 48.4%p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경우 ‘줄어든 것 같다’는 응답이 2018년 75.0%, 2019년 76.6%에 비해서 크게 감소한 반면, ‘많아진 것 같다’는 응답은 2018년 3.3%, 2019년 1.6%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군내에서 발생한 특혜 의혹과 정치권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안 때문에 전문가들의 인식이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 때문에 병무 부조리가 많아진 것 같다고 인식하는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8) 경향신문(2019. 7. 11) 대법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7112146015#csidx37edc50ba82ac6f9df5735b177d5f38](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7112146015#csidx37edc50ba82ac6f9df5735b177d5f38) (검색일: 2020.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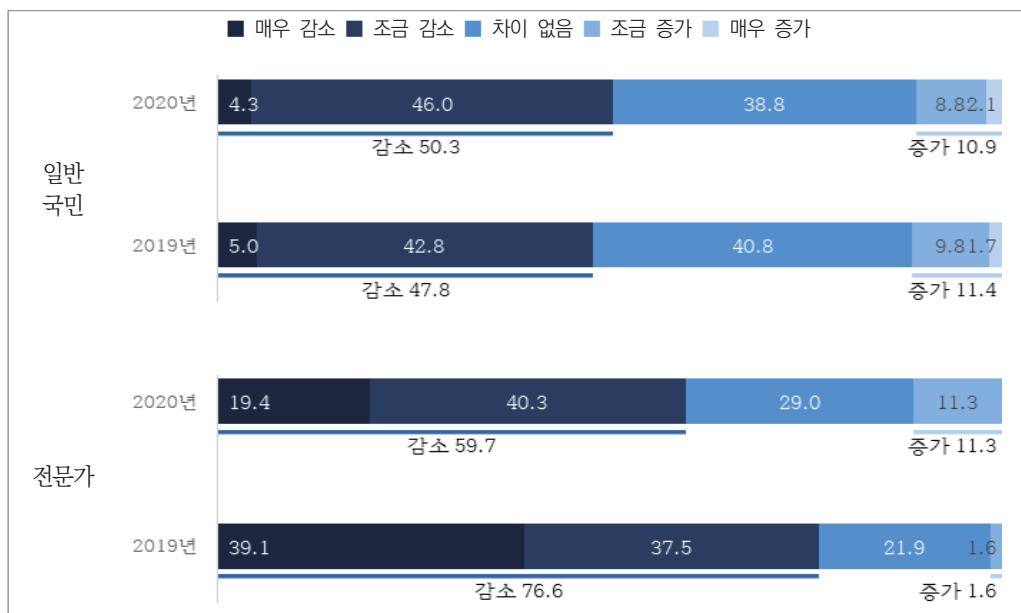
9) 연합뉴스(2020. 10. 26.) 강경화 “유승준에 비자 발급 허용치 않기로 결정”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6145600504> (검색일: 2020.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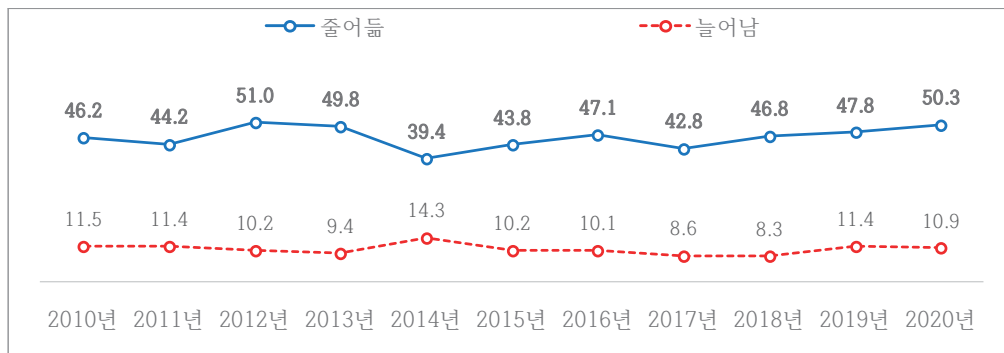
10) 한겨레신문(2020. 11. 20). BTS ‘만 30살’ 까지 병역연기 가능…병역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0820.html#csidx52a327aa49bbbecbcf79e0f07f61c0a> (검색일: 2020. 11. 20)

〈그림 II-4〉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



〈그림 II-5〉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 연도별 비교



지난 10년간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가 줄어들었다는 국민의 의견은 50%를 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는 병무부조리가 현저하게 개선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들은 특정 계층이나 특정인에게 공정하지 않은 복무상의 이익이 제공되는 것에 부정적임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무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이 병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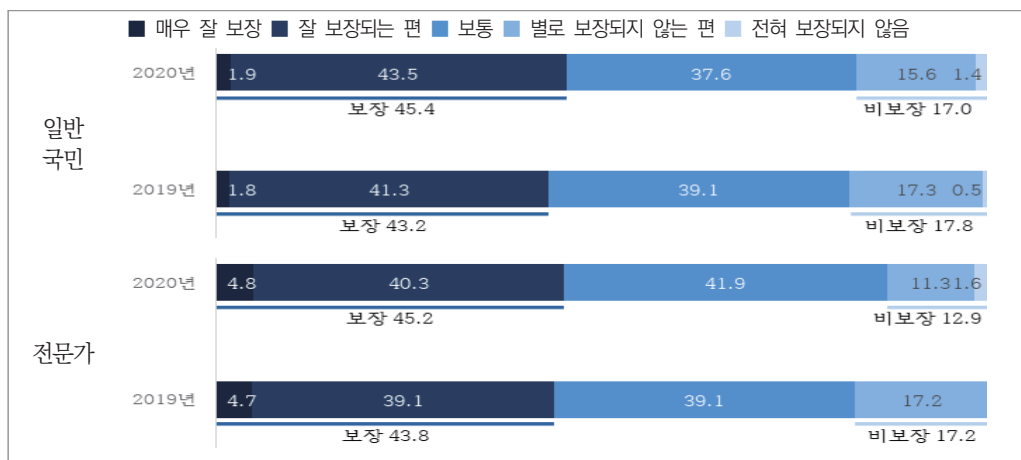
무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국방 차원에서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이며, 군이 추진하는 국방정책과 국방개혁 추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는 비단 국방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으로, 국가와 사회차원에서는 공정성의 문제이자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특권을 이용한 병역의무의 불공정한 이행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 3. 군내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

일반적으로 군 조직은 상하 엄격한 명령체제와 위계질서를 강조하고 있으며, 군의 기강 확립은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많다. 그러나 기강확립과 엄격한 위계질서를 강조한다는 미명하에 장병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군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일정부분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은 군인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일부 기본권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법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이어야 한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군인을 ‘군복입은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장병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장병들이 군 내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군내 인권보장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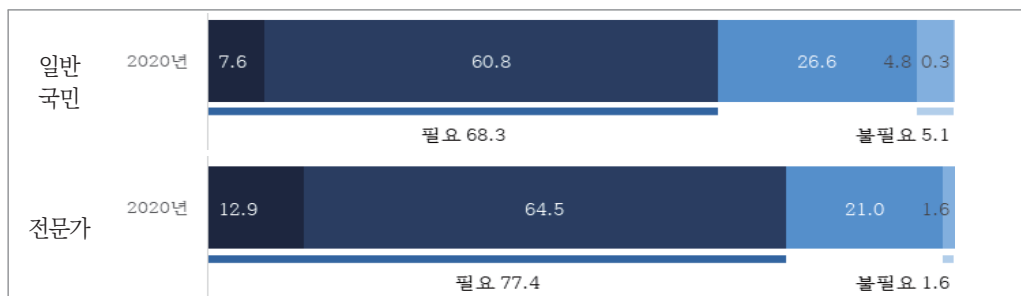
군내의 인권보장 정도에 대한 의견으로 ‘보장된다’는 응답이 45.4%로, ‘보장되지 않는다’(17.0%)는 응답보다 28.4%p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대비 ‘보장된다’는 응답은 2.2%p(2019년 43.2%) 증가하였고,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0.8%p(2019년 17.8%)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전문가의 경우 ‘보장된다’는 응답이 45.2%로, ‘보장되지 않는다’(12.9%)는 응답보다 32.3%p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대비 ‘보장된다’는 응답은 1.4%p(2019년 43.8%) 증가하였으며,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p(2019년 17.2%)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림 II-6〉 군 내의 인권 보장 정도 전년도 비교



군내에서 인권이 보장된다는 의견이 과반수에 달하지 않는 점은 군내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조사결과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군 내 인권 보호 정책 강화에 대해 일반국민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8.3%로, ‘필요하지 않다’(5.1%)는 응답보다 63.2%p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에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77.4%로, ‘필요하지 않다’(1.6%)는 응답보다 75.8%p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7〉 군내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필요도 일반국민·전문가 세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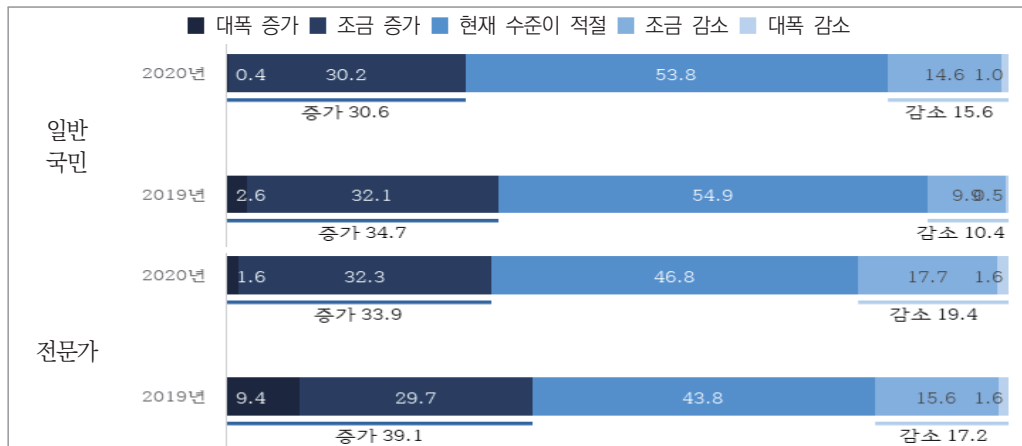
국민들이 군내 인권실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군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국민들의 인식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많은 국민들은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53.8%) 때문에 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군내 인권실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도 관련이 높다 할 수 있다.

### III. 국방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 1. 한국의 국방비 수준

국방개혁 2.0을 기반으로 한 국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방재원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우리나라 국방비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본 결과 일반국민과 전문가 집단은 대체로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각각 53.8%, 4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국방비 수준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일반국민의 경우 30.6%로, ‘줄여야 한다’(15.6%)는 응답보다 15.0%p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대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4.1%p(2019년 34.7%) 감소하였고,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5.2%p(2019년 10.4%) 증가했지만 두 응답 모두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33.9%로, ‘줄여야 한다’(19.4%)는 응답보다 14.5%p 높게 나타났고, 이는 2019년 대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5.2%p(2019년 39.1%) 감소하였고,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2.2%p(2019년 17.2%) 증가했지만 두 응답 모두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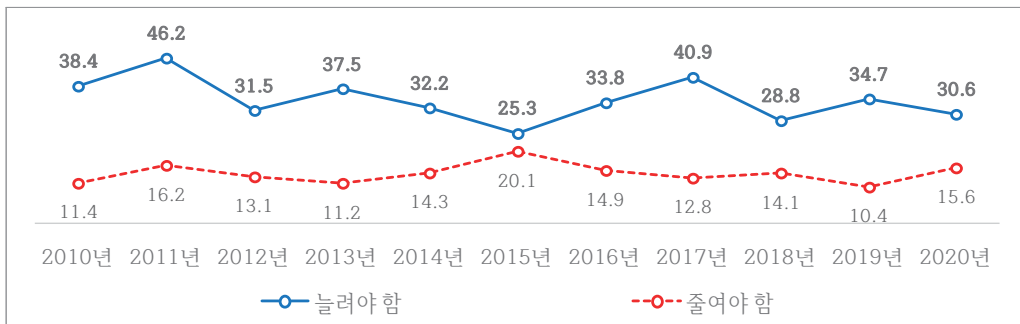
〈그림 III-1〉 한국의 국방비 증감에 대한 의견



국방비 수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지난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국방비를 현재 수준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줄여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응답은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2011년 이후 국방비 수

준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015년과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서 향후 국방비 증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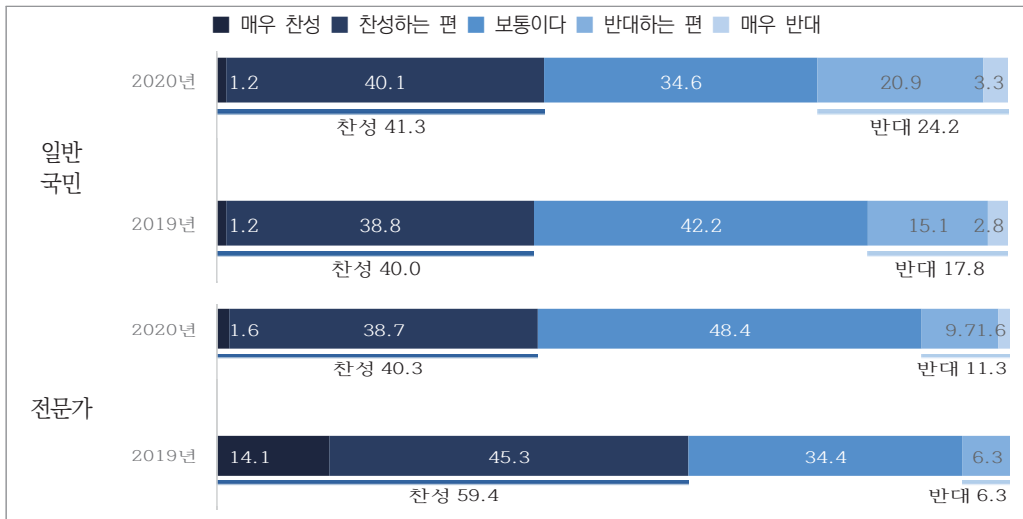
〈그림 Ⅲ-2〉 국방비 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 추이



국방비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변화는 남북한 및 주변국과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이 빈번하고, 한반도 전쟁위험이 고조되었던 2015-2017년간에는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져서 2017년에는 일반국민의 40.6%가 국방비 증액에 찬성하였으나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간에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2018년에는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던 북미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고 남북한 관계가 다시 경색됨에 따라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적지 않은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국민의 41.3%는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반대한다'(24.2%)는 의견보다 17.1%p 높게 나타난 것이다. 다만 2019년에 비해서 '반대한다'는 응답은 6.4%p(2019년 17.8%) 증가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경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40.3%로, '반대한다'(11.3%)는 의견보다 29.0%p 높게 나타났는데, 2019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19.1%p(2019년 59.4%)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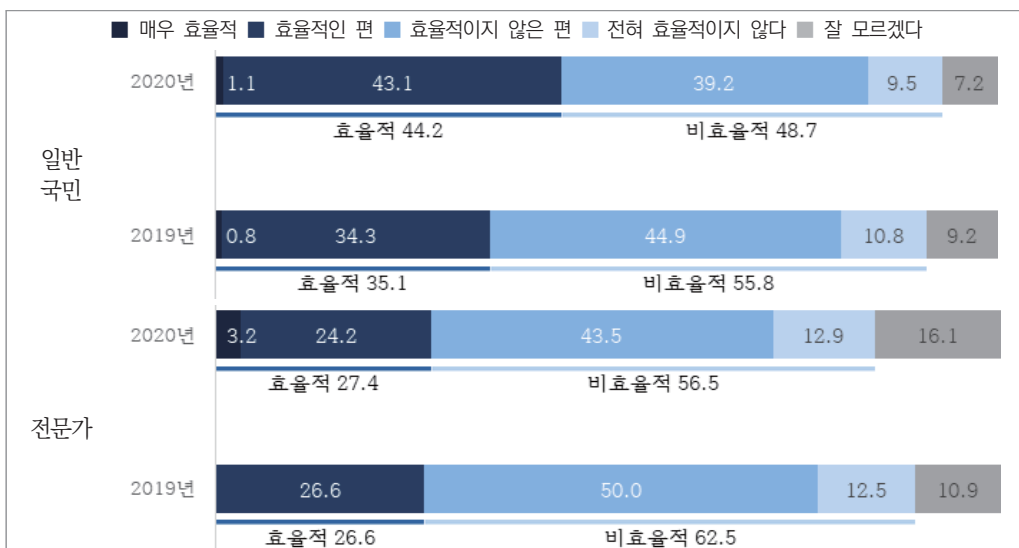
〈그림 Ⅲ-3〉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증세에 대한 의견



## 2.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과 방위력개선 사업의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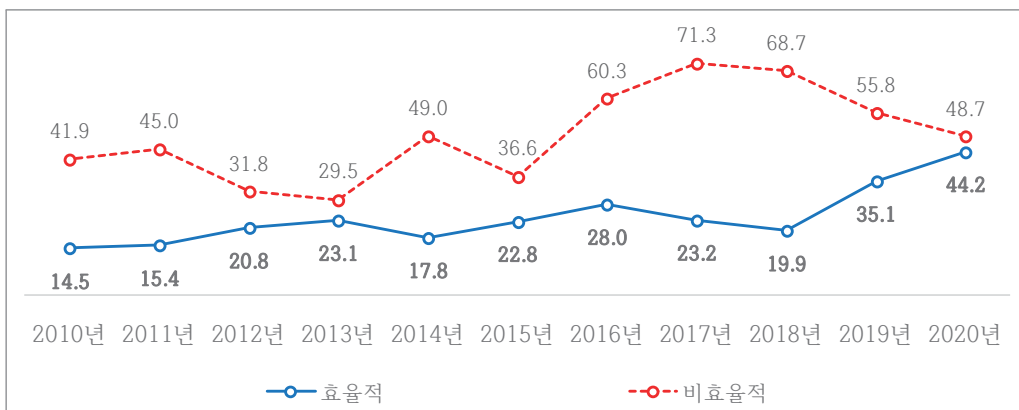
국방정책 추진에 필요한 적정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중요하다.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일반국민은 ‘비효율적이다’는 응답(48.7%)과 ‘효율적이다’는 응답(44.2%)은 4.5%p 차이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대비 ‘비효율적이다’는 응답은 7.1%p(2019년 55.8%) 감소한 반면에, ‘효율적이다’는 응답은 9.1%p(2019년 35.1%) 증가하였다. 전문가는 일반국민에 비해서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비효율적이다’는 응답이 56.5%로, ‘효율적이다’(27.4%)는 응답보다 29.0%p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대비 ‘비효율적이다’는 응답은 6.0%p(2019년 62.5%) 감소한 반면에, ‘효율적이다’는 응답은 0.8%p(2019년 26.6%) 증가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림 III-4〉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전년도 비교



2020년 조사결과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상승했던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2019년부터 감소하여 2020년에는 효율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크게 차이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그림 III-5〉 최근 10년간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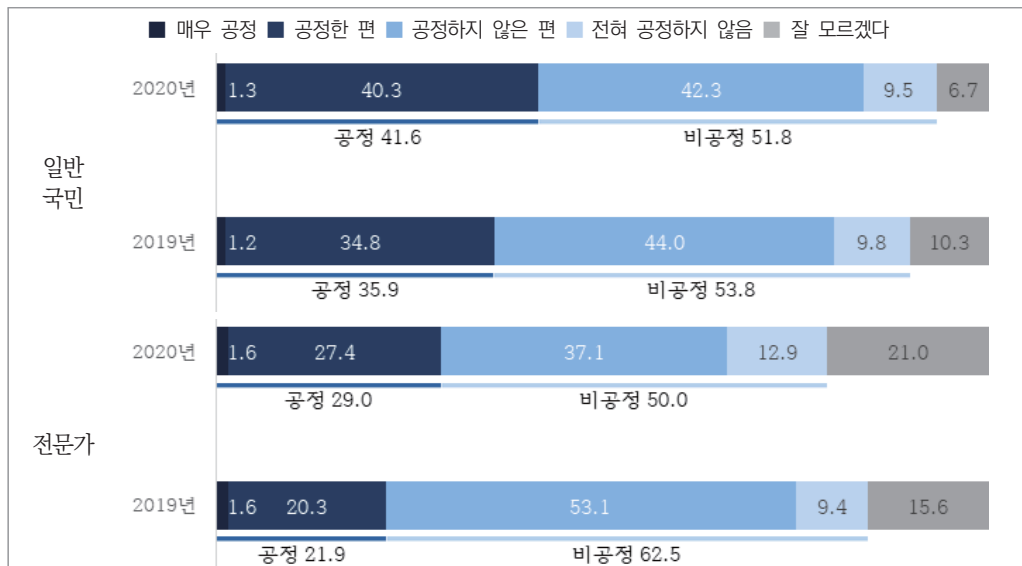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과 국방비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군이 목표로 하는 첨단기술 기반의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다.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따라 현재 우리 군은 병력집약형 군 구조에서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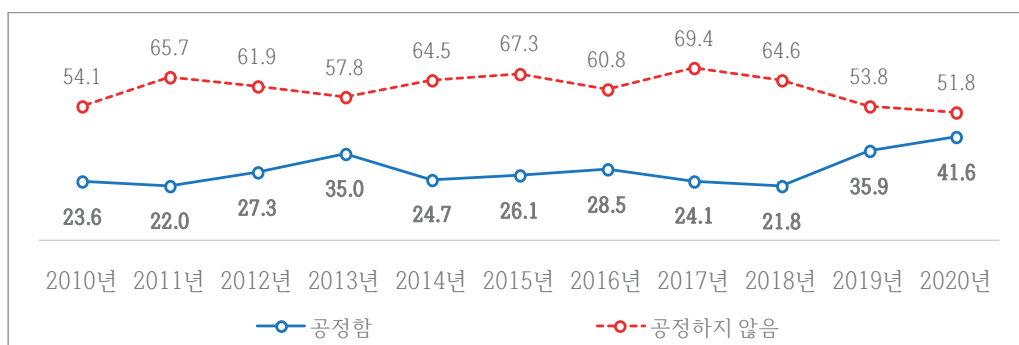
중심의 첨단과학군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방위력 개선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방위력 개선 사업의 공정성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일반국민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51.8%로, ‘공정하다’(41.6%)는 응답보다 10.2%p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대비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2.1%p(2019년 53.8%) 감소하고, ‘공정하다’는 응답은 5.7%p(2019년 41.6%) 증가했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전문가의 경우에도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50.0%로, ‘공정하다’(29.0%)는 응답보다 21.0%p 높게 나타났는데, 2019년 대비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12.5%p(2019년 62.5%) 감소한 반면에, ‘공정하다’는 응답은 7.1%p(2019년 21.9%)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인식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국민의 인식은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조사결과에서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60%를 상회하고 2017년의 경우에는 69%까지 육박했던 부정적 인식이 2020년 조사결과에서는 5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림 III-6〉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



〈그림 III-7〉 최근 10년간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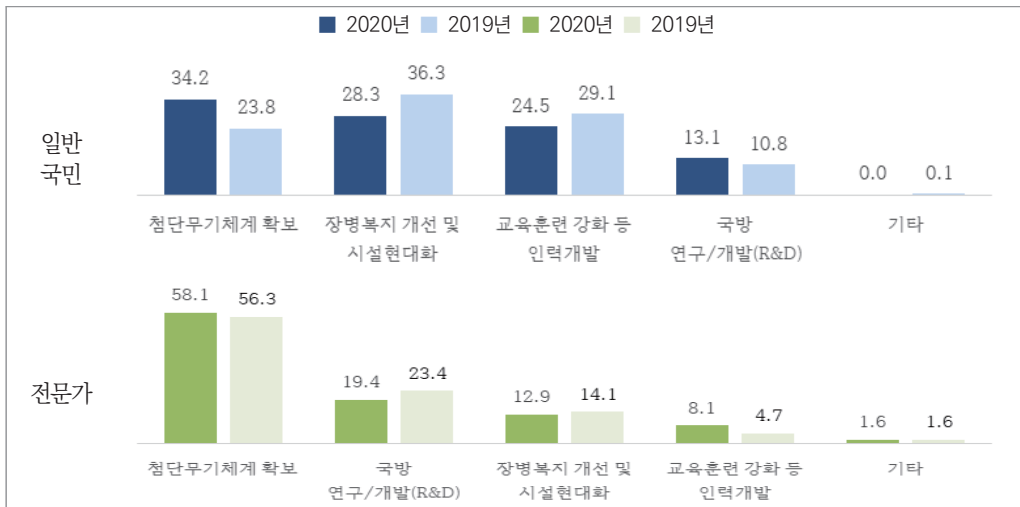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방산비리 문제는 방위력개선 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중요한 악재이다. 정부와 군이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을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0년 조사결과가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방위력 개선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3.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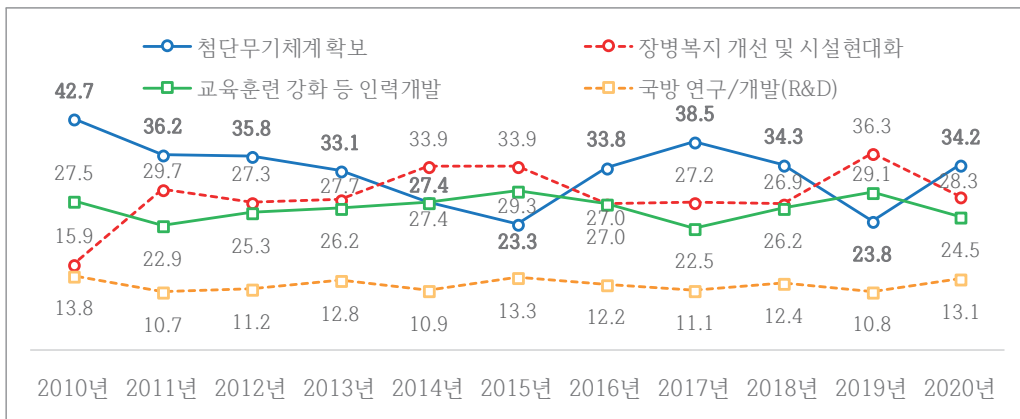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는 첨단과학기술 중심군으로의 변환은 향후 국방비를 어떻게 투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결과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일반국민은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에 대해서 ‘첨단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이 3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2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첨단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은 10.4%p(2019년 23.8%) 증가한 반면에,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라는 응답은 8.1%p(2019년 3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첨단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이 5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방 연구/개발(R&D)’(19.4%)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첨단무기체계 확보’에 대한 응답은 1.8%p(2019년 56.3%) 증가했지만, ‘국방 연구/개발(R&D)’이라는 응답은 4.0%p(2019년 23.4%) 감소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림 III-8〉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국방비 투자 분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첨단무기 체계확보,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 국방연구/개발(R&D) 분야가 매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은 22~29% 내외, 국방연구/개발(R&D) 분야는 10~13% 내외로 지속적인 응답 비율이 나타난 반면에 첨단무기체계확보는 23~38% 내외, 장 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는 27~36% 내외로 상대적으로 연도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III-9〉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연도별 비교



일반국민들은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 증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금상승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데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술중심군으로 변환하는데 필요한 첨단무기체계 확보에 대한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과 방위력 개선사업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군이 국방개혁 2.0을 중심으로 한 국방정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국방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 자체적으로도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국방경영을 효율화하는 동시에, 방산비리를 엄격하게 근절하여 방위력개선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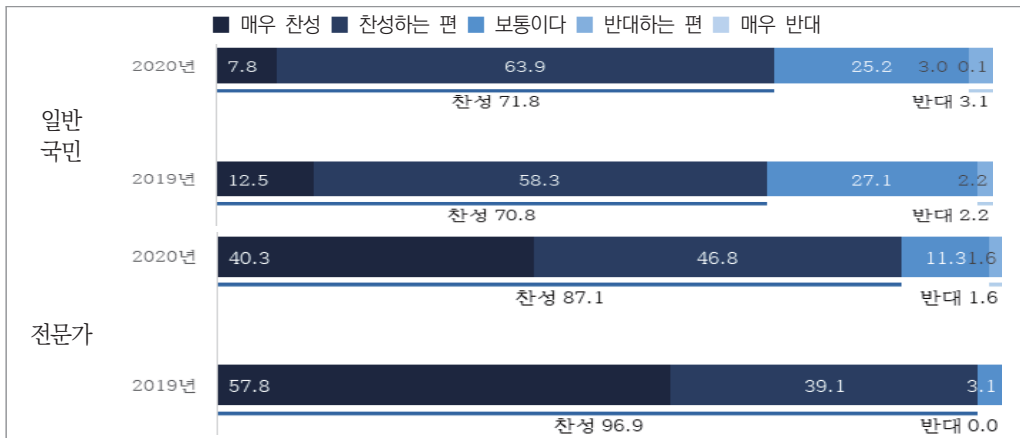
## IV. 안보위협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 1.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군의 기본적인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 군은 지금까지 주로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왔는데, 최근 들어 안보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연말부터 시작하여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이나 사이버 위협, 재해재난, 테러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비군사적 위협도 전통적인 위협과 더불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을 중심으로 한 국방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전 방위적인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비전통적이고,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대비해야한다는 의견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국민은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1.8%로, ‘반대한다’(3.1%)는 응답보다 68.7%p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찬성한다’(2019년 70.8%)는 응답과, ‘반대한다’(2.2%)는 응답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에도 ‘찬성한다’는 응답은 87.1%로, ‘반대한다’(1.6%)는 응답보다 85.5%p 높게 나타났으며, 2019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9.8%p(2019년 96.9%) 감소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비슷한 수준(2019년 0.0%)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성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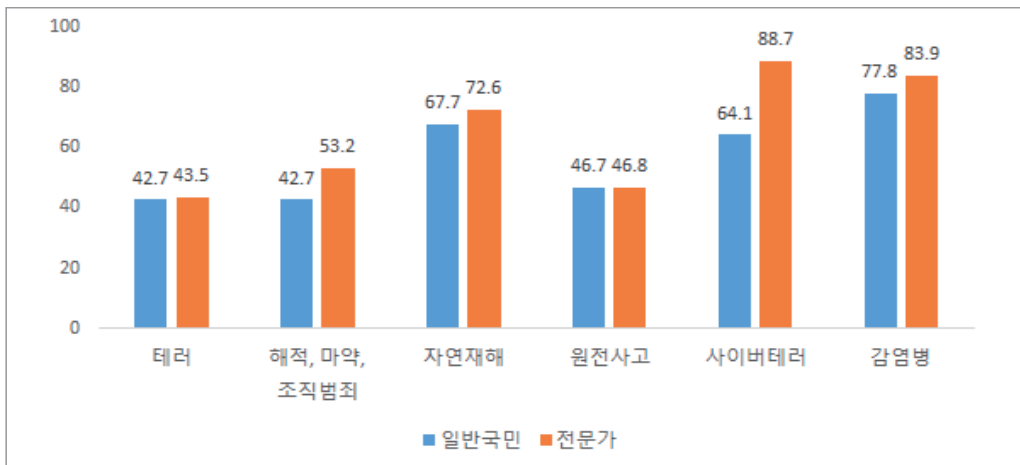
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비군사적 위협의 유형별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능성과 사이버 테러로 인한 피해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과 전문가 모두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조사에 새롭게 반영된 감염병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가장 높게 응답하였는데, 이는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하여 막대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COVID-19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0년에 새롭게 조사에 포함된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일반국민은 ‘크다’는 응답이 77.8%로, ‘작다’(5.7%)는 응답보다 72.1%p 높게 나타났다으며, 전문가의 경우 ‘크다’는 응답이 83.9%로, ‘작다’(3.2%)는 응답보다 80.7%p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 테러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일반국민은 ‘크다’는 응답이 64.1%로, ‘작다’(7.9%)는 응답보다 56.2%p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대비 ‘크다’는 응답은 15.4%p(2019년 48.7%) 증가한 반면, ‘작다’는 응답은 7.8%p(2019년 15.7%) 감소하였다. 전문가는 ‘크다’는 응답이 88.7%로, ‘작다’(1.6%)는 응답보다 87.1%p 높게 나타났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일반국민은 ‘크다’는 응답이 67.7%로, ‘작다’(6.8%)는 응답보다 60.8%p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대비 ‘크다’는 응답은 25.4%p(2019년 42.3%) 증가한 반면, ‘작다’는 응답은 11.1%p(2019년 17.9%) 감소하였다. 전문가의 경우 ‘크다’는 응답이 72.6%로, ‘작다’(4.8%)는 응답보다 67.7%p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대비 ‘크다’(2019년 73.4%)는 응답과 ‘작다’(2019년 3.1%)는 응답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국민들은 테러, 해적·마약·조직범죄, 원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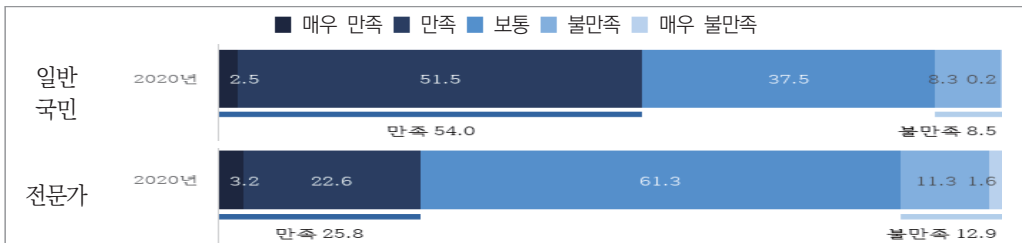
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의 경우 테러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이 42.7%로, ‘작다’ (22.6%)는 응답보다 20.1%p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19년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전문가의 경우 ‘크다’는 응답이 43.5%로, ‘작다’(27.4%)는 응답보다 16.1%p 높게 나타났는데, 2019년 대비 ‘크다’는 응답은 6.5%p(2019년 50.0%) 감소한 반면, ‘작다’는 응답은 14.9%p(2019년 12.5%) 증가하였다. 해적, 마약, 조직범죄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일반국민은 ‘크다’는 응답이 42.7%로, ‘작다’(21.9%)는 응답보다 20.8%p 높게 나타났으며, 2019년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문가의 경우 ‘크다’는 응답이 53.2%로, ‘작다’(16.1%)는 응답보다 37.1%p 높게 나타났으며, 2019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일반국민은 ‘크다’는 응답이 46.7%로, ‘작다’(18.8%)는 응답보다 27.9%p 높게 나타났으며,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크다’는 응답이 46.8%로, ‘작다’(12.9%)는 응답보다 33.9%p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대비 ‘크다’(2019년 51.6%)는 응답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작다’는 응답은 12.1%p(2019년 25.0%) 감소하였다.

〈그림 IV-2〉 유형별 비전통적 안보 위협 피해 가능성(크다 응답)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국방부 대응 만족도에 대해 일반국민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54.0%로, ‘만족하지 않는다’(8.5%)는 응답보다 45.5%p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25.8%로, ‘만족하지 않는다’(12.9%)는 응답보다 12.9%p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3〉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방부 대응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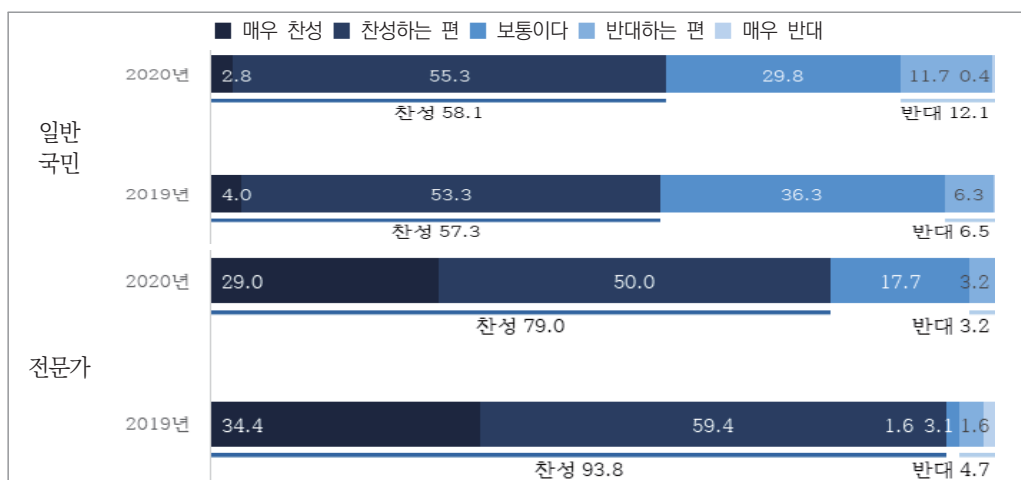
## 2.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최근 들어 전 세계는 내전, 테러 등으로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급격한 세계화에 따라 다양한 안보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 국가의 안보문제가 해당 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안보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력과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를 요구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국가의 사례이다.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후 우리나라는 분쟁지역에 군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s)을 전개해왔다.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실전경험을 축적하여 군사태세를 강화하고,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유사시에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는 위한 전략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은 국제평화 증진이라는 거시적인 명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 위상 및 영향력 확대, 국가 이익 증대 등 다양한 전략적 도구로 확대되고 있다.<sup>11)</sup>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다른 국방정책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경계, 재건, 의료 지원 등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은 ‘찬성한다’는 응답이 58.1%로, ‘반대한다’(12.1%)는 응답보다 46.0%p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대비 ‘반대한다’는 응답은 5.6%p(2019년 6.5%) 증가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79.0%로 일반국민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한다’(3.2%)는 응답보다 75.8%p 높게 나타났다. 다만, 2019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14.8%p(2019년 93.8%) 감소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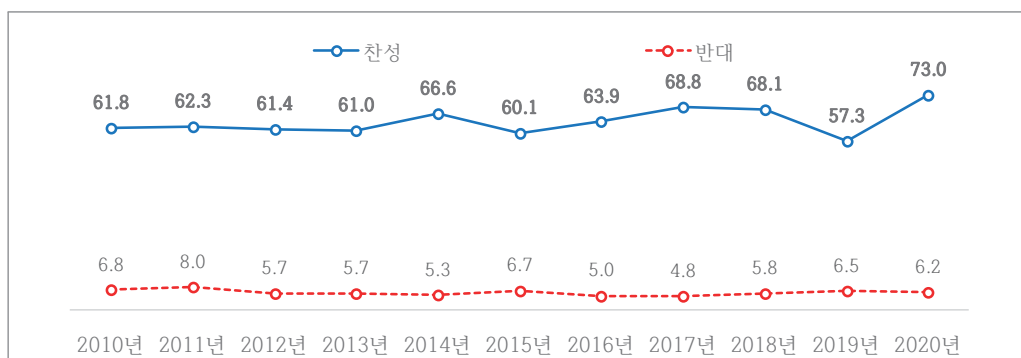
11) 전제국, “한국군의 해외파병과 한반도 안보: 국제평화활동의 국익증진 효과,” 『국가전략』제17권2호(2011), p. 34.

〈그림 IV-4〉 한국군의 국제평화 유지활동에 대한 찬반 전년도 비교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인식변화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은 전반적으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50%대로 일시적으로 하락 하였으나, 2020년에는 최근 10년 중에서 최초로 70% 이상의 응답자가 찬성하였다. 반대 의견은 지난 10년간 5~8%로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IV-5〉 최근 10년간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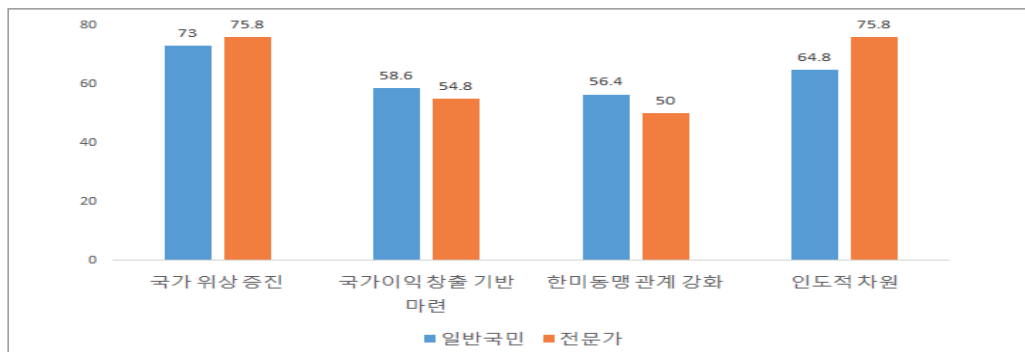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해외파병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 하는 것일까? 우리 국민들은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1) 국가위상증진, 2) 국가이익창출 기반 마련, 3) 한미동맹관계 강화, 4) 인도적 차원 등 4가지 이유와 목적 때문에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중에서도 국가 위상 증진과 인도적 차원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는데, 국가 위상 증진을 위해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일반국민은 ‘찬성한다’는 응답이 73.0%로, ‘반대한다’(6.2%)는 응답보다 66.8%p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에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75.8%로, ‘반대한다’(8.1%)는 응답보다 67.7%p 높게 나타났다. 인도적 차원에서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일반국민의 64.8%, 전문가의 75.8%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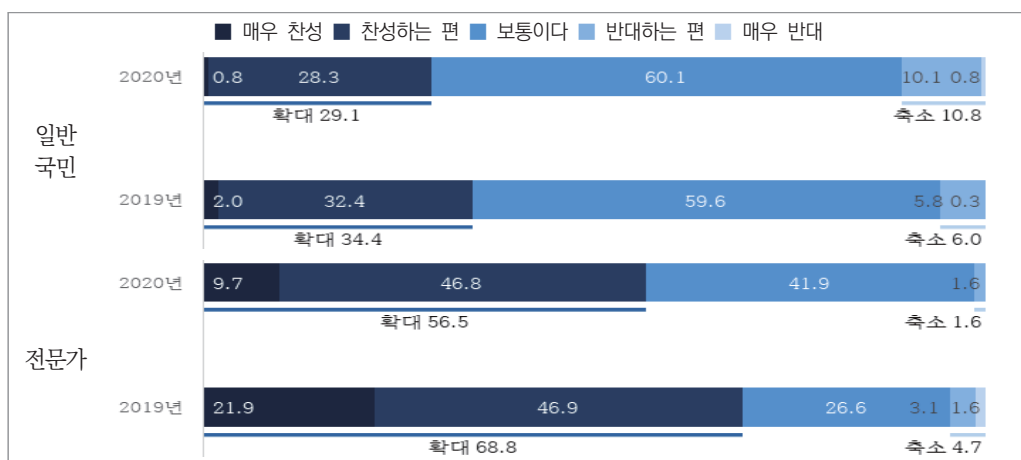
국가이익 창출 기반 마련과 한미동맹관계 강화를 위해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국가이익 창출 기반 마련에 대해서 일반국민의 58.6%가 ‘찬성한다’로 응답하여, ‘반대한다’(7.7%)보다 50.9%p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에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54.8%로, ‘반대한다’(11.3%)는 응답보다 43.5%p 높게 나타났다. 한·미동맹 관계 강화를 위해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일반국민은 ‘찬성한다’는 응답이 56.4%로, ‘반대한다’(9.3%)는 응답보다 47.1%p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의 경우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0.0%로, ‘반대한다’(16.1%)는 응답보다 33.9%p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6〉 해외파병 필요성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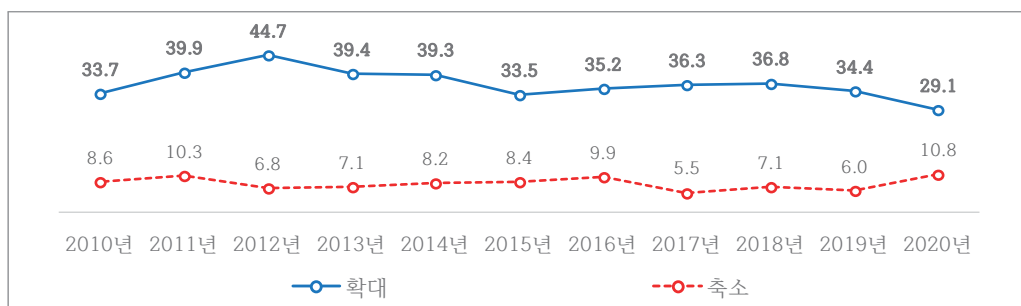
해외파병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함께 향후 국제평화유지활동 규모에 대한 의견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들은 향후 국제평화유지활동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29.1%로, ‘축소해야 한다’(10.8%)는 응답보다 18.3%p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에는 일반국민보다 훨씬 긍정적이었는데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6.5%로, ‘축소해야 한다’(1.6%)는 응답보다 54.8%p 높게 나타났다. 201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감소하였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림 IV-7〉 향후 한국군의 해외 평화유지활동 참여 방향 전년도 비교



향후 국제평화유지활동 추진 방향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인식변화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은 국제평화유지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9~45%의 변화를 보인 반면에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11%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인원이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인원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전반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 중에서 2020년의 경우에는 확대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에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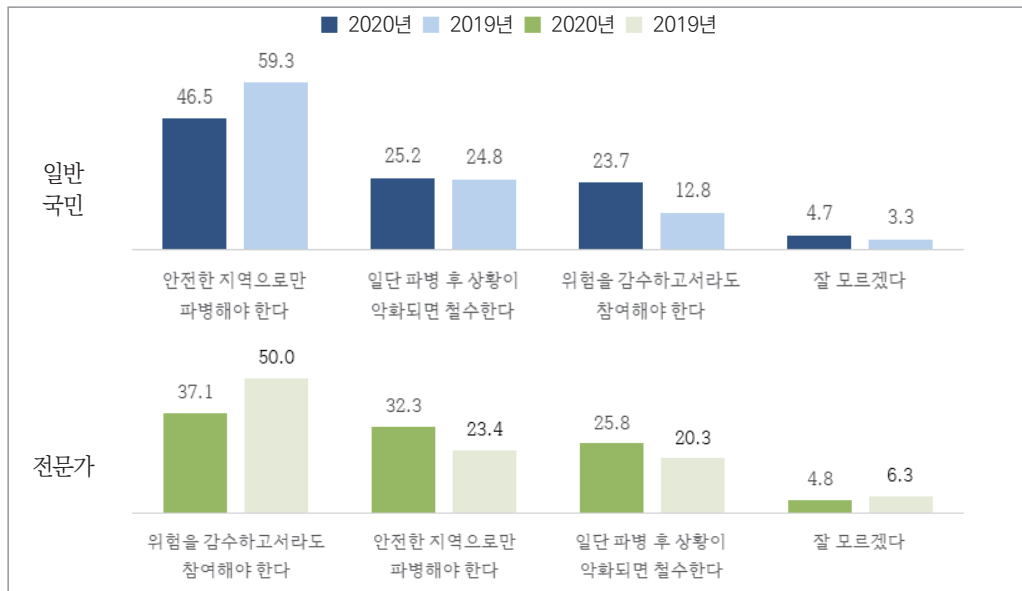
〈그림 IV-8〉 향후 국제평화유지활동 추진 방향 연도별 비교



한편,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지만 평화유지활동의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안전지역을 지향하는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지역에 파병하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은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는

응답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단 파병 후 상황이 악화되면 철수한다’(2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는 응답은 12.8%p(2019년 59.3%) 감소한 반면, ‘일단 파병 후 상황이 악화되면 철수한다’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2019년 24.8%). 전문가의 경우에는 일반국민과 차이를 보였는데,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37.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3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12.9%p(2019년 50.0%) 감소한 반면,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는 응답은 8.9%p(2019년 23.4%) 증가하였다.

〈그림 IV-9〉 위험 지역 파병에 대한 의견



전문가들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참여와 국제적 기여에 대한 비용을 감수해야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군을 분쟁지역에 파병할 때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위험성의 차이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국제평화유지활동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직업군인이 아닌 의무복무 병사들이 분쟁지역에 파병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병사들이 분쟁지역에서 희생당하면 국민적 비난과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발생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우리 정부는 상대적으로 분쟁의 강도가 약하고 위험성이 낮은 지역으로 파병하여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때문에 지금까지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우리 군과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인 데 반해서 정작 안전한 지역 위주로 파병하는 우리 정부의 파병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았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국력이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파병정책은 자칫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알고 파병정책의 방향을 신중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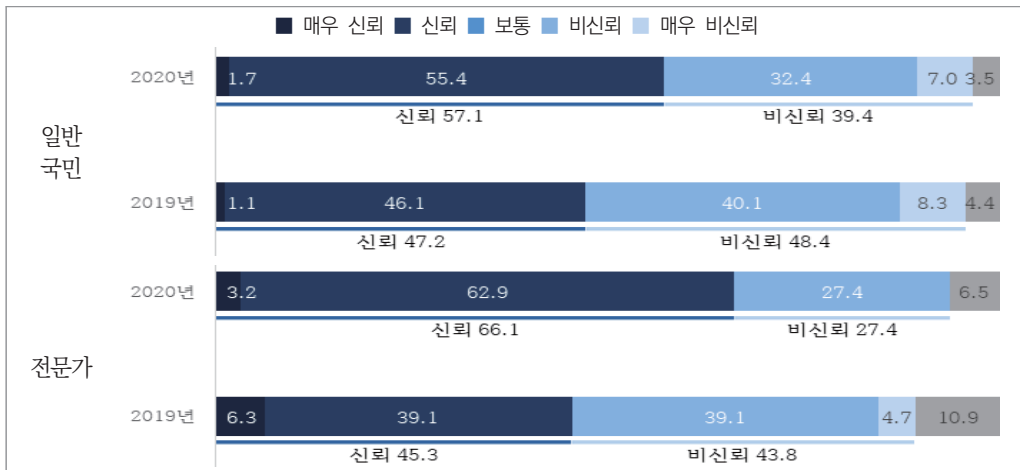
## V. 국민의 대군 신뢰도

### 1.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과 미래 국방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 동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않고서는 국방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게 국방개혁과 국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2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일반국민은 ‘신뢰한다’는 응답이 57.1%로, ‘신뢰하지 않는다’(39.4%)는 응답보다 17.7%p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9.9%p(2019년 47.2%) 증가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0%p(2019년 48.4%) 감소한 결과로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의 경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66.1%로, ‘신뢰하지 않는다’(27.4%)는 응답보다 38.7%p 높게 나타났는데, 2019년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20.8%p(2019년 45.3%) 증가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4%p(2019년 43.8%)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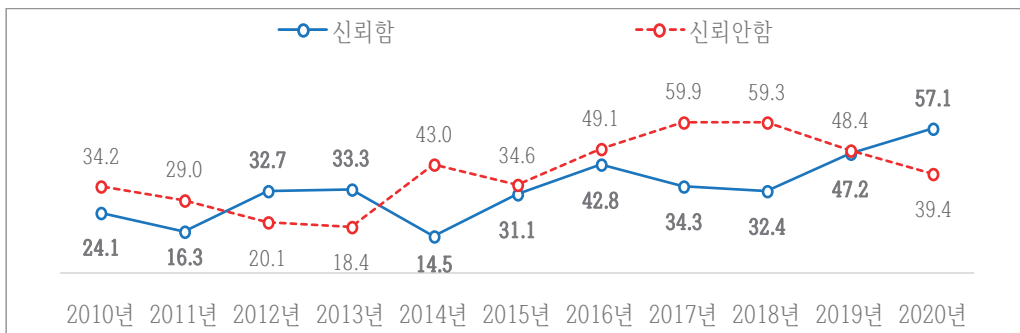
〈그림 V-1〉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



최근 10년간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의 추이를 보면 국민은 대체로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이후 2012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는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20년 조사결과가 고무적인 것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던 불신의 비율이 2019년에 일부 감소한 이후 2020년에는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2017년과 2018년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불신하는 비율이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25~27% 높게 나타난 데 반해서 2019년에는 신뢰한다는 응답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7~48%로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2020년에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18%p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011년 이후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으면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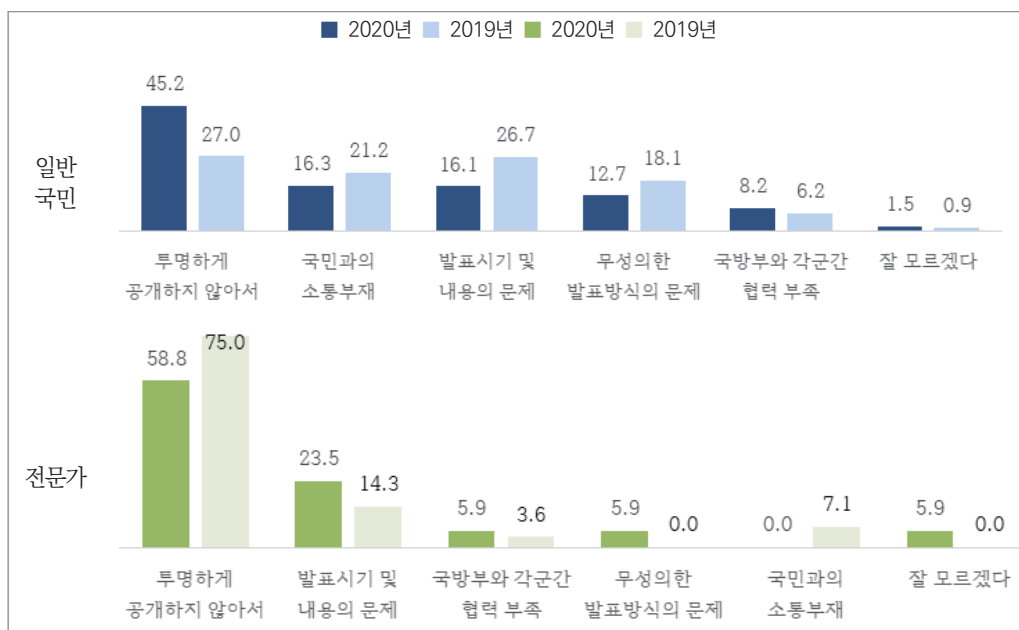
〈그림 V-2〉 최근 10년간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



이러한 점은 최근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의 방향이나 각종 국방정책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2014년 이후 국방부 발표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던 국민들의 인식이 지난 2018년 이후 급격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괄목할만하다.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국방부 발표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각종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경우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민과의 소통부재’(16.3%)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2019년 대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에 대한 응답은 18.2%p(2019년 27.0%) 증가한 반면, ‘국민과의 소통부재’에 대한 응답은 4.9%p(2019년 21.2%) 감소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응답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가 58.8%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발표시기 및 내용의 문제’(2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라는 전문가의 응답은 16.2%p(2019년 75.0%)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V-3〉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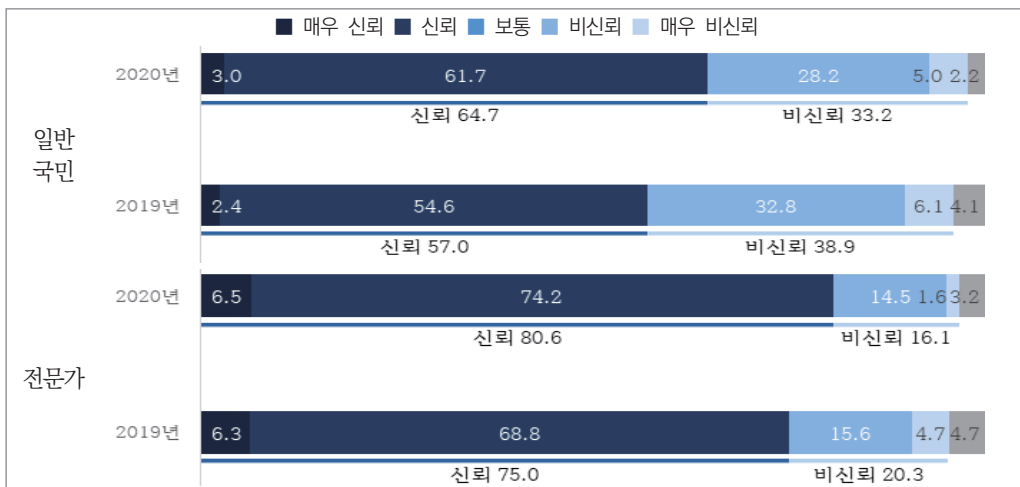


국방부의 경우 다른 기관과 다르게 비밀과 보안유지라는 업무의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일반국민이나 전문가들이 이러한 국방부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비밀이나 보안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2. 군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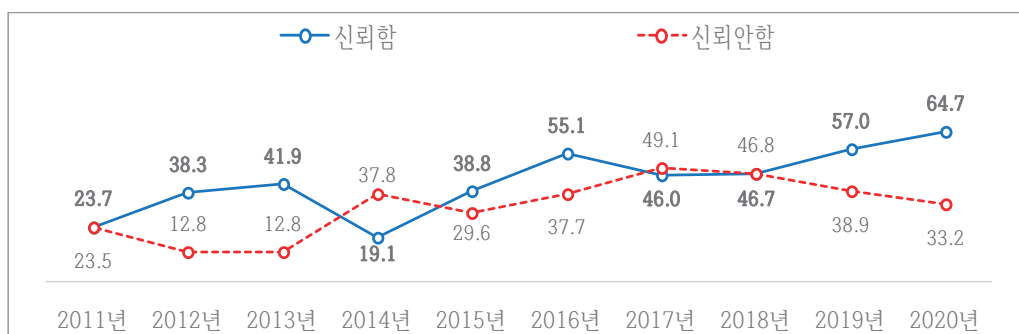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와 함께 군의 사명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2020년 조사결과에서 일반국민들은 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64.7%p로, ‘신뢰하지 않는다’(33.2%)는 응답보다 31.5%p 높게 나타났다.

〈그림 V-4〉 군에 대한 신뢰도



이러한 결과는 군으로서는 매우 긍정적인데, 지난 10년간의 조사결과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2018년 오차범위 내에서 신뢰한다는 응답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는데 비해서 2019년에는 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57.0%p이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8.9%p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격차가 2020년에는 더욱 커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V-5〉 최근 10년간 군에 대한 신뢰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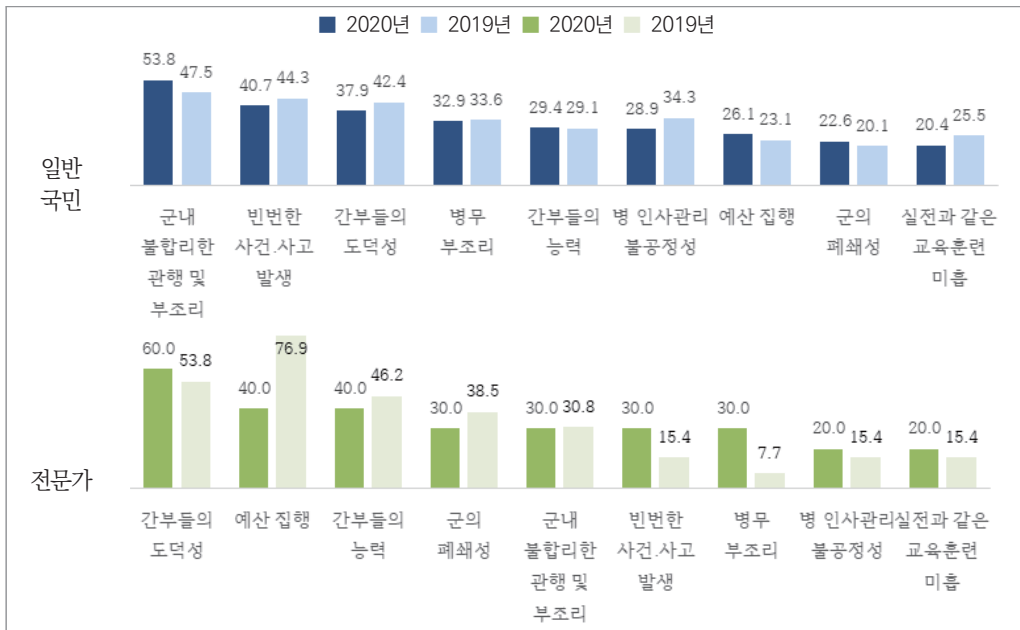


비록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2019년에 비해서 5.7%p 감소하였고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전문가의 경우에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80.6%로, ‘신뢰하지 않는다’(16.1%)는 응답보다 64.5%p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2019년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5.6%p(2019년 75.0%) 증가하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p(2019년 20.3%)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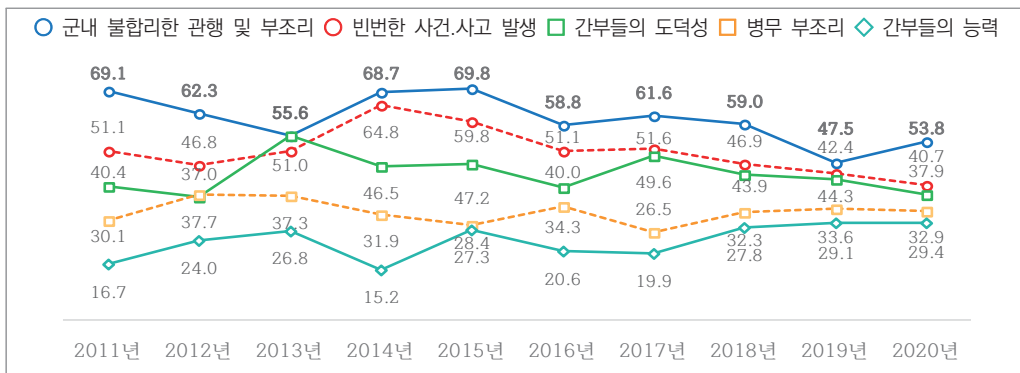
군에 대한 신뢰도가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보다 더 높게 나타난 점도 아이러니하면서도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의 발표는 투명하지 않은 정보공개 등의 이유로 불신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 전체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반국민이 주목하는 국방부의 각종 발표의 경우 국방정책에 관한 내용보다는 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나 사건, 사고에 대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도가 높다는 점은 군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향후 국방정책 추진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군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의 경우에는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가 5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빈번한 사건·사고 발생’(4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라는 응답은 6.3%p(2019년 47.5%) 증가하였고, ‘빈번한 사건·사고 발생’이라는 응답은 3.6%p(2019년 44.3%) 감소하였다. 한편, 일반국민들과 달리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간부들의 도덕성’이 6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예산 집행’(4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에는 2019년 대비 ‘간부들의 도덕성’이라는 응답은 6.2%p(2019년 53.8%) 증가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며, 2019년에 가장 높았던 ‘예산 집행’이라는 응답은 36.9%p(2019년 76.9%) 감소하였다.

〈그림 V-6〉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그림 V-7〉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연도별 비교(상위 5개 응답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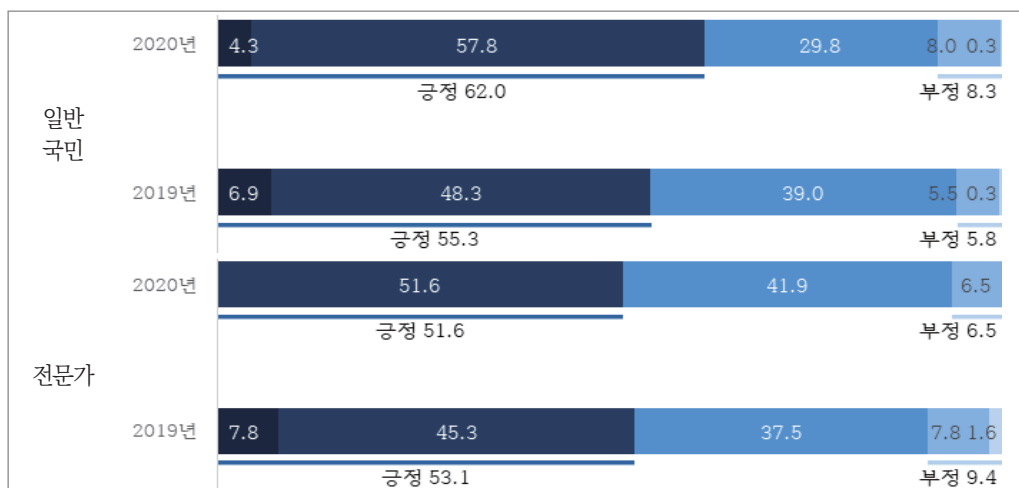


군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요인이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국민개병제에 따라 징병제를 병역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대 문화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은 항상 직간접적으로 군 복무를 경험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직접적으로 군 복무를 경험하고, 여성의 경우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간접적으로 군 복무에 대해 들음으로써 군내 불합리한 관행이나 부조리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다. 따라서 군은 군대문화 개선 노력을 통

하여 군내 불합리한 관행이나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대군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군의 신뢰도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국민들의 대군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국민의 경우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62.0%, ‘부정적이다’(8.3%)라는 응답보다 53.8%p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에는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51.6%, ‘부정적이다’(6.5%)라는 응답보다 45.2%p 높게 나타났다.

〈그림 V-8〉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일반국민들의 대군 신뢰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2018년과 2019년 리얼미터의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결과를 살펴볼 때,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기 위해서 다방면에 걸쳐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018년과 2019년 조사에서 군은 12개 국가사회기관 중에서 국회, 검찰, 경찰 다음으로 낮은 신뢰도를 보였는데, 이는 국민들이 다른 국가사회기관에 비해서 군을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sup>12)</sup>

일반국민과 전문가 집단이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견해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방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정보 수집 경로의 차이, 국방 이슈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국민은 국방에 대한 전문지식보다는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얻는 정보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들은 국방에 대한 전문적인 문제보다는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뉴스와 기사를 바탕으로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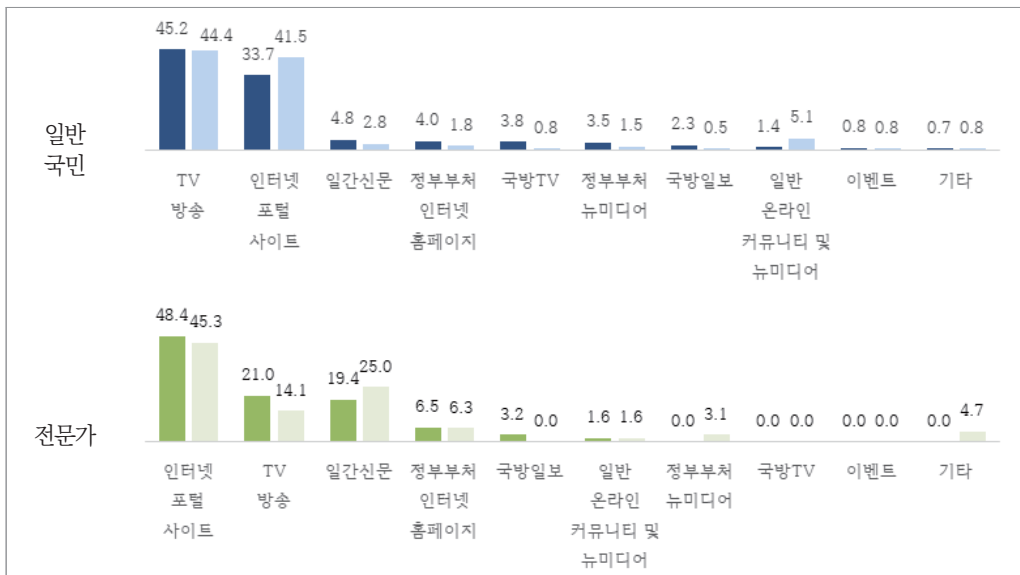
12) 리얼미터, 『TBS현안조사: 2018국가사회기관 신뢰도』(서울: 리얼미터, 2018. 10. 31).

랫동안 논쟁거리가 되어온 군내 부정적인 관행이나 군대 문화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전문가 집단의 경우 국가안보와 국방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책적 이슈와 거시적 안보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일반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대군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상관없이 군은 이러한 모든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 3.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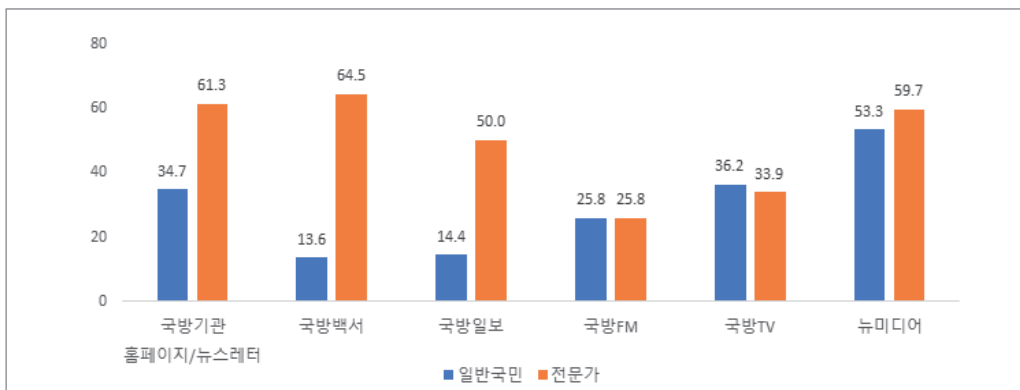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나 군에 대한 신뢰도는 안보 및 국방정책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홍보수단의 효과성과 국민들이 안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획득하는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반국민들의 경우에 'TV방송'이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을 접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4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3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는 응답은 7.8%p(2019년 41.5%) 감소하였다. 전문가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정보 획득 경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는 응답이 4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TV방송'(2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2019년 대비 'TV방송'이라는 응답은 6.9%p(2019년 14.1%) 증가하였다.

〈그림 V-9〉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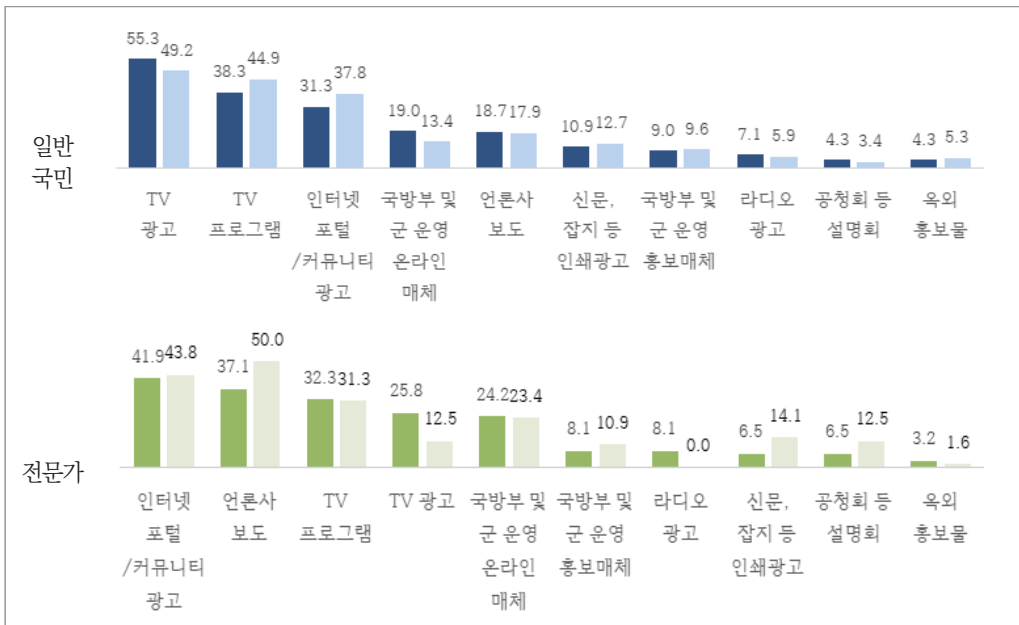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와 마찬가지로 국방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홍보매체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접촉 정도는 앞으로 국방부의 정책에 대한 홍보 경로를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국민들은 국방부가 운영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 접촉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일반국민은 34.7%에 불과했으며, 국방백서와 국방일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각각 13.6%, 14.4%에 불과했다. 국방일보에 비해서 국방FM과 국방TV는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이 좀 더 많았지만 그마저도 25.8%와 36.2%에 불과했다. 다만, 최근 국방부가 활용하고 있는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뉴미디어를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53.3%로 다른 매체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국민들의 정보획득 수단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SNS의 활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홍보수단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V-10〉 국방매체 접촉 여부에 대한 결과



국방부가 국방개혁 2.0과 국방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제대로 홍보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적합한 홍보수단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국방부 및 군의 정책을 알리기 위한 적합한 홍보활동으로 일반국민은 ‘TV 광고’라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TV 프로그램’(38.3%), ‘인터넷 포털/커뮤니티 광고’(31.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식은 2019년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경우 ‘인터넷 포털/커뮤니티 광고’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언론사 보도’(37.1%), ‘TV 프로그램’(3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11〉 적합한 홍보활동(1+2순위)



일반국민들이 안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얻는데 TV 방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국방부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려를 준다. 특히,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정보를 획득하는데 몰입하는 소위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의 문제는 자칫 국민들로 하여금 왜곡된 정보를 획득하게 만들 수 있다.<sup>13)</sup> 또한, 안보 및 국방 현안에 대한 객관적 사실보다는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국방개혁과 국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정보가 유통되는 생태계의 변화 추세에 관심을 기울이고 효과적인 국방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군 내부적인 홍보 및 정보전달 매체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정보획득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수립해야 하겠다.

13) 이병구,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와 국방정책 발전방향,” 『국민안보의식조사를 통한 정책대안 연구』(서울: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7), p. 171.

## VI. 정책적 제언

### 1. 미래 지향적 병역제도 및 공정한 병역의무 추진 노력

현재 우리는 급격한 내외적 안보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과거보다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과 이를 중심으로 한 국방정책도 안보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안보환경 속에서 미래 지향적인 병역제도와 병역의무의 공정한 이행을 담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당면한 실질적인 위협인 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병역제도로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추진해왔다. 지금까지의 범국민안보의식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병역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일반국민은 아직은 모병제보다 국민개병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병역제도에 대한 인식은 일반국민과 차이를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모병제 도입을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특히 인구절벽에 따른 가용병력자원의 급감이 예견된 가운데 향후 10년 이내에 현재 국방개혁 2.0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비병력 50만 명의 유지조차 힘들어진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국가로 2020년까지의 출산율을 바탕으로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40년에는 가용병력자원인 남자 20세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6여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병력자원의 급감은 2024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국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징병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모병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인지는 앞으로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였으나 안보위협이 다변화되고, 모병을 통해 목표 인력 획득이 힘들어지자 최근 다시 징병제로 전환하는 국가와 징병제 전환을 검토 중인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가용인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복합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제도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국민개병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개병제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인식을 고려해볼 때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인 지위와 배경에 상관없이 병역의 의무를 공정하게

이행하는 것에 매우 민감하다. 또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병역의무 이행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형성에도 매우 중요하다.

2018년 아시안게임과 연계된 병역특례에 대한 논란이나, 종교적 사유에 의한 대체 복무 논란, 유모씨의 병역의무 이행 약속 위반에 대한 국민적 공분 등 병역의무 이행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국민적으로 첨예한 대립이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 대기업 자녀의 황제 군 복무나 유력 정치인 자녀가 군 복무 간에 특혜를 받았다 의혹 등이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방탄소년단의 국가 위상 제고가 스포츠 선수들의 국가 위상 제고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 최근 방탄소년단 등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 연기에 대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찬반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과 갈등은 앞으로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방부, 나아가 정부 차원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회적 계층이나 예외 조항이 확대되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병역제도와 함께 국가안보의 큰 축이 붕괴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은 병역의무에 관한 예외 조항을 최소화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고, 제도 및 정책 개선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선진적인 병영문화 달성을 통한 강군 육성 추진

미래 지향적인 병역제도를 도입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선진적인 병영문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군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하 위계질서와 상명하복 및 군 기강확립이라는 미명하에 장병 개개인의 인권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개병제를 채택함에 따라 대부분의 남성은 직접적인 군 복무를 통해서, 그리고 여성은 가족이나 친지의 군 복무 경험을 듣고 간접적인 군 복무를 통해서 군대 문화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올바른 군대 및 병영문화 정착은 군의 사기를 높이고 전투력을 극대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군내 불합리한 관행이나 부조리를 척결하여 병영문화를 혁신시키는 것은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와 인식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이다. 2020년 범국민안보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수차례의 병영문화 혁신 노력을 통해서 일반국민의 병영문화에 대한 인식은 일부 개선되었다고 자부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국방개혁 2.0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간부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병영문화 개선을 추진해왔다.<sup>14)</sup> 특히, 병사들의 자율성과 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병 휴대폰 사용’, ‘병 평일 외출’ 등을 통하여 병사들의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자율적인 병영문화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up>15)16)</sup> 이러한 군의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병영문화 개선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과 함께 인권침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숨김없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이나 신변보호를 위한 대책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가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장병들이 군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이나 부조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의 노력을 통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병영문화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는 선진적인 병영문화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과 제도 구축 등이 군의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방해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에도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나 평일 외출 제도가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선진적인 병영문화 조성과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향후 결과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군의 사명과 역할 수행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요구될 것이다.

### 3. 병력집약형에서 기술중심군으로 변환 추진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무기체계의 변화,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가용 인력의 급격한 감소 등에 따라 현재 우리 군은 병력집약형 군 구조에서 첨단과학기술을 중

14) 국방부, 『보도자료: '18년 '병영문화혁신'은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 국방부 주관 육·해·공군 중·대령급 이하 지휘관 및 인사관계관 교육』(서울: 국방부, 2018. 2. 26).

15) <https://news.joins.com/article/22899925>

16) [http://reform.mnd.go.kr/cop/kookbang/kookbangllboView.do?siteId=mnd&pageIndex=1&findType=&findWord=&categoryCode=dema0003&boardSeq=23152&startDate=&endDate=&id=mnd\\_020101000000](http://reform.mnd.go.kr/cop/kookbang/kookbangllboView.do?siteId=mnd&pageIndex=1&findType=&findWord=&categoryCode=dema0003&boardSeq=23152&startDate=&endDate=&id=mnd_020101000000)

심으로 한 기술중심군으로의 변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국방부에서는 국방예산을 증가하고, 국방예산에서 방위력개선 예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중심군으로의 변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 방위력개선 사업의 효과성 제고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발표된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방예산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방위력개선 예산 증가를 추진하고 있다.<sup>17)</sup> 2020년 범국민안보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주국방과 전력증강을 위한 국방예산 증가와 더불어 이를 위한 국민세금 증액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이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국방예산의 확보와는 별개로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방위력개선 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방예산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과 방위력개선 사업의 공정성 확립은 앞으로 과학기술중심군으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국방예산의 양적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방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경우에는 비록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었다고는 하더라도 향후 안정적인 국방재원 확보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방산비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국방예산의 양적 증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방위력개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식별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4. 전 방위적 안보위협 대응과 군의 역할 확대

미래에 우리 군이 직면하게 될 안보 상황은 북한의 실존적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군사적 위협과 더불어 감염병, 사이버 위협, 재해재난, 테러 등 비군사적이고 비전통적인 위협이 불확실하고 복합적으로 얹혀 있다. 우리 군은 복잡하고 다변화된 군사위협과 불확실한 초국가적, 비전통적 위협 등 전 방위적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2020년 범국민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우리 국민들은 비군사적,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이나 사이버 테러, 자연재해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국민들의 인식은 이러한 비전통적, 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향후 국방정책과 군

17) 국방부, 『보도자료: '21-'25 국방중기계획 수립』(서울: 국방부, 2020. 08. 10)

사전략 수립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우리 군은 전통적 군사적 위협과 함께 비군사적,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에의 기여와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방정책 중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크게 지지받아 온 정책 중 하나가 국제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이다. 우리 국민은 국가 위상 제고와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참여를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지역에 대한 파병은 일반국민과 전문가가 다소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징병제에 따라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안전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다소 위험성이 높더라도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참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같이 마냥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하는 정책을 고수할 때는 자칫 노력에 비해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기회주의적으로 참여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앞으로는 비록 위험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파병되는 우리 장병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적 동의가 ‘안전한 지역’으로 파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험한 분쟁지역으로의 파병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5. 국민의 대군 신뢰도 지속 증진을 위한 노력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을 중심으로 한 국방정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받는 것이 급선무이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예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방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그동안 국방부와 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지만 2020년 범국민안보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대군 신뢰도가 최근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국방개혁 2.0과 국방정책 추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방부와 군의 노력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대군 신뢰도 개선이 고무적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대군 신뢰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방정책과 개혁방향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과 적시에 소통하고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획득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우리

군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접촉하는 다양한 전달 매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세대별로 국민들이 접촉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를 고려하여 맞춤형 홍보수단을 다변화해야 한다. 최근 젊은 세대들은 SNS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 활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민안보의식조사를 통한 정책대안 연구』(서울: 국방대학교, 2018).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민안보의식조사를 통한 정책대안 연구』(서울: 국방대학교, 2019).
- 국방부,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2.0: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서울: 국방부, 2018).
- 국방부, 『보도자료: '18년 '병영문화혁신'은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 국방부 주관 육·해·공 군 중·대령급 이하 지휘관 및 인사관계관 교육』(서울: 국방부, 2018. 2. 26).
- 국방부, 『보도자료: '21-'25 국방중기계획 수립』(서울: 국방부, 2020. 08. 10).
- 리얼미터, 『TBS현안조사: 2018국가사회기관 신뢰도』(서울: 리얼미터, 2018. 10. 31).
- 이정민, “국민안보의식 변화추세와 정책방안,” 『국민안보의식조사를 통한 정책대안 연구 2015』,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정책연구보고서, 2016, p. 2-45.
- 전제국, “한국군의 해외파병과 한반도 안보: 국제평화활동의 국익증진 효과,” 『국가전략』제 17권2호(2011).
- 『경향신문』(2017. 8. 14).
- 『경향신문』(2019. 7. 11) 대법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7112146015#csidx37edc50ba82ac6f9df5735b177d5f38](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7112146015#csidx37edc50ba82ac6f9df5735b177d5f38) (검색일: 2020. 11. 12)
- 『경향신문』(2020. 10. 7). 2020 국정감사 시작...여야, 추미애 아들 의혹 증인 공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072055005#csidx983609e884c9d1093\\_fa46accdc06e46](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072055005#csidx983609e884c9d1093_fa46accdc06e46) (검색일: 2020. 11. 12)
- 『연합뉴스』(2020. 10. 26.) 강경화 "유승준에 비자 발급 허용치 않기로 결정"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6145600504> (검색일: 2020. 11. 12)
- 『중앙일보』(2020. 11. 10). 공군 '황제복무' 병사 아버지에게 식사 대접 받은 공군 소령 기소  
<https://news.joins.com/article/23916735>(검색일: 2020. 11. 12)
- 『한겨레신문』(2020. 6. 15). 공군, '황제 군 복무' 의혹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49410.html#csidx911e53bbb8adcca80a57d007c235f11> (검색일: 2020. 11. 15)
- 『한겨레신문』(2020. 11. 20). BTS ‘만 30살’까지 병역연기 가능...병역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0820.html> (검색일: 2020. 11. 20)
- 『YTN』(2017. 8. 9). “문재인 대통령 “北 도발 대응 전력 확보 시급... 환골탈태 수준 국방 개혁 필요,”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63397>(검색일: 2020. 11. 10).

#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국방의 역할

민 정 훈\*

- I. 서 론
- II. 비군사적 안보 분야 국민안보의식 변화추세 분석
- III. 비군사적 위협과 국방의 역할
- IV. 결 론

## 요약서

냉전종식, 세계화, 정보화 등을 겪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는 안보 영역에서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환경의 변화는 안보 위협 요인을 초국가적 위협에서부터 비군사적 요소로까지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기후, 보건, 난민, 테러, 사이버 범죄 등 비군사적 안보 이슈들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증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를 맞이하여 전통적인 안보위협과 더불어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예외일 수 없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같은 글로벌 질병으로 인한 우려 확산, 황사나 미세먼지를 둘러싼 한중 외교 갈등, 제주도 예멘 난민사태로 불거진 난민과 이주자문제 등 비군사적 안보영역에서의 위협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전통안보 영역에서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는 한편

\*국립외교원

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가 간 협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점차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인식 변화에 직면하여 국방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범국민안보의식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비군사적 위협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안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국방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북한 핵위협 등 전통적인 안보위협과 더불어 테러, 마약, 조직범죄, 자연재해, 원전사고, 감염병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보다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는 전문가들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비군사적 위협 대비 필요성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일반국민에게 안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국방정책 및 안보전략 수립의 근간을 형성하는 국민의 지지를 제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분석 결과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군사적 위협 대비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인구통계학적인 특징들(성별, 연령, 지역 크기, 학력, 생활수준)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 지역 크기, 생활수준에 따른 답변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와 관련하여 어느 계층이 보다 큰 불안감 및 소외의식을 느끼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비군사적 위협 대비 관련 인식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데 국방이 기여한다면 비군사적 위협 대비 관련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데 국방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기 위해 비군사적 위협 관련 국방의 역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비군사적 안보 위협 관련 국방부 대응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분석 결과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비군사적 위협 관련 국방부의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방부 발표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비군사적 안보 위협 관련 국방부 대응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연령, 생활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비군사적 위협 관련 국방부 발표 신뢰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비군사적 위협 관련 국방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비군사적 위협 관련 국방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그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인식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키려는 국방의 노력이 비군사적 위협 관련 국방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비군사적 위협 관련 국방의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방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국방부 발표의 투명성, 발표 시기 및 내용, 무성이한 발표 방식’ 등이 국방부 발표 신뢰 여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 ‘투명한 정보 공개’ 여부가 국방부 발표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투명한 정보 공개 제고를 위한 국방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방의 대응을 포함하여, 국방부 발표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투명한 정보 공개 제고를 위해 국방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분석 결과는 TV 방송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을 접하는 주된 경로임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여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군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TV 방송을 선호한 반면 남성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을 접함에 있어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에 따라 TV 방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선호가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안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계층별 선호 정보 및 접촉 경로 등을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면 국방부 발표에 대한 관심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분석 결과는 안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국방TV, 국방일보 등의 매체와 젊은 층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블로그(Blog),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유튜브(YouTube) 같은 정부부처 뉴미디어를 보다 활성화하여 안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다각도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미디어 시장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국민들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택적으로 획득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국방TV, 국방일보 등의 매체가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함과 동시에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SNS와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해 안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전문성에 기초하여 보다 쉽고 자세하게 전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냉전종식, 세계화, 정보화 등을 겪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는 안보 영역에서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환경의 변화는 안보 위협 요인을 초국가적 위협에서부터 비(非)전통적/군사적 요소로까지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관계의 행위자, 이슈, 과정 등이 다양해지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전통적인 안보개념을 벗어나 포괄적인 안보개념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활성화되었다.<sup>1)</sup>

기후, 보건, 난민, 테러, 사이버 범죄 등 비군사적 안보(non-military security) 이슈들은 초국가적 상호작용의 네트워크가 심화·확산됨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도 비군사적 안보 영역에서의 위험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한, 중, 일 3국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자연재해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사스(SARS), 메르스(MERS), 코로나19(COVID-19)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질병의 발생과 확산은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부각되었다. 과거 자연재해는 주로 일본, 중국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였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한국에서도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원자력 발전소와 인접한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가 폭발하였고, 이후 방사능에 노출된 수산물과 식료품 유통, 건축 폐기물의 국내 유입 및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 등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접 국가의 질병이나 재난 사고가 연쇄적이고 복합적으로 주변국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sup>2)</sup>

한국은 분단 및 냉전을 거치면서 국가생존과 번영을 위해 대북 억지력 확보와 동북아 정세 안정에 집중하는 전통적 안보 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냉전 종식, 세계화, 정보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외교·안보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 범주를 군사적인 측면을 넘어 경제, 문화, 환경, 보건 등의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질병으로 인한 우려 확산, 황사나 미세먼지를 둘러싼 한중 외교 갈등, 제주도 예멘 난민사태로 불거진 난민과 이주자문제 등 비군사적 안보 영역에서의 위험인식도 증대되고 있다.<sup>3)</sup>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

1) 이신화 (2008), “비전통안보와 동북아지역협력” 한국정치학회보 42(2), pp. 411-434.

2) 김상규 (2018), “한, 중, 일 3국의 위기와 협력에 관한 연구: 비전통 안보 영역의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3(4), pp. 29-47.

제 구축이라는 전통안보 영역에서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는 한편 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가 간 협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점차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인식 변화에 직면하여 국방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범국민안보의식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비군사적 위협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안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국방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이신화(2008)는 비전통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지역의 갈등과 협력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동북아 역내 안보 레짐의 발전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통안보와 비전통 안보 관련 이슈와 다자간 협력과정 및 그 한계점을 고찰하고 협력의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송은희(2016)는 냉전종식 및 세계화·정보화 등의 국제질서 변화로 인하여 국가안보 위협요인이 초국가적 위협에서부터 비군사적 요소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전통 안보 위협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비전통 안보 위협요인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통해 안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델파이(Delphi) 기법을 활용하여 안보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김상규(2018)는 한·중·일 3국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과 협력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의 3국의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는 한·중·일 3국은 기본적으로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정치적 요인과 국가이익의 접점으로 인해 안정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슈 사이클을 통해 협력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해결책의 선택 결정 과정에서 의견도출이 어려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잠재적 위기 발생 가능성으로 향후 3국 사이에 협력이 이루어질 여지가 충분하며, 그 중 한국의 주도적인 의제의 제안과 조율을 통해 협력의 기틀이 마련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관련

3) 이신화·정한울 (2019), “한국인의 ‘신안보’ 인식: 변화와 지속성” 21세기정치학회보 29(2), pp. 73-98.

문제에 관한 한국의 역할을 확대·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이신화·정한울(2019)은 포괄안보시대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 국제관계에서 한국인들은 어떠한 신(新)안보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고려대 SSK·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웹 조사를 근거로 한국사회의 신안보 인식을 비핵화 협상전개과정에 따른 한국인의 대북 안보인식변화와 비전통 안보 영역에 대한 위협인식 변동추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비전통 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조사 결과는, 전통안보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환경, 질병, 난민 등과 같은 비전통 안보에 대한 한국인들의 위협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으며, 전통안보 이슈에서 대체로 기존의 세대균열과 이념균열이 양상이 뚜렷하게 유지되는 반면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는 요인별로 상반된 반응 패턴이 분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 3. 연구의 내용과 범위

본 연구는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범국민안보의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군사적 위협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국방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범국민안보의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군사적 안보 분야 관련 국민안보의식의 장·단기 변화 추세를 분석할 것이다. 비군사적 안보 이슈별 장·단기 변화 추세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도표 및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 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국민 인식을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비군사적 안보 분야 관련 국민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령, 성별, 학력, 출신지역, 생활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이 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이상에서 논의한 비군사적 안보 위협 관련 국민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국방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하고자 한다. 비군사적 위협 관련 국방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안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국방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4.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비전통 안보 분야의 기존 연구들은 비전통 안보 위협 관련 동북아 지역의 개괄적인 상황을 다루거나 해당분야 관련 단기적인 변화추세만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범국민안보의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군사적 위협과 관련된 국민안보의식의 장·단기 변화추세와 변화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비군사적 위협과 관련된 국민 인식과 국방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범국민안보의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군사적 위협과 관련된 국민 안보의식의 변화추세를 그래프, 도표 등을 이용하여 정리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해를 돕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비군사적 위협과 관련된 국민 인식과 국방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연구라는 점에서 향후 해당 분야 논의와 국방정책 및 안보전략 수립을 위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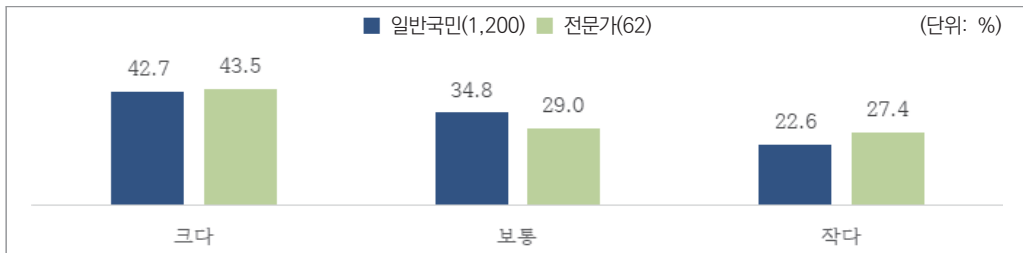
## II. 비군사적 안보 분야 국민안보의식 변화추세 분석

### 1. 비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 가. 테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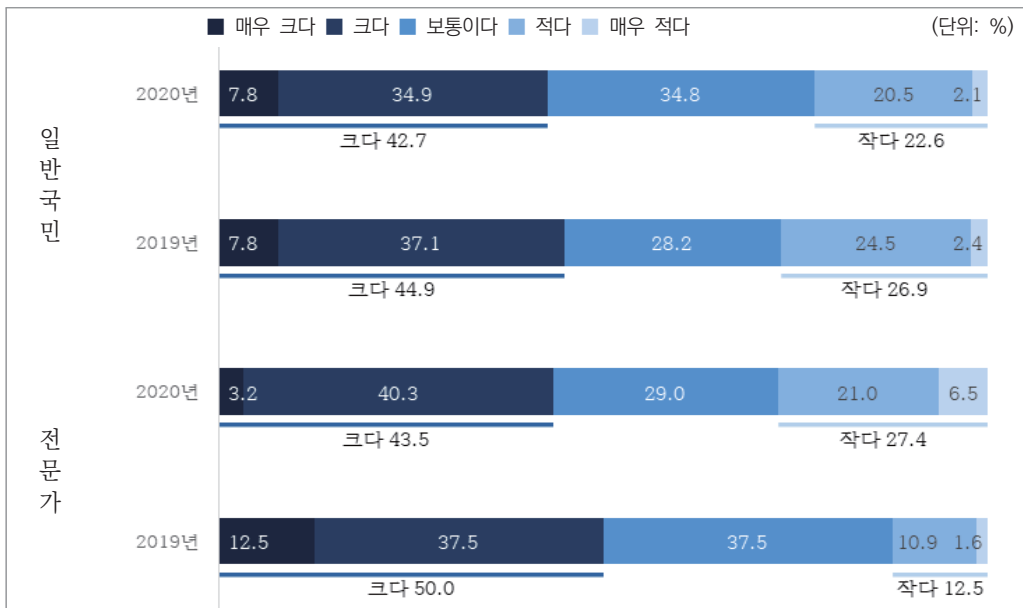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2020년 범국민안보의식조사에서 ‘한국이 테러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림 II-1>에서 볼 수 있듯이, 42.7%의 일반국민들은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고, 34.8%는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22.6%는 ‘작다’고 답변하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43.5%가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고, 29.0%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27.4%는 ‘작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전문가들이 일반국민들에 비해 테러 위협에 대해 다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1〉 테러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019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테러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의 경우 ‘크다’는 응답과 ‘작다’는 응답이 각각 2.2% (2019년 44.9%)와 4.3%(2019년 26.9%) 감소한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은 6.6%(2019년 28.2%) 증가하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경우 ‘크다’는 답변과 ‘보통’이라는 답변이 각각 6.5%(2019년 50.0%)와 8.5%(2019년 37.5%) 감소한 반면, ‘작다’는 답변은 14.9%(2019년 12.5%) 증가하였다(그림 II-2참조).

〈그림 II-2〉 테러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전년도 비교



〈표 II-1〉은 테러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이 야기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안보의식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8년에 걸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연평균 42.3%의 국민들이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고, 31.4%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26.4%는 ‘작다’고 응답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에 테러의 위협이 ‘크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년도 대비 10.2% 증가하여 50%를 넘어 선 반면 2018년의 경우에는 동일한 답변을 한 국민들이 11.4% 감소하여 20% 대 중반을 기록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전문가의 경우 2018, 2019, 2020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용 가능하다. 3개년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연평균 47.3%의 전문가들이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고, 33.5%는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19.3%는 ‘작다’고 답변했다. 한편 3개년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일반국민들과 전문가들의 답변을 비교해 볼 때 전문가들이 일반국민들에 비해 테러 위협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평균 테러의 위협이 ‘크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47.3%로 일반국민들(37.4%)에 비해 9.9%로 높은 반면, 19.3%의 전문가들이 테러의 위협이 ‘작다’고 답변함으로써 일반국민들(29.9)보다 10.6% 낮았다.

〈표 II-1〉 비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테러 (단위: %)

〈일반국민〉

| 척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크다   | 39.3 | 47.6 | 47.1 | 57.3 | 35.1 | 24.5 | 44.9 | 42.7 |
| 보통이다 | 34.2 | 29.2 | 30.1 | 29.8 | 29.3 | 35.3 | 28.2 | 34.8 |
| 작다   | 26.6 | 23.2 | 22.9 | 12.9 | 35.6 | 40.3 | 26.9 | 2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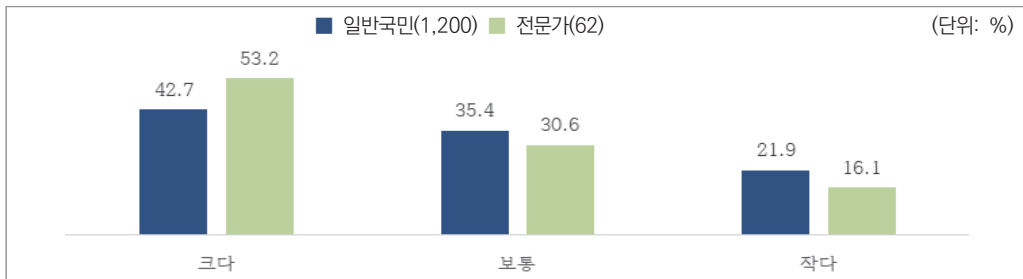
〈전문가〉

| 척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크다   | -    | -    | -    | -    | -    | 46.7 | 51.6 | 43.5 |
| 보통이다 | -    | -    | -    | -    | -    | 41.7 | 29.7 | 29.0 |
| 작다   | -    | -    | -    | -    | -    | 11.7 | 18.8 | 27.4 |

## 나. 해적, 마약, 조직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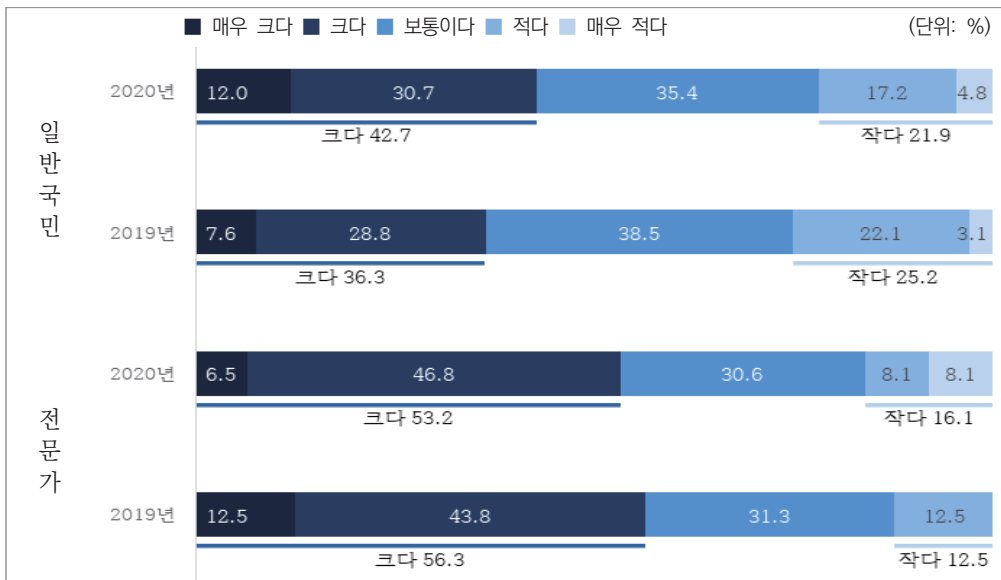
국방대학교 안정보장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2020년 범국민안보의식조사에서 ‘한국이 해적, 마약, 조직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림 II-3〉에서 볼 수 있듯이, 42.7%의 일반국민들은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고, 35.4%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21.9%는 ‘작다’고 응답하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53.2%가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고, 30.6%는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16.4%는 ‘작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전문가들이 일반국민들에 비해 해적, 마약, 조직범죄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3〉 해적, 마약, 조직범죄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019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해적, 마약, 조직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의 경우 ‘보통’이라는 답변과 ‘작다’는 답변이 각각 3.1%(2019년 38.5%)와 3.3%(2019년 25.2%) 감소한 반면, ‘크다’는 답변은 6.4%(2019년 36.3%) 증가하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경우 ‘크다’는 응답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각각 3.1%(2019년 56.3%)와 0.7%(2019년 31.3%) 감소한 반면, ‘작다’는 응답은 3.6%(2019년 12.5%) 증가하였다(그림 II-4 참조).

〈그림 II-4〉 해적, 마약, 조직범죄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전년도 비교



〈표 II-2〉는 해적, 마약, 조직범죄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8년에 걸

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연평균 40.5%의 국민들이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고, 34.9%는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24.7%는 ‘작다’고 답변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에 ‘가능성이 크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년도 대비 18.2% 감소하여 20%대 후반으로 낮아진 반면 이후 동일한 답변을 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 42.7%를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전문가의 경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에 걸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 볼 때, 연평균 49.7%의 전문가들이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고, 34.6%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15.7%는 ‘작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전문가들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 해적, 마약, 조직범죄로 인한 안보 위협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평균 해적, 마약, 조직범죄로 인한 위협이 ‘크다’고 답변한 전문가들은 49.7%로 일반국민들(40.5%)에 비해 9.2%로 높은 반면, 15.7%의 전문가들이 위협이 ‘작다’고 응답함으로써 일반국민들(24.7)보다 9.0% 낮았다.

〈표 II-2〉 비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해적, 마약, 조직범죄 (단위: %)

〈일반국민〉

| 척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크다   | 45.7 | 44.1 | 46.6 | 47.4 | 29.2 | 31.7 | 36.3 | 42.7 |
| 보통이다 | 34.9 | 33.9 | 30.3 | 35.7 | 37.3 | 33.3 | 38.5 | 35.4 |
| 작다   | 19.4 | 22.0 | 23.2 | 16.9 | 33.5 | 35.1 | 25.2 | 2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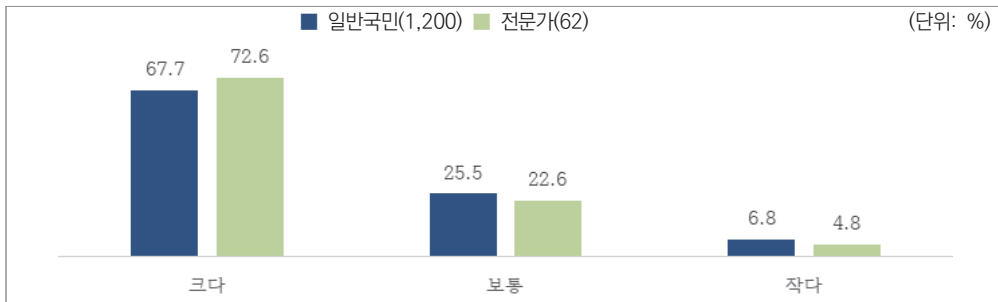
〈전문가〉

| 척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크다   | 55.0 | 56.6 | 38.3 | 43.3 | 43.3 | 51.7 | 56.3 | 53.2 |
| 보통이다 | 33.3 | 28.3 | 48.3 | 33.3 | 38.3 | 33.3 | 31.3 | 30.6 |
| 작다   | 11.7 | 15.0 | 13.3 | 23.3 | 18.3 | 15.0 | 12.5 | 16.1 |

## 다. 자연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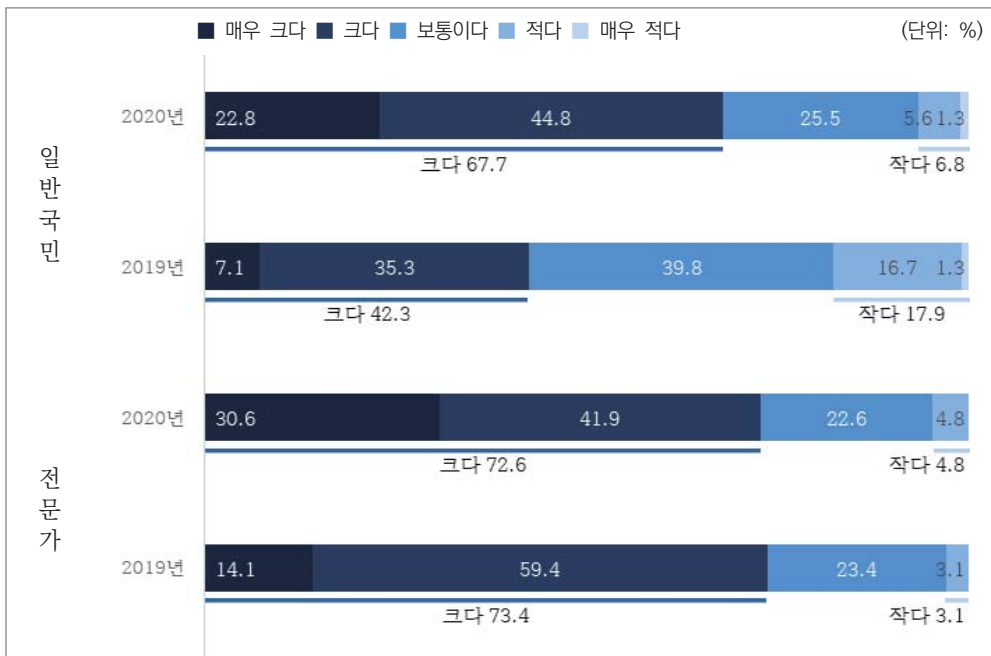
국방대학교 안정보장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2020년 범국민안보의식조사에서 ‘한국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림 II-5〉에서 볼 수 있듯이, 67.7%의 일반국민들은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고, 25.5%는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6.8%는 ‘작다’고 답변하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72.6%가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고, 22.6%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4.8%는 ‘작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전문가들이 일반국민들에 비해 자연재해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5〉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019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과 ‘작다’는 응답이 각각 14.3%(2019년 39.8%)와 11.1%(2019년 17.9%) 감소한 반면, ‘크다’는 응답은 25.4% (2019년 42.3%) 증가하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경우 ‘크다’는 답변과 ‘보통’이라는 답변이 각각 0.8%(2019년 73.4%)와 0.8%(2019년 23.4%) 감소한 반면, ‘작다’는 답변은 1.7%(2019년 3.1%) 증가하였다(그림 II-6 참조).

〈그림 II-6〉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전년도 비교



〈표 II-3〉은 자연재해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이 야기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8년에 걸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연평균 48.2%의 국민들이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고, 37.9%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13.9%는 ‘작다’고 응답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에 자연재해의 위협이 ‘크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년도 대비 5.5% 증가하여 50%를 넘어섰고 2020년에 동일한 답변을 한 국민들이 60%대 중반을 기록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전문가의 경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에 걸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연평균 56.6%의 전문가들이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고, 34.1%는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9.3%는 ‘작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전문가들이 일반국민들에 비해 자연재해로 인한 안보 위협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평균 자연재해의 위협이 ‘크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56.6%로 일반국민들(48.2%)에 비해 8.4%로 높은 반면, 9.3%의 전문가들이 자연재해의 위협이 ‘작다’고 답변함으로써 일반국민들(13.9%)보다 4.6% 낮았다.

〈표 II-3〉 비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자연재해 (단위: %)

〈일반국민〉

| 척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크다   | 46.9 | 42.5 | 44.7 | 50.2 | 43.1 | 48.3 | 42.3 | 67.7 |
| 보통이다 | 39.7 | 38.3 | 39.1 | 39.7 | 43.4 | 37.8 | 39.8 | 25.5 |
| 작다   | 13.4 | 19.3 | 16.3 | 10.2 | 13.5 | 13.9 | 17.9 | 6.8  |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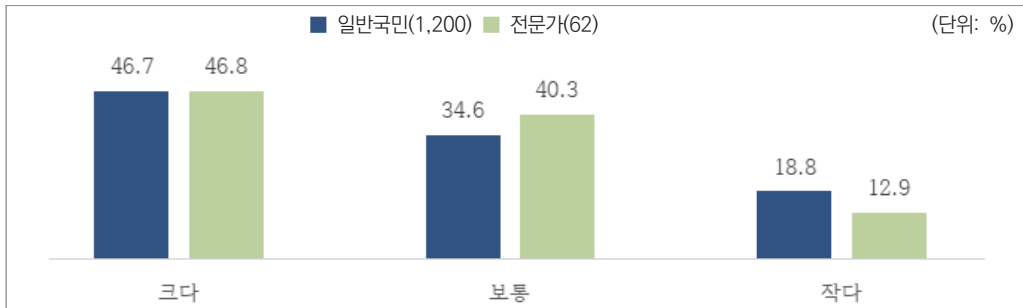
| 척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크다   | 48.3 | 56.7 | 50.0 | 43.3 | 50.0 | 58.4 | 73.4 | 72.6 |
| 보통이다 | 41.7 | 28.3 | 43.3 | 45.0 | 40.0 | 28.3 | 23.4 | 22.6 |
| 작다   | 10.0 | 15.0 | 6.6  | 11.7 | 10.0 | 13.3 | 3.1  | 4.8  |

## 라. 원전사고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2020년 범국민안보의식조사에서 ‘한국이 원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림 II-7〉에서 볼 수 있듯이, 46.7%의 일반국민들은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고, 34.6%는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18.8%는 ‘작다’고 답변하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46.8%가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고, 40.3%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12.9%는 ‘작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원전사고의 위협에 대한 전문가들과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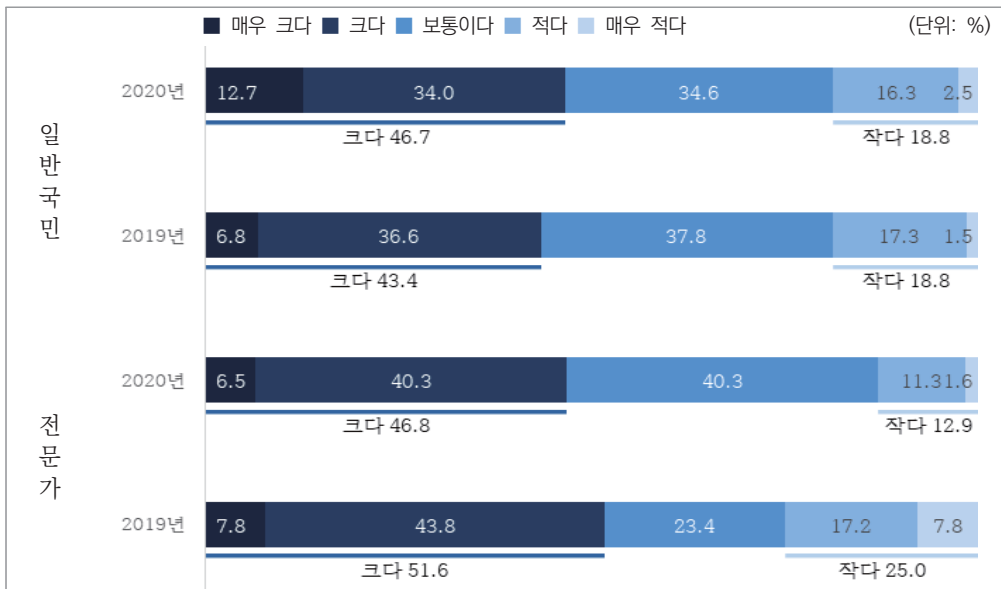
국민들의 인식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림 II-7〉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019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원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의 경우 ‘크다’는 답변은 3.3%(2019년 43.4%) 증가한 반면 ‘보통’이라는 답변은 3.2%(2019년 37.8%) 감소하였다. ‘작다’는 답변에는 변동이 없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경우 ‘크다’는 응답과 ‘작다’는 응답이 각각 4.8%(2019년 51.6%)와 12.1%(2019년 25.0%) 감소한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은 16.9%(2019년 23.4%) 증가하였다(그림 II-8 참조).

〈그림 II-8〉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전년도 비교



〈표 II-4〉는 원전사고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8년에 걸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 볼 때, 연평균 45.2%의 국민들이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고, 36.4%는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18.5%는 ‘작다’고 답변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에 ‘가능성이 크다’고 답한 응답자가 50%를 넘어섰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이 주목할 만하다. 전문가의 경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에 걸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연평균 51.7%의 전문가들이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고, 30.3%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18.1%는 ‘작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전문가들이 일반국민들에 비해 원전사고로 인한 안보 위협을 다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평균 원전사고로 인한 위협이 ‘크다’고 답변한 전문가들은 51.7%로 일반국민들(45.2%)에 비해 6.5%로 높은 반면, 18.1%의 전문가들이 위협이 ‘작다’고 응답함으로써 일반국민들(18.5)보다 0.4% 낮았다.

〈표 II-4〉 비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원전사고 (단위: %)

〈일반국민〉

| 척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크다   | 49.9 | 45.7 | 44.8 | 54.2 | 38.7 | 38.2 | 43.4 | 46.7 |
| 보통이다 | 36.1 | 34.8 | 37.6 | 33.4 | 42.1 | 34.8 | 37.8 | 34.6 |
| 작다   | 14.0 | 19.6 | 17.7 | 12.4 | 19.2 | 27.1 | 18.8 | 18.8 |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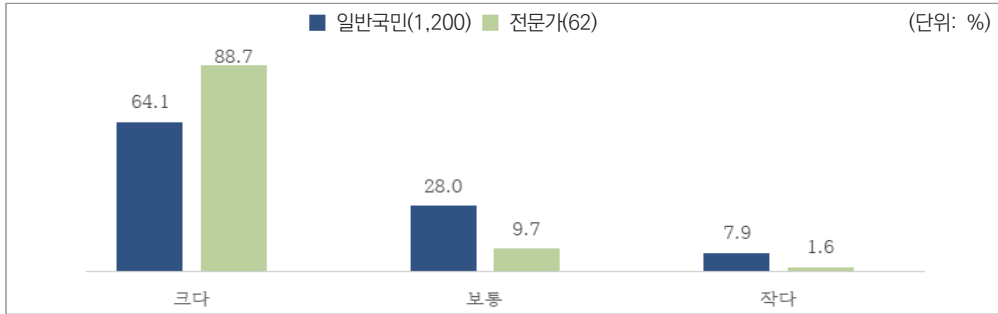
| 척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크다   | 70.0 | 65.0 | 48.4 | 58.3 | 31.7 | 41.7 | 51.6 | 46.8 |
| 보통이다 | 18.3 | 26.7 | 38.3 | 31.7 | 40.0 | 23.3 | 23.4 | 40.3 |
| 작다   | 11.6 | 8.3  | 13.4 | 10.0 | 28.3 | 35.0 | 25.0 | 12.9 |

## 마. 사이버 테러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2020년 범국민안보의식조사에서 ‘한국이 사이버 테러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림 II-9〉에서 볼 수 있듯이, 64.1%의 일반국민들은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고, 28.0%는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7.9%는 ‘작다’고 답변하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88.7%가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고, 9.7%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1.6%는 ‘작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전문가들이 일반국민들에 비해 사이버 테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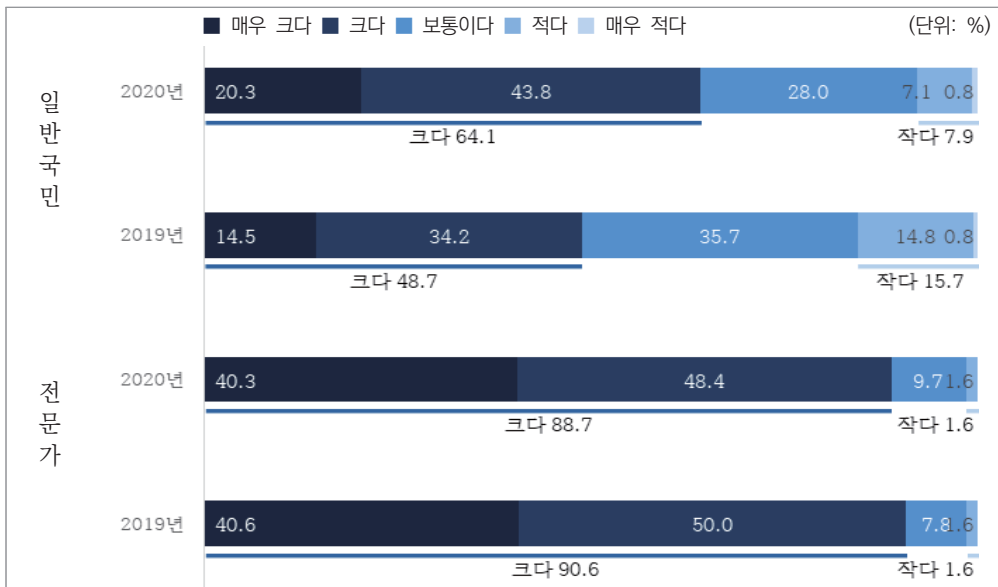
위협에 대해 훨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9〉 사이버 테러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019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사이버 테러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의 경우 ‘크다’는 응답은 15.4%(2019년 48.7%) 증가한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과 ‘작다’는 응답은 각각 7.7%(2019년 35.7%)와 7.8% (2019년 15.7%) 감소하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경우 ‘크다’는 답변은 1.9% (2019년 90.6%) 감소한 반면, ‘보통’이라는 답변은 1.9%(2019년 7.8%) 증가하였다. ‘작다’는 답변에는 변동이 없었다(그림 II-10 참조).

〈그림 II-10〉 사이버 테러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전년도 비교



〈표 II-5〉는 사이버 테러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이 야기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안보의식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8년에 걸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연평균 60.9%의 국민들이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고, 26.8%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12.4%는 ‘작다’고 응답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에 사이버 테러의 위협이 ‘크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년도 대비 13.2% 증가하여 70%를 넘어 선 것이 주목할 만하다. 전문가의 경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에 걸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 볼 때, 연평균 88.3%의 전문가들이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고, 9.9%는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1.9%는 ‘작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전문가들이 일반국민들에 비해 사이버 테러로 인한 안보 위협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평균 사이버 테러의 위협이 ‘크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88.3%로 일반국민들(60.9%)에 비해 27.4%로 높은 반면, 1.9%의 전문가들이 사이버 테러의 위협이 ‘작다’고 답변함으로써 일반국민들(12.4%)보다 10.5% 낮았다.

〈표 II-5〉 비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사이버 테러 (단위: %)

〈일반국민〉

| 척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크다   | 68.0 | 59.1 | 59.0 | 72.2 | 56.4 | 59.7 | 48.7 | 64.1 |
| 보통이다 | 21.3 | 25.8 | 27.5 | 20.0 | 31.2 | 24.5 | 35.7 | 28.0 |
| 작다   | 10.8 | 15.2 | 13.5 | 7.8  | 12.4 | 15.7 | 15.7 | 7.9  |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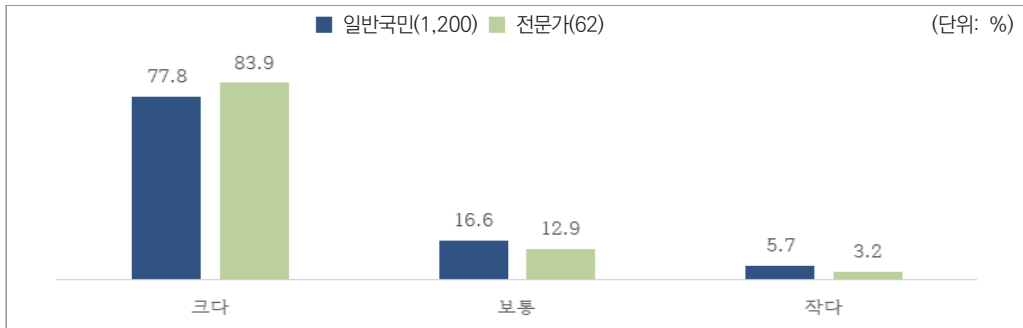
| 척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크다   | 86.7 | 91.7 | 88.4 | 85.0 | 85.0 | 90.0 | 90.6 | 88.7 |
| 보통이다 | 10.0 | 6.7  | 11.7 | 11.7 | 13.3 | 8.3  | 7.8  | 9.7  |
| 작다   | 3.3  | 1.7  | 0.0  | 3.3  | 1.7  | 1.7  | 1.6  | 1.6  |

## 바. 감염병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2020년 범국민안보의식조사에서 ‘한국이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림 II-11〉에서 볼 수 있듯이, 77.8%의 일반국민들은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고, 16.6%는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5.7%는 ‘작다’고 답변하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83.9%가 ‘크다’고 응답했고, 12.9%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3.2%는 ‘작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전문가들이 일반국민들에 비해 감염병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해 다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83.9%로 일반국민들(77.8%)에 비해 6.1%로 높은 반면, 3.2%의 전문가들이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작다’고 답변함으로써 일반국민들(5.7%)보다 2.5%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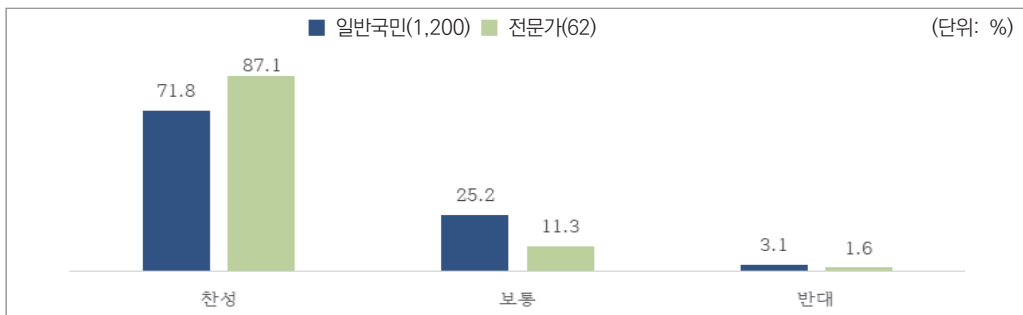
〈그림 II-11〉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 2.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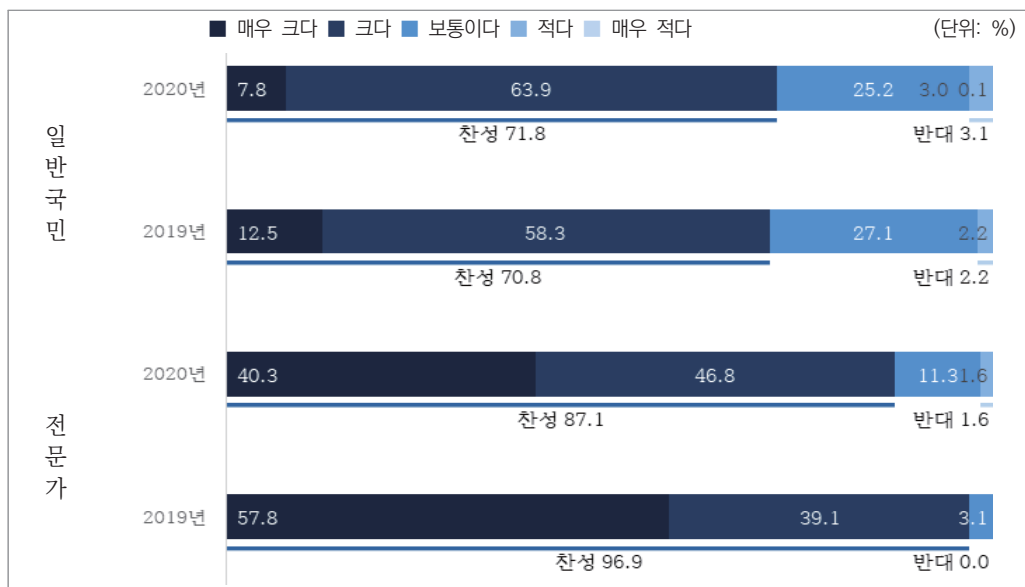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2020년 범국민안보의식조사에서 ‘한국이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림 II-12〉에서 볼 수 있듯이, 71.8%의 일반국민들은 ‘찬성한다’고 답변했고, 25.2%는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3.1%는 ‘반대한다’고 답변하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87.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11.3%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1.6%는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전문가들이 일반국민들에 비해 비군사적 위협 대비 필요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12〉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019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의 경우 ‘찬성한다’는 응답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각각 1.0% (2019년 70.8%)와 0.9%(2019년 2.2%) 증가한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은 1.9%(2019년 27.1%) 감소하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경우 ‘보통’이라는 답변과 ‘반대한다’는 답변이 각각 8.2%(2019년 3.1%)와 1.6%(2019년 0.0%) 증가한 반면, ‘찬성한다’는 답변은 9.8%(2019년 96.9%) 감소하였다(그림 II-13 참조).

〈그림 II-13〉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성 전년도 비교



〈표 II-6〉은 ‘한국이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8년에 걸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연평균 73.5%의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답변했고, 24.0%는 ‘보통이다’라고 답변했으며, 2.6%는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에 ‘찬성한다’고 답변 응답자가 80%대를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전문가의 경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에 걸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 볼 때, 연평균 89.0%의 전문가들이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8.1%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했으며, 2.9%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전문가들이 일반국민들에 비해 비군사적 안보 위협 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평균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전문가들은 89.0%로 일반국민들(73.5%)에 비해 15.5%높은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

에는 전문가들(2.9%)과 일반국민들(2.6%)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표 II-6〉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성 (단위: %)

〈일반국민〉

| 척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크다   | 72.4 | 73.1 | 68.0 | 72.6 | 78.8 | 80.1 | 70.8 | 71.8 |
| 보통이다 | 26.0 | 24.2 | 28.5 | 23.7 | 19.6 | 17.8 | 27.1 | 25.2 |
| 작다   | 1.7  | 2.7  | 3.5  | 3.8  | 1.7  | 2.2  | 2.2  | 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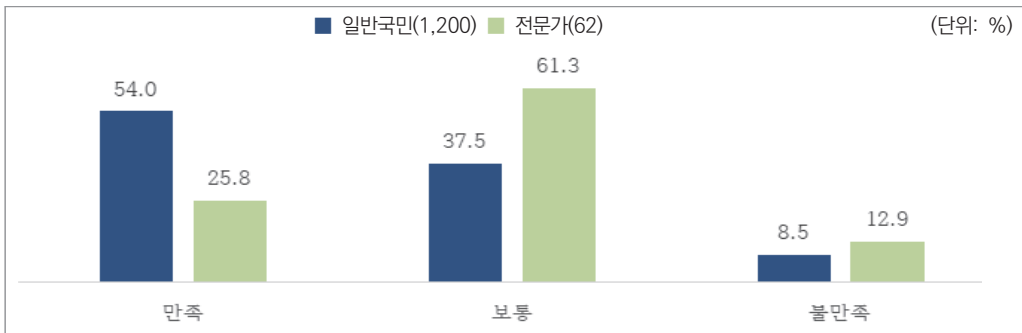
〈전문가〉

| 척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크다   | 85.0 | 93.3 | 91.6 | 78.3 | 85.0 | 95.0 | 96.9 | 87.1 |
| 보통이다 | 11.7 | 5.0  | 3.3  | 16.7 | 10.0 | 3.3  | 3.1  | 11.3 |
| 작다   | 3.3  | 1.7  | 5.0  | 5.0  | 5.0  | 1.7  | 0.0  | 1.6  |

### 3.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방부 대응 만족도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2020년 범국민안보의식조사에서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에 만족하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림 II-14〉에서 볼 수 있듯이, 54.0%의 일반국민들은 ‘만족한다’고 답변했고, 37.5%는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8.5%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25.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61.3%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12.9%는 ‘작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비군사적 안보 위협 관련 국방부의 대응에 대한 전문가들과 일반국민들의 인식에 있어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25.8%로 일반국민들(54.0%)에 비해 28.2% 작은 반면, 12.9%의 전문가들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함으로써 일반국민들(8.5%)보다 4.4%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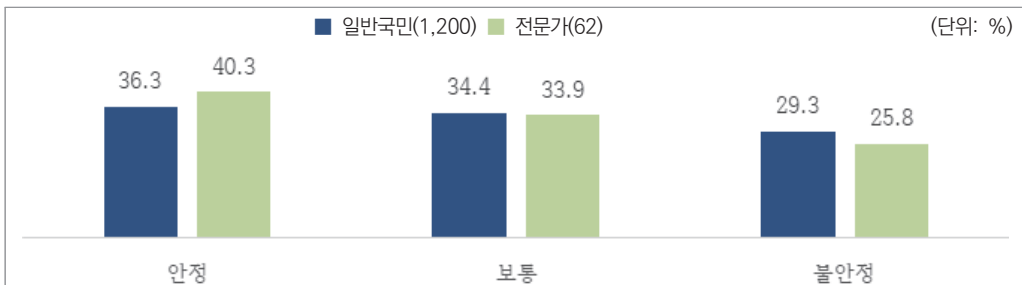
〈그림 II-14〉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방부 대응 만족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 III. 비군사적 위협과 국방의 역할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2020년 범국민안보의식조사에서 ‘최근 대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림 III-1〉에서 볼 수 있듯이, 36.3%의 일반국민들은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답변했고, 34.4%는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29.3%는 ‘불안정’하다고 답변하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40.3%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했고, 33.9%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25.8%는 ‘불안정’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전문가들이 일반국민들에 비해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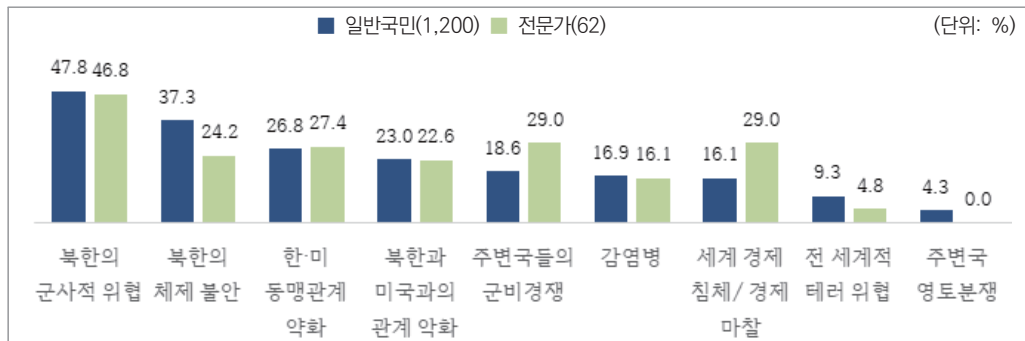
〈그림 III-1〉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2020년 범국민안보의식조사에서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림 III-2〉에서 볼 수 있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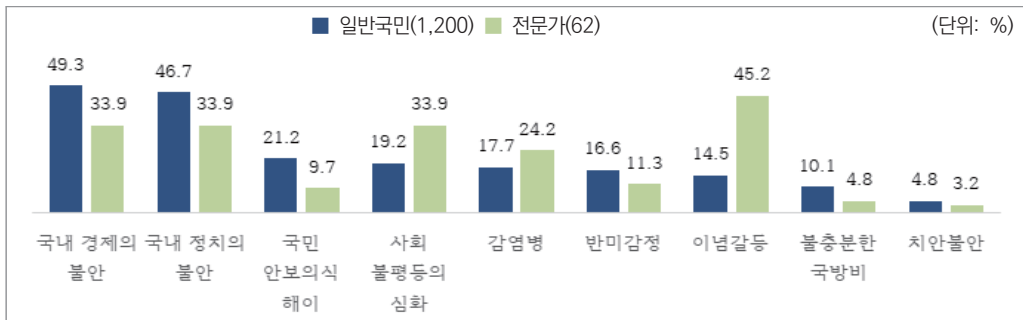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47.8%(일반국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북한의 체제 불안'(37.3%, 일반국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군사적 위협과 관련해서는, '감염병'(16.9%, 일반국민), '세계 경제 침체/경제 마찰'(16.1%, 일반국민), '전세계적 테러 위협'(9.3%, 일반국민)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군사적 위협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전통적인 군사 위협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주요한 대외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I-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2020년 범국민안보의식조사에서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그림 III-3〉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으로 '국내 경제의 불안'이 49.3%(일반국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내 정치의 불안'(46.7%, 일반국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군사적 위협과 관련해서는, '사회 불평등의 심화'(19.2%, 일반국민), '감염병'(16.1%, 일반국민), '치안불안'(4.8%, 일반국민)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협과 인간안보 위협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보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위협과 인간안보 위협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주요한 대내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I-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 1. 비군사적 위협 관련 국민안보의식 조사결과의 특징

### 가. 테러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이 테러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하여 42.7%의 일반국민들은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고, 34.8%는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22.6%는 ‘작다’고 답변하였다(그림 II-1 참조). 테러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인 특징, 즉 성별, 연령, 지역 크기, 학력, 생활수준에 따른 답변을 비교해 보았다. 〈표 III-1〉에서 볼 수 있듯이, 성별 및 생활수준에 따른 답변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연령, 지역 크기, 학력에 따른 답변에서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테러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45.5%의 30대 미만 응답자, 47.2%의 대도시 거주자, 49.3%의 고학력(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응답자가 테러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한 반면 38.8%의 50대 응답자, 36.6%의 군지역 거주자, 36.6%의 저학력(고졸 이하) 응답자가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을 하였다.

〈표 III-1〉 테러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       |        | 사례수 (명) | 종합 (%) |      |      |
|-------|--------|---------|--------|------|------|
|       |        |         | 크다     | 보통   | 작다   |
| 전체    |        | 1262    | 42.7   | 34.5 | 22.8 |
| 성별    | 남성     | 720     | 42.5   | 35.0 | 22.5 |
|       | 여성     | 480     | 42.9   | 34.4 | 22.7 |
| 연령    | 18-29세 | 303     | 45.5   | 30.4 | 24.1 |
|       | 30대    | 256     | 41.8   | 37.5 | 20.7 |
|       | 40대    | 314     | 44.6   | 30.9 | 24.5 |
|       | 50대    | 327     | 38.8   | 40.4 | 20.8 |
| 지역 크기 | 대도시    | 551     | 47.2   | 35.6 | 17.2 |
|       | 중소도시   | 608     | 39.0   | 33.1 | 28.0 |
|       | 군지역    | 41      | 36.6   | 48.8 | 14.6 |
| 학력    | 고졸이하   | 354     | 37.6   | 37.0 | 25.4 |
|       | 전문대    | 311     | 37.0   | 37.6 | 25.4 |
|       | 4년제 이상 | 535     | 49.3   | 31.6 | 19.1 |
| 생활 수준 | 상      | 137     | 41.6   | 37.2 | 21.2 |
|       | 중      | 700     | 42.7   | 34.4 | 22.9 |
|       | 하      | 363     | 43.0   | 34.4 | 22.6 |

## 나. 해적, 마약, 조직범죄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이 해적, 마약, 조직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하여 42.7%의 일반국민들은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고, 35.4%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21.9%는 ‘작다’고 응답하였다(그림 II-3 참조). 해적, 마약, 조직범죄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성별, 연령, 지역 크기, 학력, 생활수준)에 따른 응답을 비교해 보았다. 〈표 III-2〉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크기에 따른 응답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성별, 연령, 학력, 생활수준에 따른 답변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성인 경우, 연령이 낮은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해적, 마약, 조직범죄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45.8%의 여성 응답자, 46.2%의 18-29세 응답자, 48.2%의 고학력(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응답자, 52.1%의 생활수준이 낮은 응답자가 해적, 마약, 조직범죄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한 반면 40.6%의 남성 응답자, 약 41%의 30대 이상 응답자, 37.3%의 저학력(고졸 이하) 응답자, 38.7%의 생활수준이 높은 응답자가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을 하였다.

〈표 III-2〉 해적, 마약, 조직범죄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       |        | 사례수 (명) | 종합 (%) |      |      |
|-------|--------|---------|--------|------|------|
|       |        |         | 크다     | 보통   | 작다   |
| 전체    |        | 1262    | 43.2   | 35.2 | 21.6 |
| 성별    | 남성     | 720     | 40.6   | 36.8 | 22.6 |
|       | 여성     | 480     | 45.8   | 33.3 | 20.8 |
| 연령    | 18-29세 | 303     | 46.2   | 30.4 | 23.4 |
|       | 30대    | 256     | 41.4   | 36.7 | 21.9 |
|       | 40대    | 314     | 41.1   | 36.0 | 22.9 |
|       | 50대    | 327     | 41.9   | 38.5 | 19.6 |
| 지역 크기 | 대도시    | 551     | 46.1   | 37.7 | 16.2 |
|       | 중소도시   | 608     | 39.3   | 33.2 | 27.5 |
|       | 군지역    | 41      | 46.3   | 36.6 | 17.1 |
| 학력    | 고졸이하   | 354     | 37.3   | 37.3 | 25.4 |
|       | 전문대    | 311     | 39.2   | 35.4 | 25.4 |
|       | 4년제 이상 | 535     | 48.2   | 34.2 | 17.6 |
| 생활 수준 | 상      | 137     | 38.7   | 38.7 | 22.6 |
|       | 중      | 700     | 38.6   | 39.3 | 22.1 |
|       | 하      | 363     | 52.1   | 26.7 | 21.2 |

#### 다. 자연재해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하여 67.7%의 일반국민들은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고, 25.5%는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6.8%는 ‘작다’고 답변하였다(그림 II-5 참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성별, 연령, 지역 크기, 학력, 생활 수준)에 따른 답변을 비교해 보았다. 〈표 III-3〉에서 볼 수 있듯이, 성별에 따른 답변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연령, 지역 크기, 학력, 생활수준에 따른 답변에서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약 69% 내외의 50대 미만 응답자, 69.1%의 대도시 거주자, 70.8%의 고학력(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응답자, 70%의 생활수준이 낮은 응답자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한 반면 64.2%의 50대 응답자, 53.7%의 군지역 거주자, 65.3%의 저학력(고졸 이하) 응답자, 64.2%의 생활수준이 높은 응답자가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을 하였다.

〈표 III-3〉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       |        | 사례수 (명) | 종합 (%) |      |      |
|-------|--------|---------|--------|------|------|
|       |        |         | 크다     | 보통   | 작다   |
| 전체    |        | 1262    | 67.9   | 25.4 | 6.7  |
| 성별    | 남성     | 720     | 66.8   | 26.9 | 6.3  |
|       | 여성     | 480     | 69.0   | 23.3 | 7.7  |
| 연령    | 18-29세 | 303     | 68.3   | 25.4 | 6.3  |
|       | 30대    | 256     | 69.1   | 25.0 | 5.9  |
|       | 40대    | 314     | 69.4   | 24.2 | 6.4  |
|       | 50대    | 327     | 64.2   | 27.2 | 8.6  |
| 지역 크기 | 대도시    | 551     | 69.1   | 23.0 | 7.8  |
|       | 중소도시   | 608     | 67.3   | 26.5 | 6.3  |
|       | 군지역    | 41      | 53.7   | 43.9 | 2.4  |
| 학력    | 고졸이하   | 354     | 65.3   | 26.3 | 8.5  |
|       | 전문대    | 311     | 65.0   | 27.0 | 8.0  |
|       | 4년제 이상 | 535     | 70.8   | 24.1 | 5.0  |
| 생활 수준 | 상      | 137     | 64.2   | 25.5 | 10.2 |
|       | 중      | 700     | 67.1   | 27.3 | 5.6  |
|       | 하      | 363     | 70.0   | 22.0 | 8.0  |

## 라. 원전사고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이 원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하여 46.7%의 일반국민들은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고, 34.6%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18.8%는 ‘작다’고 응답하였다(그림 II-7 참조).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성별, 연령, 지역 크기, 학력, 생활수준)에 따른 응답을 비교해 보았다. 〈표 III-4〉에서 볼 수 있듯이, 성별에 따른 응답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연령, 지역 크기, 학력, 생활수준에 따른 답변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연령이 낮은 경우,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51.2%의 18-29세 응답자, 51.0%의 대도시 거주자, 54.6%의 고학력(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응답자, 49.6%의 생활수준이 낮은 응답자가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한 반면 43.1%의 50대 응답자, 34.1%의 군지역 거주자, 38.1%의 저학력(고졸 이하) 응답자, 46%의 생활수준이 높은 응답자(및 45.3%의 생활수준이 중간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을 하였다.

〈표 III-4〉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       |        | 사례수 (명) | 종합 (%) |      |      |
|-------|--------|---------|--------|------|------|
|       |        |         | 크다     | 보통   | 작다   |
| 전체    |        | 1262    | 46.7   | 34.9 | 18.5 |
| 성별    | 남성     | 720     | 46.3   | 35.1 | 18.6 |
|       | 여성     | 480     | 47.3   | 33.8 | 19.0 |
| 연령    | 18-29세 | 303     | 51.2   | 31.0 | 17.8 |
|       | 30대    | 256     | 44.5   | 37.9 | 17.6 |
|       | 40대    | 314     | 47.8   | 33.4 | 18.8 |
|       | 50대    | 327     | 43.1   | 36.4 | 20.5 |
| 지역 크기 | 대도시    | 551     | 51.0   | 32.7 | 16.3 |
|       | 중소도시   | 608     | 43.6   | 35.9 | 20.6 |
|       | 군지역    | 41      | 34.1   | 41.5 | 24.4 |
| 학력    | 고졸이하   | 354     | 38.1   | 39.8 | 22.0 |
|       | 전문대    | 311     | 42.8   | 39.9 | 17.4 |
|       | 4년제 이상 | 535     | 54.6   | 28.0 | 17.4 |
| 생활수준  | 상      | 137     | 46.0   | 39.4 | 14.6 |
|       | 중      | 700     | 45.3   | 36.3 | 18.4 |
|       | 하      | 363     | 49.6   | 29.5 | 20.9 |

## 마. 사이버 테러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이 사이버 테러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하여 64.1%의 일반국민들은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고, 28.0%는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7.9%는 ‘작다’고 답변하였다(그림 II-9 참조). 사이버 테러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성별, 연령, 지역 크기, 학력, 생활수준)에 따른 답변을 비교해 보았다. 〈표 III-5〉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성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사이버 테러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66.9%의 여성 응답자, 66.7%의 18-29세 응답자, 61.2%의 대도시(및 67.8%의 중소도시) 거주자, 67.9%의 고학력(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응답자, 71.1%의 생활수준이 낮은 응답자가 사이버 테러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한 반면 62.2%의 남성 응답자, 61.8%의 50대 응답자, 48.8%의 군지역 거주자, 57.3%의 저학력(고졸 이하) 응답자, 55.5%의 생활수준이 높은 응답자가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을 하였다.

〈표 III-5〉 사이버 테러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       |        | 사례수 (명) | 종합 (%) |      |      |
|-------|--------|---------|--------|------|------|
|       |        |         | 크다     | 보통   | 작다   |
| 전체    |        | 1262    | 65.3   | 27.1 | 7.6  |
| 성별    | 남성     | 720     | 62.2   | 29.4 | 8.3  |
|       | 여성     | 480     | 66.9   | 25.8 | 7.3  |
| 연령    | 18-29세 | 303     | 66.7   | 26.1 | 7.3  |
|       | 30대    | 256     | 65.2   | 25.8 | 9.0  |
|       | 40대    | 314     | 63.1   | 29.0 | 8.0  |
|       | 50대    | 327     | 61.8   | 30.6 | 7.6  |
| 지역 크기 | 대도시    | 551     | 61.2   | 30.7 | 8.2  |
|       | 중소도시   | 608     | 67.8   | 25.7 | 6.6  |
|       | 군지역    | 41      | 48.8   | 26.8 | 24.4 |
| 학력    | 고졸이하   | 354     | 57.3   | 34.2 | 8.5  |
|       | 전문대    | 311     | 65.3   | 26.0 | 8.7  |
|       | 4년제 이상 | 535     | 67.9   | 25.0 | 7.1  |
| 생활수준  | 상      | 137     | 55.5   | 31.4 | 13.1 |
|       | 중      | 700     | 62.1   | 29.7 | 8.1  |
|       | 하      | 363     | 71.1   | 23.4 | 5.5  |

## 바. 감염병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이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하여 77.8%의 일반국민들은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고, 16.6%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5.7%는 ‘작다’고 응답하였다(그림 II-11참조).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성별, 연령, 지역 크기, 학력, 생활수준)에 따른 응답을 비교해 보았다. 〈표 III-6〉에서 볼 수 있듯이, 학력에 따른 응답에는 차이가 발견된 반면 그 이외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들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82.1%의 고학력(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응답자가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한 반면 73.7%의 저학력(고졸 이하) 응답자가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을 하였다. 비록 학력에 따른 응답에서처럼 일정한 증감 패턴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 이외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들에 의한 응답들은, 다른 비군사적 위협들에 비해,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즉 75% 이상의 응답자들이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상당한 어려움

을 겪었음을 보여준다.

〈표 III-6〉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       |        | 사례수 (명) | 종합 (%) |      |      |
|-------|--------|---------|--------|------|------|
|       |        |         | 크다     | 보통   | 작다   |
| 전체    |        | 1262    | 78.1   | 16.4 | 5.5  |
| 성별    | 남성     | 720     | 76.9   | 17.4 | 5.7  |
|       | 여성     | 480     | 79.0   | 15.4 | 5.6  |
| 연령    | 18-29세 | 303     | 76.6   | 17.8 | 5.6  |
|       | 30대    | 256     | 81.3   | 16.0 | 2.7  |
|       | 40대    | 314     | 78.7   | 15.6 | 5.7  |
|       | 50대    | 327     | 75.2   | 16.8 | 8.0  |
| 지역 크기 | 대도시    | 551     | 76.2   | 15.2 | 8.5  |
|       | 중소도시   | 608     | 79.4   | 17.8 | 2.8  |
|       | 군지역    | 41      | 73.2   | 17.1 | 9.8  |
| 학력    | 고졸이하   | 354     | 73.7   | 18.9 | 7.3  |
|       | 전문대    | 311     | 74.9   | 19.6 | 5.5  |
|       | 4년제 이상 | 535     | 82.1   | 13.3 | 4.7  |
| 생활수준  | 상      | 137     | 75.2   | 14.6 | 10.2 |
|       | 중      | 700     | 78.7   | 16.4 | 4.9  |
|       | 하      | 363     | 76.9   | 17.6 | 5.5  |

## 2.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성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이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71.8%의 일반국민들은 ‘찬성한다’고 답변했고, 25.2%는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3.1%는 ‘반대한다’고 답변하였다(그림 II-12 참조).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성별, 연령, 지역 크기, 학력, 생활수준)에 따른 답변을 비교해 보았다. 〈표 III-7〉에서 볼 수 있듯이,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답변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지역 크기, 생활수준에 따른 답변에서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및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할 필요성이 크다고 답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77.5%의 중소도시 거주자 및 81.5%의 생활수준이 낮은 응답자가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할 필요성이 크다고 답변한 반면 65.7%의 대도시 거주자(및 68.3%의 군지역 거주자)와

67.2%의 생활수준이 높은 응답자가 필요성이 크다고 답변을 하였다.

〈표 III-7〉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성

|          |        | 사례수 (명) | 종합 (%) |      |     |
|----------|--------|---------|--------|------|-----|
|          |        |         | 크다     | 보통   | 작다  |
| 전체       |        | 1262    | 72.5   | 24.5 | 3.0 |
| 성별       | 남성     | 720     | 71.9   | 25.0 | 3.1 |
|          | 여성     | 480     | 71.5   | 25.4 | 3.1 |
| 연령       | 18-29세 | 303     | 71.6   | 26.4 | 2.0 |
|          | 30대    | 256     | 70.3   | 27.0 | 2.7 |
|          | 40대    | 314     | 72.0   | 23.9 | 4.1 |
|          | 50대    | 327     | 72.8   | 23.9 | 3.4 |
| 지역<br>크기 | 대도시    | 551     | 65.7   | 30.1 | 4.2 |
|          | 중소도시   | 608     | 77.5   | 20.7 | 1.8 |
|          | 군지역    | 41      | 68.3   | 24.4 | 7.3 |
| 학력       | 고졸이하   | 354     | 71.5   | 25.4 | 3.1 |
|          | 전문대    | 311     | 67.2   | 28.3 | 4.5 |
|          | 4년제 이상 | 535     | 74.6   | 23.2 | 2.2 |
| 생활<br>수준 | 상      | 137     | 67.2   | 26.3 | 6.6 |
|          | 중      | 700     | 67.6   | 29.1 | 3.3 |
|          | 하      | 363     | 81.5   | 17.1 | 1.4 |

### 3.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방부 대응 만족도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54.0%의 일반국민들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37.5%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8.5%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그림 II-14 참조).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방부 대응 만족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성별, 연령, 지역 크기, 학력, 생활수준)에 따른 응답을 비교해 보았다. 〈표 III-8〉에서 볼 수 있듯이,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응답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지역 크기, 학력, 생활수준에 따른 답변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국방부 대응 만족도가 크다고 응답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53.4%의 대도시 거주자(및 55.1%의 중소도시 거주자), 57.8%의 고학력(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응답자, 61.3%의 생활수준이 높은 응

답자가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방부 대응 만족도가 크다고 답변한 반면 46.3%의 군지역 거주자, 46.3%의 저학력(고졸 이하) 응답자, 50.4%의 생활수준이 낮은 응답자가 만족도가 크다고 응답을 하였다.

〈표 III-8〉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방부 대응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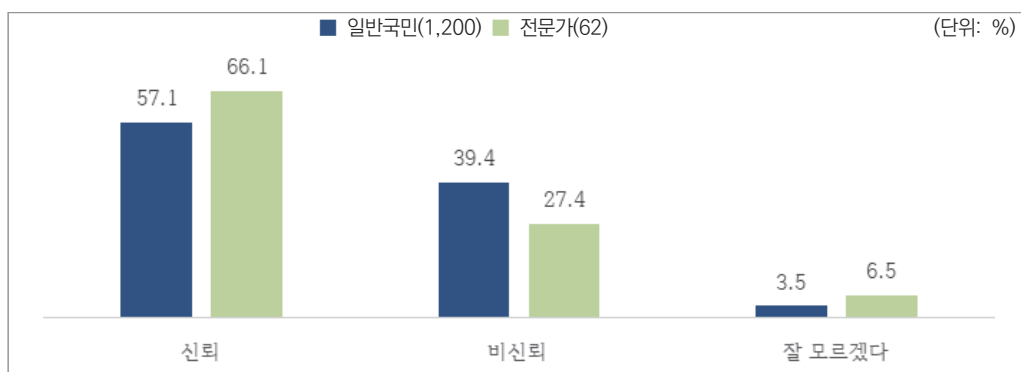
|          |        | 사례수 (명) | 종합 (%) |      |      |
|----------|--------|---------|--------|------|------|
|          |        |         | 크다     | 보통   | 작다   |
| 전체       |        | 1262    | 52.6   | 38.7 | 8.7  |
| 성별       | 남성     | 720     | 54.6   | 37.8 | 7.6  |
|          | 여성     | 480     | 53.1   | 37.1 | 9.8  |
| 연령       | 18-29세 | 303     | 55.1   | 36.3 | 8.6  |
|          | 30대    | 256     | 55.5   | 35.5 | 9.0  |
|          | 40대    | 314     | 53.8   | 36.0 | 10.2 |
|          | 50대    | 327     | 52.0   | 41.6 | 6.4  |
| 지역<br>크기 | 대도시    | 551     | 53.4   | 38.1 | 8.5  |
|          | 중소도시   | 608     | 55.1   | 36.8 | 8.1  |
|          | 군지역    | 41      | 46.3   | 39.0 | 14.6 |
| 학력       | 고졸이하   | 354     | 49.4   | 41.5 | 9.0  |
|          | 전문대    | 311     | 52.7   | 38.3 | 9.0  |
|          | 4년제 이상 | 535     | 57.8   | 34.4 | 7.9  |
| 생활<br>수준 | 상      | 137     | 61.3   | 30.7 | 8.0  |
|          | 중      | 700     | 54.4   | 37.6 | 8.0  |
|          | 하      | 363     | 50.4   | 39.9 | 9.6  |

## 4.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방의 역할

### 가.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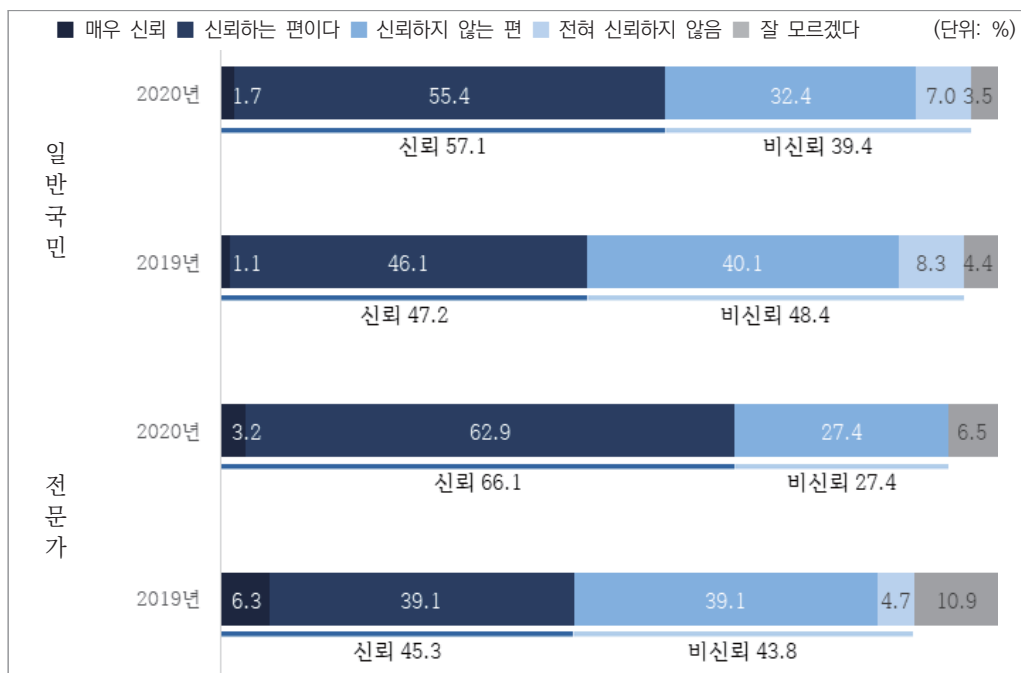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2020년 범국민안보의식조사에서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하여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 III-4〉에서 볼 수 있듯이, 57.1%의 일반국민들은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한다고 답변한 반면 39.4%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66.1%가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27.4%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국민들에 비해 전문가들의 국방부 발표 신뢰도가 보다 높음을 보여준다.

〈그림 III-4〉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하여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의 경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9.9%(2019년 47.2%) 증가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9.0%(2019년 48.4%) 감소하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경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20.8%(2019년 45.3%) 증가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16.4% (2019년 43.8%) 감소하였다(그림 III-5 참조).

〈그림 III-5〉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 전년도 비교



국방부 발표 신뢰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성별, 연령, 지역 크기, 학력, 생활수준)에 따른 답변을 비교해 보았다. <표 3-9>에서 볼 수 있듯이, 성별 및 학력에 따른 답변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연령, 지역 크기, 생활수준에 따른 답변에서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답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61.8%의 50대 응답자, 60.2%의 중소도시 거주자, 56.9%의 생활수준이 높은 응답자(및 62.4%의 생활수준이 중간 정도인 응답자)가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답변한 반면 53.5%의 18-29세 응답자, 53.9%의 대도시 거주자(및 53.7%의 군지역 거주자), 46.8%의 생활수준이 낮은 응답자가 만족도가 크다고 응답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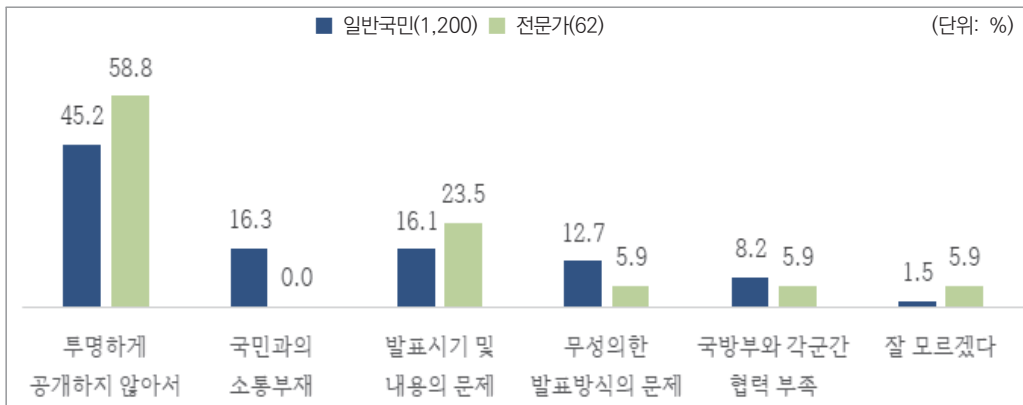
<표 Ⅲ-9>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

|       |        | 사례수 (명) | 종합 (%) |       |        |
|-------|--------|---------|--------|-------|--------|
|       |        |         | 신뢰한다   | 비신뢰한다 | 잘 모르겠다 |
| 전체    |        | 1262    | 57.5   | 38.8  | 3.6    |
| 성별    | 남성     | 720     | 56.9   | 40.8  | 2.2    |
|       | 여성     | 480     | 57.3   | 37.3  | 5.4    |
| 연령    | 18-29세 | 303     | 53.5   | 42.2  | 4.3    |
|       | 30대    | 256     | 54.3   | 41.4  | 4.3    |
|       | 40대    | 314     | 58.0   | 39.2  | 2.9    |
|       | 50대    | 327     | 61.8   | 35.5  | 2.8    |
| 지역 크기 | 대도시    | 551     | 53.9   | 43.7  | 2.4    |
|       | 중소도시   | 608     | 60.2   | 35.2  | 4.6    |
|       | 군지역    | 41      | 53.7   | 43.9  | 2.4    |
| 학력    | 고졸이하   | 354     | 57.1   | 39.3  | 3.7    |
|       | 전문대    | 311     | 54.3   | 42.4  | 3.2    |
|       | 4년제 이상 | 535     | 58.7   | 37.8  | 3.6    |
| 생활수준  | 상      | 137     | 56.9   | 40.1  | 2.9    |
|       | 중      | 700     | 62.4   | 35.6  | 2.0    |
|       | 하      | 363     | 46.8   | 46.6  | 6.6    |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2020년 범국민안보의식조사에서 ‘국방부의 각종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 Ⅲ-6>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국민의 경우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민과의 소통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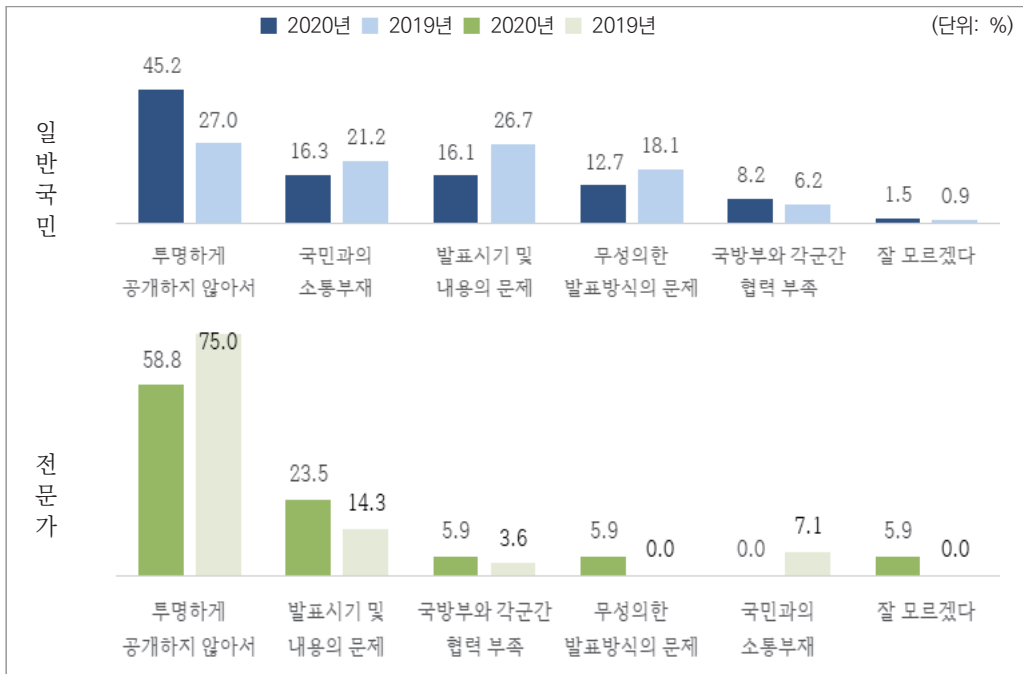
(16.3%), ‘발표 시기 및 내용의 문제’(16.1%), ‘무성의한 발표방식의 문제’(12.7%), ‘국방부와 각군간 협력 부족’(8.2%)가 뒤를 이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의 경우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발표 시기 및 내용의 문제’(23.5%), ‘무성의한 발표방식의 문제’(5.9%), ‘국방부와 각군간 협력 부족’(5.9%)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국방부 발표의 투명성, 발표 시기 및 내용, 무성의한 발표방식’ 등이 국방부 발표 신뢰 여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I-6〉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국방부의 각종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의 경우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라는 답변은 18.2% 증가한 반면 ‘국민과의 소통부재’(-4.9%), ‘발표 시기 및 내용의 문제’(-10.6%), ‘무성의한 발표방식의 문제’(-5.4%), ‘국방부와 각군간 협력 부족’(-2%)이라는 답변은 감소하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경우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라는 답변은 16.2% 감소한 반면 ‘발표 시기 및 내용의 문제’(9.2%), ‘무성의한 발표방식의 문제’(5.9%), ‘국방부와 각군간 협력 부족’(2.3%)이라는 답변은 증가하였다(그림 III-7 참조). 이러한 결과는 ‘투명한 정보 공개’ 여부가 국방부 발표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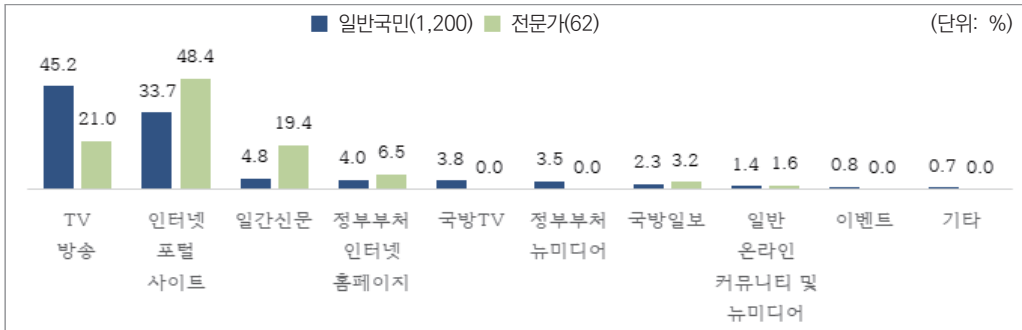
〈그림 III-7.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전년도 비교〉



#### 나.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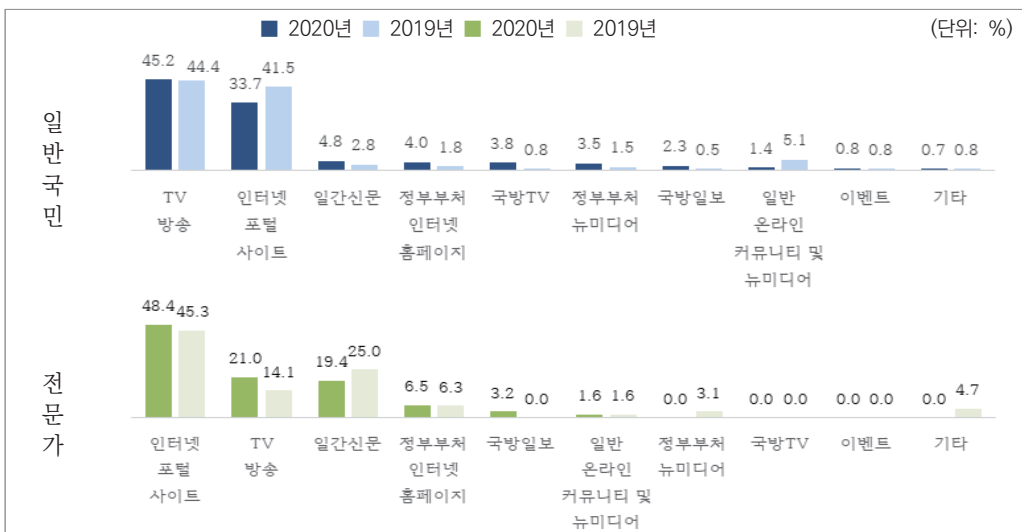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2020년 범국민안보의식조사에서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을 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얻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에 대한 접촉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 III-8〉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국민의 경우 ‘TV 방송’이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33.7%), ‘일간신문’(4.8%), ‘정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4.0%), ‘국방TV’(3.8%), ‘정부부처 뉴미디어’(3.5%), ‘국방일보’(2.3%),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 및 뉴미디어’(1.4%), ‘이벤트’(0.8%)가 뒤를 이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의 경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이라는 응답이 48.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TV 방송’(21.0%), ‘일간 신문’(19.4%), ‘정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6.5%), ‘국방일보’(3.2%),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 및 뉴미디어’(1.6%)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TV 방송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을 접촉하는 주된 경로임을 보여준다.

〈그림 III-8〉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을 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얻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의 경우 ‘TV 방송’(+0.8%), ‘일간신문’(+2.0%), ‘정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2.2%), ‘국방TV’(+3.0%), ‘정부부처 뉴미디어’(+2.0%), ‘국방일보’(+1.8%)라는 답변은 증가한 반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7.8%),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 및 뉴미디어’(-3.7%)라는 답변은 감소하였다. ‘이벤트’라는 답변은 변동이 없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경우 ‘인터넷 포털 사이트’(+3.1%), ‘TV 방송’(+6.9%), ‘정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0.2%), ‘국방일보’(+3.2%)라는 답변은 증가한 반면 ‘일간신문’(-5.6%), ‘정부부처 뉴미디어’(-3.1%)라는 답변은 감소하였다.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 및 뉴미디어’라는 답변은 변동이 없었다(그림 III-9 참조).

〈그림 III-9.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 전년도 비교〉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성별, 연령, 지역 크기, 학력, 생활수준)에 따른 답변을 비교해 보았다. <표 III-10>에서 볼 수 있듯이, TV 방송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경우, 모든 인구통계학적 특징에서 선호도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여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군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TV 방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을 접함에 있어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에 따라 TV 방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선호가 분명하게 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10>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에 대한 접촉 경로

|       |        | 사례 수(명) | 종합 (%) |            |       |               |       |           |       |               |
|-------|--------|---------|--------|------------|-------|---------------|-------|-----------|-------|---------------|
|       |        |         | TV 방송  | 인터넷 포털 사이트 | 일간 신문 | 정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 국방 TV | 정부부처 뉴미디어 | 국방 일보 | 일반커뮤니티 및 뉴미디어 |
| 전체    |        | 1262    | 44.0   | 34.4       | 5.5   | 4.1           | 3.6   | 3.3       | 2.3   | 1.4           |
| 성별    | 남성     | 720     | 42.6   | 35.4       | 5.1   | 4.6           | 3.5   | 4.3       | 1.9   | 1.5           |
|       | 여성     | 480     | 49.0   | 31.0       | 4.2   | 3.1           | 4.2   | 2.3       | 2.7   | 1.3           |
| 연령    | 18-29세 | 303     | 33.7   | 43.2       | 4.0   | 5.0           | 3.0   | 4.0       | 2.6   | 2.6           |
|       | 30대    | 256     | 43.4   | 37.9       | 3.5   | 4.7           | 4.3   | 2.7       | 2.0   | 0.8           |
|       | 40대    | 314     | 50.3   | 30.6       | 4.5   | 3.2           | 3.8   | 2.5       | 2.2   | 1.3           |
|       | 50대    | 327     | 52.3   | 24.5       | 6.7   | 3.4           | 4.0   | 4.6       | 2.1   | 0.9           |
| 지역 크기 | 대도시    | 551     | 44.8   | 34.4       | 4.7   | 5.5           | 3.5   | 2.4       | 2.4   | 1.1           |
|       | 중소도시   | 608     | 45.1   | 34.3       | 4.8   | 2.8           | 3.6   | 4.1       | 2.1   | 1.8           |
|       | 군지역    | 41      | 51.2   | 14.6       | 4.9   | 2.4           | 9.8   | 9.8       | 2.4   | 0.0           |
| 학력    | 고졸이하   | 354     | 58.2   | 20.6       | 5.1   | 3.1           | 3.1   | 4.0       | 2.3   | 1.4           |
|       | 전문대    | 311     | 41.8   | 38.3       | 5.5   | 5.1           | 3.5   | 1.6       | 1.9   | 1.0           |
|       | 4년제 이상 | 535     | 38.5   | 39.6       | 4.1   | 3.9           | 4.3   | 4.3       | 2.4   | 1.7           |
| 생활 수준 | 상      | 137     | 34.3   | 40.1       | 10.9  | 4.4           | 1.5   | 2.9       | 4.4   | 0.7           |
|       | 중      | 700     | 44.3   | 34.3       | 4.0   | 4.1           | 3.9   | 3.3       | 2.4   | 2.0           |
|       | 하      | 363     | 51.0   | 30.0       | 3.9   | 3.6           | 4.4   | 4.1       | 1.1   | 0.6           |

### (3) 비군사적 위협과 국방의 역할

테러, 마약, 조직범죄, 자연재해, 원전사고, 사이버 테러, 감염병 등 비군사적 안보 이

슈들은 초국가적 상호작용의 네트워크가 심화·확산됨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군사적 문제에 버금갈 만큼의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점차 중요성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 국방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범국민안보의식조사에 나타난 국민의 인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이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71.8%의 일반국민들과 87.1%의 전문가들이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은 비군사적 위협 대비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비군사적 위협 대비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성별, 연령, 지역 크기, 학력, 생활수준)에 따른 답변을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는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답변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 크기, 생활수준에 따른 답변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77.5%의 중소도시 거주자 및 81.5%의 생활수준이 낮은 응답자가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할 필요성이 크다고 답변한 반면 65.7%의 대도시 거주자(및 68.3%의 군지역 거주자)와 67.2%의 생활수준이 높은 응답자가 필요성이 크다고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와 관련하여 어느 계층이 보다 큰 불안감 및 소외의식을 느끼고 있는지를 나타내 준다. 특히 생활수준이 낮은 응답자와 생활수준이 높은 응답자의 인식 격차가 14.3%에 이른다는 것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비군사적 위협 대비 관련 인식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데 국방이 기여한다면 비군사적 위협 대비 관련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데 국방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기 위해 비군사적 위협 관련 국방의 역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 보았다. 우선 비군사적 안보 위협 관련 국방부 대응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분석 결과는, 비군사적 위협 대비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비군사적 위협 관련 국방부의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53.4%의 대도시 거주자(및 55.1%의 중소도시 거주자), 57.8%의 고학력(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응답자, 61.3%의 생활수준이 높은 응답자가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방부 대응 만족도가 크다고 답변한 반면 46.3%의 군지역 거주자, 46.3%의 저학력(고졸 이하) 응답자, 50.4%의 생활수준이 낮은 응답자가 만족도가 크다고 응답을 하였다.

또한 국방부 발표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비군사적 안보 위협 관련 국방부 대응

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 연령, 생활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비군사적 위협 관련 국방부 발표 신뢰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61.8%의 50대 응답자, 60.2%의 중소도시 거주자, 56.9%의 생활수준이 높은 응답자(및 62.4%의 생활수준이 중간 정도인 응답자)가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답변한 반면 53.5%의 18-29세 응답자, 53.9%의 대도시 거주자(및 53.7%의 군지역 거주자), 46.8%의 생활수준이 낮은 응답자가 만족도가 크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들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비군사적 위협 관련 국방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비군사적 위협 관련 국방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그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인식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키려는 국방의 노력이 비군사적 위협 관련 국방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부 발표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데 국방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하여 신뢰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57.1%의 일반국민들과 66.1%의 전문가들이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일반국민들에 비해 전문가들의 국방부 발표 신뢰도가 높음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는 국방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 국방부 발표 관련 정보 획득 여부 등이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국방부 발표 신뢰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성별, 연령, 지역 크기, 학력, 생활수준)에 따른 답변을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는 성별 및 학력에 따른 답변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 지역 크기, 생활수준에 따른 답변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61.8%의 50대 응답자, 60.2%의 중소도시 거주자, 56.9%의 생활수준이 높은 응답자(및 62.4%의 생활수준이 중간 정도인 응답자)가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답변한 반면 53.5%의 18-29세 응답자, 53.9%의 대도시 거주자(및 53.7%의 군지역 거주자), 46.8%의 생활수준이 낮은 응답자가 만족도가 크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생활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비군사적 위협 관련 국방부 발표 신뢰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비군사적 위협 관련 국방의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방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방부의 각종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국방부 발표의 투명성, 발표 시기 및 내용, 무성 이한 발표방식’ 등이 국방부 발표 신뢰 여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그 중 ‘투명한 정보 공개’ 여부가 국방부 발표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투명한 정보 공개 제고를 위한 국방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방의 대응을 포함하여, 국방부 발표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국방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이에 대해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을 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얻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TV 방송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을 접하는 주된 경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안보 및 국방 관련 투명한 정보를 이러한 매체들에 보다 적극적·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국방부 발표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성별, 연령, 지역 크기, 학력, 생활수준)에 따른 답변을 비교해 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TV 방송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경우 모든 인구통계학적 특징에서 선호도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여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군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TV 방송을 선호한 반면 남성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을 접함에 있어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에 따라 TV 방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선호가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안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계층별 선호 정보 및 접촉 경로 등을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면 국방부 발표에 대한 관심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안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국방TV, 국방일보 등의 매체와 젊은 층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블로그(Blog),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유튜브(YouTube) 같은 정부부처 뉴미디어를 보다 활성화하여 안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다각도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국민들이 안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접촉하는 경로에 있어 ‘TV 방송’(45.2%)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33.7%)가 78.9%를 차지하는 반면 ‘국방TV’(3.8%), ‘정부부처 뉴미디어’(3.5%), ‘국방

일보'(2.3%)는 9.6%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미디어 시장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국민들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택적으로 획득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국방TV, 국방일보 등의 매체가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함과 동시에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SNS와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해 안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전문성에 기초하여 보다 쉽고 자세하게 전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IV. 결 론

냉전종식, 세계화, 정보화 등을 겪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는 안보 영역에서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환경의 변화는 안보 위협 요인을 초국가적 위협에서부터 비군사적 요소로까지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기후, 보건, 난민, 테러, 사이버 범죄 등 비군사적 안보 이슈들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증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를 맞이하여 전통적인 안보위협과 더불어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예외일 수 없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같은 글로벌 질병으로 인한 우려 확산, 황사나 미세먼지를 둘러싼 한중 외교 갈등, 제주도 예멘 난민사태로 불거진 난민과 이주자문제 등 비군사적 안보영역에서의 위협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전통안보 영역에서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는 한편 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가 간 협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점차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인식 변화에 직면하여 국방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범국민안보의식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비군사적 위협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국방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북한 핵위협 등 전통적인 안보위협과 더불어 테러, 마약, 조직범죄, 자연재해, 원전사고, 감염병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보다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군사

적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는 전문가들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비군사적 위협 대비 필요성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국민에게 안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국방정책 및 안보전략 수립의 근간을 형성하는 국민의 지지를 제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분석 결과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군사적 위협 대비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성별, 연령, 지역 크기, 학력, 생활수준)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 지역 크기, 생활수준에 따른 답변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와 관련하여 어느 계층이 보다 큰 불안감 및 소외의식을 느끼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따라서 비군사적 위협 대비 관련 인식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데 국방이 기여한다면 비군사적 위협 대비 관련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데 국방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기 위해 비군사적 위협 관련 국방의 역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 보았다. 우선 비군사적 안보 위협 관련 국방부 대응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분석 결과는, 비군사적 위협 대비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비군사적 위협 관련 국방부의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국방부 발표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비군사적 안보 위협 관련 국방부 대응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 연령, 생활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비군사적 위협 관련 국방부 발표 신뢰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들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비군사적 위협 관련 국방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비군사적 위협 관련 국방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그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인식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키려는 국방의 노력이 비군사적 위협 관련 국방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비군사적 위협 관련 국방의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방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국방부 발표의 투명성, 발표 시기 및 내용, 무성이한 발표방식’ 등이 국방부 발표 신뢰 여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그 중 ‘투명한 정보 공개’ 여부가 국방부 발표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투명한 정보 공개 제고를 위한 국방부의 지속적인 노력 이,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방의 대응을 포함하여, 국방부 발표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투명한 정보 공개 제고를 위해 국방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분석 결과는 TV 방송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을 접하는 주된 경로임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여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군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생활수준 이 낮을수록 TV 방송을 선호한 반면 남성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을 접함에 있어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에 따라 TV 방송 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선호가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비군사 적 위협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안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계층 별 선호 정보 및 접촉 경로 등을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면 국방부 발표에 대한 관심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분석 결과는 안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국방 TV, 국방일보 등의 매체와 젊은 층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블로그(Blog),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유튜브(YouTube) 같은 정부부처 뉴미디어를 보다 활성화하여 안 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다각도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미디어 시장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국민들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택적으로 획득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국방TV, 국방일보 등의 매체가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함과 동시에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SNS와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해 안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전문성에 기초하여 보다 쉽고 자세하게 전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참고 문헌

- 김도희·허석재 (2018),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Vol. 13.
- 김상규 (2018), “한, 중, 일 3국의 위기와 협력에 관한 연구: 비전통 안보 영역의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3(4), pp. 29-47.
- 김성한 (2005), “미국의 동아태전략: 변화와 지속성” NSP Report 10,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이신화 (2007), “21세기 글로벌 이슈와 국제정치학” 국제정치논총 제6집 특별호, pp.197-226.
- 이신화 (2008), “비전통안보와 동북아지역협력” 한국정치학회보 42(2), pp. 411-434.
- 이신화·정한울 (2019), “한국인의 ‘신안보’ 인식: 변화와 지속성” 21세기정치학회보 29(2), pp. 73-98.
- 송은희 (2016), “비전통 안보 위협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사회과학연구 27(1), pp. 247-262.
- Baldwin, David. (1997), “The Concept of Securit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3(1), pp. 5-26.
- Buzan, Barry (1991), “New Patterns of Global Secu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Affairs* 67(3), pp. 431-451.
- Craig, Susan (2007), *Chinese Perceptions of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Strategic Studies Institute, (<http://www.StrategicStudiesInstitute.army.mil>)
- Dewitt, David B. (1994), *Common, Comprehensive, and Cooperative Security in Asia-Pacific*, Vancouver: Canadian Consortium on Asia Pacific Security.
- Kaldor, Mary (2007) *Human Security: Reflections on Globalization and Intervention*, Cambridge:Polity Press.

## 국민안보의식조사를 통한 정책대안 연구 2020

2020년 12월 28일 인쇄  
2020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_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인 쇄\_ 화신문화

병영생활고충, 군범죄·성폭력,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은  
국방헬프콜 ☎ 1303(군·공중·일반·휴대전화 등 모든 전화로 가능)  
【인트라넷, 인터넷/모바일로도 신고/상담가능】

## 국민안보의식조사를 통한 정책대안 연구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간첩 · 테러범 · 방산스파이 · 사이버테러 · 군사보안 신고/상담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1337 [www.dssc.mil.kr](http://www.dssc.mil.kr)  
신고하는 1등 국민에게 337 박수를!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33021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별로 1040  
T. 041 831 6412 [www.kndu.ac.kr](http://www.kndu.ac.kr)